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연구책임자 : 정 형 옥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안 태 윤 (본원 연구위원)

최 지 현 (본원 연구조원)

연구기간 : 2011.11 ~ 2012.5

2012

• • •

발 간 사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기해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실시되던 여성가족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적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현실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여성과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개발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정책은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같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지역의 여성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가족과 관련한 사회적, 정책적 환경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원에서는 경기도민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향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도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대규모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총 1,995가구의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남녀가구주와 여성가구원 3,647명(여성 2,302명, 남성 1,345명)을 통해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정책수요조사에는 여성·가족정책 우선순위, 여성경제활동, 취약계층 여성복지, 여성폭력 및 안전, 여성건강·문화·여가, 돌봄(보육, 아동청소년), 가족 등 여성가족정책의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동안 각 주제별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이처럼 여성가족정책이라는 큰 틀에서 정책대상자들의 요구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습니다. 조사결과 경기도 여성들 사이에서도 연령, 혼인상태, 학력, 취업여부, 주택형태,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생활권(도시, 도농복합) 등에 따라 정책수요에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을 수립·개발하는데 있어서 소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본 연구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먼저, 연구의 기본 틀 마련에서부터 정책제언에 이르기까지 조언해주신 김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손승영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양소남 경기대학교 교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연구진행에 도움을 주신 경기도청 관계 공무원들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조사를 담당해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준 경인지방통계청 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책임지고 이끌어간 정형옥 연구책임자를 비롯하여, 공동연구자인 안태윤 연구위원, 최지현 연구조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경기도민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요구가 향후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에 수립·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12년 5월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박 명 순

Abstract

A Survey of Gyeonggi Province Residents' Demand on Policies for Women and Families

Chung, Hyungok
Ann, Taeyoon
Choi, Ji-hyun

This study has been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explicating Gyeonggi Province women and families' desire for policies based on a survey of the demand on policies for women and families for the part of Gyeonggi Province residents, and based on this proposing a direction of Gyeonggi Province policies for women and families for the future.

The research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has reviewed theoretical backgrounds of policies for women and families. Second, it has analyzed the current conditions of Gyeonggi Province policies for women and families. Third, it has analyzed the statistic conditions related to women and families in Gyeonggi Province. Fourth, it has analyzed Gyeonggi Province residents' requirements of policies for women and families on the basis of a questionnaire survey. Fifth, it has proposed a political direction of policies for women and families that Gyeonggi Province should take for the future. Our main research methodologies include collection of basic statistic data, a questionnaire survey, consulted experts' meetings, bull sessions for policies etc.

The subjec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carried out by this study were 'male householders and female family members aged from 19 to 65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The sample size consists of 3,647 subjects (2,302 females and 1,345 males) from 1995 households (95% confidence level and sample error $\pm 3.1\%$). The survey was performed via home visiting. The contents of the survey included various areas subsumed under policies for women and families such as levels of the enhancement and

priorities of policies for women, welfare for women in vulnerable classes, violence against and safety for women, female health/culture/leisure, and care (nursery, children and youths), and family. The field research was performed by the Gyeongin Regional Statistics Office.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has turned out that the subjects residing in Gyeonggi Province replied the question of what is the area the women's policies should take on first of all by designating the 'activation of female economic activities' in the first place and the 'policies related to nursery.' The 'spreading of healthy familial culture' occupied the position of the most impressing issue that should be driven among family policies, and the 'diversification of child care support' turned out to be the next important issue.

Key words : Women's Policy, Family Policy, Residents' Demand

연구요약

연구요약

제1장 서론

-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여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함. 이에 따라 1998년부터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 한편, 우리사회에서 가족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며, 사회적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안이 발의된 시기임. 2005년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기본법’이며, 이를 통해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음. 이에 기반해 2006년부터 5년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1995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실시되던 여성가족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음.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여성가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음.
-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약화 등 사회적 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여성의 삶의 조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향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함. 둘째,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 현황을 분석함. 셋째, 경기도 여성 및 가족 관련 현황을 분석함. 넷째,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 경기도민의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함. 다섯째, 향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함.
- 주요 연구방법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임. 이 외 기초통계자료 수집, 관련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정책간담회 등 다양하게 이루어짐.

제2장 이론적 배경

- 여성정책의 개념을 살펴보면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포괄적인 정책으로 정의되어 왔고,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대부분 법에서 정의한 여성정책 개념을 인용하고 있음.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의미함.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성정책의 범주는 교육정책, 고용정책, 보건정책, 보육정책, 복지정책, 가족정책 등의 정책으로 매우 광범위함.
-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임. 즉, 여성정책은 정책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음. 이렇게 볼 때 여성정책은 가족정책, 저출산 정책 등 특정한 범주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상호 연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우리 사회에서 가족정책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짐.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가족정책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정책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

이 일반적임. 즉,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가족 정책으로 보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크게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 주류화 개념 및 실현방안,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정책, 여성정책 수요조사로 나누어 살펴보았음. 보다 최근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여성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한 성 주류화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서 성 주류화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임. 한편,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이후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봄.
- 가족정책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요약할 수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유형의 다양화, 여성의 경제활동변화, 이와 연계된 돌봄노동의 사회화 필요성 등의 사회적 배경을 제시하면서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이 때 가족유형의 변화를 ‘위기’로 보느냐, 아니면 변화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음.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0년대 이후의 논문들은 대부분 외국의 가족정책을 소개·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가족정책 중에서도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음. 이 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음.

제3장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현황

- 조례 :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는 2012년 5월 현재 총 22개임. 분야별로는 여성가족 관련 조례 9개, 보육 관련 조례 1개,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9개,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3개임.

- 인력 : 현재 경기도에서 여성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는 본청의 여성가족국과 제2청의 복지여성실로 구분할 수 있음. 본청 여성가족국의 경우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다문화가족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제2청 복지여성실은 4개의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여성가족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는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임. 2012년 현재 경기도의 본청과 2청의 여성가족정책 담당(사업소 제외) 인력은 총 88명임.
- 예산 :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구의 예산은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우선, 본청 여성가족국의 2011년 전체 예산은 805,598백만원으로 2010년 665,156백만원에 비하여 140,442백만원 증가함. 한편, 경기도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의 2011년 전체 예산은 332,765백만원으로 2010년 275,244백만원 대비 57,521백만원 증가함. 본청과 2청의 여성가족정책 기구의 2011년 예산의 합은 1,138,363백만원으로 2011년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임.
- 경기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 정책,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의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음.

제4장 경기도 여성가족 현황

- 경기도 여성인구의 비율은 2007년 49.6%에서 2011년 53.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2011년 경기도 총인구 11,937,415명 중 여성인구는 5,922,058명임. 또한 경기도 외국인 인구 중에서 여성인구 비율도 2007년 38.2%에서 2011년 41.1%(124,424명)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 경기도의 15세 이상 인구는 약 9,874천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6,045천명으로 61.2%를 차지함(2011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2007년 49.2%에서

2011년 47.9%로, 남성은 2007년 75.4%에서 2011년 74.8%로 감소하여 여성의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남.

- 2011년 경기도의 총 혼인수는 79,137건이며, 총인구수 대비 총 혼인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2011년 6.7%로 전국 6.6%에 비해 높게 나타남. 경기도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29.4세, 남성 31.9세로 나타남. 2007년 경기도 평균 초혼연령 여성 28.3세, 남성 31.0세 대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 2011년 경기도의 총 이혼건수는 28,444건으로 전국 총 이혼건수의 24.9%를 차지하였음.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을 보면, 경기도는 2.4%로 전국 2.3%에 비해 약간 높았음.

제5장 설문조사 방법

- 모집단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가구주와 여성가구원
- 표본추출틀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
- 표본규모 : 총 1,995 가구(100개 조사구)의 3,647명(여성 2,302명, 남성 1,345명)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응답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한하여 자기 기입방식 병행
- 조사기간 : 2012.2.21 ~ 3.1(10일간)
- 조사내용 : 개인관련사항, 여성경제활동, 취약계층 여성복지, 여성폭력 및 안전, 여성 건강·문화·여가, 돌봄, 가족, 정책추진체계, 여성·가족정책 향상도와 우선순위, 가구관련사항 등
- 조사체계 : 설문지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표본설계 및 현장조사는 경인지방 통계청에 의해 수행됨.

제6장 조사결과 및 정책제언

1. 응답자 특성

□ 응답가구의 특성

- 가구구성형태 : 부부와 자녀(62.8%) > 부부(17.1%) > 1인 가구(6.5%) > 한부모+자녀(6.0%) > ‘3세대 이상’ 가구(5.7%) > 기타 (2.0%)
- 주택형태 : 아파트(58.9%) > 연립/다세대/기타(25.2%) > 단독주택(15.8%)
- 주택의 점유형태 : 자기집(52.3%) > 전세(28.2%) > 보증부 월세(10.8%) > 월세(5.1%) > 무상 및 기타(3.6%)
- 가구 월평균소득 : 200-300만원 미만(22.4%) > 300-400만원 미만(20.6%) > 500만원 이상(19.7%) > 100-200만원 미만(18.2%) > 400-500만원 미만 (12.4%) > 100만원 미만(6.6%)
- 맞벌이 여부 : 외벌이(45.6%) > 맞벌이(37.5%) > 미혼 등 ‘해당없음’ (16.9%)
- 생활권 : 도시지역(66.7%) > 도농복합지역(33.3%)

□ 여성응답자(여성가구주 및 여성가구원)의 특성

- 연령별 : 40-50세 미만(27.3%) > 30-40세 미만(26.4%) > 50-65세 미만(24.9%) > 19-30세 미만(21.4%)
- 혼인상태별로 : 유배우자(68.8%) > 미혼(21.9%) > 사별/이혼(9.3%)
- 가구주와의 관계 : 배우자(56.1%) > 가구주 본인(27.7%) > 미혼자녀(12.8%) > 기타(3.5%)
- 교육정도 : 대졸이상(43.6%) > 고졸(42.2%) > 중졸이하(14.2%)
- 취업여부별 : 취업여성(52.4%) > 미취업여성(47.6%)

□ 가구주의 특성

- 성별 : 남성(79.0%) > 여성(21.0%)
- 연령별 : 40-50세 미만(33.9%) > 50-65세 미만(31.2%) > 30-40세 미만(26.9%) > 19-30세 미만(8.0%)

- 혼인상태별 : 유배우자(86.8%) > 사별/이혼(6.8%) > 미혼(6.3%)
- 교육정도별 : 대졸이상(49.9%) > 고졸(38.6%) > 중졸이하(11.6%)
- 취업여부별 : 취업자(84.2%) > 미취업자(15.8%)
- 경기도 거주기간 : 20년 이상(36.7%) > 5-10년 미만(17.0%) > 10-15년 미만(16.0%)
> 1-5년 미만(14.2%) > 15-20년 미만(12.1%) > 1년 미만(4.0%)

□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은 크게 여성응답자(여성가구주 및 여성가구원 2,302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전체 가구주 1,995명(남성가구주 1,345명, 여성가구주 650명)의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나뉘 실시함. 여성응답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별, 취업여부별, 주택형태별, 가구 월평균소득별, 맞벌이 여부별, 생활권별로 분석해 여성 집단별 차이를 살펴봄. 한편, 가구주에 대한 분석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음. 이하 모든 분석결과는 제5장에서 설명한 가중치가 부여된 자료를 이용함.

2.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경기도민들은 지난 10년 동안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1) 법 및 제도 2) 정치참여 3) 교육 4) 가족생활 5) 경제활동 6) 문화 및 의식 각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를 살펴보았음. 분야별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민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성평등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서는 비교적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분야별 비교

- 여성응답자 : 교육(2.80점) > 문화 및 의식(2.69점) > 경제활동(2.64점) > 가족생활(2.63점) > 정치참여(2.56점) > 법 및 제도(2.37점)
- 가구주 : 교육(2.83점) > 문화 및 의식(2.72점) > 경제활동(2.67점), 가족생활(2.67점) > 정치참여(2.62점) > 법 및 제도(2.47점)

3. 여성·가족정책 우선순위

□ 여성정책 우선순위

- 여성응답자(1순위)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26.9%) > 보육관련정책(16.9%) >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12.3%) > 교육에서의 남녀평등(11.6%) > 여성건강지원(9.0%) >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8.9%)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7.2%) >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4.8%) > 농어촌여성 복지증진(1.7%) > 여성의 자원봉사활동(0.4%) >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0.3%)
- 가구주(1순위)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23.2%) > 보육관련정책(20.3%) >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13.7%) > 교육에서의 남녀평등(12.7%) >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9.4%) > 여성건강지원(7.9%) >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6.1%) >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3.4%) > 농어촌여성 복지증진(2.9%) > 여성의 국제협력강화(0.2%) > 여성의 자원봉사활동(0.1%)
- 여성정책 중 1순위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 및 가구주 모두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육관련정책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경기도의 여성정책이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보육관련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경기도민의 일반적인 인식과도 부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 그러나 여성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2순위와 3순위를 포함한 복수응답 결과는 1순위 응답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음. 즉, 1순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던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여성건강지원,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분야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임.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여성정책을 추진할 때 참조해야 할 사항임.
-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나타났음.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30대는 보육 관련 정책, 50대는 여성건강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사별/이혼은 취약계층여성복지증진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학력별로는 중졸이하는 교육에서의 남녀평등과 여성건강지원, 대졸이상은 보육관련정책에 대

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음.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구소득 등에 따른 여성들 집단별 차이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함.

- 한편, 가구에 대한 여성정책 1순위 조사결과는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음. 즉, 여성가구의 경우는 여성정책의 우선순위로 보다 직접적으로 여성이 대상이 되는 정책(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을 남성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정책 우선순위

- 여성응답자(1순위)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39.0%) > 자녀돌봄 지원의 다양화(16.1%) > 남성의 가족 생활참여 지원(10.9%) >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10.8%)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8.0%) > 부모역할지원(6.7%) >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조성(4.0%) > 가족돌봄자 지원서비스 강화(2.0%)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1.4%) >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1.2%)
- 가구주(1순위)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38.2%) > 자녀돌봄 지원의 다양화(17.4%) >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11.3%)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지원(9.8%) > 한부모가족 지원정책(7.4%) > 부모역할지원(6.8%) >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조성(3.8%) > 가족돌봄자 지원서비스 강화(2.3%) >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조성(1.5%)
- 가족정책 중 1순위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 및 가구주 모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이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높았음. 또한 여성정책과 마찬가지로 가족정책 1순위에서도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음.
- 가족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한 조사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기도민들이 위기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정책 보다 가족문화 확산, 자녀돌봄 지원,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지원 등과 같은 ‘모든 가족’ 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가족정책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임. 이는

향후 경기도의 가족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큼. 즉,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가족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경기도민이 취약계층과 관련한 가족정책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왜냐하면 가족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에서는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 조사결과는 경기도민들이 가족정책의 범주로 정책의 1순위로는 복지정책의 대상으로도 포괄 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줌. 그러나 3순위까지 고려한다면 취약계층 관련 가족정책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음.
- 여성응답자의 연령별, 혼인상태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차이도 나타남. 즉, 30대 여성은 자녀돌봄지원의 다양화를 상대적으로 중시함. 한편, 사별/이혼, 중졸이하, 가구소득이 낮은 여성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를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족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가족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결과에는 여성정책 보다 자신이 당면한 가족문제에 관한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정책추진체계

- 여성응답자 : 예산의 확대(31.2%) >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16.0%) > 여성, 가족부서와 관련부서의 업무협력(13.2%) > 도지사 등 최고 관리자의 관심과 의지(10.7%) > 경기도의회와 전문성과 의지(10.5%) >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9.6%)
- 가구주 : 예산의 확대(35.0%) >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13.7%) > 여성·가족부서와 관련부서의 업무협력(11.5%) > 도지사 등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의지(11.1%) > 경기도의회와 전문성과 의지(10.5%) >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10.3%)

- 여성가족정책 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조사결과는 ‘예산의 확대’ 다음으로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임. 따라서 향후에는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기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임. 지역여성단체에서도 경기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임.

4. 여성경제활동 부문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

- 여성응답자 :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33.4%) >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30.7%) > 취업알선서비스(21.3%) > 여성창업지원 강화(13.1%)
- 가구주 :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33.7%) >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32.7%) > 취업알선서비스(19.1%) > 여성창업지원 강화(13.0%)
-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가 나타남.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은 30대, 대졸이상, 아파트 거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중졸이하, 연립/다세대/기타,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인 여성들의 요구가 높았음. 취업알선서비스는 50대 이상, 중졸이하, 단독주택 거주여성이, 여성창업지원 강화는 사별/이혼여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음.
- 또한 조사대상 여성 중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연령, 학력 등 인적자본과 일자리의 불일치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적합하거나, 자신의 거주지 주위나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범위 내에 알맞은 일거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
- 이러한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을 설계할 때 지역이라는 변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함. 즉, 직업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그 지역의 사업체나 산업여건에 기반해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일자

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서비스를 위한 구인 사업체를 발굴할 때도 거리 및 교통시스템을 고려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 여성응답자 :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31.4%)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18.9%) > 출퇴근시간 유연화(18.4%) >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18.0%)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12.8%)
- 가구주 :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34.3%)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19.3%)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17.8%) >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15.2%) > 출퇴근시간 유연화(13.2%)
-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이나 경기도의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여성응답자의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음. 특히,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50대 이상, 사별/이혼, 중졸이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는 30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중요시함.
-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법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왔음. 그러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법제도적 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매우 더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법제도적 변화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 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경기도민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임.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여성응답자(1순위)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예방(27.5%) >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24.7%) >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13.3%)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11.0%) > 직업능력교육과정의 다양화(8.0%) > 여성근로자 차별방지(7.0%) >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지원(4.9%) >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2.5%) > 남성다수직종에 여성진출 확대(1.2%)
- 가구주(1순위)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28.2%) >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23.3%) >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13.0%)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11.1%) > 직업능력교육과정의 다양화(8.4%) > 여성근로자 차별방지(6.2%) >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지원(4.5%) >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3.4%) > 남성다수직종에 여성진출 확대(2.2%)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1순위 조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들 내부에서도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남. 우선, 청년 여성층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은 20대, 미혼이 상대적으로 요구가 높음.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정책은 20대와 30대, 대졸이상,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요구가 높음.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은 사별/이혼,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여성들의 요구가 높음.
- 한편, 여성응답자의 복수응답 결과 여성근로자 차별방지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됨. 이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해 1순위로 중요한 정책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요한 정책 과제로 다뤄져야 하는 정책임을 시사함. 특히, 20대, 미혼 여성들이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 정책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중이지만 직접 사업으로는 주로 미취업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음. 그러나 경기도민들은 경력단절 후 사후처방 차원의 정책보다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력단절예방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로 나타남. 이러한 경기도민의 조사결과는 향후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임.

5.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

- 여성응답자 : 경제적 자립지원(0.5%) > 자녀양육 지원(30.6%) > 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지원(11.0%)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7.7%)
- 가구주 : 경제적 자립 지원(53.3%) > 자녀양육 지원(30.6%) > 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지원(9.8%) >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6.1%)
- 조사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집단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자립지원의 경우 50대 이상, 중졸 이하, 1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한편,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20대와 30대 여성, 대졸이상, 400-500만원 미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음.

□ 미혼모 지원 정책

- 여성응답자 :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30.2%) >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29.1%)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24.4%) >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15.8%)
- 가구주 :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28.8%) >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28.4%) >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27.0%) >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15.1%)
- 다른 정책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의 집단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가구여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 한편, 앞서 살펴본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고 응답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미혼모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세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20~30% 사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향후 미혼모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임.

- 미혼모 지원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미세하지만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경기도민들이 ‘미혼모 문제’ 해결의 주체로 ‘미혼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따라서 향후 미혼모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미혼부의 양육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여성노인 지원 정책

- 여성응답자 : 생계비 지원(24.4%) > 혼자 사는 여성 노인 돌봄사업(17.9%) > 요양원(실버타운)등 주거 지원(17.6%) > 건강관련 지원 (16.0%) > 일자리 관련 지원(15.4%)
- 가구주 : 생계비 지원(23.2%) > 혼자사는 여성노인 돌봄 사업(18.8%) > 건강 관련 지원(18.0%) > 일자리 관련 지원(17.5%) > 요양원(실버타운)등 주거지원(15.4%) >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 제공(7.1%)
- 여성노인지원 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모두 10% 후반에서 20% 중반의 비율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노인 지원 정책이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대상별로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혼자 사는 여성노인 돌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20대 여성이 50대 이상 여성보다 10%p 정도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는 사실이 두드러짐. 이는 여성노인 정책의 실질적인 대상자는 여성노인이지만, 정책의 효과는 자녀 등 다음 세대와 관련된다는 것을 암시함.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이 세대 간 연관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은 향후 여성노인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여성노인의 건강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사별/이혼,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함.

□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 여성응답자 : 사회참여를 확대를 위한 지원(31.9%) > 일자리 관련 지원(27.2%) > 건강 및 의료지원(19.3%) >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9.4%) > 기초 교육 지원(7.8%) > 그룹 홈 등 주거지원(4.3%)
- 가구주 :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32.4%) > 일자리 관련 지원(29.3%) > 건강 및 의료지원사업(20.8%) > 기초교육지원(7.0%) >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6.0%) > 그룹홈 등 주거지원(4.5%)
-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정책과 일자리 지원 정책의 중요성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상호연관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여성장애인 정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됨.
-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은 30대, 300만원대 가구소득 여성들이, 건강 및 의료지원 사업은 50대 이상, 중졸이하 여성들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 여성응답자 : 언어소통지원(26.6%) >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19.8%) > 일자리 관련 지원(16.1%)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12.9%) >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11.2%)
- 가구주 : 언어소통 지원(27.0%) > 다문화 가족(부부, 부모)을 위한 프로그램(21.1%) > 일자리 관련 지원' (16.9%)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확대(11.9%) >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11.2%) > 결혼이주여성 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8.7%) >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3.1%)
-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에 해당함. 궁극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임. 그러나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됨.

□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 여성응답자(1순위) : 한부모여성 지원(47.0%) > 여성노인 지원(20.8%) > 미혼모 지원(16.5%) > 여성장애인 지원(13.5%) > 결혼이주여성 지원(2.1%)
- 가구주(1순위) : 한부모여성 지원(47.2%) > 여성노인 지원(21.3%) > 미혼모 지원(15.7%) > 여성장애인 지원(13.0%) > 결혼이주여성 지원(2.9%)
- 여성응답자의 1순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집단별로 다소 차이를 보임.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은 40대, 사별/이혼 여성이, 미혼모 지원 정책은 20대, 미혼 여성이, 여성노인 지원 정책은 50대 이상,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여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함. 이는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잠재적인 정책대상자 집단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됨.

6.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

□ 가정폭력 예방 정책

- 여성응답자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37.3%) >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24.3%) > 가정폭력 예방교육(21.6%)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16.8%)
- 가구주 :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33.5%) > 가정폭력 예방교육(28.7%) >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22.7%) >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15.0%)
- 여성응답자 중에서는 중졸이하, 단독주택 거주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음.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가정폭력 가해자처벌 및 교정사업, 남성가구주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이 모두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음. 특히,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임.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권

한은 없지만, 향후 가해자에 대한 교정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성폭력 예방 정책

- 여성응답자 :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43.5%) > 성폭력 예방교육(21.3%) >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15.0%) >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 유지(11.4%) >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8.7%)
- 가구주 :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43.2%) > 성폭력 예방교육(23.5%) >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14.1%) >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11.2%) >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8.0%)
- 경기도민들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의 경우도 가정폭력 예방 정책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이라고 생각하였음. 특히,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3% 정도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보다 현저하게 높았음.
- 성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폭력 예방정책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졌음.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은 연령이 낮은 집단, 취업여성, 아파트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 도시지역 거주여성이 상대 집단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가정폭력 예방 교육 정책과 달리 성폭력 예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 남성가구주의 경우도 가정폭력 보다는 성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권한은 부재함.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교정사업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성매매 예방 정책

- 여성응답자 :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정사업(52.6%) > 성매매 예방교육(17.5%) > 성매매피해 여성 자립지원(12.4%) > 성매매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확대(11.4%) > 성매매지역 및 시설 단속(6.1%)
- 가구주 :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정사업(44.8%) > 성매매 예방교육(21.2%) >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14.8%) >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12.1%) >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7.2%)
- 여성응답자의 집단별로 차이를 보임.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예방 정책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크게 인식함. 반면, 연령이 낮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아파트 거주여성, 가구소득이 높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남. 향후 성매매 예방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여성내부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는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가구주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 사업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

- 여성응답자 : 방법취약지역 CCTV 설치(43.8%) > 경찰의 순찰 강화(21.7%) >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20.9%) >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9.0%) >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4.5%)
- 가구주 : 방법취약지역 CCTV 설치(43.5%) >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22.2%) > 경찰의 순찰 강화(21.0%) >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10.2%) >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3.0%)
- 여성응답자의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경찰의 순찰 강화를, 30대 이상은 방법취약지역 CCTV 설치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 거주여성은 CCTV 설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은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

역 거주여성은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도시지역 여성은 경찰의 순찰강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정책들이 다 중요하지만, 경기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방법취약지역 CCTV 설치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

- 여성응답자 :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체계 구축(60.8%) > 차량, 보행 도로 분리(19.4%) > 여성, 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11.3%) >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조성(8.0%)
- 가구주 :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59.4%) > 차량-보행 도로 분리(보행 안전성 확보)(21.3%) > 여성·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11.7%) >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조성(7.4%)
-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 중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향후 정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임.
- 여성응답자 내부의 차이도 나타남.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은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구축, 20대와 30대는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조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성은 차량-보행 도로 분리, 미취업여성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조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여성은 대중교통 체계 구축,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은 차량-보행 도로 분리, 여성과 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함.
- 언뜻 볼 때 대중교통 관련 정책은 여성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여성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분야임. 여성들의 경우 자가운전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반면 대중교통이용률은 높고, 무엇보다 여성들은 아동을 동반하고 이동하는 경우도 많음. 경기도의 경우 지역이 넓어 도민들의 생활에 대중교통

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시설이 됨. 이 때 여성들의 연령별, 주택유형별, 생활권별 차이를 고려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됨.

□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여성응답자(1순위)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40.3%)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31.0%) >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22.4%) >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3.6%)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2.7%)
- 가구주(1순위) :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44.8%) >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28.6%) >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22.2%)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2.4%) >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2.0%)
- 조사결과를 2순위를 포함해 복수응답으로 분석해 보면 1순위 결과와 달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민들이 가정폭력 예방 정책 못지않게 성폭력 예방 정책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줌.
- 한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나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는 1순위 결과에서는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나 우선순위에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차지함. 그런데 복수응답 결과에서는 이들 정책 간에도 다소 차이를 보임. 즉, 2순위를 포함해 분석하면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응답률은 현저하게 높아지는데(여성응답자 46.9%),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응답률은 여전히 낮기 때문임(여성응답자 12.7%). 이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을 만드는 정책과 달리 성매매 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됨.
- 여성응답자 조사결과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남. 우선,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은 40대와 50대 이상, 중졸이하, 단독주택,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함. 반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은 20대, 미혼, 대졸이상 여성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함. 또한 20대의 경우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의 필요성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함. 혼인상태별 차이도 크게 나타남. 사별/이혼 여성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이나 유배우자 여성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의 경우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함.

- 경기도 여성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 여성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들 내부의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여성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향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여성 집단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다른 정책 분야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됨.

7. 여성건강 · 문화 · 여가 부문

□ 여성건강 정책

- 여성응답자 :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31.6%) >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16.1%)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13.6%) >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지원(13.5%) >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12.7%) > 여성특성화 질병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12.3%)
- 가구주 :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27.0%) >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16.9%) >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16.0%) >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15.7%) > 여성특성화 질병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13.3%) >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지원(11.0%)
-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을 제외한 여성건강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건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예상할 수 있듯이 여성들의 연령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여성응답자의 경우, 임신 ·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 정책은 20대와 30대, 미혼, 대졸이상 여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함.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지원은 50대 이상, 사별/이혼, 중졸이하 여성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은 20대, 미혼, 맞벌이 가구 여성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사별/이혼,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여성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음.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는 학력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음.

□ 문화 및 여가 관련 정책

- 여성응답자 :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54.5%) >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19.0%) > 다양한 시대간의 문화프로그램 확대(15.2%) > 문화,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7.7%) > 문화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3.2%)
- 가구주 :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50.7%) >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22.7%) > 다양한 시대간의 문화프로그램 확대(15.1%) > 문화,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7.6%) > 문화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3.7%)
-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나타남. 저렴한 비용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40대,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여성,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400만원 가구소득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함. 취업여성의 경우 미취업여성에 비해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 프로그램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이는 미취업 여성에 비해 문화생활에 있어 시간제약을 받는 취업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됨.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이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 확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여성정책 중에서 다른 분야의 정책과 달리 문화 및 여가생활 관련 정책은 여성 중에서도 특정한 정책대상이 있는 분야가 아니라 모든 여성이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야임. 따라서 위와 같은 여성 집단별 요구의 차이가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함. 예를 들어, 도농복합지역 여성의 경우 저렴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도시지역에 비해 높았음. 문화

생활을 향유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의 문제와 함께 접근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문화시설은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에 있어서 저렴한 문화프로그램의 확대에 일정 부분 선행되어야 할 정책임. 따라서 조사결과는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여성을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8. 돌봄 부문

□ 보육 정책

- 여성응답자(1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45.2%)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13.5%) > 직장어린이집 확대(12.0%) >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10.5%) > 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5.2%) >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4.2%) >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2.7%) > 영아 전담 어린이집 확대(2.7%) > 가정파견보육서비스 확대(2.1%) > 장애아보육 지원확대(1.9%)
- 가구주(1순위) : 국공립어린이집 확대(51.7%) >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12.6%) >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9.9%) > 직장어린이집 확대(9.3%) > 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3.4%) > 영아 전담 어린이집 확대(3.1%) >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3.1%) > 장애아보육 지원확대(2.4%) > 가정파견보육서비스 확대(2.3%) >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2.2%)
-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는 경기도 여성들 중에서도 50대 이상, 중졸이하, 200만원 미만 가구소득, 도시지역 여성들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이는 어린이집의 시설주체가 민간이 아닌 국공립이라는 것인데 경기도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결국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대, 민간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높은 요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보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운영 주체가 누구이든, 보육대상 아동이 누구이든(영아, 장애아

등) 기본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함.

- 한편,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의 경우 30대, 외벌이 가구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함. 특히, 현재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양육수당 확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함.

□ 아동·청소년 정책

- 여성응답자(1순위) : 방과 후 돌봄서비스(40.7%) > 아동·청소년 인성교육(32.2%) > 아동·청소년 상담지원(10.2%) > 아동·청소년직업체험 및 진로교육(9.1%) >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6.2%) > 아동·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확대(1.6%)
- 가구주(1순위) : 방과 후 돌봄서비스(47.0%) > 아동·청소년 인성교육(26.8%) > 아동·청소년 상담지원(11.2%) > 아동·청소년직업체험 및 진로교육(7.2%) >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6.9%) > 아동·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확대(0.8%)
- 여성응답자 집단별로도 차이가 있었음.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30대, 맞벌이 가구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함.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은 30대, 대졸이상, 400만원대 가구소득, 외벌이, 도농복합지역, 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함.
- 조사결과 아동청소년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취학 자녀가 현재 있는 여성들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보다도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음. 또한 여성응답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를 2순위까지 합한 결과는 1순위 분석결과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보다 높게 나타남.
-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방과 후 돌봄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집단별 요구에 따라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 여성응답자(1순위) : 결식아동 급식지원(29.9%) > 학교 폭력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24.2%) >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12.0%) >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11.4%) >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9.1%) >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4.5%) >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 재활프로그램 확대(3.8%) >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지원(2.8%) > 청소년한부모 지원(2.4%)
- 가구주(1순위) : 결식아동 급식지원(33.2%) > 학교 폭력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 (22.3%) >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11.7%) >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10.6%) >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9.4%) >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4.0%) >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지원(3.1%) >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 재활프로그램 확대, 청소년한부모 지원(2.9%)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은 3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임.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과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순위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것임. 특히, 여성들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였음.
-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수요는 정책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성인 또는 보호자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것임.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 여성응답자(1순위) :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54.4%) >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15.7%) > 개별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13.7%) > 장애인 지원시설 확대(8.1%) > 근로자가 가족간호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6.2%)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1.8%)

- 가구주(1순위) :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57.4%) >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14.8%) > 개별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11.8%) > 장애인 지원 시설 확대(8.8%) > 근로자가 가족 간호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4.8%)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8.8%)
- 경기도민 약 2명 중 1명 이상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꼽았음. 정책대상으로서 노인의 경우 장애인 등 다른 정책대상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인 관련 정책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임.
- 그런데 노인 관련 정책 중에서도 가사간병도우미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경기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 돌봄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음.
- 여성응답자의 조사결과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음.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에 대한 요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현저하게 높아졌음. 학력별로도 차이가 보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지원 시설과 같은 시설 확대 정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음. 주택형태별로는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음.
-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음. 여성가구주도 저렴한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높았음.

9. 가족 부문

□ 저출산 정책

- 여성응답자 : 자녀양육비용 지원확대(43.9%) >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경감 등 교육관련 정책(20.8%) >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13.8%)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의 제공(10.5%)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7.9%) > 가족친화적인 직장, 사회환경 조성(2.9%)

- 가구주 : 자녀양육비용 지원확대(43.9%) >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경감 등 교육관련 정책(22.3%) >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14.8%) >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의 제공(9.4%) >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6.5%) > 가족친화적인 직장, 사회환경 조성(3.0%)
- 경기도민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자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향후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파도 일맥상통함. 여성들 중에서도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학력별로는 고졸, 가구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임.
-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가 드러남.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는 30대, 사별/이혼, 중졸이하, 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이 더욱 중요시함. 교육관련 정책은 40대, 400만원 이하 가구소득, 도시지역 거주 여성의 요구가 더 높았음.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수요는 20대, 미혼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았음. 이러한 사실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수요가 여성내부에서도 연령, 소득 등 차이에 따라 더욱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음.
-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를, 남성 가구주의 경우 교육관련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음.
-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아님. 출산·양육·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들이 유기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남. 특히, 자녀양육 비용 확대 다음으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등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저출산 정책의 범주가 출산, 양육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분야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함. 즉, 최근 저출산 정책의 방향이 주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육의 문제에서 자녀교육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

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플랜이 요구되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고 생각됨.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 여성응답자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1.1%) >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33.2%) > 가족상담 프로그램 확대(16.5%) >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확대(9.3%)
- 가구주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1.8%) >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34.2%) > 가족상담 프로그램 확대(15.7%) >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확대(8.1%)
-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드러남.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50대 이상, 사별/이혼,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여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의 요구가 현저하게 높았음. 20대 여성의 경우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보다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41.5%)이 더 높게 나타남.
-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 상담 프로그램 을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 가족문화를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정책임. 따라서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여성 집단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됨. 특히, 경기도민의 요구에 부응해 향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 여성응답자 :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휴가제도 활성화(35.3%) >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25.3%) >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19.8%)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정(19.6%)

- 가구주 :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휴가제도 활성화(36.3%) >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26.9%)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정(20.6%) >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16.1%)

- 자녀양육 ·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 휴가제도 활성화에 대해서는 30대, 200만원대 가구소득 여성들의 요구가 높았음.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 제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 이 외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즉, 남성가구주의 경우 여성가구주에 비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인식함. 반면, 여성가구주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남성의 가정 내 역할교육 강화를 상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성가구주는 가족생활 참여의 조건으로 ‘시간’의 문제를, 여성가구주는 ‘문화와 교육’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여성응답자(1순위) : 한부모 가족지원(44.3%) > 장애인가족지원(16.2%) > 노인가족지원(15.0%) > 조손가족지원(12.4%) > 다문화가족지원(8.2%) > 입양가족지원(3.1%) > 북한이탈주민가정지원(0.8%)

- 가구주(1순위) : 한부모 가족지원(41.1%) > 장애인가족지원(16.6%) > 노인가족 지원(14.5%) > 조손가족지원(12.6%) > 다문화가족지원(11.3%) > 입양가족지원(2.8%) > 북한이탈주민가정지원(1.1%)

- 여성응답자 중에서는 30대, 사별/이혼 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더욱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1순위, 2순위를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도 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이 가장 높았으나, 노인가족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졌음. 노인가족 지원은 50대 이상, 중졸이하 여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목 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7

제2장 이론적 배경

1. 개 념	13
가. 여성정책	13
나. 가족정책	15
2. 선행연구 검토	18
가. 여성정책	18
나. 가족정책	27

제3장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현황

1. 조 례	35
2. 인력 및 예산	38
가. 담당기구 및 인력	38
나. 예 산	42
3. 분야별 정책 현황	44
가. 여성정책	44
나. 가족정책	53
다. 저출산정책	58
라. 아동·청소년정책	63

마. 소 결	67
--------------	----

제4장 경기도 여성가족 현황

1. 인 구	71
가. 인구구성	71
나. 외국인 인구	72
2. 경 제	74
가. 경제활동	74
나. 근로조건	77
3. 자녀양육	79
가. 보 육	79
나. 교 육	82
4. 가족생활	85
가. 가족 구성	85
나. 가족가치관	90

제5장 설문조사 방법

1. 조사 개요	95
2. 표본 설계	95
가. 모집단	95
나. 표본추출틀	101
다. 층화 및 분류지표	101
라. 표본규모	101
마. 표본조사구 및 표본가구 추출	102
바. 가중치 작성 및 추정	105
3. 조사 체계	106

제6장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111
가. 가 구	111
나. 여성응답자	113
다. 가구주	113
2.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118
가. 분야별 비교	118
나. 법 및 제도	120
다. 정치참여	120
라. 교 육	123
마. 가족생활	123
바. 경제활동	126
사. 문화 및 인식	126
3. 여성·가족정책 우선순위	129
가. 여성정책	129
나. 가족정책	135
다. 정책추진체계	141
4. 여성경제활동 부문	146
가. 경제활동 현황	146
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	160
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163
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168
5.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175
가.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	176
나. 미혼모 지원 정책	178
다. 여성노인 지원 정책	181
라.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184

마.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186
바. 취약계층 여성복지 정책 우선순위	189
6.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	194
가. 가정폭력 예방 정책	194
나. 성폭력 예방 정책	197
다. 성매매 예방 정책	199
라.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	201
마.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	204
바.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206
7. 여성건강·문화·여가 부문	212
가. 여성건강 정책	212
나. 문화 및 여가 관련 정책	217
8. 돌봄 부문	226
가. 보육 정책	226
나. 아동·청소년 정책	234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246
9. 가족 부문	251
가. 저출산 정책	251
나.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255
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268
라.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260

제7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여성가족정책 우선순위	267
2. 여성경제활동 부문	270
3.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273

4.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	277
5. 여성건강·문화·여가 부문	281
6. 돌봄 부문	284
7. 가족 부문	287
 참고문헌	 291
 부 록	 295
부록 1. 경기도 가구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분석 결과표	297
부록 2.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여성가구주)	342
부록 3.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여성가구원)	353
부록 4.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남성가구주)	365

표 목 차

〈표 1-1〉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9
〈표 2-1〉 가족정책 개념(선행연구)	17
〈표 2-2〉 여성정책 수요조사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결과	26
〈표 3-1〉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	36
〈표 3-2〉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구의 인력현황(2012.03현재)	39
〈표 3-3〉 경기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2012.03현재)	41
〈표 3-4〉 경기도 여성관련 사업소 주요업무(2012.03현재)	42
〈표 3-5〉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여성가족정책 예산(2005~2011)	42
〈표 3-6〉 경기도 가족여성정책 담당 기구 내 분야별 예산(2010~2011)	43
〈표 3-7〉 제1차 및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성과	45
〈표 3-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과제	47
〈표 3-9〉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여성인력활용	49
〈표 3-10〉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여성권익보호	51
〈표 3-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53
〈표 3-12〉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1~2015)	55
〈표 3-13〉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57
〈표 3-14〉 저출산 정책 중점과제	60
〈표 3-15〉 경기도 저출산 정책 시행계획(2012)	61
〈표 3-16〉 제4차 청소년정책 세부과제	64
〈표 3-17〉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계획(2011)	66
〈표 3-18〉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연계성	68
〈표 4-1〉 경기도 여성인구 추이(2007~2011)	71
〈표 4-2〉 경기도 연령별 인구(2011)	71
〈표 4-3〉 경기도의 인구이동(2007~2011)	72

〈표 4-4〉 경기도 외국인 여성인구 추이(2007~2011)	72
〈표 4-5〉 경기도 연령별 외국인 인구(2011)	73
〈표 4-6〉 경기도의 출신국가별 외국인 인구(2011)	73
〈표 4-7〉 경기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2007~2011)	74
〈표 4-8〉 경기도 산업별 성별 취업자(2010)	75
〈표 4-9〉 경기도 직업별 성별 취업자(2010)	75
〈표 4-10〉 경기도 종사상지위별 성별 취업자 (2010)	76
〈표 4-11〉 경기도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2007~2011)	76
〈표 4-12〉 경기도 근로자 각종 급여(2011)	77
〈표 4-13〉 경기도 근로자 산업별 월급여(2011)	77
〈표 4-14〉 경기도 근로자 산업별 노동시간(2011)	78
〈표 4-15〉 경기도 5세 이하 성별 인구(2011)	79
〈표 4-16〉 경기도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2011)	80
〈표 4-17〉 경기도 연령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2011)	81
〈표 4-18〉 경기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2011)	81
〈표 4-19〉 경기도 특수어린이집 유형별 정원충족률(2011)	82
〈표 4-20〉 경기도 유치원수 및 원아수(2007~2011)	82
〈표 4-21〉 경기도 초·중학교 수 및 학생수(2007~2011)	83
〈표 4-22〉 경기도 고등학교 수 및 학생수(2007~2011)	83
〈표 4-23〉 경기도민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2010)	84
〈표 4-24〉 경기도민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2010)	84
〈표 4-25〉 경기도 학생의 과외수업 여부(2011)	85
〈표 4-26〉 경기도 혼인수 및 조혼인율(2007~2011)	86
〈표 4-27〉 경기도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2007~2011)	86
〈표 4-28〉 전국 및 경기도 국제결혼 현황(2007~2011)	87
〈표 4-29〉 경기도 외국인 아내 출신국적 분포(2011)	87
〈표 4-30〉 경기도 외국인 남편 출신국적 분포(2011)	88
〈표 4-31〉 경기도 이혼수 및 조이혼율(2007~2011)	88

〈표 4-32〉 경기도민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수별 이혼건수(2011)	89
〈표 4-33〉 경기도민 혼인형태별 비율(2007~2011)	89
〈표 4-34〉 경기도민 이혼사유별 비율(2007~2011)	90
〈표 4-35〉 경기도민 결혼에 대한 견해(복수응답)(2010)	90
〈표 4-36〉 경기도민 이혼에 대한 견해(2010)	91
〈표 4-37〉 경기도민 입양에 대한 견해(2010)	91
〈표 4-38〉 경기도민 노부모부양에 대한 견해(2010)	92
〈표 5-1〉 조사모집단 가구별 분포	96
〈표 5-2〉 조사모집단 주택유형별 분포	97
〈표 5-3〉 조사모집단 연령별 분포	98
〈표 5-4〉 조사모집단 혼인상태별 분포	99
〈표 5-5〉 조사모집단 학력별 분포	100
〈표 5-6〉 분류지표	101
〈표 5-7〉 표본규모에 따른 오차의 한계	102
〈표 5-8〉 층별 표본배분(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103
〈표 5-9〉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표본리스트	104
〈표 5-10〉 조사원 등 역할 분담	107
〈표 6-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112
〈표 6-2〉 여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14
〈표 6-3〉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115
〈표 6-4〉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인적 특성	116
〈표 6-5〉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 특성	117
〈표 6-6〉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법 및 제도(여성)	121
〈표 6-7〉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정치참여(여성)	122
〈표 6-8〉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교육(여성)	124
〈표 6-9〉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가족생활(여성)	125
〈표 6-10〉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경제활동(여성)	127

〈표 6-11〉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문화 및 의식(여성)	128
〈표 6-12〉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131
〈표 6-13〉 여성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133
〈표 6-14〉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138
〈표 6-15〉 가족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139
〈표 6-16〉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여성)	143
〈표 6-17〉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여성)	145
〈표 6-18〉 경제활동 여부 및 고용형태(여성)	148
〈표 6-19〉 취업여성의 종사산업	149
〈표 6-20〉 취업여성의 종사직업	150
〈표 6-21〉 취업여성의 주당 근무시간	150
〈표 6-22〉 취업여성의 월평균급여	151
〈표 6-23〉 미취업여성의 구직활동 여부	151
〈표 6-24〉 구직여성의 희망고용형태	151
〈표 6-25〉 구직여성의 구직활동 어려움	152
〈표 6-26〉 미취업여성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153
〈표 6-27〉 경제활동 여부 및 고용형태(가구주)	156
〈표 6-28〉 취업가구주의 종사산업	157
〈표 6-29〉 취업가구주의 종사직업	158
〈표 6-30〉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여성)	161
〈표 6-3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여성)	164
〈표 6-32〉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여성)	167
〈표 6-33〉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171
〈표 6-34〉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173
〈표 6-35〉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여성)	177
〈표 6-36〉 미혼모 지원 정책(여성)	180
〈표 6-37〉 여성노인 지원 정책(여성)	183
〈표 6-38〉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여성)	185

〈표 6-39〉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여성)	188
〈표 6-40〉 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191
〈표 6-41〉 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193
〈표 6-42〉 가정폭력 예방 정책(여성)	196
〈표 6-43〉 성폭력 예방 정책(여성)	198
〈표 6-44〉 성매매 예방 정책(여성)	200
〈표 6-45〉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여성)	203
〈표 6-46〉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여성)	205
〈표 6-47〉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08
〈표 6-48〉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210
〈표 6-49〉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여성)	213
〈표 6-50〉 여성건강 지원 정책(여성)	215
〈표 6-51〉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여성)	218
〈표 6-52〉 문화 및 여가생활에 불만족한 이유(여성)	219
〈표 6-53〉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정책(여성)	221
〈표 6-54〉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여성)	224
〈표 6-55〉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여성)	225
〈표 6-56〉 자녀 양육의 어려움(여성)	227
〈표 6-57〉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30
〈표 6-58〉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232
〈표 6-59〉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37
〈표 6-60〉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239
〈표 6-6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42
〈표 6-6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245
〈표 6-6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49
〈표 6-64〉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251
〈표 6-65〉 출산 계획 및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여성)	254
〈표 6-66〉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여성)	255

〈표 6-67〉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여성)	258
〈표 6-68〉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여성)	260
〈표 6-69〉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63
〈표 6-70〉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264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0
〈그림 3-1〉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구(2012.03현재)	38
〈그림 3-2〉 여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46
〈그림 3-3〉 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54
〈그림 3-4〉 저출산 정책 목표 및 정책과제	59
〈그림 3-5〉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개요	63
〈그림 5-1〉 조사체계	107
〈그림 6-1〉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여성)	118
〈그림 6-2〉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가구주)	119
〈그림 6-3〉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130
〈그림 6-4〉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132
〈그림 6-5〉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134
〈그림 6-6〉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135
〈그림 6-7〉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136
〈그림 6-8〉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137
〈그림 6-9〉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140
〈그림 6-10〉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141
〈그림 6-11〉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가구주)	142
〈그림 6-1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가구주)	146
〈그림 6-13〉 경제활동 여부 및 고용형태(가구주)	154
〈그림 6-14〉 취업가구주 주당 근로시간	159
〈그림 6-15〉 취업가구주 월평균급여	159
〈그림 6-16〉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가구주)	162
〈그림 6-1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가구주)	165

〈그림 6-18〉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가구주)	168
〈그림 6-19〉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169
〈그림 6-20〉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172
〈그림 6-21〉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174
〈그림 6-22〉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175
〈그림 6-23〉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가구주)	178
〈그림 6-24〉 미혼모 지원 정책(가구주)	179
〈그림 6-25〉 여성노인 지원 정책(가구주)	182
〈그림 6-26〉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가구주)	186
〈그림 6-27〉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가구주)	187
〈그림 6-28〉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190
〈그림 6-29〉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192
〈그림 6-30〉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194
〈그림 6-31〉 가정폭력 예방 정책(가구주)	195
〈그림 6-32〉 성폭력 예방 정책(가구주)	197
〈그림 6-33〉 성매매 예방 정책(가구주)	201
〈그림 6-34〉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가구주)	202
〈그림 6-35〉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가구주)	206
〈그림 6-36〉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07
〈그림 6-37〉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209
〈그림 6-38〉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211
〈그림 6-39〉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211
〈그림 6-40〉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가구주)	216
〈그림 6-41〉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정책(가구주)	222
〈그림 6-42〉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여성)	229
〈그림 6-43〉 취학 전 자녀유무에 따른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29
〈그림 6-44〉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231
〈그림 6-45〉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233

〈그림 6-46〉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234
〈그림 6-47〉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35
〈그림 6-48〉 취학자녀유무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36
〈그림 6-49〉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238
〈그림 6-50〉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240
〈그림 6-51〉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240
〈그림 6-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41
〈그림 6-53〉 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	243
〈그림 6-5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	244
〈그림 6-5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244
〈그림 6-5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	246
〈그림 6-57〉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247
〈그림 6-58〉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	249
〈그림 6-59〉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251
〈그림 6-60〉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가구주)	255
〈그림 6-6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가구주)	256
〈그림 6-6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가구주)	260
〈그림 6-63〉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	261
〈그림 6-64〉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264

부표목차

〈부표 1〉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법 및 제도(가구주)	301
〈부표 2〉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정치참여(가구주)	302
〈부표 3〉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교육(가구주)	303
〈부표 4〉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가족생활(가구주)	304
〈부표 5〉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경제활동(가구주)	305
〈부표 6〉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문화 및 의식(가구주)	306
〈부표 7〉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307
〈부표 8〉 여성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308
〈부표 9〉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309
〈부표 10〉 가족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310
〈부표 11〉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가구주)	311
〈부표 1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가구주)	312
〈부표 13〉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가구주)	313
〈부표 14〉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가구주)	314
〈부표 15〉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315
〈부표 16〉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 복수응답(가구주)	316
〈부표 17〉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가구주)	317
〈부표 18〉 미혼모 지원 정책(가구주)	318
〈부표 19〉 여성노인 지원 정책(가구주)	319
〈부표 20〉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가구주)	320
〈부표 21〉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가구주)	321
〈부표 22〉 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322
〈부표 23〉 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323
〈부표 24〉 가정폭력 예방 정책(가구주)	324
〈부표 25〉 성폭력 예방 정책(가구주)	325

〈부표 26〉 성매매 예방 정책(가구주)	326
〈부표 27〉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가구주)	327
〈부표 28〉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가구주)	328
〈부표 29〉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329
〈부표 30〉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330
〈부표 31〉 여성건강 지원 정책(가구주)	331
〈부표 32〉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정책(가구주)	332
〈부표 33〉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333
〈부표 34〉 취학 전 자녀 양육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334
〈부표 35〉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335
〈부표 36〉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336
〈부표 37〉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337
〈부표 3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338
〈부표 39〉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339
〈부표 40〉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340
〈부표 41〉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가구주)	341
〈부표 42〉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가구주)	342
〈부표 43〉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가구주)	343
〈부표 44〉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344
〈부표 45〉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345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오랫동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1980년대 까지도 여성관련 정부정책은 가족법개정과 출산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인구정책이 주를 이루었다(김경희, 2002). 그러나 1995년 세계여성대회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적인 여성정책의 전략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개념을 수용하고¹⁾,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체계적인 여성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여성정책 추진기구에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1988년 최초로 여성정책전담부서인 정무장관실(제2)이 설치되었고, 이후 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1998)를 거쳐 2001년에는 여성부가 설립되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1998년부터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큰 틀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실제적인 지침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에서 가족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사회적으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안이 발의된 시기이다.²⁾ 당시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싸고 가족의 개념, 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으나, 2005년 제정된 「건강가족기본법」은 우리나라 ‘최초의 가족기본법’이며, 이를 통해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강희경, 2005; 김혜경, 2005; 이승미 외, 2006; 김미숙, 2008; 윤경자, 2008).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과 이에 따라 2006년부터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에

1) 그 동안 여성정책은 여성을 경제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미활용된 자원으로 ‘발전 속의 여성’(WID: Woman In Development)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WID 접근은 여성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제기된 것이 ‘젠더와 발전’(GAD: Gender and Development) 관점이다. GAD 접근은 여성보다는 젠더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단지 ‘여성’이라는 범주 뿐만 아니라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위치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 나아가 1995년 세계여성대회에서 주류의 모든 영역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성 주류화’ 전략이 채택되면서 여성정책의 영역이 보다 확대되었다(정형옥 외, 2009).

2)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근거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비전을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가족기능강화,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³⁾

한편, 1995년 실시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중앙정부 주도로 실시되던 여성가족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도 많이 변화하였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입안한 정책을 시행하는 행정적인 기능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여성가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되면서 유권자인 여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지역여성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중앙정부의 여성가족정책이 법·제도의 변화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여성가족정책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성문제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정책집행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공선영 외, 2008).

지역의 여성가족정책은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역량, 지역 여성운동과의 역학관계 등에 따라 각 지역 간의 편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의 여성가족정책은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삶의 조건이 같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지역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역의 여성가족정책도 기본적인 방향과 틀은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건강가족기본계획」에 근거하지만, 지역별 여성가족 현황과 특성에 따라 여성가족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수정(판)」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간 여성정책 연계 및 상향평준화를 주요 추진 계획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다양한 가족형태의 증가, 가족 내 돌봄 기능의 약화 등 사회적 환경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고 여성의 삶의 조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성의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다. 가족 내의 제한된 자원과 가부장적 인식으로 인해 오랫동안 여성은 남성과

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최종 검색일 2012.3.20)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러한 교육에서의 성차별은 사회전반에서의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인구구조의 변화,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을 기대하는 한국적 교육열 등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변화된 현실은 여성의 대학진학률만 살펴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 31.9%에 불과했으나 이후 가빠르게 증가해 2005년에는 80.8%를 기록했고, 2009년부터는 남성의 대학진학률을 넘어서기 시작했다.⁴⁾ 한편, 1980년대 까지 40% 초반에 머물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47.0%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7%로 2000년 이후 답보상태에 있으며, 성별 격차(남성 경제활동참가율 73.1%)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⁵⁾ 또한 OECD 평균 여성경제활동참가율(61.8%, 2010)⁶⁾에 비해서도 10%p 이상 낮게 나타난다. 동시에 우리사회는 인구학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른바 ‘저출산’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0년 현재 1.31명에 불과하다.⁷⁾ 이는 OECD 평균 1.74명(2009년)⁸⁾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가족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여성의 무급노동에 기대어 온 ‘돌봄노동’의 문제를 어떻게 사회화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위와 같이 사회적 및 정책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지역여성과 가족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정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해 경기도 여성과 가족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향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4)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6)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7)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8) OECD, 「Society at a Glance 2011: OECD Social Indicators」.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본 연구는 경기도민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요구를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가족정책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우선,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개념을 통해 각 정책의 범주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선행되어온 여성가족정책 관련 연구를 검토하였다.

둘째,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 현황을 분석하였다.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의 근거가 되는 조례와 담당기구 및 인력, 예산을 통해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추진체계를 파악하였다. 이어서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 중인 여성가족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여성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 등 관련 기본계획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시행 중인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을 분석하였다.

셋째, 경기도 여성 및 가족 관련 현황을 분석하였다. 인구, 경제, 자녀양육, 가족생활 관련 통계현황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여성 및 가족 관련 기초적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였다.

넷째,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우선, 총괄적으로 여성가족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요구 및 정책추진체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여성경제활동 부문,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 여성건강·문화·여가 부문, 돌봄 부문, 가족 부문으로 나누어 분야별 정책수요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한 후, 향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이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 연구방법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수요조사를 위한 본 연구에서는 주요 연구방법으로 기초통계자료 수집, 관련 문헌연구, 그리고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초통계 수집 및 문헌연구

- 경기도 여성 및 가족 관련 기초통계 수집 및 분석
-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 관련 논문 및 자료집, 정책연구보고서 검토
- 경기도 여성 및 가족정책 현황 분석

2) 정책간담회(1차)

- 대상 : 경기도 및 경인지방통계청 관련 공무원
- 안건 : 연구범위 및 설문지(안) 검토
- 일시 : 2011.12.27

3) 원내 전문가 의견수렴

- 대상 : 보육, 청소년, 가족, 다문화 관련 원내 전문가 4인의 의견수렴
- 안건 : 분야별 설문지(안) 검토
- 일시 : 2012.1.3 ~ 1.6

4) 사전 설문조사 실시(Pre-test)

- 대상 : 총 20가구(수원시 10가구, 구리시 10가구)
- 목적 : 사전 조사결과 반영 설문지(안) 수정
- 일시 : 2012.1.12 ~ 1.13

5) 중간보고회

- 대상 : 외부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4인
- 안건 : 연구방법 및 설문지(안) 검토
- 일시 : 2012.1.17

6) 설문조사

- 조사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가구주와 여성가구원
- 표본규모 : 총 1,995 가구(100개 조사구)의 3,647명(여성 2,302명, 남성 1,345명)
 - ※ 1개 조사구에서 조사대상 가구가 부족하여 15가구만 조사
- 조사방법 : 가구방문 면접조사
- 조사내용 : 개인관련사항, 여성경제활동, 취약계층 여성복지, 여성폭력 및 안전, 여성 건강·문화·여가, 돌봄, 가족, 정책추진체계, 여성·가족정책 향상도와 우선순위, 가구관련사항

7) 정책간담회(2차)

- 대상 : 경기도 관련 공무원
- 안건 : 조사결과 발표 및 의견수렴
- 일시 : 2012.5.31

〈표 1-1〉 조사영역 및 조사내용

부 문	조사항목 (64개)
개인관련사항	-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상태, 경기도 거주기간
여성경제활동	- 경제활동여부 - 고용형태, 종사산업, 종사직업, 월평균급여, 일·가정 양립 어려움, 근로시간 - 구직여부 및 희망고용형태, 구직어려움, 구직활동하지 않는 이유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취약계층 여성복지	- 한부모 여성지원정책 - 미혼모 지원정책 - 여성노인 지원정책 - 여성 장애인 지원정책 -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여성폭력 및 안전	- 가정폭력 예방정책 - 성폭력 예방정책 - 성매매 예방정책 -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 -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 -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여성건강, 문화, 여가	- 건강상태,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정책 -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돌봄	- 취학전 자녀유무(만 6세미만), 자녀현황, 자녀 양육의 어려움, 취학전 자녀 양육정책 우선순위 - 취학자녀 유무(초·중·고등학생),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
가족	- 출산계획,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정책추진체계	-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여성·가족정책 향상도, 우선순위	-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족정책
가구관련사항	- 주택유형, 점유형태, 가구구성 형태, 맞벌이가구 여부, 가구소득

주 : 〈부록〉 설문지 참조.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1단계	연구 설계	⇔	▷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2단계	자료수집 및 분석	⇔	▷ 선행연구 검토 ▷ 각종 행정자료 분석 ▷ 각종 통계자료 분석
3단계	정책간담회(1차)	⇔	▷ 연구범위 및 설문지(안) 검토
4단계	원내 전문가 의견수렴	⇔	▷ 설문지(안)에 대한 보육, 청소년, 가족, 다문화 분야 원내 전문가 의견수렴
5단계	사전조사	⇔	▷ 사전조사 실시(Pre-Test)
6단계	중간보고회	⇔	▷ 연구내용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7단계	설문조사	⇔	▷ 경기도 거주 성인남녀 대상 설문조사
8단계	정책간담회(2차)	⇔	▷ 조사결과 발표 및 의견수렴

이론적 배경

1. 개 념
2. 선행연구 검토

1. 개 념

가. 여성정책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이전에는 여성정책은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포괄적인 정책으로 정의되어 왔고(장필화, 1990; 변화순, 1993; 권영자, 1995; 김선옥, 1996),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대부분 법상의 여성정책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차인순, 2004).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여성정책’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성정책의 범주는 교육 정책, 고용정책, 보건정책, 보육정책, 복지정책, 가족정책 등의 정책으로 매우 광범위하다.⁹⁾ 이는 여성정책이 기본적으로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보다 최근에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저출산 정책 범주의 상호연관성과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양현아(2006)는 1990년대 이후 가족정책을 ‘양성평등원리’의 관점에서 고찰하고, 여성주의정책으로서의 한국 가족정책의 원리를 모색하였다.¹⁰⁾ 한편, 김

9)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5의2. 여성인적자원의 개발에 관한 정책

6. 어린이집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족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 장애여성 등 보호를 요하는 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의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방지에 관한 정책

9의2. 성매매 방지 및 성매매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 및 국제협력강화에 관한 정책

11의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10)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분영역, 가사노동영역, 이혼영역 등에서의 가족정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볼 때 네거티브 정책이 맹위를 떨쳤다. 둘째, 모성보호정책의 육아휴직처럼 가족정책에서 남

경희(2009)는 현재 여성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여성정책의 가족정책화 경향을 지적하였다. 이는 여성정책이 가족정책을 통합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성정책이 가족정책 특히 보육정책에 포섭되어 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2002~2005년까지의 시기에는 가부장적 젠더 관계의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호주제 폐지, 성매매와 같은 의제가 중심에 있었다면, 2005년 이후에는 보육, 가족 의제가 중심이 되었다. 실제로 2005년 여성정책 기본계획 예산 중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66.5%였으나, 2009년에는 89.9%로 증가했는데, 예산을 중심으로 보면 여성정책예산은 보육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책 영역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하던 보육정책이 우리사회에서 관심을 받게 된 것은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학적 변화에 기인한다. 저출산의 원인을 여성의 출산·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진단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담론이 형성된 것이다. 또한 보육문제 해결을 통한 적극적인 여성인력활용이 국가경쟁력강화의 핵심이라는 기조 하에, 보육정책은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여성인력활용 부분에 포함된 것이다.

김영옥(2010)은 ‘저출산 사회’로 규정되는 현재 상황에서 나타나는 여성정책의 문제로 ① 법제도상의 발전이 여성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는 착시효과를 주고 있으나,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현실 ② 저출산 추이 속에서 여성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구화되고 있는 것 ③ 정규직 중심의 일-가족 양립정책으로 인한 실효성 부족 ④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가족 양립정책에서 나타나는 성인지 시각의 결여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반해 저출산 사회의 여성정책의 방향으로 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 달성이라는 여성정책 고유의 목적과 정체성 회복 ② 법과 제도의 개선에서부터 문화와 인식의 변화, 일상적 관행의 변화 등 미시적인 삶의 변화로 정책중점의 이동 ③ 젠더관계의 전환과 남성과의 파트너십 강화 ④ 톱다운 방식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여성정책 거버넌스 구현 등을 제안하였다.

그렇다면 저출산 정책은 여성정책인가? 신경아(2010)은 ‘저출산 대책이 여성정책인가?’라는 의미있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여성 없는 여성정책’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한국

녀의 역할공유를 지향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 셋째, 가사양육노동을 포함한 보살핌 노동에 대한 가치인정이 양성평등 가족정책의 핵심사안이다. 넷째, 다양한 가족형태 증가에 따른 가족에 대한 상황별, 위기별 개입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에서 저출산 정책은 여성정책의 영역을 떠나 광범위한 이해당사자들과 정부 각 부처의 세력 관계가 교차하는 등 다양한 관점들의 각축장(contested terrain)이 되어 왔음을 지적하였다. 저출산 대책은 출산의 주체로서 정책의 관점을 제공하는 위치(perspective position)에 있는 여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통합하지 못했으며 여성을 정책의 대상으로 제한해 왔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2000년 이후 정부가 관심을 갖고 시행해 온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도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여성정책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여성정책은 정책대상이 아니라 정책의 목적을 중심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여성정책은 가족정책, 저출산 정책 등 특정한 범주의 정책과 본질적으로 배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책목적에 따라 상호연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여성정책의 의제는 가족정책, 저출산 정책의 개념으로 범주화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성평등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가족정책

우리 사회에서 가족정책의 개념에 대한 논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2000년대 중반을 전후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가족정책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정책을 포괄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소득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양육지원정책, 의료보장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건강정책 등이 가족정책의 영역에 포함된다. 협의의 의미로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더라도 가족정책은 여성정책과 상당히 중복되며, 때로는 인구정책(전광희, 2005), 때로는 복지정책(정광조, 1996; 정현숙, 2006)과 유사한 범주로 인식된다. 또한 가족정책을 사회정책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윤홍식, 2005). 이에 윤홍식(2005)은 가족정책이 다른 정책과 다른 배타적 영역을 갖는 독립적인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보다는 어떠한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대부분의 연구들은 가족정책을 정의할 때 캐머만과 칸(Kamerman & Khan, 1978), 짐머만(Zimmerman, 1988; 1992; 2001) 등의 논의를 인용하거나 발전시키고 있다. 캐머만과 칸(Kamerman & Khan, 1978)은 가족정책은 “정부가 가족을 위해, 그리고 가족에 대해 취하는 모든 조치”를 지칭하며, 가족정책은 어떤 나라에서도 가족을 향한 ‘단일정책’으로서가 아니라 ‘정책의 집합체’로 간주된다고 밝혔다(김희자, 2008). Zimmerman(1992)도 가족정책을 직간접적으로 정부가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적인 정책이라고 개념화하고 있다(윤홍식, 2005). 손승영(2002)은 Zimmerman(1988)을 인용해 가족정책이란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고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정책이라고 정의한다. 양현아(2006)도 가족정책을 정의하는데 Zimmerman(1992)의 개념을 인용하고 있다. 즉, 가족정책이란 한 정부가 가족에게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가족정책과 명시되지 않지만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가족정책을 포함한다고 밝힌다. 따라서 가족정책에는 가족법, 여성정책, 인구정책, 모성관련 복지제도, 보육제도, 가족상담, 소득유지정책, 교육정책, 고용정책, 주택과 건강정책까지 포함된다는 것이다. 결국 가족정책이란 가족과 관련해 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인 동시에 가족과 연관된 수많은 이질적 ‘프로그램들’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한편, 장혜경 외(2003)은 가족정책은 가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가족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법과 제도들, 가족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정책,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족과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또한 가족 소득지원 등 가족복지정책도 직접적으로 요보호 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에 포함된다고 본다. 변화순·최윤정(2004)은 가족정책을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가치보다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시행과 집행의 결과를 가족과 관련시키는 관점(perspective)을 가지는 정책인 동시에 모든 가족관련 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영역(field)으로 정의한다.

김승권(2004)은 가족정책을 개념적으로 정의하면서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즉, 가족을 위한 사회정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밝힌다. 첫째, 가족정책은 가정의 안녕과 복지달성이라는 당위적 목표를 갖고 국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개입

활동을 말한다. 둘째, 가족정책은 가족단위에서 표출되는 욕구를 지원, 보충, 대체하는 기능을 강조하고 가족 및 가정생활과 연계해서 다룬다. 셋째, 가족원의 복지증진이나 가정생활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제반 정책들이 가족정책의 범주에 속한다. 이에 기반해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생활단위로서의 가족과 가정생활을 위한 사회정책을 포함한 것’을 가족정책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주요 가족정책으로는 소득보장정책, 주거보장정책, 양육 및 부양지원정책, 의료보장정책, 가정생활문화정책, 가족보호정책 등을 포함시킨다.

한편, 고경환(2009)은 가족정책의 범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가족정책이라 함은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소득보장제도, 일-가족양립제도, 유아교육·보육서비스제도가 포함된다고 규정하였다. 근거로는 OECD SOCX Database의 가족급여 지출 항목의 범위와 동일하다고 밝힌다.

〈표 2-1〉 가족정책 개념(선행연구)

출처	가족정책 개념
손승영(2002)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고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한 정책
장혜경 외(2003)	가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책을 포괄하는 개념
김승권(2004)	매일의 일상적인 삶을 영위하는 생활단위로서의 가족과 가정생활을 위한 사회정책을 포함한 것
변화순·최윤정(2004)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가치보다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책의 기획에서부터 시행과 집행의 결과를 가족과 관련시키는 관점(perspective)을 가지는 정책인 동시에 모든 가족관련 프로그램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영역(field)
양현아(2006)	한 정부가 가족에게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명시적 가족정책과 명시되지 않지만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가족정책을 포함됨
고경환(2009)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소득보장제도, 일-가족양립제도, 유아교육·보육서비스제도가 포함됨

이처럼 가족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보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가. 여성정책

다음에서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크게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 주류화 개념 및 실현방안,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정책, 여성정책 수요조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선,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 실태 또는 거버넌스 유형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김재인·임미영, 2004; 김은경, 2008; 조영희, 2009). 김재인·임미영(2004)는 한국 여성정책네트워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성정책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사이에 갈등과 비협조 관계가 있고 특히 외부와의 네트워크 형성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현실은 성평등이라는 여성정책의 목표달성은 물론 공사파트너십 형성이 핵심인 거버넌스 맥락에서 볼 때도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한국 여성정책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트워크에 비 친화적인 정부 구조의 변화, 공사파트너십을 위한 적극적 조치, 정부 내 공무원의 업무상 갈등 완화 네트워크 활성화, 정부 내 중앙과 지방 정부의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여성부의 위상 강화를 제안했다. 한편, 김은경(2008)은 여성부의 협력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2001년 이후 추진하고 있는 공동협력사업의 내용과 재정지원 규모 등을 통해 여성부와 여성단체의 관계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힌 것이다. 그 결과 여성부 협력사업은 외형적으로 사업내용 선정의 주체성과 재정부담에 있어서 여성부가 주도하고 있어 여성단체는 대리자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나, 여성단체가 사업내용의 결정에 크게 개입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동반자 유형의 거버넌스 특징을 갖는다고 밝혔다.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조영희(2009)는 호주제 폐지, 육아휴직제 개정, 군가산점 폐지, 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안정적인 정책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여성정책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정책이슈의 특성과 정책네트워크

의 구조라는 변수에 주목했다. 그 결과 이슈의 복잡성이 낮을수록, 이슈의 현저성(salience)이 높을수록 참여적 네트워크가 형성될수록 안정적인 정책변동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도 여성운동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김경희, 2002, 조현옥, 2008; 권수현, 2011). 김경희(2002)는 1990년대 정부와 여성운동의 여성정책 프레임 분석했다. 우선, 90년대 국회에서 제기된 여성 의제들이 80년대에 비해 양적으로나 이슈의 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지만, 여성정책의 핵심 아이디어로 양성평등이 자리 잡지는 못 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운동은 평생평등 노동권,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여성관점에서 사회정책 이슈를 평가하는 등 정부의 여성정책 프레임과는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90년대 말에 이르러서는 정부와 여성운동 모두 국제 여성정책의 기조인 성 주류화라는 동일한 정책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현옥(2008)은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과정과 여성운동의 의제분석을 통해 한국 여성정책의 수립에 여성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정부의 여성정책 추진기구가 취약하고,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도 낮은 상태에서 여성운동은 여성의 힘을 모아내고 여성의제를 전면에 배치하면서 국가로 하여금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여성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도록 압박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한편, 권수현(2011)은 여성운동과 정부를 여성정책의 동학(dynamics)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로 보고 두 행위자의 관계에 따라 민주화 이후 한국 여성정책의 동학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여성운동의 역량이 강하고 정부의 당파성이 보수적일 때(김영삼 정부)는 여성의 이해가 제한적으로 반영된 여성정책이 형성되었고, 여성운동의 역량이 강하고 정부 당파성이 진보적일 때(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젠더 정체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여성정책이 변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운동의 역량이 약하고 정부 당파성이 보수적일 때(이명박 정부)는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 한국여성의 정치참여, 교육정책의 변화가 여성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전경옥, 2003; 오재림, 2004)과 세계화가 한국 여성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김경희, 2005) 등이 있다.

2) 성 주류화 개념 및 실현방안

보다 최근에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여성정책의 주요 전략으로 채택한 성 주류화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사회에서 성 주류화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를 이룬다(김경희·신현옥, 2004; 김경희, 2005; 마경희, 2007; 원숙연, 2009 등).

김경희·신현옥(2004)는 1990년대 후반 이후 여성정책의 전략으로 채택한 성주류화가 정책과정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를 공무원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르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성인지적 정책네트워크의 부재와 인사정책의 양성평등 원칙을 담아내지 못한 약한 정책도구가 사용됨으로서, 평등개념을 성비균형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만들어졌다. 반면,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는 성인지적 정책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 개입하여 정책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시정으로서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을 담은 평등개념을 정책에 반영시켰다.

김경희(2005)는 여성정책이 왜 젠더관점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을 검토하면서 논의하고, 젠더관점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성주류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책의 젠더관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식하면서 위계적인 권력 관계의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성역할을 보존하거나 협소한 의미의 평등개념을 적용하는 여성의 관점이나 적극적 조치의 관점과 구별될 수 있다. 또한 젠더 관점의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성 주류화를 이해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성 주류화라는 용어를 사용함에도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동안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해온 정책들과 성 주류화 전략을 상호배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경희(2007)는 국내 여성정책의 핵심어로 자리잡은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성 주류화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과거의 접근방식과 달리 가부장적 규범, 제도, 조직을 문제시하고 이에 도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에서 통용될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정의를 내리기는 불가능한 공허한 기표(empty signifier)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전제적 논의를 기초로 성 주류화의 대표적 도구인 성별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성 주류화

경험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성평등에 대한 함의와 과제를 제시하였다.

원숙연(2009)은 성 주류화를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노력이 상징적인 수사(Rhetoric)에 그칠 여지가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성 주류화가 표방하는 논리를 떠받치는 현실적 기반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위해 여성 및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위한 인적자원, 물적자원 그리고 성평등 의식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성 주류화 기반(infra-structure)은 다소 미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3) 지방자치단체와 여성정책

1995년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이후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특성과 성과를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김애령, 2000; 김경희, 2001; 한승준·주재현, 2003; 김경희, 2003; 문미경·임미영, 2004; 신경아, 2006; 엄태석, 2010 등).

우선, 지역여성정책의 추진체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김애령(2000)은 지방자치단체 여성기구의 의미를 당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서 ‘여성정책담당관’이라는 새로운 책무를 갖게 된 행위자들의 책무와 행동전략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문미경·임미영(2004)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밝히기 위해 여성정책 전담기구 및 담당인력규모의 적정성,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여부, 중장기발전계획 여부,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부,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성 주류화 실현 방안, 여성정책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지역여성정책의 구체적인 사업 및 예산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김경희(2001)는 7개 지방자치단체의 2000-2001년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1) 남녀평등과 여성들의 사회참여 확대와는 괴리가 있는 요보호 여성복지 중심의 예산배정과 2)부족한 여성관련 예산액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성인지적, 지역인지적 정책수립과 젠더예산 개념의 도입, 지방정부와 비정부기구의 네트워크 형성을 제안했다. 또한 김경희(2003)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인지 예산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정책 부서의 전체 예산 대비 비율이 매우 낮으며, 여성정책 예산이 대부분 보육지원이나 요보호 여성복지 등 보호주의적 여성정책의 성격이 강하며,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 중에는 여성 관련 예산이라고 보기 힘든 항목들이 있음을 밝혔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성별분리 통계와 예산집행과정의 성인지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추상화 수준이 낮고 조작적으로 정의가 가능한 기준들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신경아(2006)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사업 내용과 조직, 예산 등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의 정체성과 관련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보수성과 고립화, 복지정책과의 동일시 및 젠더 지형의 비가시화, 성평등 관점의 부족과 도구적 기능의 강화, 추진 주체의 취약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여성정책의 이념과 성격, 목적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특히 실제적 요구(practical needs)를 전략적 이해(strategic interest)로 전환시켜 가는데 정책의 초점을 둘 것을 주장하고 있다.¹¹⁾

반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역여성정책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한승준·주재현(2003)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실태를 조사해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업무의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 연구에 따르면 당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관련 업무는 총 67개 업무로 정리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들에 대해서 법적 구속력, 사무배분의 일반원칙, 업무수행율, 실무자 및 전문가 의견을 근거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별로 1·2순위 업무목록을 제시하고, 여성정책 담당 부서와 여타 관련 부서별로 수행해야 할 업무목록을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체계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외 지역의 여성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들(장하진, 1997, 이혜숙, 2006),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엄태석, 2010) 등이 있다.

11) 영(K. Young)은 실제적 요구란 여성이 지닌 기본적인 의식주 등 현실적인 욕구의 차원이고, 전략적 이해란 정치·경제·사회적 권력과 자원에 대한 성별 불평등한 접근 기회와 관련한 문제의식이라고 정의하였다. 영은 이러한 범주 구분에서 더 나아가 정책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 실제적 요구를 전략적 이해로 전환시킬 수 있는가?’ 하는데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Young, 2004; 신경아, 2006, 139-140에서 재인용).

4) 여성정책 수요조사

다음에서는 본 연구와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선행연구들로서 여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2010)은 경기도 거주 20대 이상 여성 1,000명과 관련 전문가 총 18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가족여성정책 관련 니즈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보육, 빈곤 및 차상위계층, 저출산, 장애 분야별 정책수혜자 총 16명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보육, 저출산, 혼인, 빈곤, 취업여성, 이주/새터민 여성, 장애여성, 성매매 여성, 여성노인 등 관련 분야 정책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미간행 자료). 보육정책 중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취업여성 보육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으로는 직장생활과 육아가 병행 가능한 지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 여성을 위한 정책 지원으로는 근무시간 제약 없는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빈곤 및 차상위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지원, 이주여성/새터민여성을 위한 정책으로는 다문화 가족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장애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다양한 일자리 확충, 성매매 여성 지원 정책으로는 자활 프로그램 마련, 여성노인 지원 정책으로는 일자리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은경 외(2010)은 전국의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약 1,134명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여성가족정책의 방향 정립을 위한 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일자리와 구직, 가족생활 및 젠더관계, 결혼과 출산, 주거와 안전, 건강·환경·일상,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30대 여성들은 ‘좋은 일자리’를 원하며 이를 위해 과잉교육투자를 하고 있으며, 경제적 자립을 결혼과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사회적 보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소형주택 등 주거문제, 지역사회 안전, 모성건강, 환경관련 질환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선 외(2010)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1,500명을 대상으로 ‘민선5기 서울시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수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여행(女幸)프로젝트 인지도 및 만족도, 돌봄 관련 정책수요, 여성의 일 관련 정책수요, 여성의

문화·여가활동관련 정책수요, 안전과 건강관련 정책수요, 여성의 생활편리증진 정책수요, 서울시 여성정책 발전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서울시민들의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보육서비스 정책에 대해 보육료 지원확대에 대한 정책수요가 가장 높고, 희망하는 보육형태는 국공립시설로 나타났다. 일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문화여가정책으로는 주부들을 위한 문화공연확대를 가장 희망했고, 여성건강 관련해서는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 여성 종합검진 비용지원 등 여성특화 건강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장혜경 외(2004)는 전국(제주도 제외)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여성정책 인지도 및 효과평가 전국민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분야별 여성정책 항목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도와 여성정책 추진결과 분야별 양성평등 향상정도로 구성되었다. 여성정책 분야는 정치 및 정책 일반, 가족 및 복지, 교육, 노동, 인적자원개발, 문화 및 여성폭력으로 구분되었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여성부에서 직접 집행하는 여성정책의 인지도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제한된 정책대상 집단을 가지는 정책은 인지도가 낮았다. 또한 정책인지도가 높은 정책이 효과성 평가점수도 높게 나타나, 우선적으로 정책의 인지도를 향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홍미영(2003)은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부산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성인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시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경제활동, 여성의 사회활동, 양성평등의식,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도로 구성되었다. 조사결과 저소득 여성, 미혼모,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훈 외(2002)는 민선 3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2001년 당시 경기도 20세 이상의 여성 인구 약 310만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의 0.5%인 15,500 표본추출(임의할당표출)하고, 31개 시군에 설문지를 배포해 최종 9,219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내용은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정책요구와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었다.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향상 및 인권보호 정책, 여성복지서비스정책,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구축정책,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정책으로 범주화 하였다. 조사결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여성 문제로 여성의 일자리 부족, 직업훈련 및 사회교육기회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여성 관련 시설로는 여성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고, 직업훈련, 어린이집에 대한 요구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저소득가정을 위한 지원방법으로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고, 직장 여성의 자녀양육 지원방법으로는 어린이집 증설, 초등학교 방과후 이동지도 프로그램 확대를 지적하였다. 여성취업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직종개발,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센터 증설, 어린이집 등의 증설 순으로 나타났다.

〈표 2-2〉 여성정책 수요조사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결과

연구제목	조사 시기	조사내용	조사대상 및 방법	주관 기관
경기도 여성 니즈 조사 결과보고서 (미간행)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 관련 사항 - 보육 관련 사항 - 저출산 관련 사항 - 혼인 관련 사항 - 빈곤 및 차상위계층 관련 사항 - 취업여성 관련 사항 - 이주여성/새터민여성 관련 사항 - 장애여성 관련 사항 - 성매매 여성 관련 사항 - 여성노인 관련 사항 - 여성모임 관련 사항 - 기타 분야별 정책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거주 20대 이상 여성 1,000명 - 일대일 면접조사 - 층화무작위 표본추출법(대도시, 중소도시, 군단위의 지역 샘플링)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민 가족여성정책 참여단 운영 조사 결과보고서 (미간행)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사항 - 보육 및 교육 관련 사항 - 저출산 관련 사항 - 혼인 관련 사항 - 이주여성(새터민 여성) 관련 사항 - 빈곤 및 차상위계층 관련 사항 - 취업여성 관련 사항 - 장애여성 관련 사항 - 성매매 여성 관련 사항 - 여성노인 관련 사항 - 여성단체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포럼 운영 위원 - 외부 경기도 거주 전문가(교수, 시민단체 등)를 추가로 보충 - 총 180명 - 심층면접 16명(보육, 빈곤 및 차상위계층, 저출산, 장애 분야별 정책수혜자 각 4명씩)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생활밀착형 여성가족정책의 방향 정립을 위한 20~30대 여성 조사연구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와 구직 - 가족생활 및 젠더관계 - 결혼과 출산 - 주거와 안전 - 건강·환경·일상 - 여성정책 및 가족정책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의 만 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 웹기반 설문조사(1,000명)와 대면면접조사(134명) 병행 - 표집방법 : 지역(대도시, 동부, 읍면부)별 및 연령별(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표본할당 	여성가족부
민선5기 서울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행(女幸)프로젝트 인지도 및 만족도 - 돌봄관련 정책 - 여성의 일관련 정책 - 여성의 문화·여가활동관련 정책 - 안전과 건강관련 정책 - 여성의 생활편리증진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20세 이상 65세 이하 서울시 여성 1,500명 - 대면면접조사 - 표집방법 : 거주지역(서울시 25개 자치구) 및 연령대별(20/30대, 40대, 50대, 60대) 비례할당 및 다단계층화추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계속)

(계속)

〈표 2-2〉 여성정책 수요조사 관련 주요 선행연구 검토결과

연구제목	조사 시기	조사내용	조사대상 및 방법	주관 기관
여성정책 방향과 의제 설정을 위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조사	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여성정책 인지도 및 효과도 - 정치 및 정책 일반 분야 - 가족 및 복지 분야 - 교육 분야 - 노동 분야 - 인적자원개발 분야 - 문화 및 여성폭력 분야 - 여성정책 추진결과 분야별 양성평등 향상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 대면면접조사 - 표집방법 : 다단계지역추출법 	여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조사 - 현재까지 추진된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 향후 정책 환경의 전망 및 쟁점 - 정책방향 설정 및 의제 개발 - 정책입안과정에서의 개선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pinion Leader Group, 여성단체, 공무원그룹(약 70명) 	
세계도시 부산의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의식 조사	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생활과 자녀양육 - 경제활동 - 여성의 사회활동 - 양성평등의식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인식 -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에 대한 요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 이상 성인여성 1,000명 - 지역별, 연령별 할당 추출에 따른 무작위 추출 	부산발전연구원
경기도민의 여성정책 요구조사	2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적 인식 및 정책 요구 - 여성의 지위향상 및 인권보호 정책 - 여성복지서비스정책 -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구축정책 -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정책 - 경기도여성정책의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현재 경기도 20세 이상의 여성인구 약 310만명을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의 0.5%인 15,500 표본 추출. 임의할당표출. - 31개 시군에 설문지배포 9,219부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나. 가족정책

가족정책과 관련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요약할 수 있는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유형의 다양화, 여성의 경제활동변화, 이와 연계된 돌봄노동의 사회화 필요성 등의

사회적 배경을 공통적으로 제시하면서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 가족유형의 변화를 ‘위기’로 보느냐, 아니면 변화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족정책에 대한 관점은 다르다.

가족정책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00년대 이후의 논문들은 대부분 외국의 가족정책을 소개·분석하는데 집중되어 있고, 내용적으로는 가족정책 중에서도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 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둘러싸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1) 외국의 가족정책 소개·분석

지금까지 발표된 가족정책 관련 논문들의 대부분은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밝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이정옥, 1999; 전광희, 2005, 박보영, 2006; 이진숙·김태원, 2007; 윤홍식, 2006, 송다영, 2009, 김희자, 2008; 윤승희, 2010; 이진숙, 2006; 이진숙, 2002; 한경현, 2010; 윤홍식, 2007). 주요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정옥(1999)은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중요 변화로 노동의 여성화, 파트타임노동의 증가, 고용 불안정성의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보고, 이러한 변화를 정책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을 유형화하였다. 즉, 가족에 대한 국가개입을 정당화하면서 여성취업에 따르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는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는 반면, 여성취업율은 높지만 가족에 대한 국가지원이 낮은 남유럽 국가의 경우 출산율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을 산업예비군이나 노동시장의 안전판이 아닌 노동시장의 통합 노동력으로 보고 가족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밝힌다.

윤홍식(2005)은 성 통합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 결과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4가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가족정책의 관점이 노동하는 주체의 관점에 섰을 때 일과 가족 양립의 문제가 특정 성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시민의 문제가 된다는 점이다. 둘째, 가족정책의 틀은 가족 구성원이 노동하는 장소에 따라 구분해야 한

다는 것이다. 이러한 틀에 따라 가족정책을 가족영역과 시장영역으로 나누었을 때 가족정책의 내용은 가족구성원이 노동권과 부모권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완화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의 방향은 여성과 남성이 생계부양과 보살핌의 책무를 함께 나누게 하는 것이다.

윤홍식(2006a)은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을 통해 OECD 15개국을 유형화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정책의 지원수준과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 모형의 강도를 통해 OECD 15개국을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합계출산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표에서 남성의 돌봄노동 참여 지원수준이 높고, 전통적 주 생계부양자가구의 비율이 낮은 국가군일수록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남성에 대한 돌봄 노동참여 지원 정책의 수준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홍식(2006b)은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가족정책에 대한 비교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에 근거해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한 목표달성은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로 부모의 이해의 요구와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국 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 (탈)상품화·(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이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홍식(2007)은 1980년부터 2002년까지 노르딕 4개국의 가족정책을 다차원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20년간 상대적으로 부모권 지원보다 노동권 지원을 중심으로 가족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보영(2006)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적 모델로서 유럽의 가족정책을 검토하였다. 이른바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이라고 불리는 유럽의 가족정책은 보살핌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양성평등적 모델의 추구로 요약하면서, 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을 실시할 경우 커다란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진숙·김태원(2007)은 EU국가들의 가족변화 경향을 진단하고, 가족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유럽의 경우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들의 양육과 부양부담 완화를 목표로 하면서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이루어지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책의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매우 협소하고, 대상도 요보호 개인 중심이어서 다양한 가족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의 방향은 가족의 전체성과 가족구성원의 개별성의 조화를 요구하며, 정책내용은 대상의 보편성, 분야의 포괄성, 수준의 적절성을 지향하도록 개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경환(2009)는 가족정책의 하위영역들과 정책적 동기를 연계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OECD 23개 국가의 가족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수준이 매우 낮으며,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형성되지 않았고, 특정 하위 제도가 가족정책으로 혼동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가족정책 수립의 포괄성과 방향성 설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즉, 전통적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출산장려와 인적자본에의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 가족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방향성이 북유럽형 또는 자유주의형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방향이 달라지므로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승희(2010)는 가족정책 논의에서 탈가족화(de-familisation)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던 가족화(familialization) 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제기하면서, 북유럽국가들 간의 상이한 아버지 권리와 역할의 개념 차이가 가족화 정책(부모휴가제도와 아동가정양육수당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버지 역할이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라 가족화 정책 형성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주장하며, 한국 사회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재정립을 통해 돌봄의 남성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진숙·김태원(2011)은 문화적 변화가 어떻게 가족정책의 경로의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보수주의 복지국가로 분류되는 독일과 스위스 사례를 통해 밝히고 있다. 분석결과 독일에서는 가족정책의 유형이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모형에서 이중생계부양자와 여성 파트타임노동에 대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전이가 일어난 반면, 스위스는 여전히 남성생계부양자와 가정주부모형에 정체되어 있다고 밝힌다.

2) 건강가정기본법 관련 연구

다음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해 가족 및 가족정책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드러낸 연구들을 살펴보았다(김혜경, 2005; 강희경, 2005; 김인숙, 2007; 김미숙, 2008; 윤경자, 2008). 우선, 김혜경(2005)은 ‘건강가정기본법’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을 가족현실에 대한 진단(해체론 vs 변화론), 가족에 대한 정의(가족주의 vs 개인주의), 정책의 방향(가족연대 vs 사회연대), 가족정책에서의 젠더(여성 내부의 차이), 가족복지책임론(국가의 ‘가족해체’와의 전쟁) 등으로 구분해 분석하였다. 한편, 강희경(2005)은 ‘건강가정’ 담론이 뜻하는 가족의 정의가 사회의 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해 비현실적이며, 가족에 대한 국가 개입의 방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즉,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과 이혼의 인위적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건강가정기본법’을 비판하면서, 국가가 개입해야 할 가족제도의 기본적 존재이유는 ‘자녀의 복리’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는 자녀양육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인숙(2007)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에 대한 담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건강가정 진영’은 ‘사회적(인과적) 효용’이라는 정당화의 논리, 국가주의적 사고와의 결합, 가족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족정책, 이분화 된 가족정책 담론을 견지했고, ‘비판 진영’ 담론은 간주관적 합의로서의 정당화 논리, 양성평등의 도구이자 복지국가 확장의 지렛점으로서 가족정책, 이분화된 아젠다에 대한 비판으로 가족정책 담론을 이끌어 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해서는 “우리사회의 지배적 가족담론이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거쳐 제도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건강가정” 담론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가족정책의 위치, 틀,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이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을 둘러싼 담론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김미숙(2008)은 참여정부 시기(2003.3~2008.2) 시기에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그 시기 제정된 가족관련 법률의 내용과 논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법률은 건강가정기본법(2005.1),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다문화가족지원법(2008.9)이다. 각각의 법률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이 존재하고 한계가 있지만, 과거 어느 시기보다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윤경자(2008)은 가족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 어떻게 기여했는가를 분석하였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가족정책 패러다임의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전달체계로서 주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현황

- 1. 조 례
- 2. 인력 및 예산
- 3. 분야별 정책 현황

1. 조 례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추진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는 <표 3-1>과 같다. 2012년 5월 현재 총 22개의 조례가 시행중인데, 여성가족 관련 조례 9개, 보육 관련 조례 1개, 아동·청소년 관련 조례 9개, 다문화가족 관련 조례 3개이다. 여성정책의 근간이 되는 조례로는 2000년 제정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로서 성평등 정책, 여성발전위원회, 성평등정책 책임관 및 성평등정책 조정회의, 여성발전기금, 경기도여성상, 경기도 여성인력개발협의회의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 외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미혼모·부지원 조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보육정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보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청소년상 조례, 경기도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차세대위원회 조례,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아동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표 3-1〉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

구분	조례명(관련 법령)	제정 및 최근 개정일	주요 내용
여성 가족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여성발전기본법)	제정:2000-01-10 개정:2012-11-08	총칙, 성평등 정책, 여성발전위원회, 성 평등정책책임관 및 성평등정책조정회의 여성발전기금, 경기도여성상, 경기도 여 성인력개발협의회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민법)	제정:2004-09-30 개정:2011-03-15	목적, 재산 및 운영경비, 출연금 등의 지 원, 공무원의 파견, 행정지원 및 시행, 운영규정, 시행규칙 등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5-07-25 개정:2010-11-08	총칙, 경기도건강가정위원회, 경기도건 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8-07-04 개정:2012-01-05	총칙, 출산 대책, 고령화 대책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지원 조례	제정:2008-10-01	예산지원, 지원대상
	경기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09-10-30 개정:2011-03-15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가족친화지수의 개발 및 공표 등
	경기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	제정:2010-03-18 개정:2011-11-08	연도별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2010-07-14	목적, 적용범위, 지원사업, 미혼모 거점 기관 운영 등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정:2012-05-11	목적,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지원대상, 지원사업 등
보육 정책	경기도 보육 조례 (영유아보육법)	제정:2003-11-26 개정:2012-01-05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보육정 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보육계획, 비용 의 보조 등

(계속)

(계속)

〈표 3-1〉 경기도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

구분	조례명(관련 법령)	제정 및 최근 개정일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경기도청소년상 조례	제정:1990-04-13 2011-01-10	목적, 수상부문과 인원, 수상대상자, 심사위원회, 수상자의 결정 등
	경기도 청소년 육성 지원 조례 (청소년기본법)	제정:1997-01-13 개정:2012-03-05	총칙, 경기도 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운영, 경기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 장학사업,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지원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정:2000-07-24 개정:2011-05-03	총칙, 경기도 청소년 수련원, 경기도 청소년 야영장,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협회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청소년기본법)	제정:2000-11-24 개정:2011-01-10	목적, 구성, 위촉자격, 임기,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
	경기도 위스타트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05-07-25 개정:2011-03-15	목적, 사업비의 지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기능, 시행규칙 등
	경기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아동복지법)	제정:2007-12-03 개정:2010-07-14	목적,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등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아동복지법)	제정:2011-01-10	사업비의 지원, 보조금의 반환, 지도·감독, 시행규칙 등
	경기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2-03-05	총칙,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의 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지원센터
	경기도 아동빈곤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12-04-06	목적, 경기도 아동빈곤예방 시행계획, 경기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 등
다문화가족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정:2008-10-01 개정:2011-03-18	총칙, 위원회, 외국인주민 지원 활성화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정:2008-11-05 개정:2011-01-10	총칙,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011-10-20	용어의 정의, 외국인주민의 지위, 지원 대상 및 범위, 위원장의 직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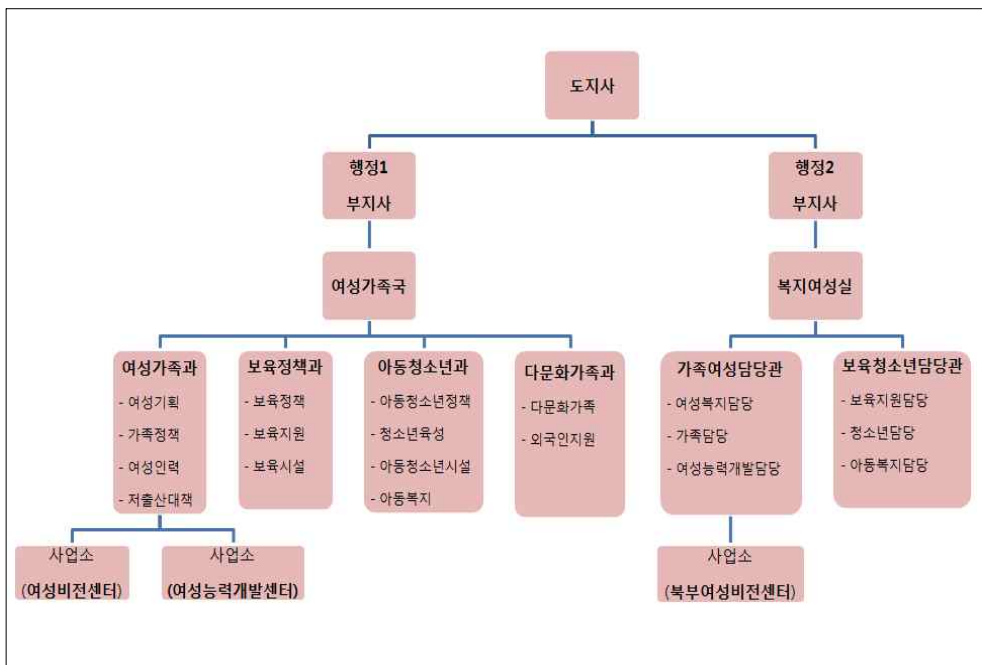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의회 홈페이지(2012.5.31. 검색)

2. 인력 및 예산

가. 담당기구 및 인력

현재 경기도에서 여성가족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기구는 <그림 3-1>과 같이 크게 본청의 여성가족국과 제2청의 복지여성실로 구분할 수 있다. 본청 여성가족국의 경우, 여성가족국 내에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다문화가족과로 4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제2청 복지여성실은 4개의 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여성가족정책과 관련이 있는 부서는 가족여성담당관과 보육청소년담당관이다.¹²⁾ 이 외 3개의 사업소(여성비전센터, 여성능력개발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 여성인력개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3-1>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구(2012.03현재)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12) 이 외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이 있다.

2012년 현재 경기도의 본청과 2청의 가족여성정책 담당(사업소 제외) 인력 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88명이며 직급별로는 3급 2명, 4급 6명, 5급 19명, 6급 27명, 7급 22명, 8급 6명, 그리고 기능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3-2〉 참조). 담당업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본청의 여성가족국의 경우 여성가족과 22명, 보육정책과 14명, 아동청소년과 16명, 다문화가족과 9명으로 총 61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사업소는 2개 기관으로 경기도여성비전센터 15명,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23명으로 총 38명이 일하고 있다. 제2청의 복지여성실의 경우 가족여성담당관실에는 15명, 그리고 보육청소년담당관실에는 12명으로 총 27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사업소인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는 12명의 인력이 일하고 있다.

〈표 3-2〉 경기도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구의 인력현황(2012.03현재)

(단위 : 명)

구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기능
전체		88	2	6	19	27	22	6	6
여성 가족국 (본청)	여성가족과	22	1	1	4	9	6	—	1
	보육정책과	14	—	1	3	3	5	1	1
	아동청소년과	16	—	1	4	5	4	1	1
	다문화가족과	9	—	1	2	2	2	1	1
복지 여성실 (2청)	가족여성담당관실	15	1	1	3	5	2	2	1
	보육청소년담당관실	12	—	1	3	3	3	1	1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위와 같은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구의 주요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3〉과 같다. 본청의 여성가족과는 도정의 성 주류화 정책 및 여성권익증진, 여성경제활동 참여 및 역량강화 확대, 건강가정 자립지원 및 출산장려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보육정책과는 보육정책 개발, 공보육 기능강화 및 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사업을,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 잠재역량 개발 및 어려운 청소년 복지 지원,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과는 다문화 정책 개발 및 지원 인프라 구축,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주민 국내 적응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제2청의 복지여성실은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족 여성담당관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돌봄기능 강화, 여성의 능력발휘 기반 구축,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보육청소년담당관의 경우 보육정책 개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 외 3개의 사업소(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 경기북부여성비전센터)에서는 주로 여성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여성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3-3〉 경기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2012.03현재)

구분	업무	
여성 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 여성권익증진 사업 추진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추진 - 여성지위향상 정책 수립 - 여성단체 지원 협력 - 여성정보 관련 업무추진 - 여성전문자원 봉사활동 개발 추진 - 여성발전기금 운용 - 여성주간 기념행사 운영 - 한부모 복지시설 및 취약가정 사례관리 사업 -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 사업 추진 - 여성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정책 추진 -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운영 지원 - 가족정책 기본계획 수립 - 여성직업훈련기관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조사연구 및 활동지원 - 여성인적자원개발 -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시·군 여성회관 건립지원 및 지도 -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 가족여성관련 법인가가 및 지도·감독 - 가족해체 예방에 관한 사항
보육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 보육조례 및 보육정책위원회 운용 - 보육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관리 -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보육정보센터 및 보육단체 관리 - 보육교사교육원 위탁관리 - 보육통계 작성 관리 - 보육진흥사업 활성화 방안 - 보육통계 작성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어린이집 운영 지원 - 어린이집이용 불편 신고센터 운영 - 어린이집연합회 등 법인·단체의 지도·감독 -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련업무 - 보육료 지원 확대 -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 - 취약보육 지원 - 취업여성 자녀보육 지원 - 어린이집 지도·점검 -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아동 청소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육성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 - (재)경기도청소년수련원 운영 지원 - 청소년 건강증진 및 자립에 관한 사항 - 도립청소년 야영장 운영 지원 - 청소년육성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상담실, 공부방운영지원 -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 청소년보호 및 선도대책 - 청소년 인권·폭력에 관한 사항 - 청소년시설 및 단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육성관련 법인의 허가 및 지도·감독 - 도립청소년수련시설 관리 등 지도·감독 - 아동복지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아동복지시설 지원 - 경기도 We Start마을 사업에 관한 사항 - 아동학대에 관한 사항 -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 입양사업지원 - 지역아동센터에 관한 사항 - 청소년 국제 교류사업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사항
다문화 가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정책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 외국인정책 연도별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세계인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 - 외국계주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다문화네트워크 조성에 관한 사항 - 국제결혼중개업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다문화센터에 관한 사항 - 결혼이민자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에 관한 사항 - 외국인집중거주지에 관한 사항 - 유학생 및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사항 - 다문화사회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 외국인주민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 외국인주민 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자료 : 경기도 홈페이지(2012.3.21 검색)

〈표 3-4〉 경기도 여성관련 사업소 주요업무(2012.03현재)

구분		업무
본청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 여성 평생학습훈련 및 가족문화육성 프로그램 개발 - 여성취업 교육 및 정보제공으로 경제활동 참여증진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사업
	여성능력개발센터	- 경기여성 e-러닝센터 구축·운영 - IT·CT 분야 여성 전문인력 및 여성 CEO 양성 - 여성 정보·자원 네트워크 활성화
제2청 복지여성실	북부여성비전센터	- 취·창업 Total Service 운영 강화 - One-stop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취업지원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나. 예 산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여성가족정책 담당기구의 예산은 〈표 3-5〉와 같이 2005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선, 본청 여성가족국의 2011년 전체 예산은 805,598백만원으로 2010년 665,156백만원에 비하여 140,442백만원 증가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3조 300억원의 6.1%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한편, 경기도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의 2011년 전체 예산은 332,765백만원으로 2010년 275,244백만원 대비 57,521백만원 증가했다. 본청과 2청의 여성가족정책 기구의 2011년 예산의 합은 1,138,363백만원으로 2011년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8.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표 3-5〉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여성가족정책 예산(2005~2011)

(각 년도 말 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	가족여성정책 예산액			예산비율
		본청	제2청	계	
2005	8,025,735	177,276	104,413	281,689	3.5
2006	9,041,347	266,126	109,437	375,563	4.2
2007	9,788,602	342,382	133,953	476,335	4.9
2008	11,400,484	407,048	183,878	590,926	5.2
2009	12,116,664	545,623	225,665	771,288	6.4
2010	12,244,416	665,156	275,244	940,400	7.7
2011	13,300,366	805,598	332,765	1,138,363	8.6

주 : 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본청과 제2청 예산이 모두 포함된 것이고, 여성가족정책 예산액에는 사업소 예산도 포함된 것임.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좀 더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국 내 분야별 예산을 살펴보면 <표 3-6>과 같다. 본청의 여성가족정책의 예산은 2010년 37,039,706천원, 2011년 39,800,465천원으로 각각 5.6%와 4.9%를 차지하였다. 본청 예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은 보육정책으로서 2010년 532,831,000천원, 2011년 668,777,097천원으로 각각 80.1%와 83.0%를 차지했다. 제2청의 경우에도 전체 예산 2010년 276,902,503천원, 2011년 332,765,190천원 중 보육정책 관련 예산이 각각 85.5%와 8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예산 측면에서 볼 때 여성가족정책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4.9%, 2011년 4.6%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6〉 경기도 가족여성정책 담당 기구 내 분야별 예산(2010-2011)

(각 년도 말 기준, 단위 : 천원, %)

구분	본청		제2청	
	액수	비율	액수	비율
2010				
전체	665,155,711	100	276,902,503	100
여성가족	37,039,706	5.6	13,508,640	4.9
보육정책	532,831,000	80.1	236,910,039	85.5
아동청소년	77,033,888	11.6	24,825,393	9.0
다문화가족	10,017,340	1.5	-	-
여성비전센터	1,580,095	0.2	-	-
북부여성비전센터	-	-	1,658,431	0.6
여성능력개발센터	6,653,682	1.0	-	-
2011				
전체	805,598,219	100	332,765,190	100
여성가족	39,800,465	4.9	15,366,126	4.6
보육정책	668,777,097	83.0	284,952,590	85.6
아동청소년	77,416,440	9.6	27,599,109	8.3
다문화가족	10,919,348	1.4	2,929,131	0.9
여성비전센터	2,946,419	0.3	-	-
북부여성비전센터	-	-	1,918,234	0.6
여성능력개발센터	5,738,450	0.7	-	-

자료 : 여성가족국과 내부자료.

3. 분야별 정책 현황

가. 여성정책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 때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여성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제7조).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을 수립·시행하였고, 현재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시행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수립에 앞서 지난 10년간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 제1차 및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성과를 <표 3-7>과 같이 평가했다(여성부, 2008). <표 3-7>에서도 확인되듯이 제1차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시행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여성정책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관련 법제도의 구비라고 볼 수 있다.¹³⁾

13) 이에 대해 법제도상의 발전이 여성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는 착시효과를 주고 있으나, 실제 사회적 변화는 법제도적 변화만큼 비약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김영옥,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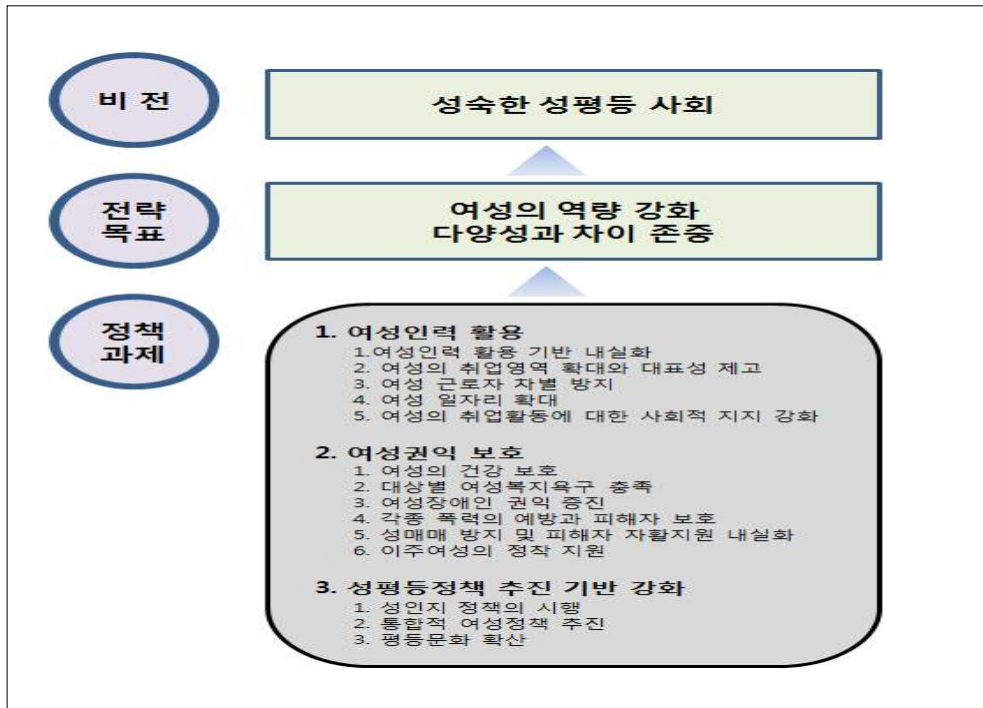
〈표 3-7〉 제1차 및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성과

구분	내용
성 주류화 전략의 도입과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평가 제도' 도입(2002) - 국가재정법 제정(2006)시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
남녀고용평등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1999)으로 성희롱 등 구제 방안 마련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간접차별 금지(1999)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의무화(2005)
일-생활의 양립을 지향하는 각종 법제도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보호와 관련한 노동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출산휴가를 90일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 지급 규정(2001) - 영유아보육법을 전면 개정(2004)해 보육정책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2007)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2007)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1998~2002), 양성평등 채용목표제(2003~2007)를 시행하고, 국공립대 여교수 채용목표제(2003) 실시 - 정당법 개정(2002, 2005)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2005)을 통해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획기적으로 증진 비례대표 후보자 중 여성 50% 이상 추천
가정폭력 및 성매매 방지 등 여성 인권보호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 연계체계 구축(2001), 폭력피해 여성 ONE STOP지원센터 설치운영 - 성매매방지법 제정(2004) 이후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
가족정책의 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제 폐지(2005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7년)을 통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수용하는 사회 포용성이 증대되고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2004)으로 가족정책 추진 인프라 구축(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 한부모 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 수립

자료 : 여성가족부, 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을 바탕으로 재구성.

다음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여성정책의 비전은 ‘성숙한 성평등 사회’로 설정되어 있으며, 전략목표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과 차이 존중’이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그림 3-2〉와 같이 여성인력활용, 여성권익보호,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분야로 설정되었다.

〈그림 3-2〉 여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 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구체적인 세부 사업은 〈표 3-8〉과 같다. 우선, 여성인력활용과 관련한 정책과제는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여성의 취업영역확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로 분류되었다. 이 중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와 관련한 사업에는 이른바 ‘돌봄’ 분야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여성권익보호와 관련한 정책과제는 여성의 건강보호, 대상별 여성복지 욕구 충족,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이주여성의 정착지원으로 분류되었다. 세부과제가 6개로 범주화되었으나, 내용적으로 보면 여성건강, 여성폭력방지, 취약계층 여성대상별 지원정책(여성장애인, 이주여성, 한부모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여성의 건강보호 분야 사업은 임신·출산 등 모성보건에 관한 사업이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와 관련한 정책과제는 성인지 정책의 시행,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평등문화 확산으로 분류되었다.

〈표 3-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과제

과제명		세부과제
1. 여성인력 활용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1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지원 1-1-2 청년여성층의 경력개발지원 1-1-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1-2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1-2-1 비전통적 직종에 여성 진출 확대 1-2-2 문화 및 과학기술분야 여성전문인력 육성 1-2-3 여성 경제인 육성 1-2-4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1-2-5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3 여성 근로자 차별 방지	1-3-1 고용상 차별 예방과 시정 1-3-2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 근로자 고용 여건 개선 1-3-3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제도상 보호 강화
	1-4 여성 일자리 확대	1-4-1 성장동력 분야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1-4-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1-4-3 여성 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1-4-4 여성기업 경영인프라 확충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5-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1-5-4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1 여성의 건강 보호	2-1-1 여성의 건강 보호
	2-2 대상별 여성복지 욕구 충족	2-2-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2-2-2 한부모가족 지원 2-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2-2-4 미혼모 지원 2-2-5 여성노인 지원 2-2-6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를 위한 보호 지원
	2-3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2-3-1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2-3-2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익 향상
	2-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2-4-1 여성·아동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2-4-2 성폭력·가정폭력 방지 제도 개선 2-4-3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2-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2-5-1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 2-5-2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지원 대책 추진 2-5-3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2-5-4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2-5-5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2-5-6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 구축
2. 여성 권익 보호	2-6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2-6-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2-6-2 여성 이주 노동자 등 지원

(계속)

(계속)

〈표 3-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세부과제

과제명		세부과제
3.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3-1 성 인지 정책의 시행	3-1-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3-1-2 성 인지 예산제도 시행
		3-1-3 공무원 성 인지 교육 체계화
	3-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3-2-2 시민사회와의 협력
	3-3 평등문화 확산	3-3-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3-3-2 양성평등 교육 확대
		3-3-3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3-3-4 여성 국제협력 확대

자료 : 여성가족부, 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이와 같은 중앙정부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여성인력활용 분야 경기도 정책을 살펴보면 〈표 3-9〉와 같이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 활동과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 총괄·조정 2개 분야의 세부과제로 6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다음으로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분야와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등 여성경제인 지원 및 여성의 대표성 제고(공직분야와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3개의 세부과제에 총 1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농가도우미 지원 등 4개 사업, 여성경제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는 경기여성경제인대회, 경기지역 여성기업 제품홍보 e-카달로그 제작, 여성전문분야 실전창업스쿨 개최 등 9개가 추진되었다. 또한 ‘여성일자리 확대’와 관련해서는 광역새일지원본부의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등 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는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 4개로 구분되며 총 23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에는 경기도 특화사업인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취업여성 보육 지원,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 꿈나무 안심학교운영이 포함되며,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업에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등이 포함된다.

〈표 3-9〉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여성인력활용

과제명	세부과제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1-1-1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취·창업률) - 광역새일지원본부(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1-1-2 지역여성인적자원 개발정책 총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경기여성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수립 -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운영 - 여성교육 훈련기관 직원역량 강화교육 - 여성회관장 워크숍
1-2. 여성의 취업 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1-2-1 여성농업인 등 여성경제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관련 위원회 운영 -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농가도우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여성경제인대회 - 경기지역 여성CEO 경영연수 - 경기지역 여성CEO 혁신포럼 - 경기지역 여성기업 제품홍보 e-카드로그 제작 - 경기지역 여성CEO MBA과정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마케팅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 여성전문분야 실전창업스쿨 개최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Biz Success구축 지원사업 - 여성IT기업 e-Biz 활성화 지원 사업
	1-2-2 공직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급이상 여성공무원 임용비율
	1-2-3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이 있는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위원 참여율 40% 이상 위원회 비율
1-4. 여성일자리 확대	1-4-1 중앙-지역 공동 여성일자리 창출 방안 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취·창업률) - 광역새일지원본부(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 - 여성회관 기능전환을 위한 조직컨설팅 지원) - 새일센터 미지정지역 지역특화교육 지원
	1-4-3 지자체 산하기관의 여성 채용 확대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비율 30% 달성 공공기관 비율

(계속)

(계속)

〈표 3-9〉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여성인력활용

과제명	세부과제	
1-5. 여성의 취업 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5-1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 - 영유아보육료 -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 취업여성 보육료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특화사업) - 취업여성 보육 지원(특화사업) - 0세아 전용어린이집 운영(특화사업) - 꿈나무 안심학교운영(특화사업)
	1-5-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본, 종합) -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5-3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의 날 운영 -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1-5-4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지원 - 경기도 일하기 좋은 일터 인증

자료 : 여성가족부, 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에서 재구성.

다음으로 경기도의 여성권익보호 정책은 〈표 3-10〉과 같다. 우선, ‘여성의 건강보호’와 관련한 세부과제는 여성건강증진 사업 실시로 모유수유클리닉, 난임부부지원 등 4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다음으로 ‘대상별 여성 복지 욕구 충족’과 관련해서는 빈곤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한부모가족·미혼모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여성노인 지원 4개 세부과제에 총 16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한 세부과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강화,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익 향상으로 구분되며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운영 등 총 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는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원스톱센터 등이 있으

며, 마지막으로 ‘이주여성 정착지원’ 과 관련한 세부과제는 다문화여성 사회통합 지원과 다문화여성 보호체계 구축으로 구분 되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결혼이민자 한국어 교육 등 11개 사업이 포함된다.

〈표 3-10〉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여성권익보호

과제명	세부과제	
2-1. 여성의 건강보호	2-1-1 여성건강증진 사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유수유클리닉 - 모유수유아 선발대회 - 난임부부지원 - 여성암검진등
2-2. 대상별 여성 복지 욕구 충족	2-2-1 빈곤여성의 기초생활 보장	- 긴급복지지원
	2-2-2 한부모가족 지원 2-2-4 미혼모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국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자체)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급여(국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분권)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지원(자체)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분권) - 미혼모부자 지원기관 운영(국비) - 취약가족 역량강화 지원(국비)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치료지원(국비) - 가족보듬사업(국비)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국비)
	2-2-3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간병비 지원
	2-2-5 여성노인 지원	- 기초노령연금 지원
	2-3-1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가사 도우미 운영 - 여성장애인 교육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활동지원
2-3. 여성장애 인 권익 증진	2-3-2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의 향상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계속)

(계속)

〈표 3-10〉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여성권익보호

과제명	세부과제	
2-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2-4-1 여성·아동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
	2-4-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원스톱, 경기해바라기센터 운영 -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 가정폭력, 성폭력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2-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2-5-1 성매매 예방 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	- 기금사업 확보
	2-5-2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지원 및 인권보호체계 구축	- 집결지 현장기능 강화 사업 확대
	2-5-4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 성매매 밀집지역 단속 및 처분실적 정기보고
2-6. 이주여성 정착 지원	2-6-1 다문화여성 사회통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 한국어교재 구입 배포 -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 다문화소식지 발간 -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교육 - 국제결혼 행복 프로그램 - 다문화가정 부부 워크숍 -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다문화교실
	2-6-2 다문화여성 보호체계 구축	- 결혼이민자 보호인원

자료 : 여성가족부, 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에서 재구성.

마지막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분야의 경기도 정책은 〈표 3-11〉과 같이 성인지 정책의 시행, 통합적 여성 정책 추진, 평등문화 확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성인지 정책의 시행’을 위한 세부과제로는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성별통계확립,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실시가 추진되었으며, ‘통합적 여성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2개의 세부과제에 총 5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마지막으로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추진사업으로는 청소년 성평등 영화제가 있다.

〈표 3-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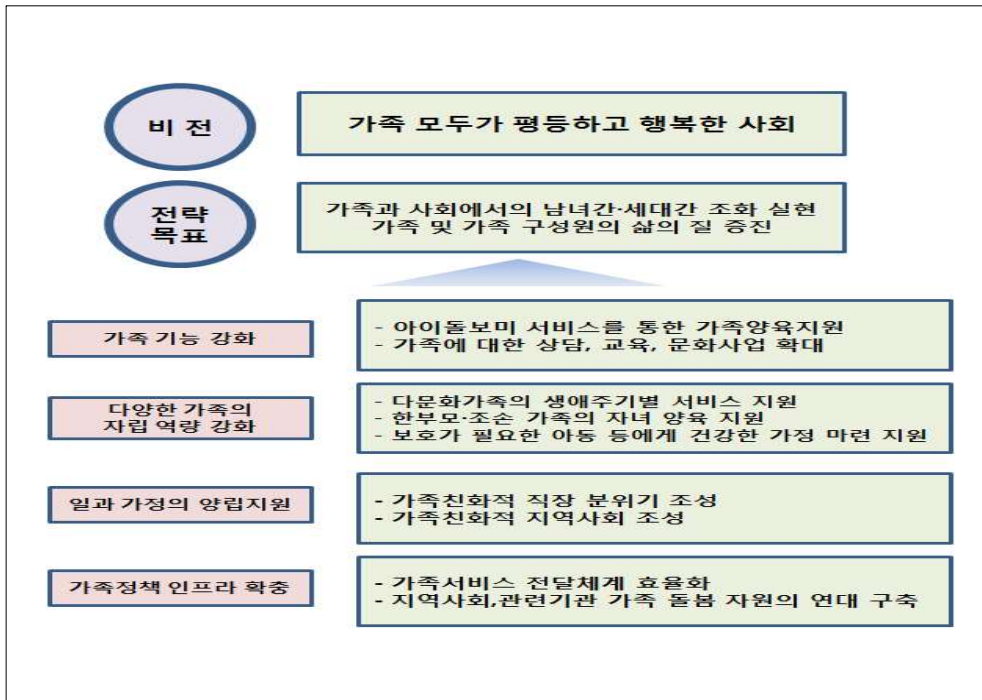
과제명	세부과제	
3-1. 성인지 정책의 시행	3-1-1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성별통계 확립	- 과제 담당자 교육
	3-1-2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3-1-3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실시	- 성인지력 향상 교육
3-2. 통합적 여성 정책 추진	3-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 성평등정책조정회의 운영 - 성평등정책실무조정회의 운영
	3-2-2 시민사회와의 협력	- 여성지도자육성 - 여성리더 워크숍 - 여성단체 활동가 연찬회
3-3. 평등문화 확산	3-3-1 평등문화 확산	- 청소년 성평등 영화제

자료 : 여성가족부, 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11년도 시행계획」에서 재구성.

나. 가족정책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현황은 여성가족부 관련 자료 및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가족정책의 비전은 ‘가족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이며, 전략목표는 ‘가족과 사회에서의 남녀간·세대간 조화 실현’과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이다. 이러한 비전과 전략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그림 3-3〉과 같이 가족 기능 강화, 다양한 가족의 자립역량강화,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가족정책 인프라 확충으로 범주화되어 실행되고 있다.

〈그림 3-3〉 가족정책 비전 및 핵심과제



자료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를 중심으로 가족정책 관련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표 3-12>와 같다. 정책분야는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로 분류되었다. 가족가치의 확산 분야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자녀 돌봄 지원 강화 분야는 보육과 교육에 대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부분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가정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은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과 지역환경 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사업은 이른바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다. 한편,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에는 가정폭력 예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는 가족정책의 추진체제와 관련한 사업이다.

〈표 3-12〉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1~2015)

과제명		세부과제
1. 가족가치의 확산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1-1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
		1-1-2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1-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휴직·휴가 제도 활성화
		1-2-2 남성의 가정내 역할교육 강화
		1-2-3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2. 자녀 돌봄지원 강화	2-1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2-1-1 보육·교육의 부담 완화와 시설양육의 서비스 질 제고
		2-1-2 가정내 돌봄 지원
		2-1-3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2-2 부모역할 지원	2-2-1 부모 역량 강화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확대
		3-1-2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체계 운영
		3-1-3 이혼과정 및 이혼가족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3-1-4 청소년 한부모 보호 및 지원서비스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2-1.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3-2-2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증진과 생활적응 지원
		3-2-3 다문화가족 자녀세대를 위한 지원 확대
		3-2-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개선
		3-2-5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3-1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구축 및 강화
		3-3-2 취약가정에 대한 서비스 내실화
		3-3-3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지원망 구축 및 서비스 개발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4-1-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실효성 제고
		4-1-2 유연근무 형태 확산
		4-1-3 가족친화기업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4-2-1 가족친화 지역 인프라 구축
		4-2-2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5.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5-1-1 가족정책 관련 법적 기반과 체계 정비
		5-2-1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설치 확대 및 전문화
	5-2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5-2-2 건강가정사업 종사자 전문성 강화

자료 : 관계부처 합동,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11~2015-가족행복더하기」에서 재구성.

위와 같은 중앙정부의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워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1년 경기도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표 3-13>과 같다. 우선, ‘가족가치의 확산’ 분야 정책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과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휴직·휴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아버지 아카데미’ 운영 체계화 및 아버지교육 활성화 사업등이 추진되었다. 다음으로 ‘자녀돌봄지원 강화’ 분야 정책은 보육·교육 부담 완화와 시설양육의 서비스 질제고 및 가정 내 돌봄 지원,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사업 등이 포함된다. 한편,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분야 정책은 한부모가족과 다문화 가족, 가족 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사업들로 구성되며,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강화지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구호,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지원,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자녀양육 지원 사업 등이 있다.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분야 정책은 가족친화기업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 가족친화 지역 인프라 구축,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보호로 분류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이용 활성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사업등이 추진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분야 정책은 가족정책 총괄기능 강화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사업이 추진되었다.

〈표 3-13〉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과제명		세부과제	
1. 가족 가치의 확산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1-1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	-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1-2-1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휴직·휴가제도 활성화	- ‘아버지 아카데미’ 운영 체계화 및 아버지교육 활성화
2. 자녀돌봄 지원강화	2-1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2-1-1 보육·교육의 부담 완화와 시설양육의 서비스 질 제고	- 보육·교육비 지원확대 - 시설 양육 서비스 질 제고
		2-1-2 가정내 돌봄 지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체계화 및 지원 확대 - 시설 양육 서비스 미이용자에 대한 비용 지원 확대
		2-1-3 지역사회 돌봄망 확충	-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2 부모역할 지원	-	-
3.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1-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확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지원 현실화
		3-1-2 한부모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체계 운영	- 한부모가족 자립 역량 강화 지원 - 미혼모·부자 위기 지원망 구축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2-1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 결혼이민자 정착 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3-2-2 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증진과 생활적응 지원	- 폭력피해 이주여성 긴급구호
		3-2-3 다문화가족 자녀세대를 위한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유아 등의 언어발달 지원사업 확대
		3-2-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한 인식 개선	-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 집단내 구성원간 이해 증진 -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의 통합 지원 -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2-5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총괄·조정 기능 강화 -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3-3-1 가족돌봄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구축 및 강화	- 노인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 산모신생아도우미 파견지원
		3-3-2 취약가정에 대한 서비스 내실화	- 장애인가족의 경제적 자립 및 자녀양육 지원 - 북한이탈주민가정 사회통합 지원 - 입양가정 역량 강화 지원 - 가정위탁제도 활성화 및 지원 확대 - 노인가족의 건강 및 취업 지원
		3-3-3 위기가정을 위한 통합지원망 구축 및 서비스 개발	- 외상적 위기 경험 가족에 통합적 서비스 제공

(계속)

(계속)

〈표 3-13〉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경기도 시행계획(2011)

과제명		세부과제	
4.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4-1-3 가족친화기업 및 직장어린이집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기반 마련 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이용 활성화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4-2-1 가족친화 지역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확보 - 아동·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 청소년 성보호 강화
		4-2-2 가정폭력 예방 및 가족구성원 인권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확산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교정 지원 확대
	5.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정책 총괄 기능 강화
	5-2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5-2-1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설치 확대 및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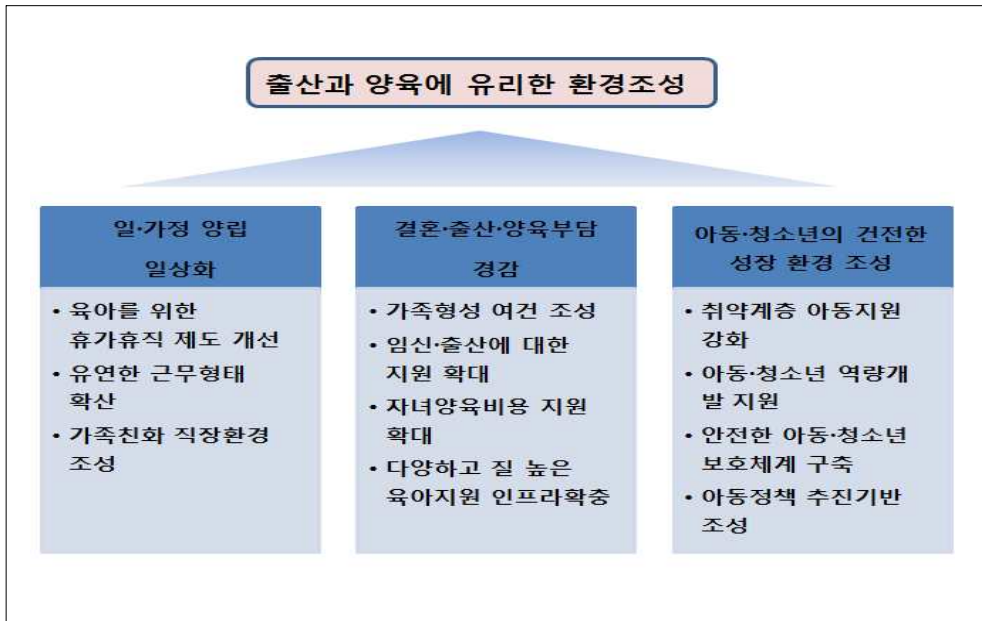
자료 : 경기도,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11~’15) 2011년도 시행계획」에서 재구성.

다. 저출산정책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도달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며 2010년 현재 1.31명에 불과하다.¹⁴⁾ 이는 OECD 평균 1.74명(2009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했다. 이에 기반해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을 수립해 지난 5년간 42.2조원을 투입해 4개 분야에 237개의 세부과제를 시행하였다. 올해부터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3-4〉와 같이 저출산 정책의 목표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며 이를 위해 일·가정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으로 정책과제를 분류하였다.

14)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그림 3-4〉 저출산 정책 목표 및 정책과제



자료 :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3-14>와 같다. 저출산과 관련한 대책은 총 95개 과제이며,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24개,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46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 25개로 구성되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분야에는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는 앞서 살펴본 여성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정책과제와 중복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분야에는 가족형성 여건조성, 임신·출산지원 확대, 자녀양육비용 확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역시 여성정책기본계획,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사업과 중복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환경 조성 사업은 취약계층아동지원,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아동정책 기반조성 사업으로 구성되었다. 이 부분은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8~2012)」와 중복된다.

〈표 3-14〉 저출산 정책 중점과제

과제명		세부과제	부처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휴가휴직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산전후 후가 분할사용 허용 	고용 고용 고용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개선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고용 행안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강제방안 도입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확산 	복지, 고용 여성가족, 기재
결혼· 출산· 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 여건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국토 국방
	임신·출산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만취약지 보건의료인프라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 확대 	복지 복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다자녀가장 공무원 퇴직후 재고용 다자녀가정 세제, 주택, 학비지원 확대 	복지, 교과 행안 기재, 국토, 교과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개선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어린이집 운영시간 다양화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복지 복지 복지 여성가족 복지, 교과, 여성가족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취약계층아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복지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강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아동학대 예방) Wee프로젝트(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 복지 교과
	아동정책 기반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복지

자료 : 대한민국정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위와 같은 중앙 정부의 저출산 정책 계획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계획은 〈표 3-15〉와 같다. 우선,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분야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활성화를 위한 4개의 세부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분야는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양육수당 지원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등과 관련한 21개 세부 사업들과 유아 학비지원, 농가 도우미 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그룹홈 지원, 경기 I-Plus카드사업 확대 등의 30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분야는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등과 관련하여 맞춤형 방과 후 학교운영(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확대(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등 9개 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표 3-15〉 경기도 저출산 정책 시행계획(2012)

과제명		세부과제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지원확대
	가족친화인증에 기업 등 참여 활성화	-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기반마련 지원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센티브 강화 -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 신혼부부 대상 주택자금 지원 확대
	결혼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 체계적 제공	- 가족생활교육 및 가족상담 서비스 내실화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확대 -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 민간의료기관 예방접종 지원비용 확대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	-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 -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 모자보건수첩 및 철분제 지원사업 -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강화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확대	- 양육수당 지원 확대
	취약지역내 국공립 어린이집 지속 확충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 -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 보육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 서비스 확대	- 사립유치원 평가 내실화 -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유치원 종일반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계속)

(계속)

〈표 3-15〉 경기도 저출산 정책 시행계획(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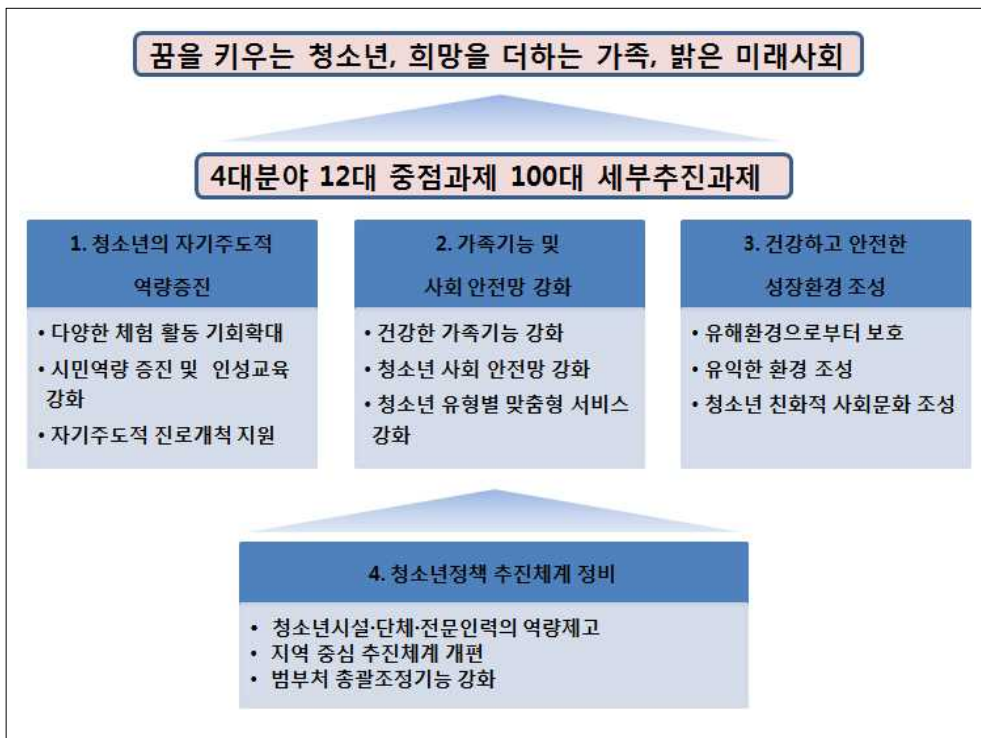
과제명		세부과제
	* 자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아학비지원 - 모유수유 증진사업 - 부적절한 인공임신 예방으로 모성건강 보호 - 농가 도우미 지원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 가정보육교사제도 - 취업여성 보육지원 -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 - 보육정보센터 운영 활성화 - 정부지원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 법정저소득층 아동 차액보육료 지원 - 0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 - 아동복지교사 지원 - 청소년 공부방 운영 - 입양기관 운영 -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 - 학대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 그룹홈 지원 -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 출산친화 인식개선 애니메이션제작·보급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운영 활성화 -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 - 경기 I-Plus카드사업 확대 - 미혼모부자지원 거점기관 운영 - 미혼모자시설 입소자 출산 및 양육 지원 - 모자자립시설 운영 - 출산여성공무원 인사우대 - 직원출산시 복지포인트 지급 -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내실화 -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 - 맞춤형 방과후 학교운영(꿈나무 안심학교 운영)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확대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확대	-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확대(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 폭력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유해환경요인 차단 및 건강관리 지원	- 흡연·음주 등 유해환경 예방사업 지속 추진

자료 : 경기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에 따른 2012년도 경기도 시행계획」 재구성.

라. 아동·청소년정책

현재 시행 중인 청소년 정책을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08~2012)」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다. 청소년 정책은 ‘꿈을 키우는 청소년, 희망을 더하는 가족, 밝은 미래사회’라는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4대 분야 12대 중점과제 100대 세부추진과제를 <표 3-16>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그림 3-5〉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개요



자료 : 관계부처합동,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08~2012)」.

이 중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분야의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와 청소년 사회안전망 조성과 관련한 세부과제, 그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분야의 세부과제는 가족정책 및 저출산 정책의 세부과제와 중복된다.

〈표 3-16〉 제4차 청소년정책 세부과제

과제명		세부과제
1.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역량 증진	1-1.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확대	1-1-1. 체험활동을 통한 역량 계발 지원 시스템 강화
		1-1-2.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확대
	1-2. 시민역량 증진 및 인성 교육 강화	1-2-1. 사회참여 활동 강화
		1-2-2. 청소년 언어순화 및 인성교육 강화
		1-2-3. 글로벌 시민역량 증진
	1-3. 자기주도적 진로개척 지원	1-3-1.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 지도 강화
		1-3-2. 건전한 아르바이트 여건 조성
		1-3-3. 청년층 취업 및 창업 지원
2. 가족기능 및 사회안전망 강화	2-1. 건강한 가족기능 강화	2-1-1. 부모교육 및 세대간 이해 증진 프로그램
		2-1-2. 가정상담지원 강화
		2-1-3. 가족공유시간 확대여건 조성
	2-2. 청소년 사회안전망 조성	2-2-1.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 확대·강화
		2-2-2. 청소년 복지서비스 강화 및 서비스간 연계
		2-2-3. 지역사회 청소년 후견인 확대
	2-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강화	2-3-1. 가출청소년·소년원 출원생 등 고위기 청소년 지원
		2-3-2. 학업중단 청소년 및 한부모 지원
		2-3-3. 저소득층 및 장애, 북한이탈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2-3-4. 다문화 청소년 지원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3-1.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3-1-1.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및 유해 매체로부터 보호
		3-1-2. 술, 담배, 유해업소로부터 보호 강화
		3-1-3. 성보호 대책 강화
		3-1-4. 학교폭력·가정학대로부터 보호
	3-2. 유익한 환경 조성	3-2-1. 청소년 생활안전 강화
		3-2-2. 신체적·정신적 건강환경 조성
	3-3. 청소년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3-3-1. 청소년 친화지수 개발 및 친화마을 확산 추진
		3-3-2. 청소년 권리 증진
4.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정비	4-1. 청소년 시설·단체·전문인력의 역량강화	4-1-1. 청소년시설·단체 인프라 확대 및 역량강화
		4-1-2. 청소년 지도사·청소년 상담사 역량강화
	4-2.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4-2-1. 지역자원 통합 연계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4-2-2. 지자체 중심으로 정책 추진체계 개편
	4-3. 범부처 정책 총괄 조정기능 강화	4-3-1. 청소년 정책관계기관협의회 활성화
		4-3-2. 성과평가체계 등 과학적 정책기반 마련

자료 : 관계부처합동,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2008~2012)」.

중앙정부의 경우 청소년 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아동 정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과에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아동정책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계획(2011)에 따르면 <표 3-17>과 같은 아동청소년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우선, ‘아동·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청소년증 발급 운영,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존) 등을 포함한 22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는 16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청소년 문화존 사업추진,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시설’과 관련한 추진 사업은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집 건립, 청소년 쉼터 운영, 그룹-홈 운영지원 등 12개이며, 마지막으로 ‘아동복지담당 소관업무’를 위해 추진된 사업은 26개로 We스타트마을 지원, 드림스타트마을 지원, 아동급식 지원, 가정학습 무한돌봄(경찰대 멘토링)추진, 저소득층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등이 포함된다.

〈표 3-17〉 경기도 아동·청소년 정책 시행계획(2011)

과제명	세부과제	
1. 아동·청소년 정책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육성기금 운용 - 청소년활동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 - 저소득층 자녀지원 사업 - 차세대 리더 국제 컨퍼런스 개최 - 청소년 학업장학금 지원 - 향사방지 우리림 조성사업 - 아동·청소년 정책 지역토론회 개최 - 아동·청소년정책 설명회 개최 -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유공자 표창 - 청소년증 발급 운영 - 경기도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 운영 -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운영 - 청소년 봉사활동 지원 - 청소년 자원봉사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 제 14회 경기도 청소년 자원봉사 대회 - 경기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 위기청소년 보호 및 사회안전망 구축 -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두드림존) -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료
2. 청소년 육성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9회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 개최 - 제20회 경기도 청소년 연극제 개최 - 청소년 문화존 사업추진 -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 어려운 청소년 해외 문화체험 - 장애청소년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 청소년 공부방 운영 - 평생교육시설 상담교사 인건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차세대(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 청소년 대토론회 개최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 경기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공모 -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 감시단 연찬회 -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수립
3. 아동·청소년 시설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운영 - 경기도 청소년야영장 운영 - 청소년 수련관 건립 -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공청소년수련시설 - 청소년지도자배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운영지원 - 청소년 쉼터 운영 - 아동 일시보호소 운영 - 아동 양육시설 운영 - 그룹-홈 운영 지원 - 개인운영 신고시설(아동)지원
4. 아동 복지담당 소관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스타트마을 지원 - 드림스타트마을 지원 - 가정위탁 양육 지원 - 소년소녀 가장 지원 -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가입 - 가정위탁지원 센터 운영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돌씨앗통장) 지원 - 아동상담실 운영 - 아동 급식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 시·군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 학대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 입양수수료 지원 - 입양기관 운영 - 도 결연기관 운영 -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 아동복지교사(사회적 일자리)지원 - 가정학습 무한돌봄(경찰대 멘토링)추진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 우수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강사 지원 - 지역아동센터 지원단 운영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 치료 지원

자료 : 경기도, 「2011 아동·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마. 소 결

지금까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 정책,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살펴해보았다.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과제가 <표 3-18>과 같이 상당히 중복된다는 점이다. 우선,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안)」의 과제명(1-1 수준)을 중심으로 보면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해당하는 사업(5-1, 5-2)을 제외하고 다른 사업 분야는 모두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사업에 포괄된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는 가족정책과 중복되는 사업이외에 여성경제활동, 여성건강,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매매, 여성정책 추진기반과 관련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저출산 정책도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및 관련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괄된다. 다만, 청소년 정책의 경우 일부 정책이 가족정책과 저출산 정책과 포괄되긴 하지만 정책대상이 청소년으로 국한되어 보다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8〉 여성정책과 가족정책 연계성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안)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1 여성인력 활용기반 내실화	-	-
1-2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	-
1-3 여성 근로자 차별 방지	-	-
1-4 여성 일자리 확대	-	-
1-5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강화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1 자녀 돌봄지원의 다양화 2-2 부모역할지원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2-1 여성의 건강 보호	-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임신·출산 지원 확대)
2-2 대상별 여성복지 욕구 충족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
2-3 여성장애인 권익 증진	-	-
2-4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강화)
2-5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 지원 내실화	-	-
2-6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3-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
3-1 성 인지 정책의 시행	-	-
3-2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	-
3-3 평등문화 확산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
-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가족형성 여건조성)
-	5-2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경기도 여성가족 현황

- 1. 인 구
- 2. 경 제
- 3. 자녀양육
- 4. 가족생활

1. 인 구

가. 인구구성

2011년 경기도 총인구는 11,937,415명이며, 이 중 여성인구는 5,922,058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여성인구 비율은 2007년 49.6%에서 2011년 53.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표 4-1〉 참조).

〈표 4-1〉 경기도 여성인구 추이(2007~2011)

(단위 : 명, %)

구분	전국			경기도		
	총인구	여성인구	여성비율	총인구	여성인구	여성비율
2007	49,268,928	24,577,679	49.9	11,106,211	5,508,005	49.6
2008	49,540,367	24,717,470	50.2	11,292,264	5,601,591	50.4
2009	49,773,145	24,843,206	50.4	11,460,610	5,687,041	51.2
2010	50,515,666	25,205,281	51.2	11,786,622	5,844,168	52.6
2011	50,734,284	25,327,350	51.4	11,937,415	5,922,058	53.3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주민등록인구통계」, www.kosis.kr.

경기도의 인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49세가 2,227,890명으로 가장 많고, 이 중 여성은 1,083,49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의 65세 이상 인구는 1,072,462명이며, 여성은 628,040명으로 58.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표 4-2〉 참조).

〈표 4-2〉 경기도 연령별 인구(2011)

(단위 :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전체	1,255,168	1,660,148	1,558,886	2,088,455	2,227,890	1,637,339	437,067	1,072,462
남	646,679	866,001	801,349	1,055,700	1,144,400	842,919	213,887	444,422
여	608,489	794,147	757,537	1,032,755	1,083,490	794,420	223,180	628,040
여성비율	48.5	47.8	48.6	49.5	48.6	48.5	51.1	58.6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주민등록인구통계」, www.kosis.kr.

2011년도 경기도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전입인구 2,062,422명, 전출인구 1,986,623명으로 경기도의 순이동은 75,799명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았다. 이 중 경기도 여성 전입인구는 1,018,092명, 전출인구는 979,888명이었으며 순이동 인구 중 여성비율은 50.4%로 나타났다(〈표 4-3〉 참조).

〈표 4-3〉 경기도의 인구이동(2007~2011)

(단위 : 명)

구분	전 입(a)		전 출(b)		순이동(a)-(b)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2007	2,306,957	1,149,696	2,193,857	1,092,438	113,100	57,258
2008	2,195,585	1,088,078	2,094,988	1,037,567	100,597	50,511
2009	2,175,681	1,079,878	2,081,528	1,033,806	94,153	46,072
2010	2,168,820	1,072,589	2,026,383	1,002,773	142,437	69,816
2011	2,062,422	1,018,092	1,986,623	979,888	75,799	38,20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국내인구이동통계」, 각년도에서 재가공, www.kosis.kr.

나. 외국인 인구

다음으로 외국인 인구를 살펴보면, 경기도 외국인 인구 중에서 여성인구 비율은 2007년 38.2%에서 2011년 41.1%로 증가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 비율은 2011년 전국의 30.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여성도 전국 외국인 여성의 2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표 4-4〉 경기도 외국인 여성인구 추이(2007~2011)

(단위 : 명, %)

구분	전국				경기도			
	전체	남	여	여성비율	전체	남	여	여성비율
2007	765,429	438,660	326,769	42.7	234,030	144,614	89,416	38.2
2008	854,007	480,136	373,871	43.8	256,827	154,026	102,801	40.0
2009	870,636	485,806	384,830	44.2	266,808	158,719	108,089	40.5
2010	918,917	514,956	403,961	44.0	285,262	169,885	115,377	40.4
2011	982,461	514,956	403,961	43.6	302,447	178,023	124,424	41.1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외국인등록인구」, www.kosis.kr.

연령대로 살펴보면, 2011년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 중 여성은 20~29세, 남성은 30~39세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외국인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은 30~39세가 34.0%로 가장 낮았으며, 50~59세가 50.6%로 가장 높았다(〈표 4-5〉 참조).

〈표 4-5〉 경기도 연령별 외국인 인구(2011)

(단위 : 명, %)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65세 이상
전체	4,912	5,331	81,823	85,700	68,633	44,542	8,257	3,249
남	2,570	2,702	51,125	56,522	37,036	21,987	4,413	1,668
여	2,342	2,629	30,698	29,178	31,597	22,555	3,844	1,581
여성비율	47.7	49.3	37.5	34.0	46.0	50.6	46.6	48.7

자료 :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 <http://stat.gg.go.kr>.

2011년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의 출신국가는 약 80개국이 넘으며, 전체 외국인 302,447명 가운데 중국인이 169,971명(56.2%)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이 9.9%, 필리핀인이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 여성은 전체 124,424명으로 출신국가 중 중국인 여성(68.1%)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여성(9.3%), 필리핀 여성(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여성의 비율은 중국인 여성이 49.9%로 가장 높았고, 미국인 여성이 39.6%, 베트남 여성이 3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표 4-6〉 경기도의 출신국가별 외국인 인구(2011)

(단위 : 명, %)

구분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몽골	인도 네시아	미국	스리 랑카	방글 라데시	우즈베 키스탄
전체	169,971	30,010	14,221	11,708	8,000	7,781	5,807	7,248	5,929	7,423
남	85,214	18,499	8,857	8,485	5,167	7,030	3,509	7,059	5,757	5,088
여	84,757	11,511	5,364	3,223	2,833	751	2,298	189	172	2,335
여성비율	49.9	38.4	37.7	27.5	35.4	9.7	39.6	2.6	2.9	31.5

주 : 경기도에 등록된 외국인의 국가(약 80개) 중 등록된 인구수가 5,000명 이상 되는 국가만 적시함.

자료 :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 <http://stat.gg.go.kr>.

2. 경 제

가. 경제활동

2011년 경기도의 15세 이상 인구는 약 9,874천명이며, 이 중 경제활동인구는 6,045천명으로 61.2%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여성은 2007년 49.2%에서 2011년 47.9%로, 남성은 2007년 75.4%에서 2011년 74.8%로 감소하여 여성의 감소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고용률은 여성은 2007년 48.0%에서 2011년 46.3%로 1.7%p 감소하였고, 남성도 같은 기간 72.4%에서 72.2%로 0.2%p 감소하였다. 또한 2011년 경기도의 실업률은 여성 3.4%, 남성 3.6%를 나타냈다(〈표 4-7〉 참조).

〈표 4-7〉 경기도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실업률(2007~2011)

(단위 : %)

구분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남	여	남	여	남	여
전국	2007	74.0	50.2	71.3	48.9	3.7	2.6
	2008	73.5	50.0	70.9	48.7	3.6	2.6
	2009	73.1	49.2	70.1	47.7	4.1	3.0
	2010	73.0	49.4	70.1	47.8	4.0	3.3
	2011	73.1	49.7	70.5	48.1	3.6	3.1
경기도	2007	75.4	49.2	72.4	48.0	3.9	2.6
	2008	75.2	49.6	72.4	48.3	3.7	2.5
	2009	75.1	47.8	72.0	46.2	4.2	3.3
	2010	75.4	47.9	72.3	46.0	4.2	3.9
	2011	74.8	47.9	72.2	46.3	3.6	3.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www.kosis.kr.

2010년 경기도 취업자의 산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사회·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4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소매·음식숙박업’ 이 27.4%, ‘제조업’ 14.9% 순으로 나타나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의 종사자 비율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도 ‘사회·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산업에 종사하는 취업자가 28.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제조업’ 23.2%, ‘도소매·음식숙박업’ 이 19.0%로 나타났다. 남성취업자의 경우 여성취업자에 비

해서는 전체 산업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8〉 참조).

〈표 4-8〉 경기도 산업별 성별 취업자(2010)

(단위 : 천명, %)

구 분		계		남		여	
전 체		5,673	(100.0)	3,433	(100.0)	2,241	(100.0)
농림·어업		169	(3.0)	105	(3.1)	64	(2.9)
광공업	전 체	1,135	(20.0)	802	(23.4)	333	(14.9)
	제조업	1,129	(19.9)	796	(23.2)	333	(14.9)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4,370	(77.0)	2,527	(73.6)	1,843	(82.2)
서비스업	건설업	388	(6.8)	342	(10.0)	46	(2.1)
	도소매·음식숙박업	1,266	(22.3)	652	(19.0)	615	(27.4)
	전기·운수·통신·금융	718	(12.7)	556	(16.2)	162	(7.2)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1,998	(35.2)	978	(28.5)	1,021	(45.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경제활동인구연보」, 2010, www.kosis.kr.

한편, 2010년 경기도 취업자의 직업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3.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무종사자’ 20.7%, ‘단순노무종사자’가 17.8%, ‘서비스종사자’가 14.9%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다음으로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가 16.9%, ‘사무종사자’가 15.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2.4%순으로 나타났다(〈표 4-9〉 참조).

〈표 4-9〉 경기도 직업별 성별 취업자(2010)

(단위 : 천명, %)

구 분		계		남		여	
전 체		5,673	(100.0)	3,433	(100.0)	2,241	(100.0)
관리자		123	(1.8)	111	(3.2)	12	(0.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305	(19.6)	780	(22.7)	525	(23.4)
사무종사자		1,004	(15.0)	541	(15.8)	463	(20.7)
서비스종사자		514	(7.7)	180	(5.2)	334	(14.9)
판매종사자		676	(10.1)	349	(10.2)	327	(14.6)
농업, 임업 및 어업 숙련 종사자		147	(2.2)	98	(2.9)	49	(2.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481	(7.2)	425	(12.4)	56	(2.5)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658	(9.9)	580	(16.9)	77	(3.4)
단순노무종사자		767	(11.5)	368	(10.7)	399	(17.8)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경제활동인구연보」, 2010, www.kosis.kr.

경기도 취업자의 종사자 지위별 분포를 보면, 여성취업자의 경우 자영업주가 13.3%, 무급가족종사자가 9.0%, 임금근로자가 77.8%를 차지했다. 남성취업자의 경우 자영업주가 25.6%로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1.2%로 여성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편,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율은 41.2%에 불과한 반면 임시근로자가 28.9%, 일용근로자가 7.7%로 나타나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여성근로자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5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임시근로자 13.5%, 일용근로자 5.4%로 나타났다(〈표 4-10〉 참조).

〈표 4-10〉 경기도 종사상지위별 성별 취업자 (2010)

(단위 : 천명, %)

구 분	계		남		여	
전 체	5,673	(100.0)	3,433	(100.0)	2,241	(100.0)
자영업주	1,175	(20.7)	879	(25.6)	297	(13.3)
무급가족종사자	243	(4.3)	42	(1.2)	201	(9.0)
임금근로자	4,255	(75.0)	2,512	(73.2)	1,743	(77.8)
상용	2,788	(49.1)	1,865	(54.3)	924	(41.2)
임시	1,112	(19.6)	464	(13.5)	648	(28.9)
일용	355	(6.3)	184	(5.4)	172	(7.7)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경제활동인구연보」, 2010, www.kosis.kr.

한편 경기도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를 보면, 2011년의 경우 가사가 1,367명으로 35.7%를 차지했고, 육아가 420명으로 11.0%를 차지했다(〈표 4-11〉 참조). 이는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사 또는 육아를 이유로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러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4-11〉 경기도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2007~2011)

(단위 : 천명)

구분	전 국					경기도				
	계	육 아	가 사	통 학	기 타	계	육 아	가 사	통 학	기 타
2007	14,954	1,496	5,343	4,148	3,967	3,404	417	1,153	951	883
2008	15,251	1,559	5,404	4,262	4,026	3,470	441	1,156	998	875
2009	15,698	1,599	5,552	4,292	4,255	3,639	458	1,198	1,014	969
2010	15,841	1,474	5,753	4,305	4,309	3,706	415	1,304	1,010	977
2011	15,953	1,469	5,854	4,254	4,367	3,829	420	1,367	1,028	1,01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www.kosis.kr.

나. 근로조건

2011년 경기도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월급여 총액은 약 247만원으로 전국평균 약249만원보다 낮게 나타난다.

〈표 4-12〉 경기도 근로자 각종 급여(2011)

(단위 : 원)

구분	월급여 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전국	2,487,340	2,308,784	178,555	386,376
경기도	2,467,899	2,299,095	168,804	321,289

주 :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됨.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11, www.kosis.kr.

경기도 근로자의 월급여를 산업별로 살펴보면,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이 3,913,600원으로 가장 높았고, ‘통신업’ 이 3,379,279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사업서비스업’의 월급여는 1,584,934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표 4-13〉 참조).

〈표 4-13〉 경기도 근로자 산업별 월급여(2011)

(단위 : 원)

구분	월급여 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광업	3,016,341	2,903,786	112,555	71,009
제조업	2,440,738	2,196,779	243,959	340,122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3,913,600	3,611,693	301,907	293,454
건설업	2,398,031	2,336,828	61,203	73,575
도매 및 소매업	2,470,208	2,382,957	87,251	354,896
숙박 및 음식점업	1,962,696	1,879,152	83,544	35,565
운수업	2,291,204	2,108,888	182,315	157,040
통신업	3,379,279	3,256,939	122,340	205,680
금융 및 보험업	3,186,465	3,066,970	119,494	1,154,819
부동산 및 임대업	2,192,849	2,155,379	37,470	69,247
사업 서비스업	1,584,934	1,509,001	75,932	126,818
교육 서비스업	2,951,690	2,898,429	53,260	453,609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2,168,736	2,037,116	131,620	347,94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211,864	2,018,186	193,678	100,763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	2,121,528	2,016,008	105,519	206,04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11, www.kosis.kr.

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높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으로 24.3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일수가 가장 낮은 산업은 ‘통신업’ 으로 20.6일로 나타났다. 총 근로시간이 가장 높은 업종 또한 ‘숙박 및 음식점업’ (206시간)이었고, 가장 낮은 업종 역시 ‘통신업’ (170.3시간)이었다(〈표 4-14〉 참조).

〈표 4-14〉 경기도 근로자 산업별 노동시간(2011)

(단위 : 일, 시간)

구분	월평균 근로일수	총 근로시간	주평균 근로일수	주당 근로시간	일평균 근로시간
광업	23.0	193.7	5.8	48.4	8.4
제조업	22.3	191.8	5.6	48.0	8.6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21.6	182.0	5.4	45.5	8.4
건설업	22.8	181.1	5.7	45.3	7.9
도매 및 소매업	22.1	181.3	5.5	45.3	8.2
숙박 및 음식점업	24.3	206.0	6.1	51.5	8.5
운수업	22.1	186.6	5.5	46.7	8.4
통신업	20.6	170.3	5.2	42.6	8.3
금융 및 보험업	21.1	173.7	5.3	43.4	8.2
부동산 및 임대업	21.4	195.3	5.4	48.8	9.1
사업 서비스업	21.0	194.6	5.3	48.7	9.3
교육 서비스업	21.7	174.0	5.4	43.5	8.0
보건 및 사회복지산업	22.1	181.7	5.5	45.4	8.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22.3	189.0	5.6	47.3	8.5
기타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23.0	185.4	5.8	46.4	8.1

주 : 주평균근로일수 = 월평균근로일수/4

주당근로시간 = 총근로시간/4

일평균근로시간 = 주당근로시간/주평균근로일수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 2011, www.kosis.kr.

3. 자녀양육

가. 보육

2011년 경기도의 보육인구는 총 748,036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세가 134,210명으로 가장 많고, 0세가 118,247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4-15〉 경기도 5세 이하 성별 인구(2011)

(단위 : 명)

구분	전체	남	여
전체	748,036	384,531	363,505
0세	118,247	60,704	57,543
1세	125,532	64,608	60,924
2세	120,197	61,913	58,284
3세	126,940	65,139	61,801
4세	134,210	68,816	65,394
5세	122,910	63,351	59,559

자료 : 경기도, 「주민등록인구통계」, 2011, www.kosis.kr.

한편, 2011년 현재 경기도에 어린이집은 11,825개소가 운영 중이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이 7,224개소(61.1%)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민간어린이집(법인 외+민간 개인)이 3,883개소(32.9%), 국·공립어린이집이 502개소(4.2%), 직장어린이집이 105개소(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16〉 참조).

다음으로 2011년 경기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를 살펴보면, 만 2세가 어린이집이 전체 이용아동의 25.6%(88,033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만 3세가 19.4%(66,765명), 만 1세가 18.9%(65,207명)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4-17〉 참조).

〈표 4-16〉 경기도 시·군별 어린이집 현황(2011)

(단위 : 개소, %)

시·군	전체	국·공립 보육	법인 보육	민간보육		가정보육	부모협동	직장 보육
				법인외	민간개인			
전체	11,825 (100.0)	502(4.2)	72(0.6)	127(1.1)	3,756(31.8)	7,224(61.1)	39(0.3)	105(0.9)
수원시	1,072	28	4	7	349	669	1	14
성남시	659	46	1	7	213	369	4	19
고양시	1,035	36	3	3	206	774	5	8
부천시	602	28	4	15	273	271	4	7
용인시	1,001	24	6	22	260	681	1	7
안산시	733	20	—	5	255	446	3	4
안양시	509	27	1	1	149	325	2	4
남양주시	649	22	3	9	208	404	1	2
의왕시	588	12	1	4	153	415	1	2
평택시	377	16	2	5	161	189	1	3
시흥시	429	20	4	2	155	247	—	1
화성시	615	23	8	8	190	379	1	6
광명시	347	21	2	3	86	232	2	1
파주시	511	14	5	1	170	316	1	4
군포시	263	17	1	1	79	160	2	3
광주시	306	9	1	2	110	181	2	1
김포시	231	16	8	—	57	148	—	2
이천시	168	10	—	2	95	59	—	2
구리시	151	7	—	3	48	92	—	1
양주시	303	15	—	1	108	179	—	—
안성시	248	8	3	5	74	157	—	1
포천시	152	15	—	4	59	72	—	2
오산시	230	18	1	2	62	146	—	1
하남시	147	6	1	—	50	87	3	—
의왕시	131	9	4	5	24	85	2	2
여주군	69	1	2	2	46	18	—	—
동두천시	128	8	1	2	45	72	—	—
양평군	48	9	1	2	28	7	—	1
과천시	53	7	1	—	7	28	3	7
가평군	35	4	1	2	21	7	—	—
연천군	35	6	3	2	15	9	—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1, www.childcare.go.kr.

〈표 4-17〉 경기도 연령별 어린이집 유형별 보육아동 현황(2011)

(단위 : 명)

구분	전체	국·공립 보육	법인 보육	민간보육		가정 보육	부모 협동	직장 보육
				법인외	민간개인			
전체	344,326	32,811	5,384	8,239	183,220	107,140	928	6,604
만0세	43,349	809	78	112	7,214	34,890	19	227
만1세	65,207	3,643	436	630	21,267	38,109	61	1,061
만2세	88,033	6,561	1,094	1,547	46,480	30,587	181	1,583
만3세	66,765	7,632	1,305	2,278	50,921	2,741	269	1,619
만4세	46,189	7,604	1,261	2,047	33,388	428	225	1,236
만5세	33,112	6,370	1,072	1,551	22,833	275	159	852
만6세 이상	1,671	192	138	74	1,117	110	14	26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1, www.childcare.go.kr.

2011년 경기도 전체에 있는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은 84.0%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로 보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이 93.4%로 가장 높았고, 민간개인 어린이집은 82.3%로 가장 낮았다(〈표 4-18〉 참조).

〈표 4-18〉 경기도 설립주체별 어린이집 정원충족률(2011)

(단위 : 명, %)

구분	전체	국·공립 보육	법인 보육	민간보육		가정 보육	부모 협동	직장 보육
				법인외	민간개인			
정원	409,956	35,143	6,346	9,699	222,628	126,503	1,052	8,585
현원	344,326	32,811	5,384	8,239	183,220	107,140	928	6,604
정원 충족률	84.0	93.4	84.8	84.9	82.3	84.7	88.2	76.9

주 : 정원충족률 = 현원 아동수 / 정원 아동수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1, www.childcare.go.kr.

2011년 경기도 특수어린이집수는 2,214개소이며 총 정원수 92,520명 가운데 82,506명이 이용중으로 정원충족률이 89.2%를 나타냈다. 각 유형별로 보면, 영아전담시설의 정원충족률이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표 4-19〉 참조).

〈표 4-19〉 경기도 특수어린이집 유형별 정원충족률(2011)

(단위 : 명, %)

구분	시설수	정원	현원	정원충족률
전체	2,214	92,520	82,506	89.2
영아전담시설	59	2,008	1,884	93.8
장애아전담시설(정부인건비지원시설)	14	577	445	77.1
장애아전담시설(정부인건비지원시설)	3	81	67	82.7
장애아전담시설 (정부인건비지원시설 + 미지원시설)	17	658	512	77.8
장애아 통합시설	223	19,041	17,345	91.1
방과후 시설현황(방과후전담 + 방과후통합)	22	1,210	847	70.0
시간연장시설	1,828	67,113	59,759	89.0
휴일시설	8	530	496	93.6
24시간시설 현황	57	1,960	1,663	84.8

주 : 정원충족률 = 현원 아동수 / 정원 아동수 × 100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1, www.childcare.go.kr.

나. 교육

2011년 경기도 내 유치원은 1,986개이며, 유치원 원아의 수는 150,966명이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원아 수는 11.6%, 유치원 수는 8.2% 증가했다(〈표 4-20〉 참조).

〈표 4-20〉 경기도 유치원수 및 원아수(2007~2011)

(단위 : 개소, 명, %)

구분	유치원수	원 아 수			여아비율
		전체	남	여	
2007	1,835	135,245	70,207	65,038	48.1
2008	1,883	136,558	70,483	66,075	48.4
2009	1,912	137,566	70,669	66,897	48.6
2010	1,950	141,626	72,713	68,913	48.7
2011	1,986	150,966	76,971	73,995	49.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cesi.kedi.re.kr.

2011년 경기도 내 초등학교는 1,159개교, 학생수는 814,927명으로,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학교 수는 8.5% 증가하였으나, 학생수는 14.4% 감소하였다. 2011년 경기도 내 중학교는 586개교, 학생수는 472,878명이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학교 수는 13.6%, 학생수는 3.4% 감소하였다(〈표 4-21〉 참조).

〈표 4-21〉 경기도 초·중학교 수 및 학생수(2007~2011)

(단위 : 개,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수	학생수			여학생 비율	학교수	학생수			여학생 비율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1,068	951,908	495,670	456,238	47.9	516	489,548	257,279	232,269	47.4
2008	1,094	920,586	478,217	442,369	48.1	545	488,203	257,102	231,101	47.3
2009	1,114	880,141	456,703	423,438	48.1	557	484,656	254,669	229,987	47.5
2010	1,145	848,135	440,793	407,342	48.0	574	482,170	251,186	230,984	47.9
2011	1,159	814,927	422,808	392,119	48.1	586	472,878	245,428	227,450	48.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cesi.kedi.re.kr.

2011년 경기도 내 고등학교는 일반계 324개, 실업계 97개였으며, 학생수는 일반계 고등학교 373,241명, 실업계 고등학교 89,215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계 고등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47.5%로, 실업계 고등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47.4%로 나타났다(〈표 4-22〉 참조).

〈표 4-22〉 경기도 고등학교 수 및 학생수(2007~2011)

(단위 : 개, 명, %)

구분	일반계					실업계				
	학교수	학생수			여학생 비율	학교수	학생수			여학생 비율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2007	243	296,918	153,683	143,235	48.2	124	114,814	60,546	54,268	47.2
2008	256	320,890	164,326	156,564	48.8	124	115,745	62,188	53,557	46.3
2009	273	341,214	175,764	165,450	48.5	124	115,683	62,227	53,456	46.2
2010	288	350,929	182,084	168,845	48.1	121	110,532	59,665	50,867	46.0
2011	324	373,241	195,952	177,289	47.5	97	89,215	46,887	42,328	47.4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인적자원 통계서비스, cesi.kedi.re.kr.

주 : 2011년도 실업계(특수목적고 + 특성화고 + 자율고) 합계 인원

한편, 2010년 경기도민 조사에 따르면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43.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학부모는 48.7%, 중학생의 학부모는 39.7%, 고등학생의 학부모는 37.3%로 조사되어, 상급학교일수록 학부모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4-23〉 참조).

〈표 4-23〉 경기도민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2010)

(단위 : %)

구분	전체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00.0	43.7	44.7	11.6
초등학교	100.0	48.7	41.8	9.4
중학교	100.0	39.7	47.3	13.0
고등학교	100.0	37.3	47.9	14.8

주 : 2011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 경기도,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 조사」, 2010, <http://stat.gg.go.kr>.

경기도민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로는 교육방법 및 수준이 40.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사의 자질이 19.7%, 학생들간의 분위기가 10.8%를 차지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 모두 자녀의 학교생활의 가장 큰 불만은 교육방법 및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4-24〉 참조).

〈표 4-24〉 경기도민 자녀 학교생활에 대한 불만족 이유(2010)

(단위 : %)

구분	전체	학교 교육 시설	학부모 치맛 바람	교육 방법과 수준	교사의 자질	생활 지도	학교 주변 환경	학생들간 분위기	기타
전체	100.0	4.8	3.5	40.9	19.7	5.3	9.9	10.8	5.1
초등학교	100.0	7.2	5.0	42.4	20.2	3.5	10.6	5.3	5.8
중학교	100.0	2.2	2.7	39.4	22.5	5.2	9.9	14.0	4.0
고등학교	100.0	4.2	2.4	40.3	16.1	8.0	8.9	15.1	5.1

주 : 2011년에는 조사되지 않았음.

자료 : 경기도, 「경기도민 생활 및 의식 조사」, 2010, <http://stat.gg.go.kr>.

2011년 경기도민 중 과외를 받는 학생의 비율은 80.1%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라는 이유가 46.8%로 가장 높았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82.5%로 가장 높았으며, 고등학생이 74.0%로 가장 낮았다. 과외를 받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19.9%로 나타났으며, 과외를 받지 않는 이유는 ‘경제적 사정’ 이 51.5%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2011년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80.1%가 과외를 받고 있었으며, 그 주된 이유는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이었고, 과외를 받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사정’ 때문이었다(〈표 4-25〉 참조).

〈표 4-25〉 경기도 학생의 과외수업 여부(2011)

(단위 : %)

구분	과외 받은적 있음	과외를 받은 이유						과외 받은적 없음	과외를 받지 않은 이유				
		수업 수준이 낮아서	수업을 못해서	남보다 앞서기 위해서	안하면 불안해서	몰어볼 사람이 없어서	기타		학교수업으로도 충분	경제적 사정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기타
전체	80.1	7.3	18.4	46.8	17.1	3.8	6.6	19.9	18.1	51.5	22.2	4.5	3.7
초등학교	82.5	6.4	15.4	45.9	18.3	5.6	8.3	17.5	23.7	51.7	14.0	6.1	4.5
중학교	81.4	9.3	20.9	46.7	16.2	2.2	4.8	18.6	11.3	54.6	27.9	3.5	2.7
고등학교	74.0	7.2	22.0	48.9	15.3	1.6	5.0	26.0	15.9	48.9	28.7	3.1	3.4

자료 : 경기도, 「경기도민 생활 및 인식 조사」, <http://stat.gg.go.kr>.

4. 가족생활

가. 가족 구성

1) 혼인

2011년 경기도의 총 혼인수는 79,137건이었으며, 총인구수 대비 총 혼인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은 2011년 6.7%로 전국 6.6%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표 4-26〉 참조).

〈표 4-26〉 경기도 혼인수 및 조혼인율(2007~2011)

(단위 : 명, %)

구분	전국		경기도	
	혼인수	조혼인율	혼인수	조혼인율
2007	343,559	7.0	81,248	7.4
2008	327,715	6.6	78,004	7.0
2009	309,759	6.2	73,403	6.5
2010	326,104	6.5	78,471	6.8
2011	329,087	6.6	79,137	6.7

주 : 조혼인율(%) = 특정 1년간의 총 혼인수(12월 31일 기준)/총인구(연앙인구, 7월 1일 기준)×1,000 (인구 1,000명 당 혼인 건수)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www.kosis.kr.

2011년 경기도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29.4세, 남성 31.9세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전국 평균 초혼연령인 여성 29.1세, 남성 31.9세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2007년 경기도 평균 초혼연령 여성 28.3세, 남성 31.0세 대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7〉 경기도 남녀의 평균 초혼연령(2007~2011)

(단위 : 세)

구분	전국		경기도	
	남	여	남	여
2007	31.1	28.1	31.0	28.3
2008	31.4	28.3	31.3	28.6
2009	31.6	28.7	31.6	28.9
2010	31.8	28.9	31.8	29.3
2011	31.9	29.1	31.9	29.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www.kosis.kr.

2011년 경기도의 국제결혼 건수는 7,019건으로 전국 국제결혼 건수의 23.6%를 차지하였다. 경기도 국제결혼 건수는 경기도 총 결혼건수 중 8.9%를 차지했으며, 이 비율은 전국 총 결혼건수 대비 전국 국제결혼건수의 비율과 비교하여 0.1%p 낮았다. 2007년~2011년 사이 경기도의 국제결혼 비율은 2009년을 제외하면 전국 국제결혼 비율보다 낮게 나타났다(〈표 4-28〉 참조).

〈표 4-28〉 전국 및 경기도 국제결혼 현황(2007~2011)

(단위 : 건, %)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전국	총 결혼건수(c)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국제결혼건수(d)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 비율(d/c×100)	10.9	11.0	10.8	10.5	9.0
경기도	총 결혼건수(a)	81,248	78,004	73,403	78,471	79,137
	국제결혼건수(b)	8,257	8,123	7,946	7,806	7,019
	총 결혼건수 대비 국제결혼 비율(b/a×100)	10.2	10.4	10.8	9.9	8.9
전국 국제결혼건수 대비 경기도 국제결혼 비율(b/d×100)		22.0	22.4	23.9	22.8	23.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각년도에서 재가공, www.kosis.kr.

2011년 경기도에서 혼인등록한 외국인 아내는 5,221명으로 전국 외국인 아내 수의 23.4%를 차지하며, 전국 16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41.4%, 베트남이 30.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외국인 아내의 국적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의 비율은 낮았다(〈표 4-29〉 참조).

〈표 4-29〉 경기도 외국인 아내 출신국적 분포(2011)

(단위 : 명, %)

구분	인원수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미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기타
전국	22,265	34.3	33.9	9.3	5.0	4.3	2.3	1.6	1.5	7.8
경기도	5,221	30.1	41.4	8.0	3.6	2.8	2.3	2.3	1.8	7.7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2011, www.kosis.kr.

2011년 경기도에서 혼인 등록한 외국인 남편은 1,798명으로, 경기도는 전국 외국인 남편 수의 24.0%를 차지하였다. 2011년 경기도 외국인 남편의 국적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34.4%, 일본이 11.6%, 미국이 25.3%를 나타내 외국인 아내에 비해 세 국가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표 4-30〉 참조).

〈표 4-30〉 경기도 외국인 남편 출신국적 분포(2011)

(단위 : 명, %)

구분	인원수	전체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프랑스	파키스탄	기타
전국	7,497	100.0	24.9	22.8	21.8	6.0	2.9	2.6	1.7	1.7	15.6
경기도	1,798	100.0	34.4	11.6	25.3	5.4	2.3	2.4	1.4	2.3	14.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2011, www.kosis.kr.

2) 이혼

2011년 경기도의 총 이혼건수는 28,444건으로 전국 총 이혼건수의 24.9%를 차지하였다. 2007년~2011년 사이 경기도의 이혼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지만, 2009년과 2011년 다소 증가양상을 보였다. 2011년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을 보면, 경기도는 2.4%로 전국 2.3%에 비해 약간 높았다(〈표 4-31〉 참조).

〈표 4-31〉 경기도 이혼수 및 조이혼율(2007~2011)

(단위 : 건, %)

구분	전국		경기도	
	이혼수	조이혼율	이혼수	조이혼율
2007	124,072	2.5	29,964	2.7
2008	116,535	2.4	28,379	2.5
2009	123,999	2.5	29,807	2.6
2010	116,858	2.3	27,810	2.4
2011	114,284	2.3	28,444	2.4

주 : 1) 조이혼율(%) = 특정 1년간의 총 이혼수/총인구(연앙인구, 7월 1일 기준)×1,000(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www.kosis.kr.

2011년 경기도민의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수를 살펴보면, 이혼 당시 자녀가 없었던 비율이 46.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1명인 경우가 25.7%로 두 번째로 높았고, 그 다음으로 2명인 경우가 24.1%를 차지하였다(〈표 4-32〉 참조).

〈표 4-32〉 경기도민 이혼당시 미성년 자녀수별 이혼건수(2011)

(단위 : 건, %)

구분	전체 ¹⁾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미상
전국	114,284	53,856	29,000	26,678	4,410	340
	100.0	47.1	25.4	23.3	3.9	0.3
경기도	28,444	13,137	7,308	6,865	1,065	69
	100.0	46.2	25.7	24.1	3.7	0.2

주 : 1) 혼인 형태 미상 포함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2011, www.kosis.kr.

2011년 경기도의 혼인형태 중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는 78.3%로, 2008년 이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초혼여성과 재혼남성은 4.2%, 재혼여성과 초혼남성은 5.9%로 감소하였다. 재혼여성과 재혼남성은 2009년 13.2%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2011년 11.6%로 감소하였다(〈표 4-33〉 참조).

〈표 4-33〉 경기도민 혼인형태별 비율(2007~2011)

(단위 : %)

구분	전체 ¹⁾	초혼(남)&초혼(여)	초혼(남)&재혼(여)	재혼(남)&초혼(여)	재혼(남)&재혼(여)	미상
2007	100.0	77.5	6.0	4.1	12.1	0.3
2008	100.0	75.8	6.6	4.4	13.1	0.1
2009	100.0	76.1	6.3	4.3	13.2	0.0
2010	100.0	78.2	5.8	4.0	12.0	0.0
2011	100.0	78.3	5.9	4.2	11.6	0.0

주 : 1) 혼인 형태 미상 포함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www.kosis.kr.

2011년 경기도민의 주요 이혼사유는 성격차이(45.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제문제(12.7%)로 나타났다. 2007년~2011년 사이 이혼사유의 추이를 보면, ‘성격차이’와 ‘가족 간 불화’는 감소추세인 반면, ‘경제문제’와 ‘배우자부정’은 꾸준히 주요 이혼사유 중 하나로 나타났다(〈표 4-34〉 참조).

〈표 4-34〉 경기도민 이혼사유별 비율(2007~2011)

(단위 : %)

구분	전체	배우자 부정	정신/ 육체적학대	가족간 불화	경제 문제	성격 차이	건강 문제	기타	미상
2007	100.0	7.9	4.1	7.8	13.6	48.2	0.6	14.4	3.4
2008	100.0	8.2	4.7	7.1	14.4	48.3	0.6	14.6	2.1
2009	100.0	7.7	4.4	7.3	14.2	48.1	0.5	16.8	1.0
2010	100.0	8.8	4.3	7.3	12.3	45.7	0.6	19.8	1.1
2011	100.0	8.2	4.4	7.2	12.7	45.4	0.6	20.4	1.2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인구동향조사」, 각년도, www.kosis.kr.

나. 가족가치관

경기도민의 결혼에 대한 견해는 ‘찬성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63.0%, ‘반대한다’ 고 응답한 비율은 4.4%로 나타나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는 중립적인 태도도 3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결혼에 ‘찬성한다’ 는 응답은 여성이 55.7%, 남성이 70.5%였으며, ‘반대한다’ 는 응답은 여성이 5.8%, 남성이 3.0%로 나타났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는 중립적인 견해는 남성(25.4%)보다 여성(37.8%)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35〉 참조).

〈표 4-35〉 경기도민 결혼에 대한 견해(복수응답)(2010)

(단위 : %)

구분	결혼에 찬성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결혼에 반대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	63.0	31.7	4.4	0.9
남	70.5	25.4	3.0	1.1
여	55.7	37.8	5.8	0.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사회조사」, 2010, www.kosis.kr.

2010년 경기도민의 이혼에 대한 견해는 ‘가급적 안된다’가 38.3%,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가 34.8%이며, ‘어떤 이유라도 안된다’가 15.9%,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가 8.9%를 차지하였다. 이혼을 반대하는 응답이 54.2%로 많아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이혼을 반대하는 응답이 여성은 48.7%, 남성은 59.9%로, 여성보다 남성이 이혼에 대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36〉 참조).

〈표 4-36〉 경기도민 이혼에 대한 견해(2010)

(단위 : %)

구분	어떤 이유라도 안된다	가급적 안된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유가 있으면 하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전체	15.9	38.3	34.8	8.9	2.0
남	19.2	40.7	30.1	7.4	2.5
여	12.7	36.0	39.5	10.4	1.5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사회조사」, 2010, www.kosis.kr.

경기도민의 입양에 대한 견해는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36.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26.7%로 나타났다. 입양에 대해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보겠다’와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각각 17.9%와 18.9%를 차지하여, 총 36.8% 정도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표 4-37〉 참조).

〈표 4-37〉 경기도민 입양에 대한 견해(2010)

(단위 : %)

구분	자녀를 원하지만 출산이 어려운 경우는 적극 고려해 보겠다	자녀유무에 상관없이 여건이 허락되면 입양을 하고 싶다	입양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전체	17.9	18.9	36.5	26.7
남	17.2	18.0	37.4	27.4
여	18.5	19.9	35.7	25.9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사회조사」, 2010, www.kosis.kr.

경기도민의 부모부양에 대한 견해는 ‘정부, 사회’가 책임져야한다는 응답이 5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과 정부, 사회’ (33.4%), ‘부모님 스스로 해결’ (11.3%), ‘가족’ (5.3%)의 순이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정부 및 사회’와 ‘가족과 정부 및 사회’라는 응답이 각각 52.1%, 30.8%인 반면 남성은 47.7%, 36.3%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원 중에서는 ‘모든 자녀’가 22.6%(무응답 제외)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식 중 능력 있는 자’가 4.9%, ‘장남 또는 며느리’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표 4-38〉 참조).

〈표 4-38〉 경기도민 노부모부양에 대한 견해(2010)

(단위 : %)

구분	스스로 해결	가족과 정부, 사회	정부, 사회	가족	부모부양의 책임 있는 가족원					
					장남 또는 만며느리	아들 또는 며느리	딸 또는 사위	모든 자녀	자식 중 능력 있는 자	무응답
전체	11.3	33.4	50.0	5.3	4.4	3.0	1.0	22.6	4.9	71.5
남	10.7	36.3	47.7	5.4	5.7	3.9	0.4	24.7	5.0	69.9
여	11.8	30.8	52.1	5.3	3.2	2.3	1.5	20.7	4.9	73.0

자료 : 통계청, 「통계청 사회조사데이터」, 2011.

설문조사 방법

- 1. 조사 개요
- 2. 표본 설계
- 3. 조사 체계

1. 조사 개요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는 경기도 거주 1,995가구의 만 19세 이상~65세 미만 남녀가구주 및 여성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를 위한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를 사용하였다. 조사는 조사원 면접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응답자가 희망하는 가구에 한하여 자기 기입방식을 병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2년 2월 21일부터 3월 1일까지 총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표는 여성가구주 조사표, 남성가구주 조사표, 여성가구원 조사표로 구성되었다(〈부록〉 설문지 참조). 본 조사의 설문지는 연구진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표본설계 및 현장조사는 경인지방통계청에 의해 수행되었다.

2. 표본 설계

가. 모집단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의 목표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경기도 만 19세 이상~65세 미만 남녀가구주 및 여성가구원이다. 조사모집단은 조사하기 어려운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제외한 일반가구의 가구원이다. 조사모집단의 가구별, 주택유형별, 연령별, 혼인상태별, 학력별 분포는 〈표 5-1〉~〈표 5-5〉와 같다.

〈표 5-1〉 조사모집단 가구별 분포

(단위 : 가구, 호, %)

구분	가구수					가구 비율				
		단독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단독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경기도	3,832,103	777,225	828,736	867,745	1,358,397	100.0	20.3	21.6	22.6	35.4
수원시	374,084	92,869	72,967	79,559	128,689	100.0	24.8	19.5	21.3	34.4
성남시	335,698	77,240	73,387	76,036	109,035	100.0	23.0	21.9	22.7	32.5
의정부시	142,369	26,942	31,754	34,030	49,643	100.0	18.9	22.3	23.9	34.9
안양시	199,519	34,900	40,391	48,420	75,808	100.0	17.5	20.2	24.3	38.0
부천시	291,519	59,244	60,874	69,060	102,341	100.0	20.3	20.9	23.7	35.1
광명시	110,311	18,659	24,617	26,857	40,178	100.0	16.9	22.3	24.3	36.4
평택시	131,887	27,616	30,499	28,405	45,367	100.0	20.9	23.1	21.5	34.4
동두천시	32,412	7,393	8,512	7,098	9,409	100.0	22.8	26.3	21.9	29.0
안산시	249,031	61,498	49,398	53,317	84,818	100.0	24.7	19.8	21.4	34.1
일산시	303,601	58,387	62,359	70,367	112,488	100.0	19.2	20.5	23.2	37.1
과천시	21,659	3,524	4,291	5,108	8,736	100.0	16.3	19.8	23.6	40.3
구리시	61,939	11,300	12,368	14,750	23,521	100.0	18.2	20.0	23.8	38.0
남양주시	170,970	24,346	37,687	41,863	67,074	100.0	14.2	22.0	24.5	39.2
오산시	66,309	17,650	13,940	13,541	21,178	100.0	26.6	21.0	20.4	31.9
시흥시	140,509	35,685	27,410	28,859	48,555	100.0	25.4	19.5	20.5	34.6
군포시	92,668	16,427	19,153	22,311	34,777	100.0	17.7	20.7	24.1	37.5
의왕시	46,421	7,218	9,456	11,546	18,201	100.0	15.5	20.4	24.9	39.2
하남시	46,105	7,888	10,172	11,237	16,808	100.0	17.1	22.1	24.4	36.5
용인시	269,828	40,799	57,238	64,924	106,867	100.0	15.1	21.2	24.1	39.6
파주시	104,735	17,728	24,900	24,017	38,090	100.0	16.9	23.8	22.9	36.4
이천시	64,260	13,068	16,229	13,457	21,506	100.0	20.3	25.3	20.9	33.5
안성시	65,556	19,507	16,192	12,159	17,698	100.0	29.8	24.7	18.5	27.0
김포시	71,290	11,683	16,107	16,129	27,371	100.0	16.4	22.6	22.6	38.4
화성시	158,504	29,773	32,878	35,174	60,679	100.0	18.8	20.7	22.2	38.3
광주시	72,994	11,752	16,367	17,285	27,590	100.0	16.1	22.4	23.7	37.8
양주시	61,269	10,302	14,688	14,304	21,975	100.0	16.8	24.0	23.3	35.9
포천시	47,461	10,135	13,114	9,683	14,529	100.0	21.4	27.6	20.4	30.6
여주군	35,505	8,012	10,765	6,841	9,887	100.0	22.6	30.3	19.3	27.8
연천군	15,441	3,888	5,060	2,770	3,723	100.0	25.2	32.8	17.9	24.1
가평군	18,075	4,507	6,060	3,176	4,332	100.0	24.9	33.5	17.6	24.0
양평군	30,174	7,285	9,903	5,462	7,524	100.0	24.1	32.8	18.1	24.9

〈표 5-2〉 조사모집단 주택유형별 분포

(단위 : 가구, 호, %)

구분	자가		주택수					주택 비율				
	수	비율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단독	아파트	연립	기타
경기도	1,881,971	49.1	3,726,415	1,131,033	2,089,224	469,408	36,750	100.0	30.4	56.1	12.6	1.0
수원시	168,618	45.1	362,196	138,207	185,113	34,874	4,002	100.0	38.2	51.1	9.6	1.1
성남시	128,016	38.1	316,480	128,544	146,361	38,477	3,098	100.0	40.6	46.2	12.2	1.0
의정부시	73,313	51.5	140,623	39,408	84,370	15,393	1,452	100.0	28.0	60.0	10.9	1.0
안양시	103,597	51.9	194,832	46,393	115,587	30,519	2,333	100.0	23.8	59.3	15.7	1.2
부천시	145,300	49.8	277,393	75,636	125,882	72,021	3,854	100.0	27.3	45.4	26.0	1.4
광명시	56,045	50.8	109,622	21,364	61,838	25,657	763	100.0	19.5	56.4	23.4	0.7
평택시	73,124	55.4	131,188	44,972	69,402	15,288	1,526	100.0	34.3	52.9	11.7	1.2
동두천시	15,078	46.5	32,175	8,512	18,332	4,957	374	100.0	26.5	57.0	15.4	1.2
안산시	100,583	40.4	243,221	103,128	92,931	45,001	2,161	100.0	42.4	38.2	18.5	0.9
일산시	152,799	50.3	279,794	58,646	193,731	25,786	1,631	100.0	21.0	69.2	9.2	0.6
과천시	8,651	39.9	20,981	6,628	12,901	1,382	70	100.0	31.6	61.5	6.6	0.3
구리시	29,558	47.7	61,147	19,759	34,213	6,711	464	100.0	32.3	56.0	11.0	0.8
남양주시	90,916	53.2	169,818	24,664	120,577	23,598	979	100.0	14.5	71.0	13.9	0.6
오산시	27,321	41.2	65,489	19,585	41,893	3,516	495	100.0	29.9	64.0	5.4	0.8
시흥시	65,277	46.5	137,538	39,706	79,030	17,308	1,494	100.0	28.9	57.5	12.6	1.1
군포시	48,525	52.4	90,785	16,242	64,396	9,237	910	100.0	17.9	70.9	10.2	1.0
의왕시	23,669	51.0	45,402	8,618	30,368	6,179	237	100.0	19.0	66.9	13.6	0.5
하남시	19,346	42.0	44,681	18,301	23,823	1,983	574	100.0	41.0	53.3	4.4	1.3
용인시	139,319	51.6	267,950	47,318	198,315	21,193	1,124	100.0	17.7	74.0	7.9	0.4
파주시	54,648	52.2	104,018	30,766	65,892	6,417	943	100.0	29.6	63.3	6.2	0.9
이천시	37,987	59.1	63,685	26,475	30,044	6,261	905	100.0	41.6	47.2	9.8	1.4
안성시	34,911	53.3	63,623	29,738	30,509	2,878	498	100.0	46.7	48.0	4.5	0.8
김포시	39,082	54.8	70,043	15,835	46,816	6,586	806	100.0	22.6	66.8	9.4	1.2
화성시	80,082	50.5	156,223	38,154	106,645	10,254	1,170	100.0	24.4	68.3	6.6	0.7
광주시	40,419	55.4	72,550	24,015	29,778	17,945	812	100.0	33.1	41.0	24.7	1.1
양주시	32,368	52.8	60,621	14,632	40,600	4,639	750	100.0	24.1	67.0	7.7	1.2
포천시	27,701	58.4	46,731	22,835	16,510	6,238	1,148	100.0	48.9	35.3	13.3	2.5
여주군	22,216	62.6	34,946	20,148	12,066	2,188	544	100.0	57.7	34.5	6.3	1.6
연천군	10,411	67.4	15,197	9,968	3,397	1,525	307	100.0	65.6	22.4	10.0	2.0
가평군	11,917	65.9	17,758	10,633	3,608	2,838	679	100.0	59.9	20.3	16.0	3.8
양평군	21,174	70.2	29,705	22,203	4,296	2,559	647	100.0	74.7	14.5	8.6	2.2

〈표 5-3〉 조사모집단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인구수	0~14세	15세 이상			인구 비율	0~ 14세	15세 이상		
				15~64세	65세이상				15~ 64세	65세 이상
경기도	10,937,478	2,029,789	8,907,689	7,939,676	968,013	100.0	18.6	81.4	72.6	8.9
수원시	1,032,053	187,394	844,659	772,772	71,887	100.0	18.2	81.8	74.9	7.0
성남시	923,259	147,937	775,322	695,556	79,766	100.0	16.0	84.0	75.3	8.6
의정부시	407,665	71,415	336,250	295,429	40,821	100.0	17.5	82.5	72.5	10.0
안양시	587,308	97,922	489,386	442,259	47,127	100.0	16.7	83.3	75.3	8.0
부천시	829,322	136,148	693,174	631,304	61,870	100.0	16.4	83.6	76.1	7.5
광명시	321,839	56,992	264,847	238,329	26,518	100.0	17.7	82.3	74.1	8.2
평택시	372,516	72,796	299,720	260,827	38,893	100.0	19.5	80.5	70.0	10.4
동두천시	87,103	15,393	71,710	59,864	11,846	100.0	17.7	82.3	68.7	13.6
안산시	686,829	128,175	558,654	514,730	43,924	100.0	18.7	81.3	74.9	6.4
일산시	880,533	160,960	719,573	638,270	81,303	100.0	18.3	81.7	72.5	9.2
과천시	65,101	11,887	53,214	47,218	5,996	100.0	18.3	81.7	72.5	9.2
구리시	182,148	33,005	149,143	134,383	14,760	100.0	18.1	81.9	73.8	8.1
남양주시	519,040	105,397	413,643	364,434	49,209	100.0	20.3	79.7	70.2	9.5
오산시	177,509	37,616	139,893	129,263	10,630	100.0	21.2	78.8	72.8	6.0
시흥시	387,186	78,644	308,542	284,827	23,715	100.0	20.3	79.7	73.6	6.1
군포시	270,897	49,710	221,187	199,969	21,218	100.0	18.4	81.6	73.8	7.8
의왕시	139,489	24,662	114,827	103,191	11,636	100.0	17.7	82.3	74.0	8.3
하남시	135,420	21,964	113,456	100,528	12,928	100.0	16.2	83.8	74.2	9.5
용인시	814,012	173,696	640,316	567,322	72,994	100.0	21.3	78.7	69.7	9.0
파주시	307,693	62,034	245,659	210,468	35,191	100.0	20.2	79.8	68.4	11.4
이천시	180,668	36,254	144,414	124,602	19,812	100.0	20.1	79.9	69.0	11.0
안성시	166,699	29,510	137,189	116,490	20,699	100.0	17.7	82.3	69.9	12.4
김포시	212,655	40,761	171,894	149,184	22,710	100.0	19.2	80.8	70.2	10.7
화성시	465,052	109,683	355,369	320,528	34,841	100.0	23.6	76.4	68.9	7.5
광주시	218,228	41,586	176,642	156,416	20,226	100.0	19.1	80.9	71.7	9.3
양주시	179,460	35,881	143,579	124,445	19,134	100.0	20.0	80.0	69.3	10.7
포천시	130,415	22,692	107,723	89,521	18,202	100.0	17.4	82.6	68.6	14.0
여주군	94,557	15,904	78,653	63,328	15,325	100.0	16.8	83.2	67.0	16.2
연천군	39,219	5,709	33,510	25,042	8,468	100.0	14.6	85.4	63.9	21.6
가평군	45,881	6,907	38,974	29,167	9,807	100.0	15.1	84.9	63.6	21.4
양평군	77,722	11,155	66,567	50,010	16,557	100.0	14.4	85.6	64.3	21.3

〈표 5-4〉 조사모집단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경기도	2,556,962	5,444,860	531,995	373,872	28.7	61.1	6.0	4.2
수원시	274,386	490,293	44,206	35,774	32.5	58.0	5.2	4.2
성남시	246,588	447,847	44,914	35,973	31.8	57.8	5.8	4.6
의정부시	96,111	199,758	22,598	17,783	28.6	59.4	6.7	5.3
안양시	152,216	290,618	27,456	19,096	31.1	59.4	5.6	3.9
부천시	223,575	397,481	39,764	32,354	32.3	57.3	5.7	4.7
광명시	78,761	158,772	16,403	10,911	29.7	59.9	6.2	4.1
평택시	78,761	186,503	21,794	12,662	26.3	62.2	7.3	4.2
동두천시	17,882	42,952	6,346	4,530	24.9	59.9	8.8	6.3
안산시	179,405	320,610	28,504	30,135	32.1	57.4	5.1	5.4
일산시	209,718	439,755	41,184	28,916	29.1	61.1	5.7	4.0
과천시	15,517	33,187	2,994	1,516	29.2	62.4	5.6	2.8
구리시	44,055	89,952	8,621	6,515	29.5	60.3	5.8	4.4
남양주시	104,158	266,652	25,577	17,256	25.2	64.5	6.2	4.2
오산시	41,415	85,594	6,881	6,003	29.6	61.2	4.9	4.3
시흥시	94,267	183,876	14,833	15,566	30.6	59.6	4.8	5.0
군포시	64,836	135,902	12,013	8,436	29.3	61.4	5.4	3.8
의왕시	33,499	70,995	6,317	4,016	29.2	61.8	5.5	3.5
하남시	32,903	68,396	7,242	4,915	29.0	60.3	6.4	4.3
용인시	160,594	428,525	32,071	19,126	25.1	66.9	5.0	3.0
파주시	59,028	159,622	17,423	9,586	24.0	65.0	7.1	3.9
이천시	33,726	94,831	10,840	5,017	23.4	65.7	7.5	3.5
안성시	37,620	83,849	10,593	5,127	27.4	61.1	7.7	3.7
김포시	43,575	110,689	11,347	6,283	25.3	64.4	6.6	3.7
화성시	85,188	240,642	19,066	10,473	24.0	67.7	5.4	2.9
광주시	45,591	114,054	10,164	6,833	25.8	64.6	5.8	3.9
양주시	34,537	92,690	9,752	6,600	24.1	64.6	6.8	4.6
포천시	25,269	68,249	9,495	4,710	23.5	63.4	8.8	4.4
여주군	17,071	51,268	7,596	2,718	21.7	65.2	9.7	3.5
연천군	6,678	21,412	4,092	1,328	19.9	63.9	12.2	4.0
가평군	7,437	25,709	4,434	1,394	19.1	66.0	11.4	3.6
양평군	12,595	44,177	7,475	2,320	18.9	66.4	11.2	3.5

〈표 5-5〉 조사모집단 학력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경기도	1,045,475	1,146,407	3,680,398	3,035,409	11.7	12.9	41.3	34.1
수원시	84,167	105,702	351,309	303,481	10.0	12.5	41.6	35.9
성남시	81,617	94,893	275,053	323,759	10.5	12.2	35.5	41.8
의정부시	42,407	47,830	151,706	94,307	12.6	14.2	45.1	28.0
안양시	48,563	61,250	190,428	189,145	9.9	12.5	38.9	38.6
부천시	75,419	95,943	305,784	216,028	10.9	13.8	44.1	31.2
광명시	31,288	34,366	107,327	91,866	11.8	13.0	40.5	34.7
평택시	46,860	41,449	135,915	75,496	15.6	13.8	45.3	25.2
동두천시	12,755	11,100	34,119	13,736	17.8	15.5	47.6	19.2
안산시	59,965	81,073	271,559	146,057	10.7	14.5	48.6	26.1
일산시	65,277	82,996	273,820	297,480	9.1	11.5	38.1	41.3
과천시	3,899	5,170	15,146	28,999	7.3	9.7	28.5	54.5
구리시	17,473	20,699	61,208	49,763	11.7	13.9	41.0	33.4
남양주시	51,747	55,914	177,872	128,110	12.5	13.5	43.0	31.0
오산시	14,164	16,310	66,305	43,114	10.1	11.7	47.4	30.8
시흥시	32,064	42,141	155,805	78,532	10.4	13.7	50.5	25.5
군포시	20,831	26,009	85,873	88,474	9.4	11.8	38.8	40.0
의왕시	11,192	13,414	45,197	45,024	9.7	11.7	39.4	39.2
하남시	14,389	16,031	48,210	34,826	12.7	14.1	42.5	30.7
용인시	53,485	62,935	212,449	311,447	8.4	9.8	33.2	48.6
파주시	36,183	31,071	105,439	72,966	14.7	12.6	42.9	29.7
이천시	26,518	21,065	61,667	35,164	18.4	14.6	42.7	24.3
안성시	24,694	19,116	58,209	35,170	18.0	13.9	42.4	25.6
김포시	22,124	22,854	71,832	55,084	12.9	13.3	41.8	32.0
화성시	41,900	38,507	147,155	127,807	11.8	10.8	41.4	36.0
광주시	23,311	24,668	76,013	52,650	13.2	14.0	43.0	29.8
양주시	21,776	21,379	66,017	34,407	15.2	14.9	46.0	24.0
포천시	24,282	18,402	46,742	18,297	22.5	17.1	43.4	17.0
여주군	19,106	12,520	30,740	16,287	24.3	15.9	39.1	20.7
연천군	10,167	5,601	12,723	5,019	30.3	16.7	38.0	15.0
가평군	10,487	6,118	14,864	7,505	26.9	15.7	38.1	19.3
양평군	17,365	9,881	23,912	15,409	26.1	14.8	35.9	23.1

나. 표본추출틀

본 조사의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조사구 중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40가구 미만조사구를 제외하고 최종 56,161개 조사구를 이용하였다.

다. 층화 및 분류지표

표본추출은 1차적으로 경기도를 31개 시군으로 층화하였다. 층화 후 조사구 특성을 반영하는 보조층화지표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계통 추출 방법으로 조사구를 추출하면 보조 층화 지표도 사실상 층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른 분류지표(부차층화)는 <표 5-6>과 같다.

<표 5-6> 분류지표

구분	지표
1차분류	각 층별(31개층) 주택 유형별 정렬(아파트, 단독주택, 기타주택)
2차분류	자가 비율 ① 36.6% 미만 ② 36.6% 이상 ~ 64.9% 미만 ③ 64.9% 이상
3차분류	대중 비율 ① 30.1% 미만 ② 30.1% 이상

라. 표본규모

단순임의추출에 대한 집락추출의 설계효과를 $def = 1 + (M-1)\rho = 2.06$ 으로 하고, 최대 표본크기를 구하도록 $P = 0.5$ 오차의 한계를 3.15%로 하여 표본의 크기 n 을 계산한 결과 약 2,000 가구이다.

$$n = \frac{z^2 p(1-p)}{e^2} \times def$$

95% 신뢰도에서 경기도 전체 2,000가구에 대한 오차의 한계는 $\pm 3.1\%$ 이며, 시·군·구 이하로 구분할 경우 세부적인 추정에는 맞지 않는다.

〈표 5-7〉 표본규모에 따른 오차의 한계

표본규모 (가구)	1,000	1,200	1,500	1,800	2,000	2,500	3,000	4,000	5,000	10,000	20,000	30,000
오차의 한계(%)	4.4	4.1	3.6	3.3	3.1	2.8	2.6	2.2	2	1.4	1	0.8

경기도 31개 시군의 인구 제곱근비례에 따라 표본조사구수를 배분한 결과는 〈표 5-8〉과 같다.

마. 표본조사구 및 표본가구 추출

표본조사구(PSU) 추출시 확률비례 계통추출법(PPS)을 사용하였다. 표본가구(USU) 추출시 초기 시작거처를 임의추출(SRS)하여 시작거처로부터 20가구를 조사하였다. 표본조사구 추출 결과는 〈표 5-9〉와 같다.

〈표 5-8〉 층별 표본배분(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단위 : 명, %, 개)

	인구	비례배분	표본조사구수	제공급배분	표본조사구수
경기도	10,937,478	100.0	100	100.0	100
수원시	1,032,053	9.4	9	6.0	6
성남시	923,259	8.4	8	5.7	6
의정부시	407,665	3.7	4	3.8	4
안양시	587,308	5.4	5	4.5	4
부천시	829,322	7.6	7	5.4	5
광명시	321,839	2.9	3	3.4	3
평택시	372,516	3.4	3	3.6	4
동두천시	87,103	0.8	1	1.7	2
안산시	686,829	6.3	6	4.9	5
일산시	880,533	8.1	8	5.5	5
과천시	65,101	0.6	1	1.5	2
구리시	182,148	1.7	2	2.5	3
남양주시	519,040	4.7	5	4.3	4
오산시	177,509	1.6	2	2.5	3
시흥시	387,186	3.5	3	3.7	4
군포시	270,897	2.5	2	3.1	3
의왕시	139,489	1.3	1	2.2	2
하남시	135,420	1.2	1	2.2	2
용인시	814,012	7.4	7	5.3	5
파주시	307,693	2.8	3	3.3	3
이천시	180,668	1.7	2	2.5	3
안성시	166,699	1.5	2	2.4	2
김포시	212,655	1.9	2	2.7	3
화성시	465,052	4.3	4	4.0	4
광주시	218,228	2.0	2	2.8	3
양주시	179,460	1.6	2	2.5	3
포천시	130,415	1.2	1	2.1	2
여주군	94,557	0.9	1	1.8	2
연천군	39,219	0.4	1	1.2	1
가평군	45,881	0.4	1	1.3	1
양평군	77,722	0.7	1	1.6	1

〈표 5-9〉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표본리스트

번호	특성	가구수	시군구	읍면동	번호	특성	가구수	시군구	읍면동
1	1	64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51	A	51	남양주시	화도읍
2	A	60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52	1	73	남양주시	진건읍
3	A	58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53	A	49	남양주시	도농동
4	1	52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54	A	58	오산시	대원동
5	A	68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55	1	71	오산시	대원동
6	A	79	수원시 영통구	태장동	56	A	57	오산시	신장동
7	1	43	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	57	A	64	시흥시	신현동
8	1	76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58	A	58	시흥시	군자동
9	1	53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59	1	140	시흥시	청왕분동
10	A	73	성남시 분당구	이매2동	60	A	69	시흥시	연성동
11	A	54	성남시 분당구	구미1동	61	1	57	군포시	금정동
12	A	74	성남시 분당구	관교동	62	A	56	군포시	오금동
13	A	71	의정부시	신곡1동	63	A	78	군포시	오금동
14	A	62	의정부시	신곡2동	64	1	79	의왕시	내손1동
15	1	85	의정부시	가농3동	65	A	59	의왕시	내손2동
16	A	80	의정부시	송산2동	66	A	67	하남시	신장2동
17	A	59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67	1	63	하남시	덕풍2동
18	A	56	안양시 만안구	석수3동	68	1	42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19	1	56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69	A	61	용인시 기흥구	기흥동
20	A	76	안양시 동안구	신촌동	70	A	59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21	1	88	부천시 원미구	심곡2동	71	A	60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22	A	72	부천시 원미구	상2동	72	A	53	용인시 수지구	죽전2동
23	1	57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1동	73	A	57	파주시	문산읍
24	1	41	부천시 오정구	고강1동	74	A	47	파주시	문산읍
25	1	50	부천시 오정구	신흥동	75	1	79	파주시	교하읍
26	1	49	광명시	광명5동	76	1	42	이천시	설성면
27	1	67	광명시	광명7동	77	1	70	이천시	창전동
28	1	223	광명시	소하1동	78	A	71	이천시	충리동
29	1	51	평택시	송북동	79	A	60	안성시	공도읍
30	1	44	평택시	신장2동	80	1	45	안성시	죽산면
31	A	56	평택시	비전2동	81	1	70	김포시	김포1동
32	A	41	평택시	세교동	82	A	55	김포시	풍무동
33	1	63	동두천시	불현동	83	A	60	김포시	풍무동
34	A	66	동두천시	불현동	84	A	91	화성시	향남읍
35	1	66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85	1	61	화성시	남양동
36	A	59	안산시 상록구	본오3동	86	A	61	화성시	병점1동
37	1	72	안산시 단원구	고잔1동	87	A	59	화성시	병점1동
38	1	78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88	A	69	광주시	오포읍
39	A	52	안산시 단원구	호수동	89	1	76	광주시	도척면
40	A	81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90	1	47	광주시	송정동
41	1	68	고양시 동구	장항2동	91	A	69	양주시	백석읍
42	1	56	고양시 서구	일산2동	92	1	51	양주시	은현면
43	A	60	고양시 서구	일산3동	93	A	58	양주시	회천3동
44	A	73	고양시 서구	주엽2동	94	1	49	포천시	영북면
45	A	70	과천시	갈현동	95	A	85	포천시	영북면
46	1	53	과천시	별양동	96	1	72	여주군	여주읍
47	1	62	구리시	동구동	97	1	49	여주군	점동면
48	A	80	구리시	동구동	98	1	96	연천군	군남면
49	1	68	구리시	수택2동	99	1	63	가평군	설악면
50	A	63	남양주시	와부읍	100	1	80	양평군	용문면

주 : 1-일반주택, A-아파트

바. 가중치 작성 및 추정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응답 조정 및 사후층화 보정으로 구분된다. 사후층화 보정은 지역(도농복합지역, 도심지역)¹⁵⁾ · 성 · 연령그룹별로 주민등록인구에 맞게 보정하였다.

□ 사후층화 보정

$$\circ \text{최종가중치 } (w_{hij}) = \frac{X_{h,sa}}{\widehat{X_{h,sa}}}$$

- X : 모집단 추정치
- \widehat{X} : 표본에서 조사된 응답자 총 가중값
- sa : 성별 및 연령별 그룹

□ 추정

$$\circ \overline{y_G} = \frac{\sum_h \sum_i^{n_h} \sum_j^{m_{hi}} w_{hij} I[hij \in G]}{\sum_h \sum_i^{n_h} \sum_j^{m_{hi}} w_{hij}}$$

- $h = 1, 2, \dots, H$: 층(지역 특성)
- $i = 1, 2, \dots, n_h$: 조사구
- $j = 1, 2, \dots, m_{hi}$: 대상가구 또는 대상 가구원
- $w_{hij} = h$ 층의 i 조사구내 j 번째 가중치

15) · 도농복합지역 : 김포시, 포천시, 양주시, 남양주시, 파주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용인시, 광주시, 평택시,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연천군
 · 도시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동두천시, 안산시, 일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cdot I(hij) \begin{cases} 1 & \text{if } I[hij \in G] \\ 0 & \text{otherwise} \end{cases}$$

$$\circ \widehat{Var}(\widehat{Y}) = \sum_{h=1}^H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overline{e_{hi}})^2]$$

$$\cdot e_{hi} = (\sum_{j=1}^{m_{hi}} W_{hij} (I_{hij} - \widehat{I}) / w_{hij})$$

$$\cdot \overline{e_{hi}} = (\sum_{i=1}^{n_h} e_{hi}) / n_h$$

$$\cdot h = 1, 2, \dots, H : \text{층(지역 특성)}$$

$$\cdot i = 1, 2, \dots, n_h : \text{조사구}$$

$$\cdot j = 1, 2, \dots, m_{hi} : \text{대상가구 또는 대상 가구원}$$

$$\cdot W_{hij} = h\text{층의 } i \text{ 조사구내 } j\text{번째 가중치}$$

$$\cdot I(hij) \begin{cases} 1 & \text{if } I[hij \in G] \\ 0 & \text{otherwise} \end{ca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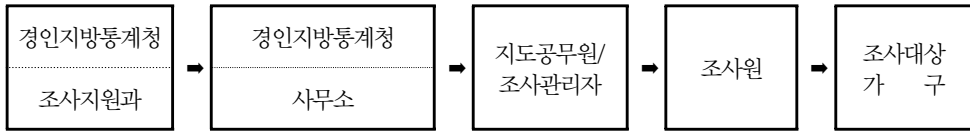
$$\circ SE(\overline{y}_G) = \sqrt{\widehat{Var}(\overline{y}_G)}$$

$$\circ CV = \frac{SE(\overline{y}_G)}{\overline{y}_G} \times 100$$

3. 조사 체계

본 조사는 경인지방통계청 사무소 지도 공무원, 조사관리자, 도급조사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조사원 교육은 설문지를 개발한 연구진과 경인지방통계청이 함께 실시하였다. 조사체계는 <그림 5-1>과 같으며, 조사원 등은 <표 5-10>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림 5-1〉 조사체계



〈표 5-10〉 조사원 등 역할 분담

구분	역할분담
사무소장 및 담당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도공무원, 조사관리자 및 조사원 업무수행 지원
본부 및 사무소 지도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관리자와 조사원 관리 지도 - 조사표류 및 조사용품 배부 - 불능가구에 대한 대체와 불응가구에 대한 지침 전달 - 필요시 조사가구를 설득하는 등 조사관리자의 업무수행 지원 - 조사표류 최종 접수 및 답례품 지급 내역 재확인
조사관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용품과 조사표류를 수령하여 조사원에게 배부 - 조사원의 불능가구 보고 시 지도공무원에게 대체가구 요청 - 조사원의 불응가구 보고 시 지도공무원에게 설득 지원이나 대응지침 요청 - 산업, 직업 코드번호 기입 - 대체가구 및 대응 지침을 조사원에게 전달 - 「가구관리종합표」 상황 점검 및 확인 - 조사표의 내용검토와 조사원의 전반적인 업무 수행 지도 - 기타 조사표류 확인 및 편철
도급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명부, 조사구역도(사본), 조사표 등 수령 - 가구를 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내용을 조사표에 기입 - 「가구관리종합표」 기입 - 사무소별로 자체적으로 정한 소집일에 출근하여 조사관리자에게 조사표의 조사내용과 「가구관리종합표」 작성 사항에 대한 점검을 받음
입력내검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 입력 - 조사표 입력내용에 대한 내용검토 및 오류 수정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분석 결과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2.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3. 여성가족정책 우선순위
4. 여성경제활동 부문
5.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6.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
7. 여성건강·문화·여가 부문
8. 돌봄 부문
9. 가족 부문

1. 응답자 일반적 특성

본 절에서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가구주 및 여성가구원의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전체 여성응답자(여성가구주 및 여성가구원)의 특성은 여성가구주와 조사대상 가구에 거주하는 여성가구원에 대한 질문지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고, 가구주의 특성은 표본가구의 가구주 질문지를 통해 파악한 가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였다. 이하 모든 분석결과는 제5장에서 설명한 가중치가 부여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가. 가 구

조사대상 가구는 총 1,995가구이며,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1>과 같다. 먼저 가구구성형태를 살펴보면 현재 ‘부부와 자녀’가 함께 살고 있는 가구가 62.8%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부부’ 가구(17.1%), ‘1인’ 가구(6.5%), ‘한부모+자녀’ 가구(6.0%), ‘3세대 이상’ 가구(5.7%), ‘기타’ 가구(2.0%)순이다. 주택형태는 ‘아파트’가 58.9%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은 ‘연립/다세대/기타’ (25.2%), ‘단독주택’ (15.8%) 순이다. 주택의 점유형태는 ‘자기집’이 52.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전세’ (28.2%), ‘보증부 월세’ (10.8%), ‘월세’ (5.1%), ‘무상 및 기타’ (3.6%)순이다.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2.4%로 가장 많고, 다음은 ‘300-400만원 미만’ (20.6%), ‘500만원 이상’ (19.7%), ‘100-200만원 미만’ (18.2%), ‘400-500만원 미만’ (12.4%), ‘100만원 미만’ (6.6%) 순으로 나타났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외벌이’ 가구가 45.6%로 가장 많고, ‘맞벌이’ 가구는 37.5%, 미혼 등 ‘해당없음’은 16.9%였다.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이 66.7%, ‘도농복합지역’이 33.3%를 차지한다.

〈표 6-1〉 조사대상 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 가구,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995	100.0	100.0
가구구성형태	부부	340	17.0	17.1
	부부+자녀	1,136	56.9	62.8
	한부모+자녀	168	8.4	6.0
	3세대 이상	118	5.9	5.7
	1인가구	189	9.5	6.5
	기타	44	2.2	2.0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8.6	15.8
	아파트	1,099	55.1	58.9
	연립/다세대/기타	525	26.3	25.2
점유형태	자기집	1,077	54.0	52.3
	전세	543	27.2	28.2
	보증부 월세	217	10.9	10.8
	월세(사글세)	95	4.8	5.1
	무상 및 기타	63	3.2	3.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2	9.1	6.6
	100-200만원 미만	392	19.6	18.2
	200-300만원 미만	455	22.8	22.4
	300-400만원 미만	377	18.9	20.6
	400-500만원 미만	233	11.7	12.4
	500만원 이상	356	17.8	19.7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688	34.5	37.5
	외벌이	861	43.2	45.6
	해당없음	446	22.4	16.9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41.1	33.3
	도시지역	1,175	58.9	66.7

나. 여성응답자

조사대상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여성가구주 및 여성가구원은 총 2,302명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2>와 같다. 우선, 연령별로는 ‘19-30세 미만’ 이 21.4%, ‘40-50세 미만’ 이 27.3%, ‘30-40세 미만’ 이 26.4%, ‘50-65세 미만’ 이 24.9%이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8.8%로 절대적으로 높았고, 다음으로는 ‘미혼’ (21.9%), ‘사별/이혼’ (9.3%)이다.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 가 56.1%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다음은 ‘가구주 본인’ (27.7%), ‘미혼자녀’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학전 자녀가 있는’ 여성이 15.3%, ‘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이 29.2%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 이 43.6%, ‘고졸’ 이 42.2%로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고, ‘중졸’ 이하는 14.2%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성’ 이 52.4%, ‘미취업여성’ 이 47.6%를 차지한다. 경기도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이 3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5년 미만’ (15.1%), ‘10-15년 미만’ (15.0%), ‘5-10년 미만’ (14.5%), ‘15-20년 미만’ (12.5%), ‘1년 미만’ (4.3%) 순이다.

다. 가구주

다음으로 가구주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6-3>과 같다. 우선, 가구주의 성별은 남성이 79.0%, 여성이 21.0%를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40-50세 미만’ 이 33.9%로 가장 많고, 다음은 ‘50-65세 미만’ (31.2%), ‘30-40세 미만’ (26.9%), ‘19-30세 미만’ (8.0%) 순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6.8%로 절대적으로 높고, 다음은 ‘사별/이혼’ (6.8%), ‘미혼’ (6.3%)순으로 나타난다. 교육정도는 ‘대졸이상’ 이 49.9%로 가장 높고, 다음은 ‘고졸’ (38.6%), ‘중졸이하’ (11.6%) 순으로 나타난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자’ 가 84.2%, ‘미취업자’ 가 15.8%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가구주의 경기도 거주기간은 ‘20년 이상’ 이 36.7%로 가장 높고, 다음은 ‘5-10년 미만’ (17.0%), ‘10-15년 미만’ (16.0%), ‘1-5년 미만’ (14.2%), ‘15-20년 미만’ (12.1%), ‘1년 미만’ (4.0%) 순으로 나타난다.

〈표 6-2〉 여성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2,302	100.0	100.0
연령별	19-30세 미만	380	16.5	21.4
	30-40세 미만	648	28.1	26.4
	40-50세 미만	668	29.0	27.3
	50-65세 미만	606	26.3	24.9
혼인상태	미혼	422	18.3	21.9
	유배우	1,660	72.1	68.8
	사별/이혼	220	9.6	9.3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650	28.2	27.7
	배우자	1,341	58.3	56.1
	미혼자녀	233	10.1	12.8
	기혼자녀 및 그배우자	19	0.8	0.8
	부모(배우자쪽 포함)	25	1.1	1.1
	미혼형제자매	24	1.0	1.1
	기타	10	0.4	0.5
취학전 자녀유무	있음	363	15.8	15.3
	없음	1,939	84.2	84.7
취학 자녀유무	있음	714	31.0	29.2
	없음	1,588	69.0	70.8
교육정도	중졸이하	345	15.0	14.2
	고졸	984	42.7	42.2
	대졸이상	973	42.3	43.6
취업여부	취업	1,208	52.5	52.4
	미취업	1,094	47.5	47.6
경기도 거주기간	1년 미만	98	4.3	4.3
	1년-5년 미만	340	14.8	15.1
	5년-10년 미만	339	14.7	14.5
	10년-15년 미만	352	15.3	15.0
	15년-20년 미만	286	12.4	12.5
	20년 이상	887	38.5	38.5

〈표 6-3〉 가구주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995	100.0	100.0
성별	남	1,345	67.4	79.0
	여	650	32.6	21.0
연령별	19-30세 미만	106	5.3	8.0
	30-40세 미만	487	24.4	26.9
	40-50세 미만	662	33.2	33.9
	50~65세 미만	740	37.1	31.2
혼인상태	미혼	152	7.6	6.3
	유배우	1,635	82.0	86.8
	사별/이혼	208	10.4	6.8
교육정도	중졸이하	291	14.6	11.6
	고졸	795	39.8	38.6
	대졸이상	909	45.6	49.9
취업여부	취업	1,591	79.7	84.2
	미취업	404	20.3	15.8
경기도 거주기간	1년 미만	77	3.9	4.0
	1년-5년 미만	272	13.6	14.2
	5년-10년 미만	318	15.9	17.0
	10년-15년 미만	319	16.0	16.0
	15년-20년 미만	237	11.9	12.1
	20년 이상	772	38.7	36.7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특성을 살펴보면 〈표 6-4〉와 같다. 우선, 연령별로는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19-30세 미만’ (14.4%)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남성가구주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97.8%로 절대적인 비율을 차지했으나, 여성가구주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45.4%로 과반수에 못 미쳤고, ‘사별/이혼’ 이 29.9%, ‘미혼’ 이 24.6%를 차지했다. 교육정도별로는 남성가구주의 경우 ‘대졸이상’ 이 5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여성가구주의 경우

‘고졸’이 45.6%로 가장 높았고, ‘중졸이하’의 비율도 20.1%나 되었다. 취업여부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는 90.5%, 여성가구주는 60.3%가 취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6-4〉 가구주 성별에 따른 인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주	가중치 비율	
			남	여
전체		1,995	100.0	100.0
연령별	19-30세 미만	106	6.4	14.4
	30-40세 미만	487	27.9	23.0
	40-50세 미만	662	34.8	30.4
	50-65세 미만	740	31.0	32.2
혼인상태	미혼	152	1.5	24.6
	유배우	1,635	97.8	45.4
	사별/이혼	208	0.7	29.9
교육정도	중졸이하	291	9.3	20.1
	고졸	795	36.7	45.6
	대졸이상	909	54.0	34.3
취업여부	취업	1,591	90.5	60.3
	미취업	404	9.5	39.7

다음으로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6-5〉와 같다. 주택형태별로는 남성가구주 가구는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4.0%로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는 ‘아파트’ (39.9%)와 ‘연립/다세대/기타’ (37.8%)가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 다음으로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도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남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500만원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23.5%로 가장 높고, 다음은 ‘300-400만원’ (22.6%), ‘200-300만원’ (21.8%)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여성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200만원 미만’이 29.5%로 가장 높고, 다음은 ‘200-300만원 미만’ (25.0%), ‘100만원 미만’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맞벌이가구 여부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외벌이’가 50.9%로 가장 높고, 다

음은 ‘맞벌이’가 43.1%이며, 미혼·이혼 등 ‘해당없음’은 5.9%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미혼·이혼 등 ‘해당없음’이 58.1%로 가장 높고, ‘외벌이’(25.6%), ‘맞벌이’(16.3%)순으로 나타난다. 생활권을 살펴보면, 남성가구주 가구(65.7%)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가 ‘도시지역’이 차지하는 비율(70.4%)이 다소 높다.

〈표 6-5〉 가구주 성별에 따른 가구 특성

(단위 : 명, %)

구분		전체가구주	가중치 비율	
			남	여
전체		1,995	100.0	100.0
주택형태	단독주택	371	14.1	22.4
	아파트	1,099	64.0	39.9
	연립/다세대/기타	525	21.9	37.8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82	2.7	21.1
	100-200만원 미만	392	15.2	29.5
	200-300만원 미만	455	21.8	25.0
	300-400만원 미만	377	22.6	13.2
	400-500만원 미만	233	14.3	5.5
	500만원 이상	356	23.5	5.7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	688	43.1	16.3
	외벌이	861	50.9	25.6
	해당없음	446	5.9	58.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34.3	29.6
	도시지역	1,175	65.7	70.4

이하 본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분석은 크게 전체 여성응답자(여성가구주 및 여성가구원) 2,302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과 가구주 1,995명(남성가구주 1,345명, 여성가구주 650명)의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나뉘 실시하였다. 여성응답자(여성가구주 및 여성가구원)에 대한 조사결과는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별, 취업여부별, 주택형태별, 가구 월평균소득별, 맞벌이 여부별, 생활권별로 분석해 여성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한편, 가구주에 대한 분석은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고, 이 외 가구주의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별, 취업여부별, 주택형태별, 가구 월평균소득별, 생활권별 차이는 <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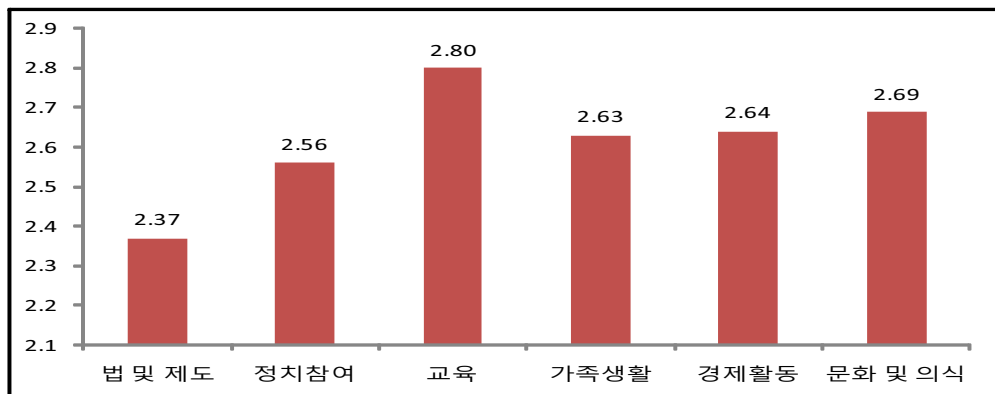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분야별 정책수요를 분석하기에 앞서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았다.

가. 분야별 비교

조사응답자들에게 지난 10년 동안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1) 법 및 제도 2) 정치참여 3) 교육 4) 가족생활 5) 경제활동 6) 문화 및 의식 각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는가를 ‘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 4점 매우 향상 되었다’의 4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그림 6-1>과 같이 ‘교육’ 분야가 2.80점으로 가장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문화 및 의식’ 분야(2.69점), ‘경제활동’ 분야(2.64점), ‘가족생활’ (2.63점), ‘정치참여’ 분야(2.56점), ‘법 및 제도’ 분야(2.37점)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1>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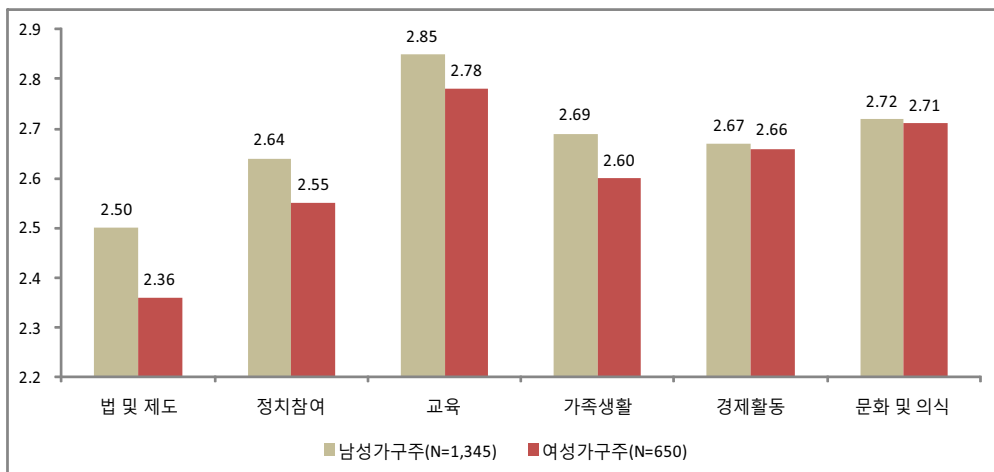
(단위 : 점)



한편, 경기도 가구주의 경우도 ‘교육’ 분야가 2.83점으로 가장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문화 및 의식’ 분야(2.72점), ‘가족생활’ (2.67점)과 ‘경제활동’ 분야(2.67점), ‘정치참여’ 분야(2.62점), ‘법 및 제도’ 분야(2.47점)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1〉~〈부표 6〉 참조).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법 및 제도, 정치참여, 교육, 가족생활 분야에 대해서는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6-2〉 참조).

〈그림 6-2〉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가구주)

(단위 : 점)



이처럼 분야별 차이는 있지만 경기도민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성평등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도민의 인식은 여성가족부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지난 10년간 여성정책의 주요한 성과로 관련 분야의 법제도화라고 평가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¹⁶⁾ 경기도민에 대한 조사결과 다른 분야에 비해 법 및 제도 분야의 성평등 수준의 향상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일반인들의 경우 법 및

16) 여성부(2008.1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2008~2012)」

제도 자체가 변화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반면, 관련 법 및 제도의 구체적인 분야의 변화로 인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다음에서는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를 중심으로 각 분야별 조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나. 법 및 제도

여성응답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법 및 제도’ 분야에 대해서는 향상되었다(매우 향상되었다 + 약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43.6%로 향상되지 않았다(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 56.4%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표 6-6> 참조). 여성들 간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보다는 유배우와 사별/이혼의 경우가 성평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정도별로는 중졸이하 > 대졸이상 > 고졸 순으로 나타났고,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 > 취업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인 경우와 500만원 이상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생활권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여성이 도농복합지역에 비해 ‘법 및 제도’ 분야 성평등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 정치참여

다음으로 지난 10년간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정치참여’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의 경우 향상되었다(매우 향상되었다 + 약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58.1%로 향상되지 않았다(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 41.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표 6-7> 참조). 여성들 간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나 사별/이혼, 학력별로는 대졸이상,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여성, 주택형태별로는 아파트나 단독주택 거주여성이,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정치분야’ 성평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6-6〉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법 및 제도(여성)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향상 되었다	매우	약간	향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향상도 평점
계		2,302	43.6	2.5	41.1	56.4	47.5	9.0	2.37
연령별	19~30세미만	380	38.9	1.6	37.3	61.1	50.3	10.8	2.30
	30~40세미만	648	38.7	0.9	37.7	61.3	51.6	9.7	2.30
	40~50세미만	668	46.9	2.7	44.2	53.1	45.2	7.9	2.42
	50~65세미만	606	49.1	4.8	44.3	50.9	43.2	7.8	2.46
혼인 상태	미혼	422	40.6	1.3	39.3	59.4	49.2	10.3	2.32
	유배우	1,660	44.2	2.6	41.6	55.8	47.4	8.4	2.38
	사별/이혼	220	45.6	4.4	41.3	54.4	44.3	10.0	2.40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45.1	4.7	40.4	54.9	45.8	9.1	2.41
	고졸	984	42.4	1.3	41.1	57.6	47.9	9.7	2.34
	대졸이상	973	44.1	2.9	41.2	55.9	47.6	8.3	2.39
취업 여부	취업	1,208	42.7	2.2	40.4	57.3	47.5	9.8	2.35
	미취업	1,094	44.5	2.8	41.7	55.5	47.4	8.1	2.39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44.5	3.0	41.5	55.5	46.8	8.7	2.39
	아파트	1,268	45.4	2.7	42.8	54.6	45.3	9.3	2.39
	연립/다세대/기타	596	39.0	1.8	37.2	61.0	52.5	8.5	2.3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50.1	4.3	45.8	49.9	41.4	8.5	2.46
	100~200만원미만	420	41.9	1.9	40.0	58.1	49.5	8.5	2.35
	200~300만원미만	520	42.1	2.1	40.0	57.9	50.4	7.5	2.37
	300~400만원미만	447	40.3	1.3	39.0	59.7	50.3	9.4	2.32
	400~500만원미만	294	43.9	2.5	41.4	56.1	46.8	9.3	2.37
	500만원이상	432	47.1	4.0	43.1	52.9	42.2	10.7	2.4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41.4	2.3	39.1	58.6	48.5	10.2	2.33
	도시지역	1,379	44.7	2.6	42.1	55.3	46.9	8.3	2.39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표 6-7〉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정치참여(여성)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매우	약간	항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항상도 평점
계		2,302	58.1	5.4	52.8	41.9	34.8	7.0	2.56
연령별	19~30세미만	380	51.5	6.1	45.5	48.5	40.1	8.3	2.49
	30~40세미만	648	52.7	3.4	49.3	47.3	38.9	8.4	2.48
	40~50세미만	668	64.1	5.6	58.5	35.9	29.3	6.6	2.63
	50~65세미만	606	62.9	6.5	56.4	37.1	32.1	5.0	2.64
혼인 상태	미혼	422	54.3	5.0	49.3	45.7	39.0	6.7	2.53
	유배우	1,660	59.4	5.2	54.3	40.6	33.6	7.0	2.58
	사별/이혼	220	57.4	7.6	49.8	42.6	34.5	8.0	2.57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59.1	5.6	53.6	40.9	33.7	7.2	2.57
	고졸	984	53.4	4.4	49.1	46.6	38.0	8.5	2.49
	대졸이상	973	62.3	6.2	56.1	37.7	32.1	5.5	2.63
취업 여부	취업	1,208	56.9	5.6	51.3	43.1	35.9	7.2	2.55
	미취업	1,094	59.5	5.1	54.4	40.5	33.7	6.8	2.58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60.1	5.3	54.8	39.9	31.8	8.1	2.57
	아파트	1,268	60.7	6.1	54.7	39.3	32.2	7.1	2.60
	연립/다세대/기타	596	51.3	3.9	47.4	48.7	42.5	6.2	2.49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64.1	8.2	55.8	35.9	28.5	7.4	2.65
	100~200만원미만	420	52.2	3.9	48.3	47.8	41.1	6.7	2.49
	200~300만원미만	520	57.4	3.9	53.5	42.6	35.5	7.1	2.54
	300~400만원미만	447	58.0	4.5	53.4	42.0	36.9	5.1	2.57
	400~500만원미만	294	58.0	4.8	53.3	42.0	32.1	9.9	2.53
	500만원이상	432	62.3	8.5	53.8	37.7	30.6	7.1	2.64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57.2	4.8	52.4	42.8	33.3	9.5	2.53
	도시지역	1,379	58.6	5.6	53.0	41.4	35.7	5.7	2.58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라. 교 육

여성응답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향상되었다(매우 향상되었다 + 약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70.7%로 향상되지 않았다(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 29.3%에 비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표 6-8〉 참조). 여성들 간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성평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정도별로는 중졸이하 > 대졸이상 > 고졸로 나타났고, 주택형태별로는 아파트 거주여성이, 가구소득별로는 400-500만원 미만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교육 분야’ 성평등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여성응답자의 혼인상태, 취업여부, 생활권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마. 가족생활

여성응답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가족생활’ 분야에 대해서는 향상되었다(매우 향상되었다 + 약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60.2%로 향상되지 않았다(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 39.8%에 비해 20.4p% 높게 나타났다(〈표 6-9〉 참조). 여성들 간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혼’ 과 ‘유배우’ 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정도별로는 중졸이하 > 대졸이상 > 고졸로 나타났고,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 > 취업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400만원 이상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생활’ 분야 성평등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6-8〉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교육(여성)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매우	약간	항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항상도 평점
계		2,302	70.7	14.1	56.6	29.3	24.6	4.6	2.80
연령별	19~30세미만	380	69.4	11.7	57.6	30.6	25.0	5.6	2.76
	30~40세미만	648	65.3	10.6	54.7	34.7	29.3	5.4	2.70
	40~50세미만	668	71.4	17.2	54.2	28.6	24.1	4.4	2.84
	50~65세미만	606	76.9	16.6	60.3	23.1	19.9	3.2	2.90
혼인 상태	미혼	422	70.3	11.3	58.9	29.7	24.3	5.5	2.76
	유배우	1,660	71.0	14.5	56.5	29.0	25.0	4.1	2.81
	사별/이혼	220	70.0	18.3	51.8	30.0	23.1	6.9	2.81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73.2	11.8	61.3	26.8	22.5	4.4	2.81
	고졸	984	68.4	15.2	53.3	31.6	26.5	5.1	2.79
	대졸이상	973	72.1	13.9	58.3	27.9	23.6	4.3	2.82
취업 여부	취업	1,208	70.8	14.2	56.6	29.2	24.2	5.0	2.80
	미취업	1,094	70.7	14.1	56.6	29.3	25.1	4.2	2.81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69.7	13.2	56.5	30.3	25.2	5.1	2.78
	아파트	1,268	72.7	15.9	56.8	27.3	22.8	4.5	2.84
	연립/다세대/기타	596	67.2	11.1	56.1	32.8	28.2	4.6	2.7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71.8	14.2	57.6	28.2	22.8	5.4	2.81
	100~200만원미만	420	69.8	11.6	58.1	30.2	26.1	4.2	2.77
	200~300만원미만	520	66.8	13.3	53.4	33.2	29.2	4.0	2.76
	300~400만원미만	447	71.2	14.8	56.4	28.8	24.3	4.5	2.82
	400~500만원미만	294	75.0	14.8	60.2	25.0	20.0	5.0	2.85
	500만원이상	432	72.4	16.3	56.1	27.6	22.2	5.4	2.83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70.0	12.5	57.5	30.0	25.0	5.0	2.77
	도시지역	1,379	71.1	15.0	56.1	28.9	24.5	4.4	2.82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표 6-9〉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가족생활(여성)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매우	약간	항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항상도 평점
계		2,302	60.2	6.8	53.4	39.8	35.5	4.3	2.63
연령별	19~30세미만	380	57.1	3.9	53.1	42.9	35.7	7.2	2.54
	30~40세미만	648	52.3	4.0	48.3	47.7	43.1	4.6	2.52
	40~50세미만	668	64.7	7.9	56.8	35.3	32.3	3.0	2.70
	50~65세미만	606	66.4	11.1	55.2	33.6	30.8	2.8	2.75
혼인 상태	미혼	422	55.5	3.2	52.3	44.5	37.7	6.8	2.52
	유배우	1,660	61.3	7.8	53.5	38.7	35.4	3.3	2.66
	사별/이혼	220	63.5	8.1	55.5	36.5	30.8	5.6	2.66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62.3	9.5	52.8	37.7	33.2	4.5	2.67
	고졸	984	59.1	5.5	53.6	40.9	35.9	5.0	2.60
	대졸이상	973	60.6	7.2	53.4	39.4	35.9	3.5	2.64
취업 여부	취업	1,208	57.7	7.1	50.6	42.3	37.4	4.8	2.60
	미취업	1,094	63.0	6.5	56.5	37.0	33.4	3.7	2.66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60.0	7.7	52.3	40.0	35.4	4.5	2.63
	아파트	1,268	62.1	7.8	54.4	37.9	34.1	3.8	2.66
	연립/다세대/기타	596	56.4	4.2	52.2	43.6	38.5	5.1	2.5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59.9	7.5	52.4	40.1	34.5	5.6	2.62
	100~200만원미만	420	58.8	4.9	53.9	41.2	37.0	4.2	2.60
	200~300만원미만	520	58.5	7.5	51.0	41.5	37.2	4.3	2.62
	300~400만원미만	447	58.8	6.3	52.5	41.2	37.7	3.5	2.62
	400~500만원미만	294	62.2	5.9	56.3	37.8	33.1	4.7	2.64
	500만원이상	432	63.9	8.7	55.2	36.1	31.8	4.3	2.68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59.3	6.4	52.9	40.7	35.2	5.5	2.60
	도시지역	1,379	60.7	7.1	53.7	39.3	35.7	3.6	2.64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바. 경제활동

여성응답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경제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향상되었다(매우 향상되었다 + 약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61.9%로 향상되지 않았다(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 38.1%에 비해 23.8p% 높게 나타났다(〈표 6-10〉 참조). 여성들 간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의 경우, 생활권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교육정도별로는 고졸이, 주택형태별로는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경제활동’ 분야의 성평등 수준의 향상도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사. 문화 및 의식

마지막으로 여성응답자의 경우 지난 10년간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문화 및 의식’ 분야에 대해서는 향상되었다(매우 향상되었다 + 약간 향상되었다)는 응답이 65.3%로 향상되지 않았다(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는 응답 34.7%에 비해 30.6p% 높게 나타났다(〈표 6-11〉 참조). 여성들 간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혼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문화 및 의식’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정도별로는 대졸이상 > 중졸이하 > 고졸로 나타났고,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 > 취업,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거주여성이,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과 400만원대의 경우, 생활권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문화 및 의식’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6-10〉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경제활동(여성)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매우	약간	항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항상도 평점
계		2,302	61.9	8.6	53.3	38.1	32.0	6.1	2.64
연령별	19~30세미만	380	58.3	6.8	51.5	41.7	32.7	9.1	2.56
	30~40세미만	648	57.0	5.1	51.9	43.0	36.3	6.8	2.55
	40~50세미만	668	64.5	10.3	54.2	35.5	30.4	5.1	2.70
	50~65세미만	606	67.5	12.0	55.5	32.5	28.5	3.9	2.76
혼인 상태	미혼	422	59.1	6.3	52.8	40.9	32.6	8.3	2.57
	유배우	1,660	63.0	9.0	54.1	37.0	31.8	5.2	2.67
	사별/이혼	220	60.3	11.3	49.0	39.7	32.3	7.4	2.64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63.0	10.4	52.6	37.0	29.8	7.2	2.66
	고졸	984	59.6	7.8	51.8	40.4	34.7	5.7	2.62
	대졸이상	973	63.8	8.8	55.0	36.2	30.1	6.1	2.67
취업 여부	취업	1,208	61.7	9.5	52.3	38.3	32.3	6.0	2.65
	미취업	1,094	62.1	7.6	54.5	37.9	31.7	6.2	2.64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62.8	10.1	52.7	37.2	30.5	6.7	2.66
	아파트	1,268	64.0	9.5	54.5	36.0	30.8	5.3	2.68
	연립/다세대/기타	596	57.1	5.7	51.4	42.9	35.5	7.4	2.5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60.8	9.6	51.2	39.2	30.2	9.0	2.61
	100~200만원미만	420	58.7	8.0	50.7	41.3	35.5	5.8	2.61
	200~300만원미만	520	62.7	7.4	55.2	37.3	30.4	6.9	2.63
	300~400만원미만	447	58.5	8.6	49.9	41.5	35.9	5.6	2.62
	400~500만원미만	294	67.0	7.7	59.3	33.0	28.0	5.1	2.70
	500만원이상	432	64.8	10.8	54.0	35.2	30.0	5.3	2.7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58.3	7.5	50.8	41.7	34.7	7.0	2.59
	도시지역	1,379	63.9	9.2	54.7	36.1	30.5	5.6	2.67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표 6-11〉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문화 및 의식(여성)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매우	약간	항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항상도 평점
계		2,302	65.3	8.9	56.3	34.7	29.8	4.9	2.69
연령별	19~30세미만	380	61.1	7.9	53.3	38.9	31.4	7.5	2.61
	30~40세미만	648	61.0	4.9	56.1	39.0	33.1	5.9	2.60
	40~50세미만	668	65.0	9.7	55.3	35.0	32.0	3.0	2.72
	50~65세미만	606	73.5	13.2	60.3	26.5	22.8	3.7	2.83
혼인 상태	미혼	422	64.7	7.4	57.4	35.3	28.9	6.3	2.66
	유배우	1,660	65.1	9.2	55.9	34.9	30.6	4.3	2.70
	사별/이혼	220	67.8	11.0	56.8	32.2	26.5	5.7	2.73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65.5	10.9	54.5	34.5	29.7	4.9	2.72
	고졸	984	63.5	8.5	54.9	36.5	31.4	5.2	2.67
	대졸이상	973	66.9	8.7	58.2	33.1	28.4	4.7	2.71
취업 여부	취업	1,208	63.6	9.3	54.2	36.4	30.5	6.0	2.67
	미취업	1,094	67.1	8.5	58.6	32.9	29.2	3.7	2.72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67.1	11.9	55.2	32.9	28.6	4.3	2.75
	아파트	1,268	66.7	9.1	57.6	33.3	28.3	5.0	2.71
	연립/다세대/기타	596	60.9	6.6	54.3	39.1	34.0	5.1	2.6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71.2	11.5	59.7	28.8	25.4	3.4	2.79
	100~200만원미만	420	59.2	6.1	53.1	40.8	35.7	5.1	2.60
	200~300만원미만	520	62.1	8.7	53.4	37.9	31.8	6.1	2.65
	300~400만원미만	447	65.9	10.3	55.6	34.1	30.4	3.7	2.73
	400~500만원미만	294	70.9	7.9	63.0	29.1	23.6	5.5	2.73
	500만원이상	432	67.6	10.1	57.6	32.4	27.6	4.7	2.73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61.8	8.3	53.5	38.2	32.0	6.2	2.64
	도시지역	1,379	67.1	9.3	57.8	32.9	28.7	4.2	2.72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3. 여성·가족정책 우선순위

본 절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한 11개 정책분야의 여성정책과 <건강가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0개 정책분야의 가족정책에 대해 경기도민들은 어떤 분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

가. 여성정책

1) 여성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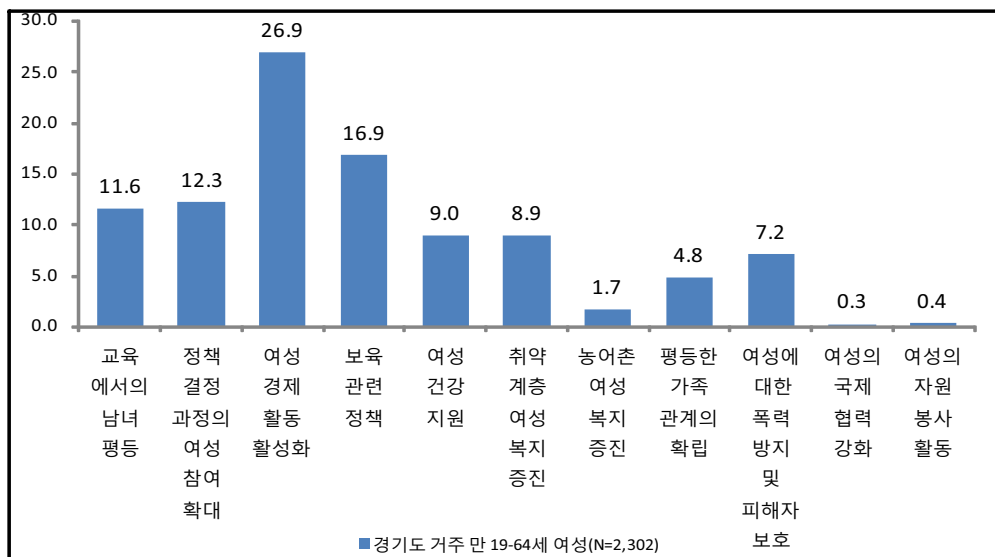
다음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한 여성정책에 해당하는 11가지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여성정책의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이다. 경기도 여성들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한 여성정책에 해당하는 11가지의 여성정책 중 1순위로 추진해야할 분야에 대해 <그림 6-3>과 같이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26.9%)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보육관련정책’ (16.9%),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 (12.3%),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11.6%), ‘여성건강지원’ (9.0%),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8.9%),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7.2%),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 (4.8%), ‘농어촌여성 복지증진’ (1.7%),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0.4%), ‘여성의 국제협력강화’ (0.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순위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표 6-12>와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30대는 ‘보육 관련 정책’, 40대는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50대는 ‘여성건강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보육관련 정책’, 사별/이혼의 경우는 ‘여성건강지원’과 ‘취약계층여성복지증진’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는 ‘교육에서의 남녀평등’과 ‘여성건강지원’, 대졸이상은 ‘보육관련정책’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 거주여성의 경우 ‘농어촌여성복지증진’에 대한 요구가 다른 주거형태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은 ‘농어촌여성복지증진’, 도시지역은 ‘보육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림 6-3〉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한편, 여성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복수응답 결과는 1순위 응답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1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던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35.0%), ‘여성건강지원’ (32.3%),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30.0%) 분야에 대한 응답비율이 2순위, 3순위를 포함한 복수응답 결과에서는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난 사실을 주목할 만 하다. 1순위에 대해서는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보육관련 정책’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2순위, 3순위까지를 포함하면 보육관련정책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반면, 위와 같은 분야의 우선순위는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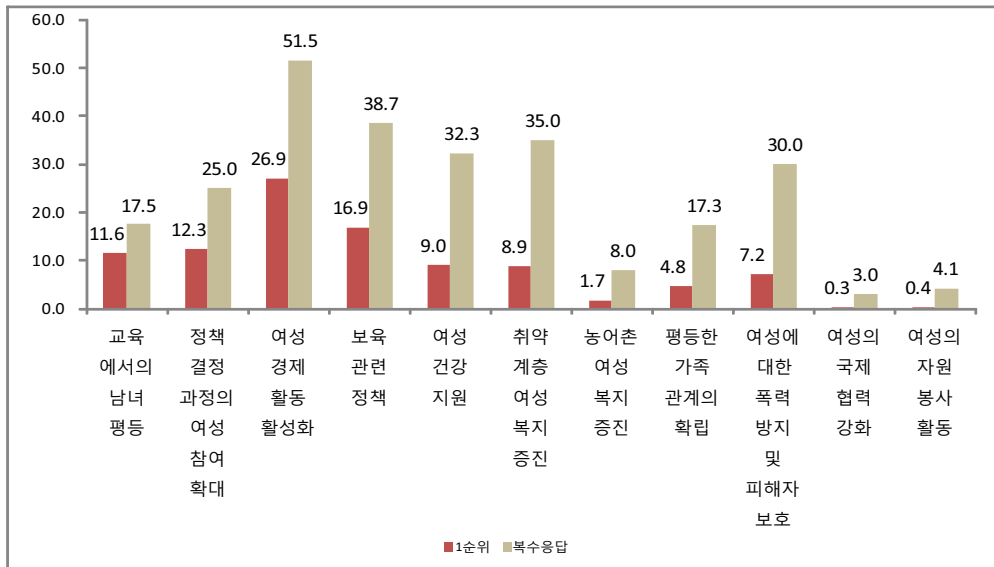
〈표 6-12〉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육에서의 남녀 평등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확대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	보육관 련 정책	여성 건강 지원	취약 계층 여성 복지 증진	농어촌 여성 복지 증진	평등한 가족 관계의 확립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국제 협력 강화	여성의 자원 봉사 활동
계		2,302	11.6	12.3	26.9	16.9	9.0	8.9	1.7	4.8	7.2	0.3	0.4
연령별	19~30세미만	380	12.3	9.8	29.8	14.4	7.8	8.1	0.3	3.9	12.6	0.8	0.3
	30~40세미만	648	8.9	10.2	28.4	27.8	4.4	6.3	1.1	5.3	6.9	0.1	0.6
	40~50세미만	668	11.9	14.1	28.1	12.5	7.2	11.5	2.3	5.3	6.6	0.3	0.2
	50~65세미만	606	13.5	14.6	21.3	12.4	16.9	9.6	2.9	4.3	3.6	0.2	0.7
혼인 상태	미혼	422	12.0	11.5	30.8	10.4	6.3	8.1	0.4	5.6	13.7	0.8	0.3
	유배우	1,660	11.3	12.7	26.4	19.7	9.4	7.7	2.2	4.4	5.6	0.2	0.4
	사별/이혼	220	13.0	11.0	21.1	11.1	12.4	19.8	1.0	5.4	4.1	-	1.0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16.0	10.5	19.4	11.7	15.8	12.8	3.9	3.9	5.2	-	0.8
	고졸	984	11.8	13.5	27.3	13.4	9.3	10.1	2.1	3.9	8.2	0.3	0.1
	대졸이상	973	10.0	11.7	28.9	22.0	6.5	6.5	0.6	5.8	7.0	0.5	0.6
취업 여부	취업	1,208	11.9	11.8	26.9	17.4	8.6	8.1	1.8	5.2	7.6	0.3	0.4
	미취업	1,094	11.3	12.8	26.9	16.4	9.4	9.8	1.6	4.3	6.8	0.4	0.4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11.5	11.2	25.0	14.2	13.5	8.9	5.5	2.8	6.6	0.6	0.2
	아파트	1,268	11.4	12.7	28.5	19.7	7.1	7.4	0.5	5.2	6.7	0.2	0.5
	연립/다세대/기타	596	12.2	12.0	24.7	12.8	10.0	12.0	1.6	5.3	8.7	0.3	0.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12.3	11.0	20.1	11.0	14.8	14.4	2.2	3.9	9.7	-	0.4
	100~200만원미만	420	14.6	9.1	28.2	11.8	9.6	12.7	2.1	2.7	8.5	0.5	0.3
	200~300만원미만	520	11.4	13.6	26.2	15.5	8.6	7.9	2.9	5.1	8.0	0.2	0.7
	300~400만원미만	447	8.3	12.5	30.8	18.1	9.9	8.7	1.1	4.4	5.4	0.3	0.5
	400~500만원미만	294	13.0	11.5	27.0	20.3	8.4	6.4	1.2	4.8	7.1	0.3	-
	500만원이상	432	11.2	14.4	25.2	22.5	5.9	6.0	0.6	7.1	5.9	0.6	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11.7	12.0	27.5	19.3	9.0	7.3	2.6	3.9	6.0	0.3	0.3
	외벌이	980	10.7	13.1	27.7	17.8	9.2	7.6	1.4	4.8	6.9	0.4	0.5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11.6	12.5	28.3	14.9	9.4	8.4	3.7	3.6	6.6	0.4	0.6
	도시지역	1,379	11.6	12.1	26.1	18.0	8.8	9.2	0.6	5.4	7.5	0.3	0.4

〈그림 6-4〉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단위 : %)



한편, <표 6-13>과 같이 복수응답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30대는 ‘보육 관련 정책’, 50대는 ‘여성건강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보육관련 정책’, 사별/이혼의 경우는 ‘취약계층여성복지증진’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와 그 외 집단 간에 차이가 보였다. 중졸이하는 ‘여성건강지원’, 고졸이상은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유형별로는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의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여성경제활동활성화’에 대한 응답률이 그 외 소득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여성복지증진’에 대한 응답률은 높게 나타난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은 ‘농어촌여성복지증진’, 도시지역은 ‘보육관련 정책’,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에 대한 수요가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6-13〉 여성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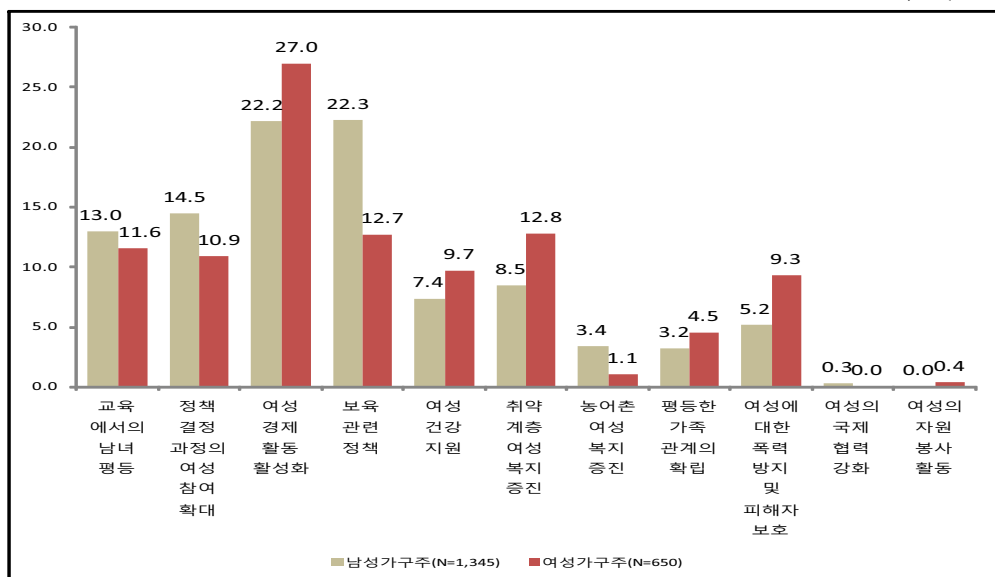
구분		시려수	교육 에서의 남녀 평등	정책결 정과정 의 여성참 여 확대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	보육 관련 정책	여성 건강 지원	취약 계층 여성 복지 증진	농어촌 여성 복지 증진	평등한 가족 관계의 확립	여성 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 보호	여성의 국제 협력 강화	여성의 지원 봉사 활동
계		2,302	17.5	25.0	51.5	38.7	32.3	35.0	8.0	17.3	30.0	3.0	4.1
연령별	19~30세미만	380	20.8	24.8	55.8	39.8	28.5	32.8	5.4	15.5	37.0	4.5	1.9
	30~40세미만	648	13.9	24.3	57.0	54.2	27.1	32.7	5.4	18.0	30.2	2.5	2.7
	40~50세미만	668	18.1	27.8	50.4	32.3	31.2	37.1	9.3	19.4	29.3	2.8	3.7
	50~65세미만	606	17.9	23.0	43.3	28.5	42.2	37.1	11.4	15.8	24.4	2.5	7.8
혼인 상태	미혼	422	20.5	25.6	54.1	34.9	28.0	34.1	6.8	17.2	37.6	4.7	2.1
	유배우	1,660	16.7	25.7	51.7	41.5	32.6	33.4	8.5	17.9	27.7	2.5	4.7
	사별/이혼	220	17.1	18.6	44.0	27.4	40.8	49.5	7.0	13.4	28.8	2.4	3.8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20.3	18.6	42.4	25.2	46.1	38.8	11.9	12.9	25.6	2.2	6.3
	고졸	984	17.5	25.3	52.2	32.6	33.6	34.3	8.4	17.3	30.8	3.0	4.0
	대졸이상	973	16.6	26.8	53.9	49.1	26.6	34.5	6.3	18.7	30.7	3.2	3.4
취업 여부	직장있음	1,208	18.2	24.0	52.1	38.7	31.7	34.5	8.5	18.5	31.6	3.5	4.2
	직장없음	1,094	16.8	26.1	50.9	38.7	32.9	35.6	7.3	16.0	28.2	2.4	3.9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16.2	20.7	44.5	29.9	39.1	36.9	16.4	14.6	28.1	3.9	6.2
	아파트	1,268	17.5	26.7	55.5	44.4	29.0	33.6	5.4	18.2	28.2	3.0	4.0
	연립/다세대/기타	596	18.6	24.5	48.0	33.0	34.6	36.6	7.4	17.3	35.0	2.2	2.8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17.7	21.6	39.5	24.4	44.7	41.9	8.1	10.9	30.1	1.5	2.4
	100~200만원미만	420	19.6	21.1	52.6	28.8	32.7	39.9	9.8	14.5	30.4	3.4	4.7
	200~300만원미만	520	18.1	25.2	49.2	41.2	31.3	34.6	9.9	19.7	31.8	2.7	3.6
	300~400만원미만	447	12.8	24.8	54.8	39.1	34.0	36.0	8.8	15.9	30.0	3.5	5.0
	400~500만원미만	294	17.5	26.8	53.4	45.7	29.2	32.0	6.7	14.6	30.3	2.9	2.5
	500만원이상	432	19.9	29.1	53.8	46.3	28.1	28.9	3.9	23.2	27.2	3.0	4.8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17.7	25.4	51.8	41.5	32.5	33.5	8.9	17.1	30.0	3.7	4.0
	홀벌이	980	16.3	25.7	53.7	42.1	31.2	32.7	7.7	18.0	27.4	2.5	4.4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17.6	24.0	50.9	36.2	30.1	32.8	14.3	16.6	28.4	3.1	5.1
	도시지역	1,379	17.5	25.6	51.8	40.1	33.5	36.2	4.6	17.7	30.8	2.9	3.5

2) 가구주

경기도 가구주 조사결과도 여성정책 중 1순위로 추진해야 할 분야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23.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보육관련정책’ (20.3%),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 확대’ (13.7%),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12.7%),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9.4%), ‘여성 건강지원’ (7.9%),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6.1%),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 (3.4%), ‘농어촌여성 복지증진’ (2.9%), ‘여성의 국제협력강화’ (0.2%),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0.1%)순으로 나타났다(〈부표 7〉 참조). 그러나 가구주에 대한 여성정책 1순위 조사결과는 〈그림 6-5〉와 같이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가구주의 경우는 ‘보육관련 정책’,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참여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조사결과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여성정책의 우선순위로 보다 직접적으로 여성이 대상이 되는 정책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5〉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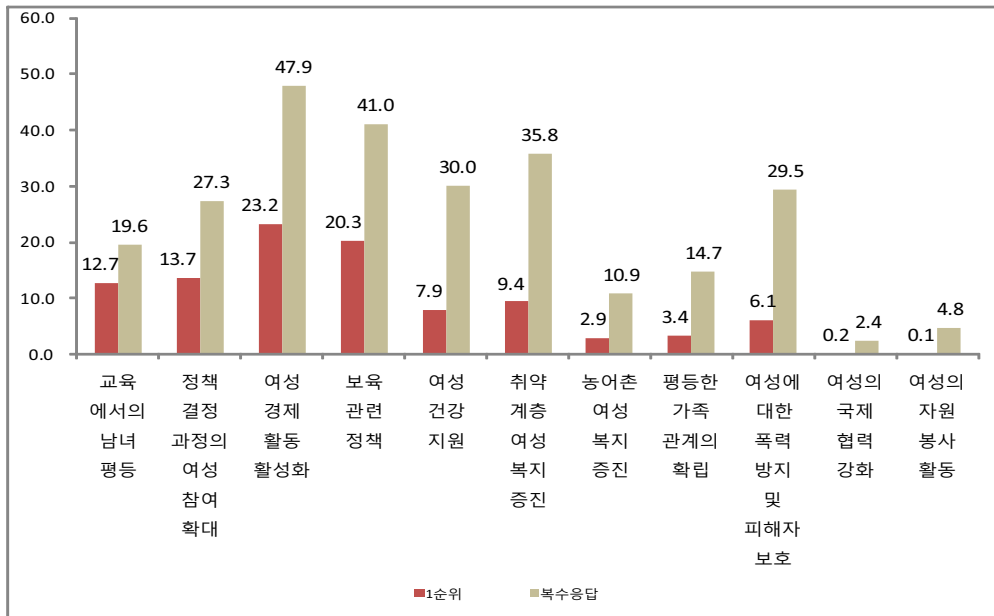
(단위 : %)



한편, 여성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가구주의 복수응답 결과도 1순위 응답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1순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던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35.8%), ‘여성건강지원’ (30.0%),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29.5%) 분야에 대한 응답비율이 2순위, 3순위를 포함한 복수응답 결과에서는 높은 비율로 나타난 사실을 주목할 만 하다(〈그림 6-6〉 참조). 이들 분야는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보육관련 정책’에 비해 1순위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 다음으로는 매우 중요한 여성정책 분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6〉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



나. 가족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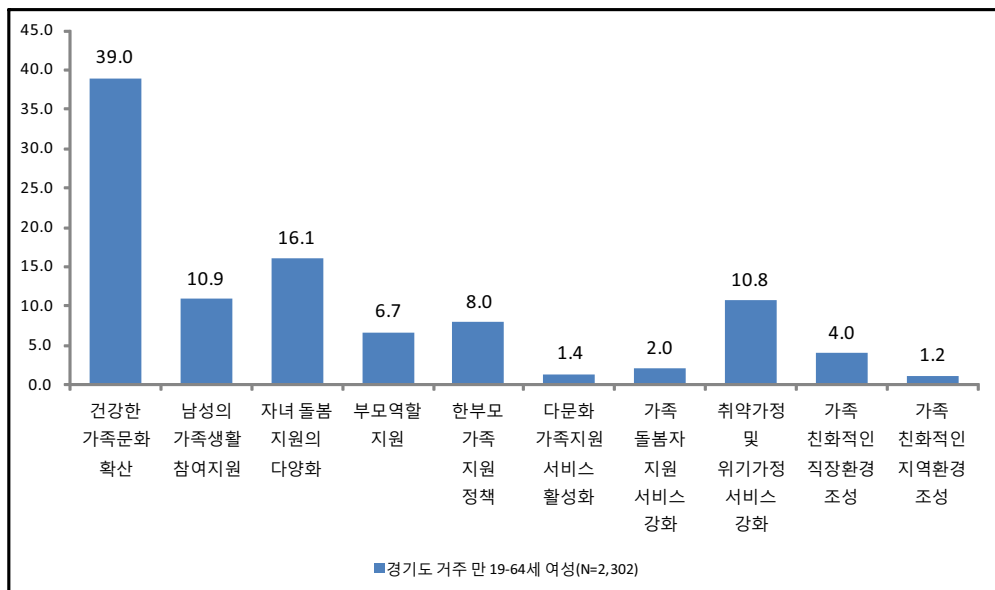
1) 여성응답자

다음은 〈건강가족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족정책에 해당하는 10가지 정책분야를 제시하고

가족정책의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이다. 우선, 여성응답자들의 <건강가족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족정책 10가지 중 추진해야 할 분야 1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는 <그림 6-7>과 같다.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이 39.0%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자녀돌봄 지원의 다양화’ (16.1%), ‘남성의 가족 생활참여 지원’ (10.9%),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 (10.8%),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8.0%), ‘부모역할지원’ (6.7%),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조성’ (4.0%), ‘가족돌봄자 지원서비스 강화’ (2.0%)순이며,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1.4%),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1.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7〉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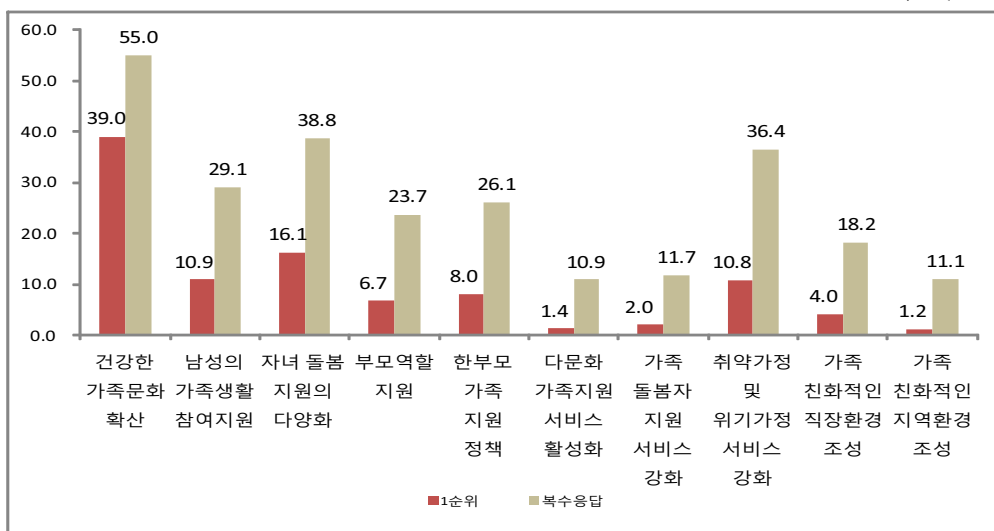
1순위로 추진해야 할 가족정책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표 6-14>와 같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40대 이상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이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의 경우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사별/이혼의 경우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현저하게 높았다. 학력별 차

이도 두드러졌다. 중졸이하는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고졸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대졸이상은 ‘자녀돌봄 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주택형태별로는 연립/다세대 등 거주여성이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결과에는 여성정책 보다 자신이 당면한 가족문제에 관한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응답자들은 <건강가족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족정책 10가지 중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는 1순위 응답과 순위는 비슷하지만 응답률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1순위에 대해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이 중요한 가족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3순위까지의 응답을 조사하면 ‘자녀돌봄지원의 다양화’ (39.8),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 (36.4%), ‘남성의 가족 생활참여 지원’ (29.1%),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 (26.1%), ‘부모역할지원’ (23.7%)에 대한 응답률이 현저하게 높아진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그림 6-8> 및 <표 6-15>참조).

〈그림 6-8〉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단위 : %)



〈표 6-14〉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남성의 가족 생활 참여 지원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부모 역할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가족 돌봄자 지원 서비스 강화	취약 가정및 위기 가정 서비스 강화	가족 친화 적인 직장 환경 조성	가족 친화 적인 지역 환경 조성
계		2,302	39.0	10.9	16.1	6.7	8.0	1.4	2.0	10.8	4.0	1.2
연령별	19~30세미만	380	32.3	12.3	18.9	6.1	6.9	1.0	2.1	11.3	7.7	1.3
	30~40세미만	648	34.3	13.0	24.1	6.3	4.1	1.3	1.5	9.2	4.5	1.7
	40~50세미만	668	46.2	8.8	9.0	7.5	9.8	2.0	2.5	10.4	2.7	1.0
	50~65세미만	606	41.7	9.7	12.8	6.7	11.2	1.0	1.8	12.7	1.6	0.9
혼인 상태	미혼	422	37.4	11.3	14.6	5.3	7.3	1.4	2.8	12.1	6.5	1.4
	유배우	1,660	40.2	11.3	16.7	6.9	6.4	1.3	1.6	10.6	3.6	1.3
	사별/이혼	220	33.5	6.7	15.1	8.3	21.7	1.7	2.5	9.8	0.6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34.4	11.4	12.5	6.8	14.5	1.1	1.3	15.6	1.7	0.7
	고졸	984	42.2	8.4	14.6	8.5	8.1	1.7	2.5	9.6	3.4	1.0
	대졸이상	973	37.4	13.1	18.6	4.9	5.8	1.1	1.7	10.5	5.2	1.6
취업 여부	직장있음	1,208	38.1	10.4	16.4	6.7	9.0	1.4	2.0	10.0	4.5	1.5
	직장없음	1,094	40.0	11.4	15.7	6.7	7.0	1.3	1.9	11.8	3.3	1.0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40.4	9.0	15.1	8.6	9.4	1.8	2.1	10.4	2.4	0.9
	아파트	1,268	39.0	12.1	16.9	5.9	6.6	1.1	2.2	9.6	5.1	1.4
	연립/다세대/기타	596	37.9	9.6	14.9	7.1	10.0	1.6	1.4	13.8	2.7	1.1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33.4	7.1	16.2	8.7	14.4	1.9	2.9	13.0	1.8	0.6
	100~200만원미만	420	36.2	10.2	14.7	7.8	9.7	1.0	2.7	14.5	2.8	0.4
	200~300만원미만	520	40.8	9.5	17.0	5.7	7.7	1.6	1.3	11.1	3.4	2.0
	300~400만원미만	447	37.3	11.5	16.2	6.3	7.8	1.4	1.6	11.7	5.3	0.9
	400~500만원미만	294	41.1	11.1	15.0	7.6	6.6	1.3	1.8	7.9	5.5	2.1
	500만원이상	432	42.2	14.0	16.8	5.6	5.1	1.2	2.1	7.3	4.4	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39.3	10.8	17.5	7.1	4.9	1.6	1.8	10.1	5.0	1.8
	홀벌이	980	39.1	11.8	16.5	6.6	7.2	1.2	1.6	10.8	4.0	1.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39.8	11.0	13.8	7.6	8.7	0.9	1.6	10.8	4.4	1.5
	도시지역	1,379	38.6	10.8	17.3	6.2	7.7	1.6	2.2	10.8	3.8	1.1

〈표 6-15〉 가족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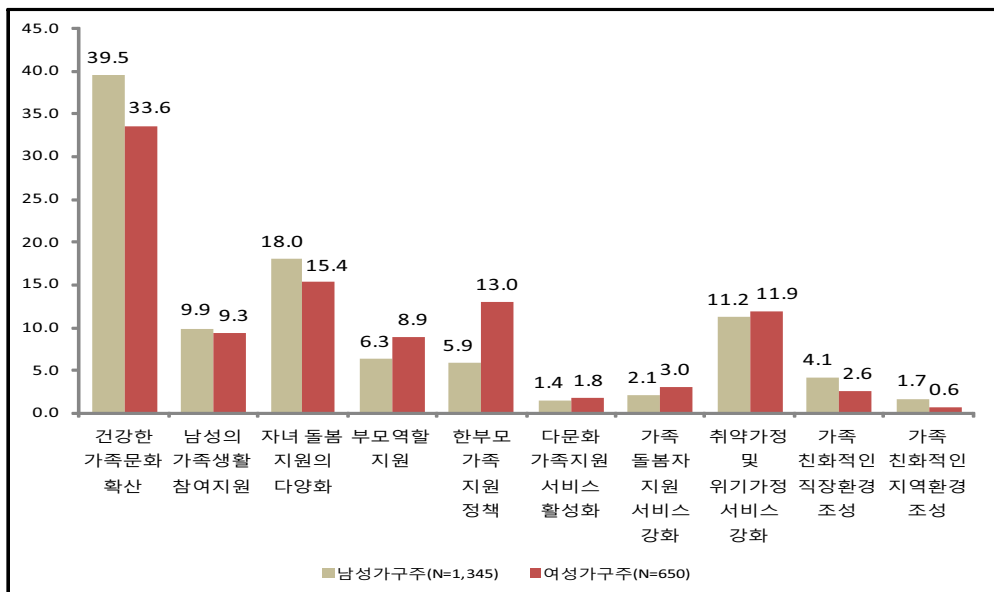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남성의 가족 생활 참여 지원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부모 역할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가족 돌봄자 지원 서비스 강화	취약 가정및 위기 가정 서비스 강화	가족 친화 적인 직장 환경 조성	가족 친화 적인 지역 환경 조성
계		2,302	55.0	29.1	38.8	23.7	26.1	10.9	11.7	36.4	18.2	11.1
연령별	19~30세미만	380	53.1	29.5	45.7	21.6	22.7	11.3	10.5	34.3	26.4	11.9
	30~40세미만	648	49.9	36.4	49.0	23.4	23.8	7.9	13.0	33.2	21.7	10.1
	40~50세미만	668	59.8	26.7	29.4	26.1	27.9	11.6	9.9	38.2	15.4	13.2
	50~65세미만	606	56.9	23.6	32.3	23.3	29.5	12.9	13.5	39.6	10.8	9.3
혼인 상태	미혼	422	55.9	29.3	39.1	21.6	25.9	11.9	10.8	34.8	25.4	10.8
	유배우	1,660	55.7	30.5	39.4	24.5	23.1	10.6	11.8	36.8	17.3	11.9
	사별/이혼	220	47.9	18.4	33.5	23.5	48.9	10.9	13.3	37.1	8.4	6.6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49.0	22.7	32.5	23.7	35.0	10.6	14.3	42.1	9.3	8.3
	고졸	984	57.7	26.7	37.0	24.4	26.8	12.0	10.3	37.0	15.0	11.6
	대졸이상	973	54.5	33.5	42.6	23.1	22.5	9.8	12.3	33.9	24.3	11.6
취업 여부	직장있음	1,208	55.8	28.6	37.6	24.4	26.7	10.4	12.0	37.4	20.2	10.6
	직장없음	1,094	54.2	29.6	40.0	23.0	25.4	11.5	11.4	35.3	16.1	11.7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52.0	26.6	36.2	29.1	27.1	12.0	10.9	37.6	14.9	10.1
	아파트	1,268	56.0	32.3	40.6	22.7	23.5	9.4	12.3	34.9	20.8	11.7
	연립/다세대/기타	596	55.2	24.0	36.8	22.2	30.8	13.2	11.2	38.6	15.2	10.7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46.8	22.1	34.7	25.2	31.4	15.2	15.1	37.1	11.0	5.1
	100~200만원미만	420	49.5	23.8	38.8	25.4	31.5	10.1	11.9	43.1	13.2	9.1
	200~300만원미만	520	57.6	30.0	38.6	23.0	27.1	13.1	10.3	36.7	16.9	11.0
	300~400만원미만	447	56.5	29.8	40.3	22.2	24.5	11.9	9.9	38.3	18.5	12.1
	400~500만원미만	294	56.7	30.5	36.4	25.2	23.7	7.4	13.1	29.9	23.1	13.8
	500만원이상	432	58.2	34.3	40.8	22.9	20.7	8.5	12.8	31.6	24.2	13.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56.9	29.9	38.1	23.4	22.8	10.3	12.9	36.1	20.5	13.3
	홀벌이	980	53.7	30.7	41.5	24.5	22.4	10.7	10.6	36.1	18.1	11.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53.9	29.7	38.1	24.0	26.0	9.1	12.0	38.1	16.7	12.5
	도시지역	1,379	55.6	28.8	39.2	23.6	26.2	11.9	11.6	35.5	19.1	10.4

2) 가구주

경기도 가구주 조사결과 <건강가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족정책 중 1순위로 추진해야 할 분야도 여성응답자 결과와 마찬가지로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이 전체의 38.2%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녀돌봄 지원의 다양화’ (17.4%),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 (11.3%), ‘남성의 가족 생활참여 지원’ (9.8%),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7.4%), ‘부모역할지원’ (6.8%),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조성’ (3.8%), ‘가족돌봄자 지원서비스 강화’ (2.3%)순이며,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은 각각 1.5%로 나타났다(<부표 9> 참조). 가구주에 대한 가족정책 1순위 조사결과에는 <그림 6-9>와 같이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가족정책 우선순위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부모역할 지원 관련 정책’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자녀돌봄 지원의 다양화’ 정책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6-9〉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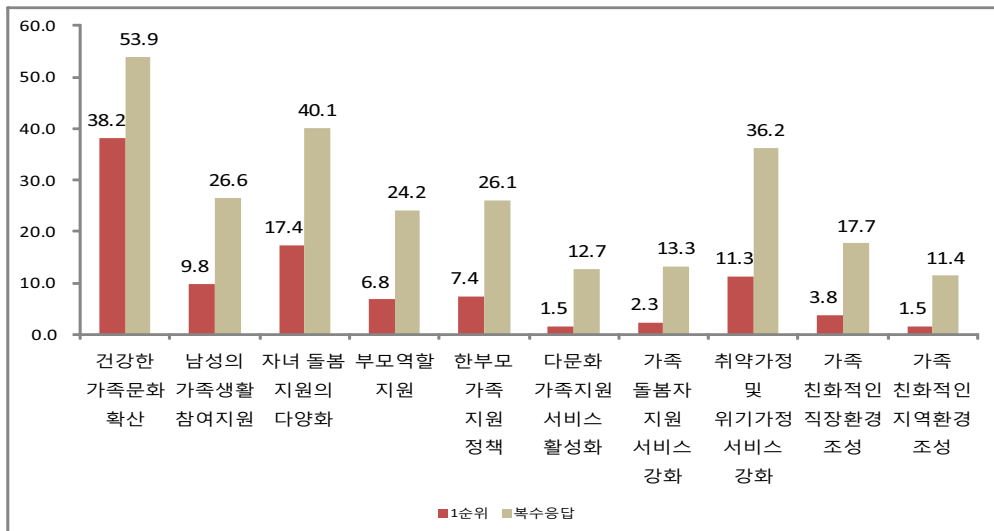
(단위 : %)



한편, 가구주들은 <건강가족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족정책 10가지 중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한 복수응답으로는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53.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녀돌봄 지원의 다양화’ (40.1),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 (36.2%), ‘남성의 가족 생활참여 지원’ (26.6%),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26.1%), ‘부모역할지원’ (24.2%),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조성’ (17.7%), ‘가족돌봄자 지원서비스 강화’ (13.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12.7%),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11.4%)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우선순위와 달리 가족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가구주의 복수응답 결과는 1순위 결과와 비슷한 순위로 나타난다(〈그림 6-10〉 참조).

〈그림 6-10〉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



다. 정책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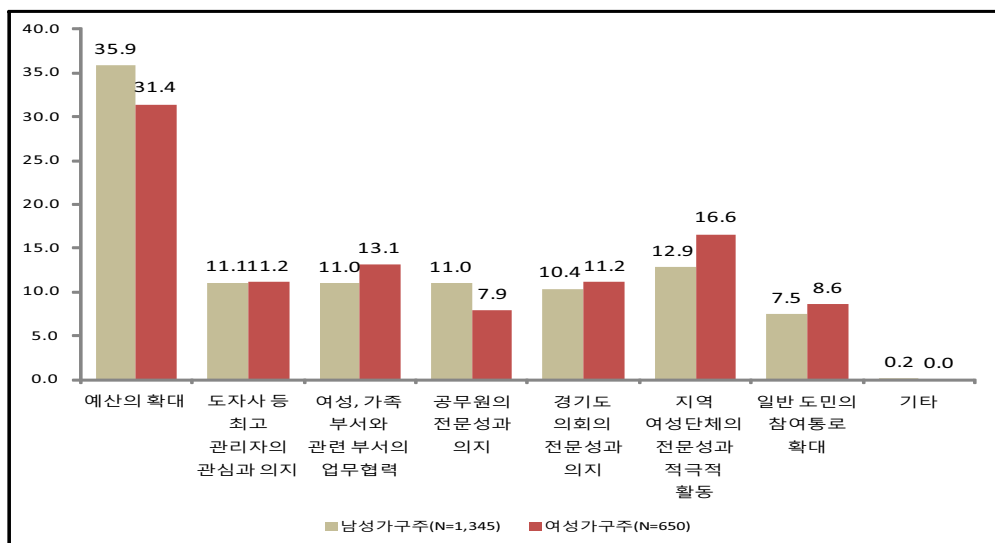
다음은 응답자 개인이 경기도의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우선, 여성응답자들은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 ‘예산의 확

대'라는 응답이 31.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16.0%), '여성·가족부서와 관련부서의 업무협력' (13.2%)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외 '도지사 등 최고 관리자의 관심과 의지' (10.7%), '경기도 의회의 전문성과 의지' (10.5%),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 (9.6%), '일반 도민의 참여통로 확대' (8.5%)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16〉 참조).

다음으로 경기도 가구주들도 '예산의 확대'라는 응답이 전체의 35.0%로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13.7%), '여성·가족부서와 관련부서의 업무협력' (11.5%), '도지사 등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의지' (11.1%), '경기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지' (10.5%),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 (10.3%)는 비슷하게 나타났다(〈부표 11〉 참조). 그런데 가구주에 대한 조사결과는 〈그림 6-11〉과 같이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여성가구주에 비해 '예산의 확대',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등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11〉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가구주)

(단위 : %)



〈표 6-16〉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예산의 확대	도지사 등 최고관리 자의 관심과 의지	여성, 가족부서와 관련 부서의 업무 협력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	경기도의 회의 전문성과 의지	지역여성 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일반 도민의 참여 통로 확대	기타
계		2,302	31.2	10.7	13.2	9.6	10.5	16.0	8.5	0.3
연령별	19~30세미만	380	29.5	11.3	11.9	8.6	10.6	17.3	10.3	0.5
	30~40세미만	648	34.2	10.4	14.0	8.1	11.5	15.2	6.0	0.6
	40~50세미만	668	28.7	10.1	14.3	11.7	11.0	16.5	7.6	-
	50~65세미만	606	32.4	11.2	12.5	9.7	8.6	15.1	10.5	-
혼인 상태	미혼	422	28.3	10.9	13.0	9.5	11.3	16.4	10.2	0.4
	유배우	1,660	31.8	10.4	13.4	9.9	10.3	15.7	8.3	0.3
	사별/이혼	220	34.1	12.9	12.7	7.8	9.3	17.0	6.2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45.7	10.3	9.2	8.9	7.9	10.7	7.3	-
	고졸	984	27.4	11.2	14.8	9.7	10.6	17.0	9.1	0.2
	대졸이상	973	30.3	10.4	13.0	9.8	11.1	16.7	8.3	0.4
취업 여부	직장있음	1,208	31.6	10.9	13.0	9.9	9.9	17.1	7.3	0.2
	직장없음	1,094	30.9	10.5	13.5	9.3	11.0	14.8	9.7	0.4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34.5	9.9	12.3	12.4	8.1	14.5	7.5	0.7
	아파트	1,268	28.0	10.9	14.0	9.6	11.2	17.5	8.7	0.2
	연립/다세대/기타	596	35.8	10.9	12.4	7.7	10.4	13.9	8.6	0.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38.5	10.9	12.9	8.5	9.9	7.8	11.4	-
	100~200만원미만	420	35.6	10.1	12.3	9.1	9.7	14.1	9.1	-
	200~300만원미만	520	32.0	9.7	11.8	9.1	10.3	17.9	9.1	-
	300~400만원미만	447	29.7	8.5	13.5	9.0	11.5	20.7	6.4	0.7
	400~500만원미만	294	23.1	12.8	15.1	10.1	11.2	19.8	7.9	-
	500만원이상	432	30.2	13.2	14.3	11.5	10.0	11.6	8.5	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923	29.6	10.3	15.1	9.1	11.7	15.1	9.1	-
	홀벌이	1,379	32.1	10.9	12.2	9.9	9.8	16.4	8.2	0.4

마지막으로 응답자 개인이 경기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에 대해 여성응답자들은 경기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해 <표 6-17>과 같이 응답하였다.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31.8%)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 (25.9%),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 (21.9%),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 (20.1%)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과 2005년 「정당법」 개정, 2005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 시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초의회, 광역의회,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교육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다음으로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 이 다음 순으로 높게 나타난 사실도 흥미롭다. 조사가 실시되던 시기 즈음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에서 여성대표가 선거를 사실상 이끌어나가는 구도여서 ‘여성정치인’에 대한 상징성이 과대표로 되어 보이는 시점이었음에도 여전히 조사결과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여성응답자의 집단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이, 30대는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를 상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은 반면,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에 대한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기도 가구주들은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31.1%)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 (26.7%),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 (22.4%),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 (19.6%)순으로 나타났다 (<부표 12> 참조). 한편, 가구주의 조사결과는 성별에 따라 <그림 6-12>와 같은 차이를 보였다. 남성가구주는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를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았고,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이 다소 더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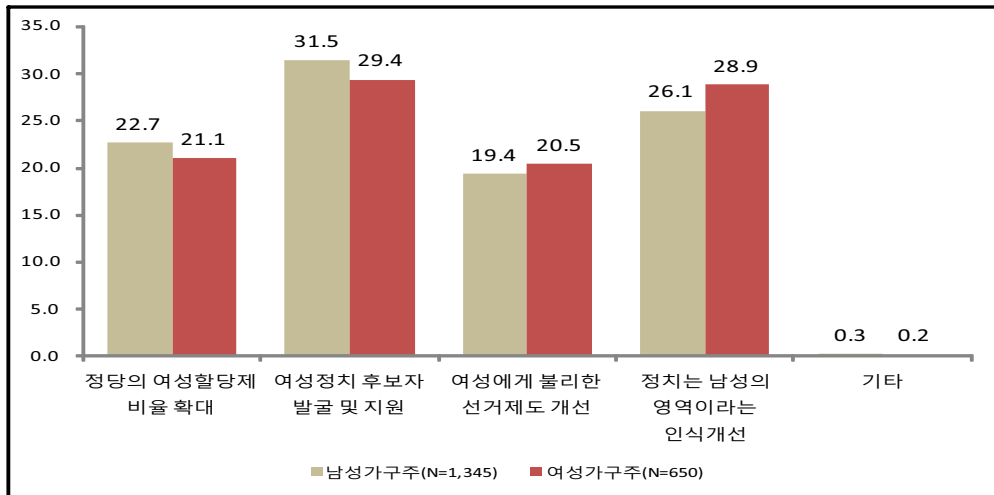
〈표 6-17〉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	기타
계		2,302	21.9	31.8	20.1	25.9	0.3
연령별	19~30세미만	380	21.9	25.1	21.8	30.7	0.5
	30~40세미만	648	24.9	33.7	20.2	20.8	0.3
	40~50세미만	668	20.6	33.0	20.3	26.0	0.2
	50~65세미만	606	20.1	34.2	18.3	27.1	0.3
혼인 상태	미혼	422	20.7	25.5	23.9	29.4	0.4
	유배우	1,660	22.2	34.4	18.9	24.2	0.3
	사별/이혼	220	22.4	27.2	19.9	30.5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18.8	30.6	21.3	29.1	0.2
	고졸	984	21.3	30.6	20.8	26.8	0.5
	대졸이상	973	23.5	33.3	19.1	24.0	0.2
취업 여부	직장있음	1,208	21.2	31.6	20.8	26.2	0.2
	직장없음	1,094	22.7	31.9	19.4	25.5	0.5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21.2	27.7	24.6	26.3	0.2
	아파트	1,268	23.5	33.6	16.4	26.0	0.4
	연립/다세대/기타	596	19.0	30.7	24.6	25.4	0.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6.3	19.1	23.6	30.6	0.4
	100~200만원미만	420	23.7	28.1	21.2	26.6	0.3
	200~300만원미만	520	16.5	31.8	23.4	28.1	0.2
	300~400만원미만	447	23.5	36.6	15.2	24.3	0.3
	400~500만원미만	294	24.4	33.5	16.6	25.5	—
	500만원이상	432	21.3	34.6	20.9	22.5	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20.4	34.4	20.2	24.6	0.4
	홀벌이	980	22.7	33.0	19.3	24.8	0.3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21.6	32.4	20.2	25.6	0.3
	도시지역	1,379	22.1	31.4	20.0	26.1	0.4

〈그림 6-1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



4. 여성경제활동 부문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현황을 살펴보고, 여성경제활동 분야 정책에 대한 수요를 분석하였다. 경제활동현황은 경제활동 여부, 고용형태, 종사산업, 종사직업, 근로시간, 월평균급여를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여성경제활동 관련 정책수요는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가. 경제활동 현황

1) 여성응답자

우선, 여성응답자의 경제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표 6-18>과 같다. 전체 여성응답자 중에서 취업여성은 52.4%, 미취업여성은 47.6%로 나타났다. 취업여성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상용근로자’가 48.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임시근로자’ 21.4%,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7%, ‘무급가족종사자’ 7.3%, ‘일용근로자’ 6.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

자' 5.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50세 미만까지는 취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3~56%로 나타났으나, 50-65세 미만의 경우 취업은 45.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30대 이하: 72.4%, 30대 55.5%, 40대 39.6%, 50대 이상 28.2%)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반면, 자영업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65세 미만 여성의 경우 영세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3.8%, 무급가족종사자가 13.6%로 매우 높았다.

여성응답자의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취업비율이 48.7%로 가장 낮았고, 미혼과 사별/이혼은 각각 60.4%, 61.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취업자의 고용형태는 미혼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유배우(44.0%), 사별/이혼(28.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배우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10.6%), 사별/이혼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9.0%)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대졸이상이 취업비율이 54.4%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중졸이하의 51.0%, 고졸은 50.8%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도 학력별 차이가 나타났다는데, 중졸이하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은 27.5%로 현저하게 낮았으나, 임시근로자(31.9%)와 일용근로자(14.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4.2%)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대졸이상의 경우는 상용근로자가 64.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의 취업비율이 47.7%로 다른 주택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반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취업자의 경우 다른 주택형태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여성취업자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14.9%로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았다.

이 외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여성응답자의 취업 비율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고, 생활권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다만,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여성응답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52.7%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무급가족종사자가 13.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6-18〉 경제활동 여부 및 고용형태(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경제 활동 하였음	소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 원이 있는 자영업 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경제 활동 하지 않았음
계		2,302	52.4	100.0	48.7	21.4	6.8	5.1	10.7	7.3	47.6
연령별	19~30세미만	380	54.2	100.0	72.4	18.0	5.2	—	2.4	2.0	45.8
	30~40세미만	648	53.8	100.0	55.5	21.2	3.7	4.5	9.5	5.6	46.2
	40~50세미만	668	55.8	100.0	39.6	21.5	8.4	6.2	16.0	8.3	44.2
	50~65세미만	606	45.7	100.0	28.2	24.8	10.0	9.5	13.8	13.6	54.3
혼인 상태	미혼	422	60.4	100.0	69.3	18.7	5.2	1.4	3.3	2.2	39.6
	유배우	1,660	48.7	100.0	44.0	20.3	6.8	6.0	12.3	10.6	51.3
	사별/이혼	220	61.1	100.0	28.3	33.9	10.4	8.4	19.0	—	38.9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51.0	100.0	27.5	31.9	14.0	3.8	14.2	8.6	49.0
	고졸	984	50.8	100.0	38.5	25.5	8.7	5.6	11.7	9.9	49.2
	대졸이상	973	54.4	100.0	64.2	14.5	2.8	5.0	8.8	4.7	45.6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57.7	100.0	36.7	23.8	8.9	4.3	11.5	14.9	42.3
	아파트	1,268	47.7	100.0	53.9	16.9	5.0	6.8	10.9	6.4	52.3
	연립/다세대/기타	596	58.5	100.0	47.9	27.3	8.3	2.8	10.0	3.7	41.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4.1	100.0	17.8	35.5	22.0	—	19.0	5.7	75.9
	100~200만원미만	420	51.3	100.0	39.4	26.4	13.1	2.8	9.8	8.5	48.7
	200~300만원미만	520	48.5	100.0	41.0	30.0	4.3	5.0	10.2	9.5	51.5
	300~400만원미만	447	56.9	100.0	53.5	20.5	4.6	4.3	12.9	4.2	43.1
	400~500만원미만	294	58.0	100.0	55.9	15.0	7.6	6.1	8.6	6.9	42.0
	500만원이상	432	62.0	100.0	59.1	11.8	3.1	8.0	10.0	8.0	38.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52.8	100.0	41.2	22.0	5.4	6.0	11.5	13.8	47.2
	도시지역	1,379	52.2	100.0	52.7	21.0	7.5	4.6	10.3	3.8	47.8

취업여성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19>와 같다. 취업여성의 경우 ‘제조업’ 이 17.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도매 및 소매업’ 16.1%, ‘교육서비스업’ 15.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0%, ‘숙박 및 음식점업’ 10.7% 등으로 나타났다.

〈표 6-19〉 취업여성의 종사산업

(단위 :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107	100.0	100.0
농업·임업 및 어업	3	0.3	0.2
제조업	190	17.2	17.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0.1	0.1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3	0.3	0.3
건설업	17	1.5	1.7
도매 및 소매업	178	16.1	16.1
운수업	12	1.1	1.2
숙박 및 음식점업	123	11.1	10.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30	2.7	2.8
금융 및 보험업	53	4.8	4.8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	1.1	1.1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28	2.5	2.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3	3.0	2.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0	3.6	3.6
교육 서비스업	168	15.2	15.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8	10.7	11.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32	2.9	3.0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2	4.7	4.4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3	1.2	1.1
국제 및 외국기관	1	0.1	0.1

한편, 취업여성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20>과 같다. 취업여성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가 2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사무종사자’ 22.5%, ‘서비스종사자’ 15.7%, ‘판매 종사자’ 15.3%, ‘단순노무 종사자’ 1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0〉 취업여성의 종사직업

(단위 :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107	100.0	100.0
관리자	8	0.7	0.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81	25.4	26.0
사무 종사자	237	21.4	22.5
서비스 종사자	178	16.1	15.7
판매 종사자	172	15.5	15.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2	0.2	0.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38	3.4	3.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45	4.1	4.0
단순 노무 종사자	145	13.1	12.2
군인	1	0.1	0.1

취업여성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표 6-21〉과 같다. ‘36시간 이상’ 은 77.3%를 차지했고, ‘18시간 이상-36시간 미만’ 은 14.8%, ‘18시간 미만’ 은 7.9%로 나타났다.

〈표 6-21〉 취업여성의 주당 근무시간

(단위 :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206	100.0	100.0
18시간 미만	97	8.0	7.9
18시간 이상~36시간 미만	183	15.2	14.8
36시간 이상	926	76.8	77.3

취업여성의 주당 월평균급여는 〈표 6-22〉와 같이 ‘100-200만원 미만’ 이 49.2%로 과반수에 가까웠고, 다음은 ‘100만원 미만’ 25.6%, ‘200-300만원 미만’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2〉 취업여성의 월평균급여

(단위 :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107	100.0	100.0
100만원 미만	291	26.3	25.6
100~200만원 미만	537	48.5	49.2
200~300만원 미만	171	15.4	15.6
300~400만원 미만	68	6.1	6.2
400~500만원 미만	23	2.1	2.0
500~600만원 미만	8	0.7	0.7
600만원 이상	9	0.8	0.7

한편, 여성응답자 2,302명 중에서 미취업여성 1,1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6-23〉~〈표 6-24〉와 같다. 우선, 현재 미취업여성 중에서 지난 4주 동안 각종 구인정보를 찾거나 구인업체에 전화문의, 서류접수, 면접을 보는 등의 구직활동을 했던 여성은 전체의 14.6%로 나타났다. 이 중 49.8%는 전일제 일자리를, 50.2%는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6-23〉 미취업여성의 구직활동 여부

(단위 :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191	100.0	100.0
구직	174	14.6	14.6
비구직	1,017	85.4	85.4

〈표 6-24〉 구직여성의 희망고용형태

(단위 :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74	100.0	100.0
전일제	86	49.4	49.8
시간제	88	50.6	50.2

구직활동을 하면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 찾기가 힘들’ 이 2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근로시간이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18.9%),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부족함’ (16.4%) , ‘임금이 적음’ (15.2%),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11.8%),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 (10.4%) 순으로 나타났다(〈표 6-25〉 참조). 여성구직자들의 경우 연령, 학력 등 인적자본과의 불일치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적합하거나, 자신의 거주지 주위나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범위 내에 알맞은 일거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표 6-25〉 구직여성의 구직활동 어려움

(단위 : 명, %)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74	100.0	100.0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힘들	18	10.3	10.4
임금이 적음	25	14.4	15.2
근로시간이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34	19.5	18.9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부족함	19	10.9	11.8
근처(주변)에 일자리가 부족함	28	16.1	16.4
나이가 많아서 일자리 찾기가 힘들	43	24.7	23.1
기타	5	2.9	3.2
없음	2	1.1	1.0

한편, 현재 미취업여성 중에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85.4%의 여성들에게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표 6-26〉과 같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육아 및 가사 때문에’ 가 38.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건강, 장애 등의 문제로 일하기가 어려워’ (16.3%), ‘학업중이어서’ (12.6%), ‘일할 생각이 없어서’ (11.7%) ,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1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6-26〉 미취업여성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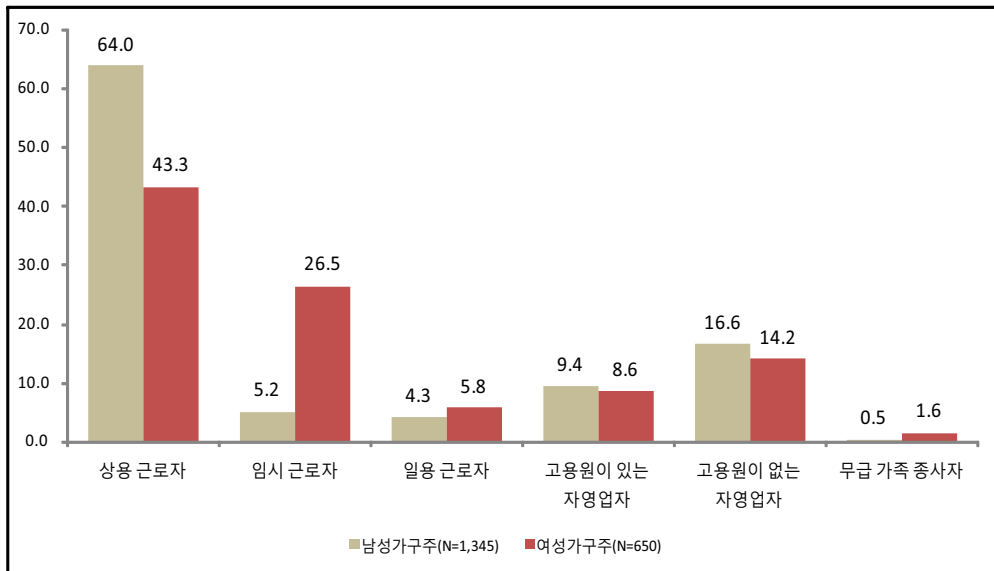
구분	가중치 미부여		가중치 부여
	사례수	비율	비율
전체	1,017	100.0	100.0
육아 및 가사 때문에	397	39.0	38.2
학업중이어서	103	10.1	12.6
창업을 하려고	13	1.3	1.2
일할 생각이 없어서	123	12.1	11.7
건강, 장애등의 문제로 일하기가 어려워서	172	16.9	16.3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105	10.3	10.0
전에 찾아보았지만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43	4.2	4.1
현재보다 더 많은 시간 일할 생각이 없어서	22	2.2	2.1
기타	39	3.8	3.8

2) 가구주

다음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주의 특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표 6-27〉과 같다. 조사대상 가구주 중에서 취업가구주는 84.2%, 미취업가구주는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취업 현황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는 ‘취업’ 이 90.5%, ‘미취업’ 이 9.5%로 나타난 반면, 여성가구주는 ‘취업’ 이 60.3%, ‘미취업’ 이 39.7%를 차지했다. 취업가구주의 고용형태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가구주는 ‘상용근로자’ 가 64.0%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다음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6.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9.4%, ‘임시근로자’ 5.2%, ‘일용근로자’ 4.3%, ‘무급가족종사자’ 0.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상용근로자’ 는 43.3%에 불과했고, ‘임시근로자’ 26.5%,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4.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8.6%, ‘일용근로자’ 5.8%, ‘무급가족종사자’ 1.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13〉 참조).

〈그림 6-13〉 경제활동 여부 및 고용형태(가구주)

(단위 : %)



경제활동 및 고용형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 6-27>과 같다. 가구주의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50세 미만 까지는 취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85% 이상이었으나, 50-65세 미만의 경우 취업은 74.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고용형태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자영업자의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50-65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영세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29.5%로 매우 높았다.

가구주의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86.5%로 취업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미혼 72.5%, 사별/이혼 66.1%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는 미혼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72.6%로 가장 높았고, 유배우의 경우는 62.2%, 사별/이혼의 경우는 26.9%로 현저하게 낮았다.

가구주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졸이상의 경우 89.1%, 고졸 82.8%, 중졸이하의 경우 67.3%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형태별로도 학력별 차이가 드러났다. 중졸이하의 경우 상용근로자 비율은 19.1%로 현저하게 낮았으나,

임시근로자(24.6%)와 일용근로자(19.8%)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고졸의 경우는 상용근로자가 53.9%, 대졸이상은 상용근로자가 73.3%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도 학력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중졸이하와 고졸의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30.4%와 22.5%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대졸이상의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3%에 불과했다. 반면, 대졸이상의 경우는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10.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의 주택형태별로 살펴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가구주 취업비율이 87.4%로 다른 주택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고용형태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상용근로자 차지하는 비율이 70.5%로 다른 주택형태에 거주하는 가구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단독주택 가구주의 경우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31.0%로 현저하게 높았고, 연립/다세대/기타에 거주하는 가구주의 경우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이 20.6%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주의 취업 비율이 높았고,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았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가구주의 경우 취업비율이 83.4%, 도시지역은 84.6%로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고용형태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가구주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63.8%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19.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6-27〉 경제활동 여부 및 고용형태(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경제 활동 하였음								경제 활동 하지 않았음
			소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계		1,995	84.2	100.0	60.9	8.4	4.5	9.3	16.2	0.7	15.8
성별	남자	1,345	90.5	100.0	64.0	5.2	4.3	9.4	16.6	0.5	9.5
	여자	650	60.3	100.0	43.3	26.5	5.8	8.6	14.2	1.6	39.7
연령별	19~30세미만	106	84.5	100.0	82.1	6.1	2.8	4.2	4.7	—	15.5
	30~40세미만	487	89.9	100.0	74.0	7.2	2.4	6.4	9.4	0.6	10.1
	40~50세미만	662	88.8	100.0	61.0	7.8	4.9	11.6	14.1	0.6	11.2
	50~65세미만	740	74.1	100.0	41.0	11.0	6.8	10.6	29.5	1.1	25.9
혼인 상태	미혼	152	72.5	100.0	72.6	14.2	4.0	3.2	5.3	0.6	27.5
	유배우	1,635	86.5	100.0	62.2	6.6	4.1	9.6	16.7	0.7	13.5
	사별/이혼	208	66.1	100.0	26.9	32.3	11.4	9.4	20.0	—	33.9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67.3	100.0	19.1	24.6	19.8	3.7	30.4	2.5	32.7
	고졸	795	82.8	100.0	53.9	9.1	5.2	8.9	22.5	0.4	17.2
	대졸이상	909	89.1	100.0	73.3	5.1	1.3	10.5	9.3	0.6	10.9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78.0	100.0	39.3	12.6	7.9	7.9	31.0	1.3	22.0
	아파트	1,099	87.4	100.0	70.5	4.4	2.4	11.4	11.0	0.2	12.6
	연립/다세대/기타	525	80.5	100.0	49.7	15.8	7.8	4.7	20.6	1.4	19.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30.3	100.0	15.8	29.6	22.3	—	27.6	4.8	69.7
	100~200만원미만	392	76.0	100.0	45.8	17.3	10.1	5.3	20.5	1.1	24.0
	200~300만원미만	455	83.5	100.0	56.1	10.8	5.5	7.2	19.9	0.4	16.5
	300~400만원미만	377	92.5	100.0	65.8	6.9	3.3	6.1	16.9	1.0	7.5
	400~500만원미만	233	94.1	100.0	63.8	5.3	1.1	16.7	12.5	0.6	5.9
	500만원이상	356	95.5	100.0	74.9	0.7	0.8	13.7	9.9	—	4.5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83.4	100.0	55.1	9.8	4.7	10.0	19.5	1.0	16.6
	도시지역	1,175	84.6	100.0	63.8	7.7	4.4	8.9	14.7	0.5	15.4

취업가구주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28>과 같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제조업’이 26.4%로 전체의 1/4이상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도매 및 소매업’ 12.8%, ‘건설업’ 1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6%, ‘운수업’ 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이 1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제조업’ 17.0%, ‘숙박 및 음식점업’ 14.4%, ‘교육서비스업’ 1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8.7% 등으로 나타났다. 취업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종사산업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8〉 취업가구주의 종사산업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남	여
전체	1,576	100.0	100.0
농업·임업 및 어업	31	1.6	0.6
제조업	369	26.4	17.0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1	0.9	0.0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9	0.6	0.5
건설업	128	10.1	0.6
도매 및 소매업	224	12.8	18.2
운수업	94	7.0	0.8
숙박 및 음식점업	93	2.6	14.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7	3.5	2.5
금융 및 보험업	61	3.5	5.6
부동산업 및 임대업	33	2.1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	4.7	2.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59	3.8	3.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7	8.6	3.4
교육 서비스업	93	4.2	11.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8	1.4	8.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6	1.2	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5	4.9	4.7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6	0.0	1.5
국제 및 외국기관	1	0.1	0.0

한편, 취업가구주의 직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6-29>와 같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사무 종사자’가 2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8.2%,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9%, ‘판매 종사자’ 11.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서비스종사자’ (19.7%), ‘사무종사자’ (19.6%), ‘판매 종사자’ (19.3%)가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으며, ‘단순노무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1.9%나 되었다.

〈표 6-29〉 취업가구주의 종사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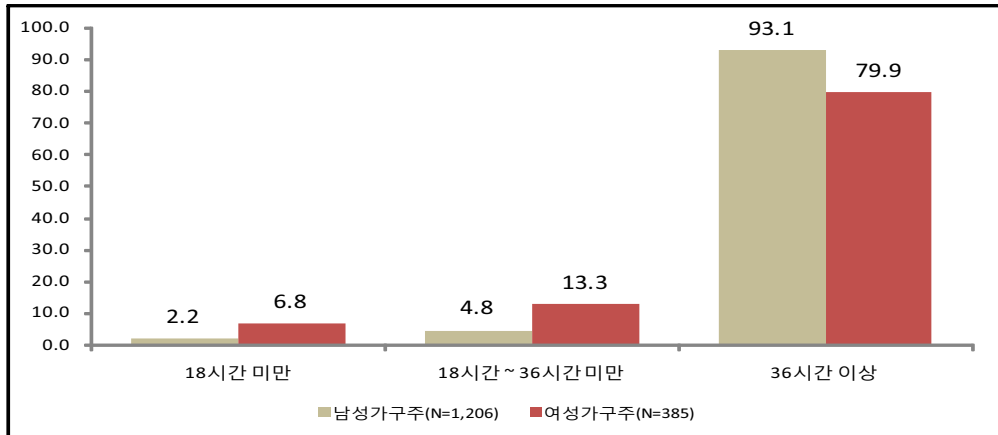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비율	
		남	여
전체	1,576	100.0	100.0
관리자	77	6.1	0.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287	18.2	21.4
사무 종사자	328	22.1	19.6
서비스 종사자	151	5.6	19.7
판매 종사자	214	11.9	19.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31	1.7	0.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145	11.7	2.9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73	12.9	4.0
단순 노무 종사자	145	7.0	11.9
군인	25	2.6	0.5

취업가구주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그림 6-14>와 같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36시간 이상’이 전체의 93.1%로 절대적으로 높았고, ‘18시간이상-36시간 미만’은 4.8%, ‘18시간 미만’은 2.2%에 불과했다.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36시간 이상’은 79.9%를 차지했고, ‘18시간이상-36시간 미만’은 13.3%, ‘18시간 미만’은 6.8%로 나타났다. 가구주의 주당 근무시간을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가 여성가구주에 비해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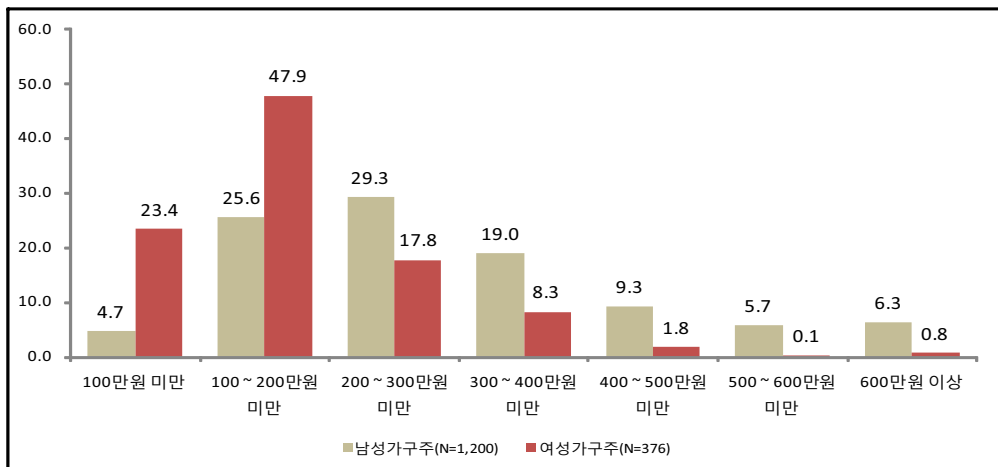
〈그림 6-14〉 취업가구주 주당 근무시간

(단위 : %)



〈그림 6-15〉 취업가구주 월평균급여

(단위 : %)



취업가구주의 월평균급여는 〈그림 6-15〉와 같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200~300만원 미만’ 이 2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00~200만원 미만’ 25.6%, ‘300~400만원 미만’ 19.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100~200만원 미만’ 이 47.9%로 과반수에 가까웠고, 다음은 ‘100만원 미만’ 23.4%, ‘200~300만원 미만’ 1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400만원 이상 월평균급여를 받는 경우가 전체의 21.3%를

차지했으나,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2.7%에 불과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월평균급여가 현저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나.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

조사대상 여성응답자에게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이 33.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30.7%, 취업알선서비스 21.3%, 여성창업지원 강화 13.1% 순으로 나타났다(〈표 6-30〉 참조).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 이상의 경우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서비스’,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혼의 경우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라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여성창업지원 강화’ (19.4%)라는 응답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반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다. 또한 중졸이하 여성의 경우 ‘취업알선서비스’라는 응답이 다른 학력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는 ‘여성창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6.2%로 미취업 여성 9.8%에 비해 높았다. 이는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취업현실’의 어려움을 보다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로서 취업보다는 ‘창업’이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거주하는 주택형태별로는 아파트 거주 여성의 경우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응답 비율이 37.3%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단독주택 거주 여성은 ‘취업알선서비스’ (27.2%)에 대한 비율이 높았다. 연립/다세대/기타 거주 여성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37.7%)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6-30〉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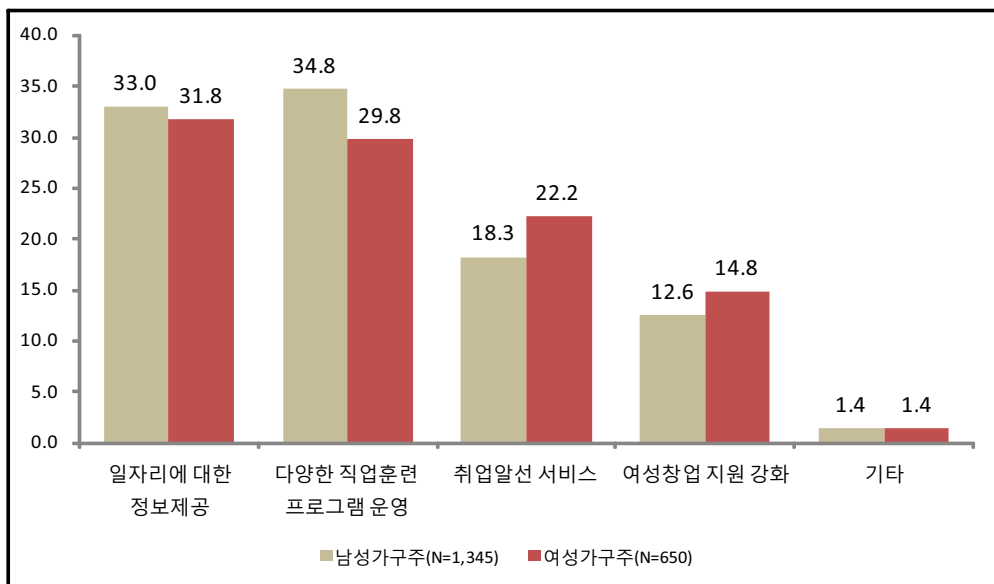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서비스	여성창업 지원 강화	기타
계		2,302	30.7	33.4	21.3	13.1	1.4
연령별	19~30세미만	380	32.3	34.7	21.8	9.7	1.5
	30~40세미만	648	25.4	41.5	17.0	13.2	2.8
	40~50세미만	668	31.1	33.9	20.1	14.5	0.5
	50~65세미만	606	34.7	23.2	26.9	14.6	0.7
혼인 상태	미혼	422	32.0	32.8	22.8	10.8	1.6
	유배우	1,660	30.5	34.8	20.3	13.0	1.4
	사별/이혼	220	29.8	24.7	25.4	19.4	0.6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41.1	15.7	30.8	11.7	0.7
	고졸	984	31.1	34.1	19.3	14.5	0.9
	대졸이상	973	27.0	38.5	20.2	12.3	2.0
취업 여부	취업	1,208	28.9	31.5	21.6	16.2	1.8
	미취업	1,094	32.7	35.5	21.0	9.8	0.9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32.1	26.5	27.2	13.2	1.0
	아파트	1,268	26.9	37.3	20.8	13.0	1.9
	연립/다세대/기타	596	37.7	30.0	18.4	13.3	0.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38.0	28.5	22.2	11.2	-
	100~200만원미만	420	34.3	28.2	23.0	14.5	-
	200~300만원미만	520	29.6	33.8	21.9	12.9	1.8
	300~400만원미만	447	29.9	36.4	19.6	12.8	1.2
	400~500만원미만	294	30.2	36.5	18.0	13.8	1.5
	500만원이상	432	26.7	34.8	22.8	12.8	2.9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29.0	31.8	21.3	15.7	2.2
	외벌이	980	32.0	36.4	20.8	9.8	1.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29.9	34.8	21.0	13.3	1.0
	도시지역	1,379	31.2	32.7	21.5	13.1	1.6

다음으로 조사대상 가구주에게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연령, 학력 등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이 33.7%로 가장 높았으나, 자신의 조건에 맞는 구인업체, 구인조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도 32.7%로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여성구직자와 구인자를 연결시켜주는 ‘취업알선서비스’가 19.1%, 여성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창업자금지원 등 ‘여성창업지원 강화’가 13.0%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13> 참조).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취업알선서비스와 여성창업지원 강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6-16> 참조).

〈그림 6-16〉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



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조사대상 여성응답자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현재 일을 하는 경우 직장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응답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의 76.7%가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가정영역의 어려움(가사노동부담,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일하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 부족)이 52.1%로 직장영역의 어려움(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가정생활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회사 분위기) 23.3% 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 여성취업자들이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려움으로는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다음은 ‘가사노동 부담’ 19.9%, ‘과중한 업무’ 1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6-31> 참조). 다음으로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는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이 45.6%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30대의 경우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이라는 응답이 52.2%로 매우 높았다. 40대도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이 40.1%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반면, 50대 이상의 경우는 ‘가사노동 부담’ 이 30.8%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과중한 업무’ 도 22.7%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교육정도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이라는 응답이 높았고, ‘가사노동 부담’ 이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도 학력이 높을수록 높았다.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다양한 사회적 자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에서 야기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 여성은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 단독주택 거주 여성의 경우는 ‘가사노동 부담’ 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반면, 가구소득이 낮은 경우 ‘과중한 업무’ 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생활권별로 살펴보면, 도시지역 거주 여성은 ‘과중한 업무’ , 도농복합지역 거주 여성은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표 6-31〉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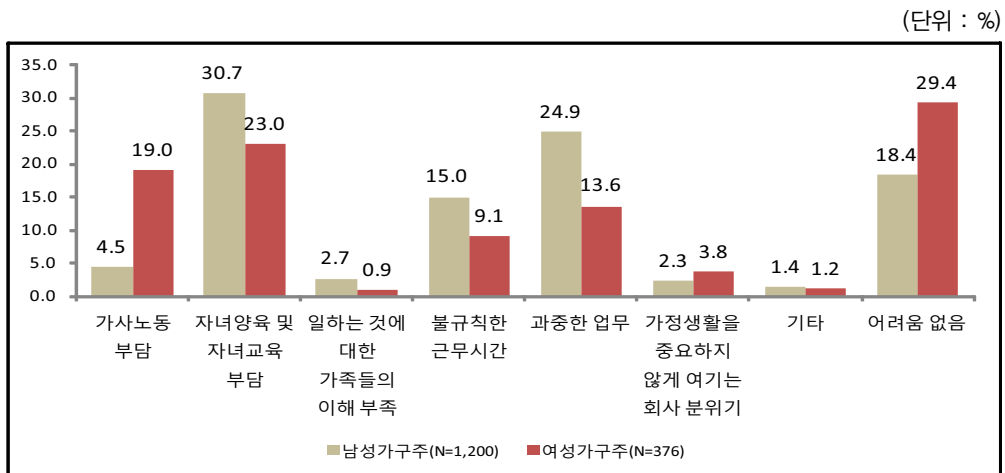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¹⁾	가사노동 부담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일하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부족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가정 생활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회사 분위기	기타	어려움 없음
계		1,107	19.9	31.0	1.2	8.1	12.9	2.3	1.3	23.3
연령별	19~30세미만	202	11.4	11.8	1.4	11.0	13.9	2.9	1.9	45.6
	30~40세미만	328	16.2	52.2	1.3	5.3	7.1	3.0	0.9	14.1
	40~50세미만	342	22.5	40.1	1.6	7.9	10.7	1.6	1.1	14.5
	50~65세미만	235	30.8	11.4	0.3	9.1	22.7	1.7	1.5	22.4
혼인 상태	미혼	251	7.1	6.2	1.9	13.1	16.9	3.2	1.7	49.8
	유배우	721	27.2	42.5	1.0	5.8	10.1	2.1	0.9	10.5
	사별/이혼	135	10.3	26.6	0.8	9.3	18.8	1.4	2.6	30.2
교육 정도	중졸이하	161	28.8	16.9	0.5	10.3	21.0	2.9	0.5	19.1
	고졸	453	22.8	30.9	1.7	7.9	12.0	2.3	1.0	21.5
	대졸이상	493	14.7	35.2	1.0	7.7	11.4	2.2	1.9	25.9
주택 형태	단독주택	215	26.2	23.7	1.0	8.5	16.3	2.8	0.3	21.1
	아파트	560	19.0	36.8	0.9	8.1	10.3	1.9	2.0	21.0
	연립/다세대/기타	332	17.5	25.8	1.8	8.0	15.1	2.7	0.7	28.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44	12.8	32.2	—	16.9	21.7	—	—	16.4
	100~200만원미만	195	19.8	21.9	2.1	5.2	15.2	2.8	2.4	30.6
	200~300만원미만	226	19.3	26.6	0.4	14.4	13.0	1.9	1.1	23.3
	300~400만원미만	241	21.5	30.1	1.7	5.0	12.5	3.7	1.0	24.5
	400~500만원미만	158	21.0	36.9	1.2	6.1	13.1	1.8	1.9	18.2
	500만원이상	243	19.3	39.0	0.9	7.7	9.8	1.8	0.9	20.7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413	20.3	33.8	0.2	7.4	10.3	3.1	1.3	23.7
	도시지역	694	19.7	29.6	1.7	8.5	14.2	1.9	1.4	23.0

주 : 1)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무급가족종사자 제외)

다음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일하고 있는 가구주의 80%가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다. 일·가정양립 어려움으로는 직장영역의 어려움(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가정생활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회사 분위기)이 39.9%로 가정영역의 어려움(가사노동부담,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일하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 부족) 38.7%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거나, 취학 자녀의 교육 등과 관련해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과중한 업무 23.2%, 현재 하고 있는 일(직장)의 근무시간이 불규칙해서 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가구주의 경우 가정영역의 어려움(37.9%) 보다 직장영역의 어려움(42.2%)이 더 크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직장영역의 어려움(26.5%) 보다 가정영역의 어려움(42.9%)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6-17〉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가구주)



다음으로 조사대상 여성응답자에게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이 31.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 (18.9%), ‘출퇴근시간 유연화’ (18.4%),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18.0%)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이 외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은 12.8%를 차지했다(〈표 6-32〉 참조).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출퇴근시간 유연화’ 는 20대와 40대의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와 40대에서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 , 50대 이상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 (19.9%)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미혼은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 (35.6%)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정도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출퇴근시간 유연화’ 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반면,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에 대한 요구는 학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현재 취업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 여성은 ‘출퇴근시간 유연화’ 가, 단독주택 거주 여성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에 대한 요구가 더 높았다. 생활권별로는 도시지역은 ‘출퇴근시간 유연화’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에 대한 요구가 더 높은 반면, 도농복합지역의 경우는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 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다음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 이 34.3%로 가장 높았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 (19.3%),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17.8%),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15.2%), 시차출퇴근제나 근무시간 선택제 등과 같은 ‘출퇴근시간 유연화’ (13.2%)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14〉 참조).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에 대한 요구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 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출퇴근시간 유연화’ 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6-1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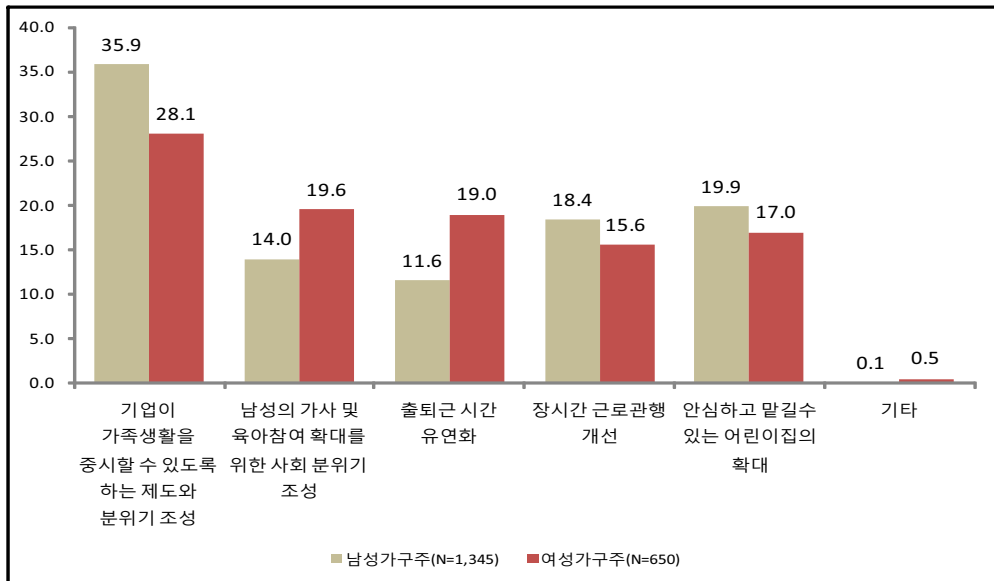
〈표 6-32〉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제도와 분위기조성	남성의가사 및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출퇴근시간 유연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안심하고 말길수 있는 어린이집 의 확대	기 타
계		2,302	31.4	18.0	18.4	12.8	18.9	0.4
연령별	19~30세미만	380	33.2	16.8	21.0	11.0	18.0	-
	30~40세미만	648	30.4	19.1	18.0	8.2	23.5	0.8
	40~50세미만	668	33.8	17.6	20.6	14.2	13.5	0.3
	50~65세미만	606	28.2	18.5	14.3	17.8	20.9	0.3
혼인 상태	미혼	422	35.6	16.8	18.7	12.2	16.4	0.3
	유배우	1,660	30.6	18.5	18.1	12.5	19.9	0.4
	사별/이혼	220	27.3	17.3	20.4	17.0	17.7	0.4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23.9	18.7	16.3	19.6	21.0	0.5
	고졸	984	34.1	17.1	17.1	14.5	16.9	0.3
	대졸이상	973	31.2	18.7	20.5	9.0	20.3	0.4
취업 여부	취업	1,208	30.8	18.8	17.5	15.1	17.2	0.5
	미취업	1,094	32.1	17.2	19.4	10.3	20.8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31.1	18.7	15.4	13.6	21.0	0.2
	아파트	1,268	32.1	18.2	19.3	11.1	18.9	0.4
	연립/다세대/기타	596	30.3	17.3	18.6	15.9	17.6	0.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7.8	19.9	18.1	13.1	20.6	0.4
	100~200만원미만	420	26.6	19.1	22.0	15.0	16.7	0.6
	200~300만원미만	520	32.7	15.9	17.4	15.0	18.8	0.2
	300~400만원미만	447	34.0	17.8	16.4	12.9	18.6	0.4
	400~500만원미만	294	32.9	15.5	18.3	12.1	20.8	0.3
	500만원이상	432	32.2	20.7	18.6	8.7	19.6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32.4	18.4	17.4	13.0	18.4	0.4
	외벌이	980	31.0	17.6	19.0	12.0	20.3	0.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33.3	17.1	17.1	11.7	20.1	0.6
	도시지역	1,379	30.4	18.5	19.1	13.5	18.3	0.2

〈그림 6-18〉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



라.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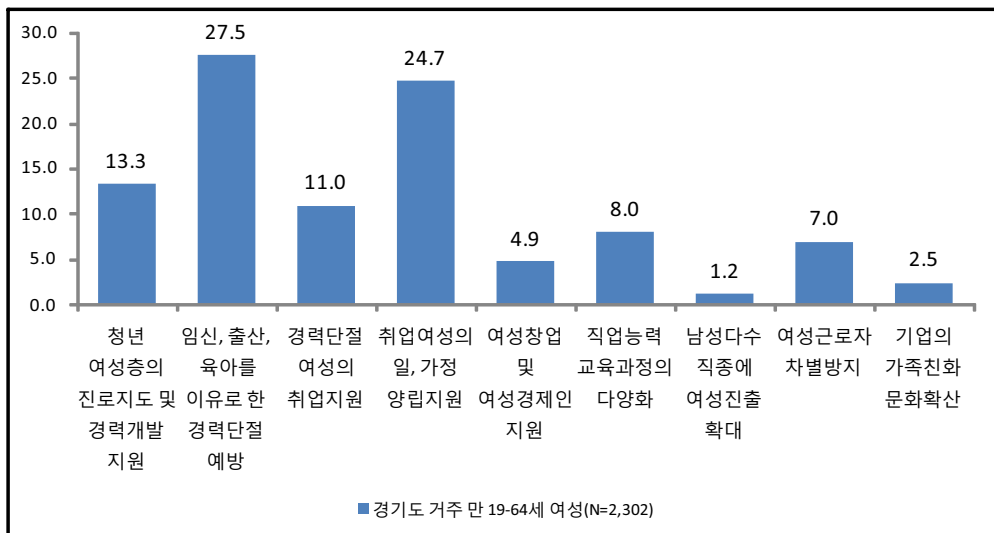
다음에서는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이다. 이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9개 정책을 제시하고 이들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이다¹⁷⁾. 다음과 같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중 우선순위(1순위)를 조사한 결

17) ①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정책은 학교(초·중·고·대학 등)에서의 직업 및 진로교육 내실화, 여학생을 위한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구직중인 청년여성을 위한 취업유망직종 교육훈련 사업, 취업중인 청년여성을 위한 경력개발 지원 사업 등을 의미한다. ②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예방 정책은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 금지 및 강력한 처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등 보육관련 인프라 확충 등의 사업을 포함한다. ③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정책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재취업이 용이한 직종개발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일자리에 대한 정보 제공, 취업알선 등이다. ④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은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 출퇴근시간 유연화, 남성의 가사 및 육아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등을 의미한다. ⑤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지원 정책은 여성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 창업 컨설팅, 창업자금지원, 여성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컨설팅, 여성기업 판로·마케팅 지원 등이다. ⑥ 직업능력교육과정의 다양화 정책은 여성구직자 특성에 적합한 직종개발 및 직업능력교육훈련을 다양하게 개발

과는 <그림 6-19>와 같다. 조사결과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예방’이 27.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24.7%),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13.3%),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이 11.0%의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외에도 ‘직업능력교육과정의 다양화’ (8.0%),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7.0%)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19〉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표 6-33〉과 같이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경우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지원’이 18.5%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예방’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수요를 나타냈다. 반면, 40대와 50대 여성의

운영하는 등의 사업이다. ⑦ 남성다수직종에 여성 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은 성별 직종 분리 해소를 위해 남성이 많은 직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실시하거나, 기계, 장비, 금속 등 남성 위주 훈련 직종에 여성 일정비용 참여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한다. ⑧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 정책은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 예방 사업,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의미한다. ⑨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 정책은 시차출퇴근제(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재택근무제 등 탄력근무제 확산, 일일 8시간 근무 후 정시에 퇴근해도 눈치가 보이지 않는 문화 조성 등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을 의미한다.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미혼이나 유배우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예방’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높은 반면, 사별/이혼의 경우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중졸이하의 경우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대졸이상의 경우는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높았다.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은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 미취업여성은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맞벌이가구 여성의 경우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 외벌이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예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를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 역시 1순위 응답과는 다르게 나타난다(<그림 6-20> 참조). 1순위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예방’이 2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나,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이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순위에 대한 응답결과와 달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직업능력교육 과정의 다양화’, 그리고 ‘여성근로자 차별방지’가 각각 29.2%로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청년 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복수응답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실은 1순위에서는 7.0%에 불과했던 ‘여성근로자 차별방지’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와 관련해 1순위로 중요한 사실은 아니지만 2순위, 3순위로는 응답률이 높은 필수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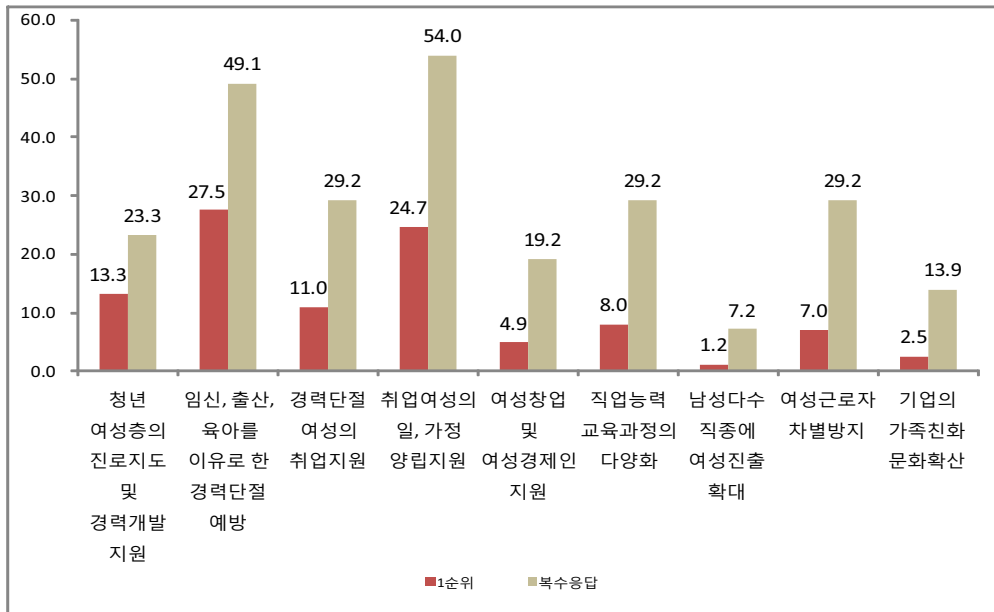
〈표 6-33〉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년 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 개발 지원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	직업 능력 교육 과정의 다양화	남성 다수 직종에 여성 진출 확대	여성 근로자 차별 방지	기업의 가족 친화 문화 확산
계		2,302	13.3	27.5	11.0	24.7	4.9	8.0	1.2	7.0	2.5
연령별	19~30세미만	380	18.5	34.8	5.5	19.5	2.3	7.4	1.6	8.4	2.1
	30~40세미만	648	8.4	37.1	8.6	28.3	3.5	6.0	0.5	4.5	3.2
	40~50세미만	668	12.9	19.5	14.6	26.4	6.8	9.8	1.3	6.5	2.1
	50~65세미만	606	14.5	19.9	14.4	23.3	6.4	8.5	1.4	9.1	2.4
혼인 상태	미혼	422	19.8	29.6	7.2	17.8	3.4	9.2	1.3	9.1	2.7
	유배우	1,660	12.0	28.3	11.5	26.1	4.4	7.3	1.3	6.4	2.6
	사별/이혼	220	7.3	16.4	16.6	30.0	11.5	9.8	0.3	6.7	1.4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10.7	24.8	15.3	24.7	5.6	7.0	1.0	9.3	1.5
	고졸	984	14.3	23.2	11.9	25.5	5.8	8.4	1.5	7.1	2.3
	대졸이상	973	13.1	32.5	8.9	23.8	3.7	7.8	0.9	6.2	3.0
취업 여부	취업	1,208	12.7	26.9	9.6	26.7	4.7	8.1	1.5	6.7	3.0
	미취업	1,094	13.9	28.1	12.6	22.4	5.0	7.8	0.8	7.4	2.0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11.4	28.0	12.4	19.8	6.3	9.3	1.1	8.3	3.4
	아파트	1,268	14.3	27.4	10.0	26.2	4.0	8.0	0.9	6.5	2.8
	연립/다세대/기타	596	12.6	27.3	12.3	24.9	5.7	6.9	1.8	7.3	1.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12.7	20.6	18.9	26.8	6.7	6.6	0.4	6.0	1.2
	100~200만원미만	420	11.8	23.8	13.8	26.6	6.2	8.9	0.8	7.0	1.1
	200~300만원미만	520	11.0	32.6	9.4	21.8	4.3	8.9	1.4	7.5	3.1
	300~400만원미만	447	14.6	25.4	10.1	26.0	4.7	7.5	1.8	5.9	4.2
	400~500만원미만	294	16.1	30.0	11.4	21.1	4.5	7.9	0.6	7.3	1.2
	500만원이상	432	14.4	28.5	7.6	26.4	3.9	7.0	1.4	8.1	2.8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14.1	25.8	8.6	28.6	4.0	7.6	1.2	6.7	3.4
	외벌이	980	12.7	30.9	12.3	21.7	4.4	8.0	0.9	7.2	2.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13.2	28.6	10.7	23.4	5.3	7.7	1.2	7.1	2.8
	도시지역	1,379	13.4	26.9	11.3	25.4	4.6	8.1	1.1	7.0	2.3

〈그림 6-20〉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단위 : %)



〈표 6-34〉와 같이 복수응답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의 경우 20대와 30대에서 높은 응답률을 나타냈다. 또한 30대와 40대 여성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지원’을 우선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대의 경우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를 우선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정도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취업여부별로 살펴보면,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은 ‘여성근로자차별방지’, ‘기업의 가족친화문화확산’, 미취업여성은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표 6-34〉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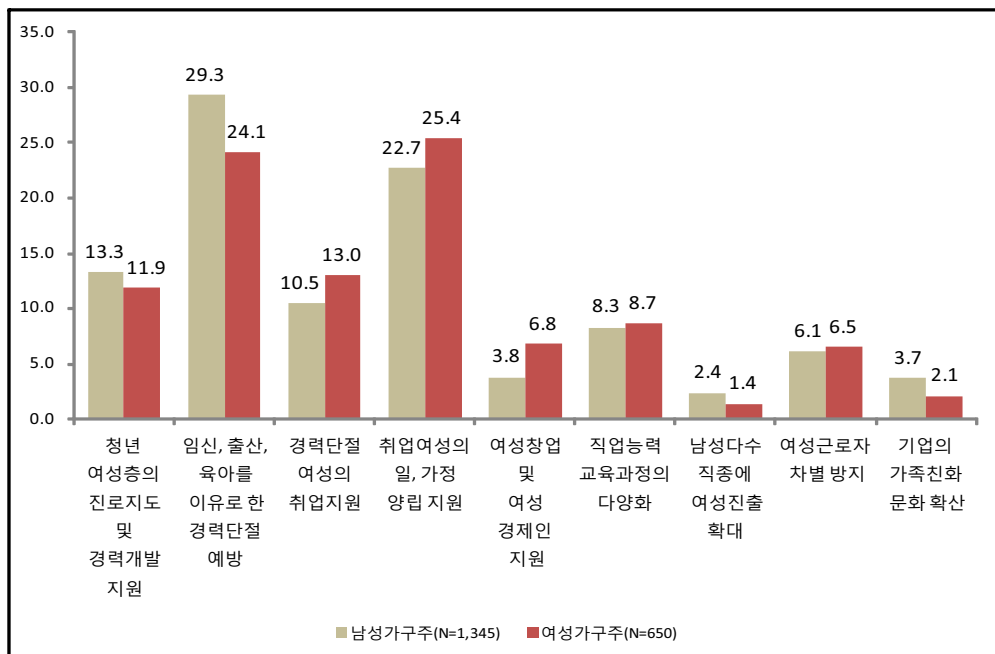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년 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 개발 지원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	직업 능력 교육 과정의 다양화	남성 다수 직종 에 여성 진출 확대	여성 근로자 차별 방지	기업의 가족 친화 문화 확산
계		2,302	23.3	49.1	29.2	54.0	19.2	29.2	7.2	29.2	13.9
연령별	19~30세미만	380	29.4	61.1	18.7	49.8	14.5	26.0	10.5	34.4	13.5
	30~40세미만	648	17.8	59.7	32.3	61.3	18.2	27.6	3.7	24.1	17.0
	40~50세미만	668	21.5	37.7	32.0	56.2	22.5	34.8	7.5	28.0	13.7
	50~65세미만	606	26.0	40.1	31.7	47.3	20.8	27.4	7.8	31.6	11.1
혼인 상태	미혼	422	31.9	55.4	20.4	48.5	17.0	27.5	10.5	34.6	14.1
	유배우	1,660	21.5	49.6	31.5	55.8	18.9	29.0	6.1	27.5	14.5
	사별/이혼	220	16.7	30.3	32.7	53.3	26.7	34.5	7.9	29.8	8.4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22.4	42.1	30.6	49.2	19.5	29.2	7.2	33.5	7.4
	고졸	984	23.9	43.3	28.9	54.8	22.5	28.9	7.6	30.4	12.5
	대졸이상	973	23.0	57.1	29.0	54.7	16.0	29.4	6.9	26.7	17.2
취업 여부	취업	1,208	22.6	47.2	27.2	55.3	19.6	30.8	7.7	31.3	15.5
	미취업	1,094	24.2	51.2	31.4	52.5	18.8	27.3	6.7	26.9	12.1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19.2	45.7	28.4	48.4	23.0	30.2	7.4	32.1	12.6
	아파트	1,268	24.2	51.1	30.1	56.5	16.6	29.5	7.0	27.6	16.1
	연립/다세대/기타	596	24.3	47.3	27.9	52.6	21.9	27.6	7.5	30.6	10.1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0.2	40.9	33.7	46.5	24.9	28.6	8.7	27.9	7.0
	100~200만원미만	420	21.1	43.0	32.9	55.3	22.4	28.6	6.9	27.8	9.5
	200~300만원미만	520	21.8	50.8	28.4	52.1	19.1	29.8	7.9	31.4	15.4
	300~400만원미만	447	25.0	48.4	28.7	55.8	19.0	30.3	7.5	28.9	12.8
	400~500만원미만	294	26.1	52.1	26.3	53.0	17.3	31.2	5.0	26.2	17.1
	500만원이상	432	25.0	55.2	27.0	57.0	15.3	26.6	7.3	31.1	18.1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23.9	48.8	27.0	58.1	18.2	30.4	5.7	29.8	17.5
	외벌이	980	22.9	52.3	32.0	52.7	17.6	27.6	6.1	27.5	12.8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22.8	47.9	27.7	53.2	20.3	28.9	6.6	30.6	12.8
	도시지역	1,379	23.6	49.7	30.0	54.4	18.6	29.3	7.6	28.5	14.4

다음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 1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결과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이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23.3%),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13.0%),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11.1%), ‘직업능력교육과정의 다양화’ (8.4%),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6.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15〉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21〉과 같다. 즉, 남성가구주의 경우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이 29.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에 대한 수요가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6-21〉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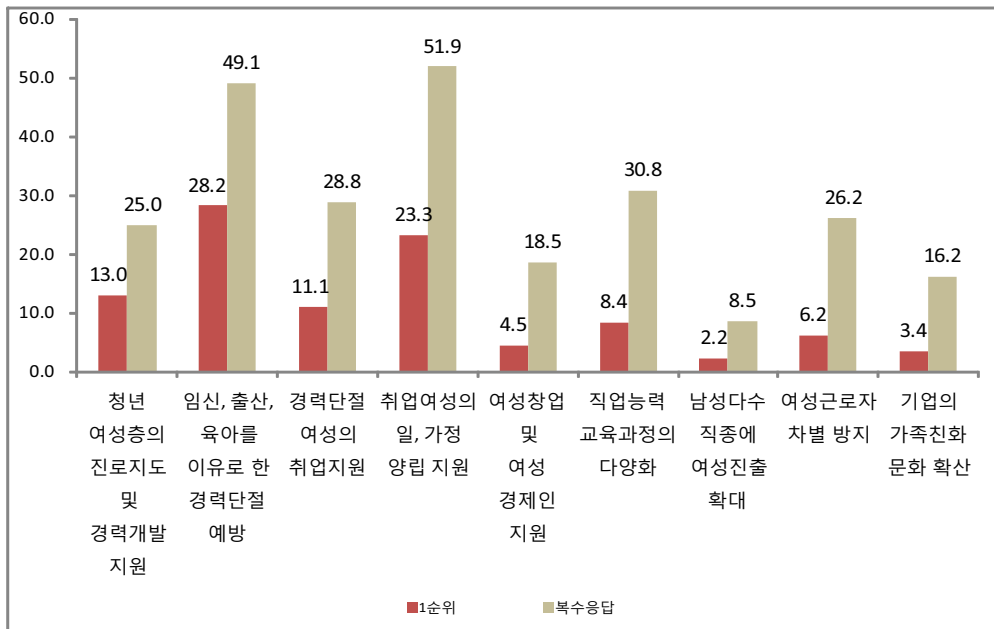


그러나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응답결과를 1순위, 2순위와 3순위를 합한 결과는 1순위만을 분석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가구주의 응답결과를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이 51.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이 49.1%, ‘직업능력교육과정의 다양화’ 30.8%,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28.8%,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26.2%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22〉 참조).

〈그림 6-22〉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



5.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본 절은 취약계층 여성복지와 관련한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 미혼모 지원 정책, 여성노인 지원 정책,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그리고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가.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35>와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경제적 자립지원’이 50.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자녀양육 지원’ (30.6%), ‘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11.0%),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7.7%)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반면, ‘경제적 자립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20대의 경우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이 10.2%로 평균보다 높은 사실을 주목할 만 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자녀양육지원, 유배우 및 사별/이혼의 경우는 ‘경제적 자립 지원’을 더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력별로도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양육 지원’이라는 응답이 높아졌다. 취업여성과 맞벌이 가구 여성의 경우 ‘자녀양육지원’을 미취업여성과 외벌이 가구 여성의 경우 ‘경제적 자립 지원’이 차지하는 응답이 다소 높았다.

다음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구주의 경우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 지원’이 53.3%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아동양육비, 방과후 돌봄 지원 등 ‘자녀양육 지원’도 30.6%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 외 ‘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9.8%),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6.1%)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17> 참조).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에 대한 응답결과를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지원’과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조금 높게 나타났다(<그림 6-2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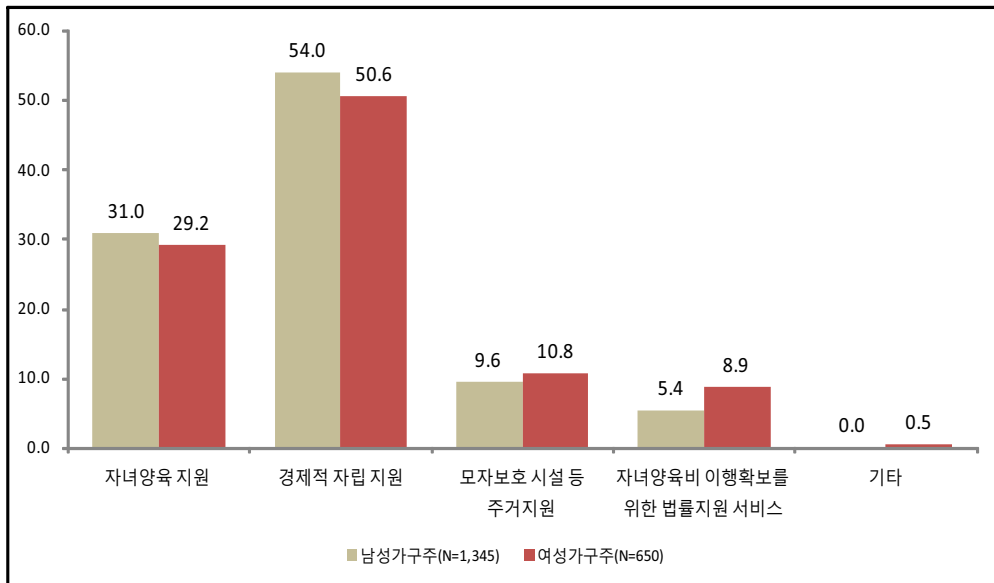
〈표 6-35〉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녀양육 지원	경제적 자립 지원	모자보호 시설 등 주거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기타
계		2,302	30.6	50.5	11.0	7.7	0.2
연령별	19~30세미만	380	35.0	41.8	12.6	10.2	0.3
	30~40세미만	648	35.6	47.8	10.9	5.5	0.2
	40~50세미만	668	29.6	53.4	10.0	6.7	0.3
	50~65세미만	606	22.7	57.4	11.0	8.7	0.2
혼인 상태	미혼	422	33.6	45.3	11.7	9.1	0.2
	유배우	1,660	29.9	52.0	10.3	7.5	0.2
	사별/이혼	220	29.0	50.8	14.6	5.1	0.5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19.2	57.8	12.9	9.6	0.4
	고졸	984	30.8	50.2	10.8	8.0	0.2
	대졸이상	973	34.1	48.3	10.7	6.7	0.2
취업 여부	취업	1,208	32.8	49.1	10.4	7.5	0.2
	미취업	1,094	28.2	51.9	11.7	7.8	0.3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27.7	49.3	11.8	10.6	0.6
	아파트	1,268	32.3	49.7	10.8	7.2	0.1
	연립/다세대/기타	596	29.1	52.8	11.1	6.6	0.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4.2	56.5	10.6	8.7	-
	100~200만원미만	420	26.6	53.3	12.5	7.5	-
	200~300만원미만	520	33.2	45.6	11.3	9.3	0.6
	300~400만원미만	447	33.3	50.4	10.1	6.0	0.2
	400~500만원미만	294	35.0	48.2	7.7	8.6	0.5
	500만원이상	432	28.3	52.4	12.8	6.5	-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33.7	48.7	10.1	7.3	0.2
	외벌이	980	28.3	52.7	10.4	8.4	0.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29.7	49.5	12.1	8.5	0.2
	도시지역	1,379	31.1	50.9	10.5	7.2	0.3

〈그림 6-23〉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



나. 미혼모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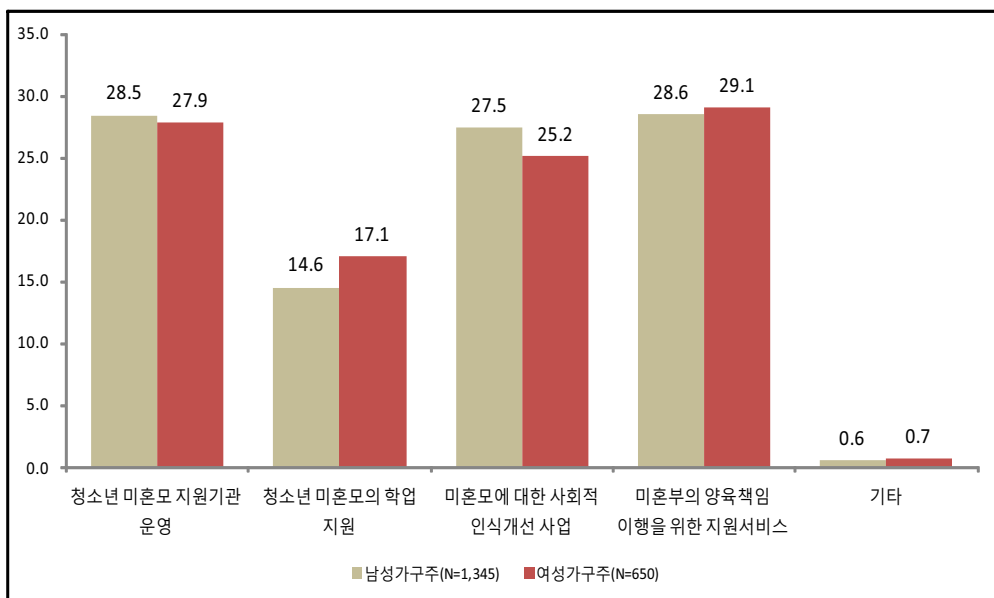
다음으로 〈미혼모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미혼모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36〉과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30.2%로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29.1%)도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24.4%),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15.8%)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조사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을 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나 사별/이혼의 경우 미혼에 비해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미혼모

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400만원대의 경우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 100만원 미만의 경우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높았다.

다음으로 가구주 조사결과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친자확인소송, 양육비 청구 등의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28.8%로 가장 높았고, 청소년 미혼모의 상황에 맞게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28.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도 27.0%이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위와 같은 미혼모 정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은 1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부표 18〉 참조). 〈미혼모 지원〉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지원서비스' 강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그림 6-24〉 참조).

〈그림 6-24〉 미혼모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



〈표 6-36〉 미혼모 지원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	기타
계		2,302	29.1	15.8	24.4	30.2	0.6
연령별	19~30세미만	380	30.0	19.5	25.3	24.7	0.5
	30~40세미만	648	30.2	13.8	22.6	33.1	0.3
	40~50세미만	668	29.6	15.0	24.2	30.9	0.3
	50~65세미만	606	26.4	15.5	25.6	31.3	1.1
혼인 상태	미혼	422	30.1	19.4	25.9	24.1	0.4
	유배우	1,660	29.5	14.2	23.7	31.9	0.6
	사별/이혼	220	23.1	18.9	25.6	31.9	0.6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23.1	14.7	30.5	31.1	0.7
	고졸	984	27.2	19.1	23.9	29.5	0.3
	대졸이상	973	32.8	12.9	22.8	30.6	0.8
취업 여부	취업	1,208	27.9	15.8	24.9	30.8	0.5
	미취업	1,094	30.3	15.7	23.8	29.6	0.6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26.4	17.3	28.9	26.3	1.1
	아파트	1,268	31.1	13.4	22.3	32.9	0.3
	연립/다세대/기타	596	26.6	19.6	25.6	27.4	0.7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5.6	12.7	31.7	28.7	1.2
	100~200만원미만	420	27.2	18.5	27.5	26.5	0.4
	200~300만원미만	520	28.4	18.5	21.0	31.0	1.1
	300~400만원미만	447	29.4	15.5	25.2	29.9	-
	400~500만원미만	294	34.2	13.4	22.8	28.8	0.8
	500만원이상	432	29.1	13.3	22.5	34.9	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27.7	16.1	24.8	30.8	0.5
	외벌이	980	31.7	13.5	23.1	31.1	0.6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30.1	15.8	23.8	30.2	0.1
	도시지역	1,379	28.5	15.8	24.7	30.2	0.8

다. 여성노인 지원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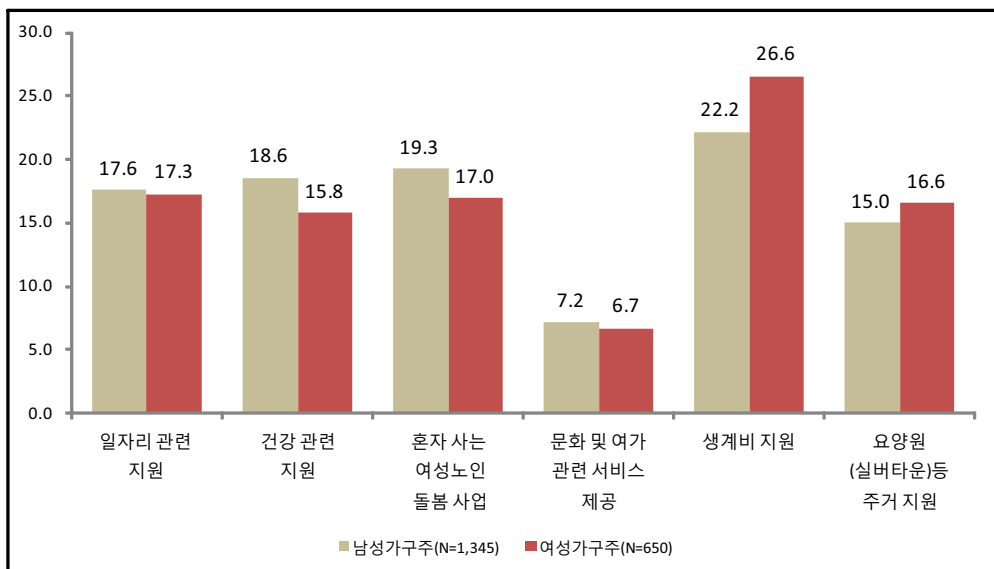
조사대상 여성응답자에게 <여성노인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는 <표 6-37>과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생계비 지원’이 2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혼자 사는 여성 노인 돌봄사업’ (17.9%), ‘요양원(실버타운)등 주거 지원’ (17.6%), ‘건강관련 지원’ (16.0%), ‘일자리 관련 지원’ (15.4%)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의 경우 ‘생계비 지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반면 ‘건강 관련 지원’ 정책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혼의 경우 ‘건강 관련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대나 미혼의 경우는 ‘혼자 사는 여성노인 돌봄 사업’의 필요성을 다른 집단에 비해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응답률은 낮았고, 반면 ‘혼자 사는 여성노인 돌봄 사업’과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 제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노인 지원 정책으로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 제공’은 다른 정책에 비해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한 다른 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인식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성응답자의 학력별로 살펴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 제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진다. 한편, 취업여성은 미취업여성에 비해 ‘일자리 관련 지원’이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건강관련 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500만원 이상 가구의 두 배에 가까웠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가구 여성은 ‘생계비 지원’을, 외벌이 가구의 여성은 ‘주거지원’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여성노인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저소득 여성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23.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사도우미 파견 등 ‘혼자사는 여성노인 돌봄 사업’ (18.8%), 여성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건강 관련 지원’ (18.0%),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취업알선, 직업훈련 프로그램운영 등 ‘일자리 관련 지원’ (17.5%), ‘요양원(실버타운)등 주거지원’ (15.4%)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문화 및 여가관련 서

비스 제공’은 7.1%로 나타났다(〈부표 19〉 참조). 〈여성노인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가구의 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6-25〉와 같이 여성가구의 경우 남성가구보다 ‘생계비 지원과 요양원(실버타운)등 주거지원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6-25〉 여성노인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



〈표 6-37〉 여성노인 지원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관련 지원	건강 관련 지원	혼자 사는 여성 노인 돌봄 사업	문화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제공	생계비 지원	요양원 (실버타운)등 주거 지원	기타
계		2,302	15.4	16.0	17.9	8.7	24.4	17.6	0.0
연령별	19~30세미만	380	10.0	15.2	23.0	10.5	25.1	16.2	-
	30~40세미만	648	18.9	11.9	17.1	7.6	25.0	19.5	-
	40~50세미만	668	15.8	15.4	18.5	8.9	25.9	15.4	0.2
	50~65세미만	606	15.9	21.8	13.7	8.1	21.4	19.0	-
혼인 상태	미혼	422	12.8	15.3	21.6	10.4	23.2	16.7	-
	유배우	1,660	16.3	15.5	17.5	8.5	24.1	18.0	0.1
	사별/이혼	220	15.2	21.6	12.4	5.8	28.5	16.5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17.0	21.8	10.9	6.3	25.6	18.4	-
	고졸	984	14.2	16.6	18.5	8.5	23.9	18.3	-
	대졸이상	973	16.1	13.6	19.6	9.6	24.4	16.6	0.1
취업 여부	취업	1,208	16.6	15.2	18.0	7.3	26.2	16.6	0.1
	미취업	1,094	14.1	16.9	17.8	10.2	22.3	18.7	-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14.9	16.6	18.0	6.7	25.9	18.0	-
	아파트	1,268	16.2	14.4	19.8	9.8	22.7	16.9	0.1
	연립/다세대/기타	596	14.1	19.0	13.9	7.7	26.7	18.6	-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15.3	22.3	12.6	8.6	25.4	15.9	-
	100~200만원미만	420	15.1	12.6	21.5	7.1	27.5	16.2	-
	200~300만원미만	520	15.8	16.6	16.7	8.7	24.4	17.9	-
	300~400만원미만	447	15.8	17.3	15.7	8.8	25.8	16.7	-
	400~500만원미만	294	14.4	18.7	17.7	7.9	23.4	18.0	-
	500만원이상	432	15.6	12.9	20.7	10.6	20.1	19.9	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16.3	16.3	17.7	7.4	26.3	15.9	0.1
	외벌이	980	14.7	15.0	17.9	10.6	22.3	19.5	-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13.3	14.4	18.8	8.7	26.0	18.9	-
	도시지역	1,379	16.6	16.9	17.4	8.7	23.5	16.8	0.1

라.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차별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여성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38>과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이 31.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일자리 관련 지원’ (27.2%), ‘건강 및 의료지원’ (19.3%),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 (9.4%), ‘기초교육 지원’ (7.8%), ‘그룹 홈 등 주거지원’ (4.3%)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사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경우는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이, 40대와 50대 이상의 경우는 ‘일자리 관련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혼 여성의 경우 ‘건강 및 의료지원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력별 차이도 나타났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일자리 관련 지원’이나 ‘건강 및 의료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과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 및 ‘그룹홈 등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주거형태별로는 단독주택 거주 여성은 ‘일자리 관련 지원’, 아파트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 여성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가구주를 대상으로 <여성장애인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여성장애인 도우미 및 차량지원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이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취업 가능한 직종개발,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취업알선 등 ‘일자리 관련 지원’ (29.3%)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리고 장애유형별 건강교육 및 운동프로그램개발 등 ‘건강 및 의료지원사업’ (20.8%)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외 기초교육지원(7.0%),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6.0%), 그룹홈 등 주거지원(4.5%)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부표 20> 참조).

〈표 6-38〉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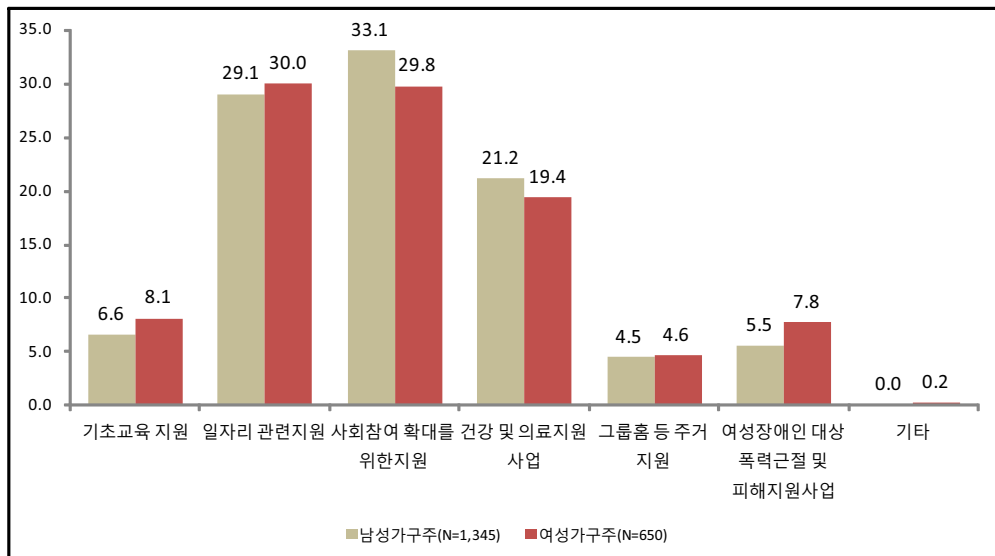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기초교육 지원	일자리 관련 지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건강 및 의료지원 사업	그룹홈 등 주거 지원	여성 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	기타
계		2,302	7.8	27.2	31.9	19.3	4.3	9.4	0.1
연령별	19~30세미만	380	8.1	25.5	31.9	18.5	2.7	12.9	0.3
	30~40세미만	648	7.6	24.7	37.1	14.5	5.8	10.1	0.2
	40~50세미만	668	6.7	29.7	31.3	19.8	4.6	7.9	—
	50~65세미만	606	8.9	28.4	27.0	24.4	3.9	7.3	—
혼인 상태	미혼	422	8.8	26.9	30.7	17.7	3.8	11.9	0.2
	유배우	1,660	7.6	27.0	33.0	19.2	4.3	8.8	0.1
	사별/이혼	220	7.2	28.8	26.6	23.5	5.9	7.9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8.9	29.3	25.4	28.6	1.5	6.4	—
	고졸	984	8.6	27.6	31.6	18.4	4.2	9.5	0.1
	대졸이상	973	6.7	26.1	34.3	17.1	5.4	10.2	0.1
취업 여부	취업	1,208	8.6	27.2	32.5	18.2	4.0	9.5	—
	미취업	1,094	7.0	27.2	31.3	20.4	4.7	9.2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7.9	28.7	27.2	22.8	3.8	9.5	—
	아파트	1,268	7.7	26.6	33.4	17.9	4.5	9.9	0.1
	연립/다세대/기타	596	8.1	27.4	32.2	19.6	4.4	8.2	0.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6.3	31.1	30.4	21.3	2.5	8.4	—
	100~200만원미만	420	7.4	30.0	27.6	21.3	5.3	8.4	—
	200~300만원미만	520	8.5	28.7	29.5	18.4	4.8	9.9	0.2
	300~400만원미만	447	6.4	23.1	39.7	19.1	3.8	7.9	—
	400~500만원미만	294	9.4	26.6	26.6	20.3	4.4	12.8	—
	500만원이상	432	8.4	25.6	35.2	17.0	4.2	9.4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9.2	26.4	31.7	18.9	3.9	10.0	—
	외벌이	980	6.8	27.8	32.6	19.0	4.2	9.5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7.3	25.9	30.3	21.2	4.9	10.4	—
	도시지역	1,379	8.1	27.9	32.8	18.2	4.0	8.8	0.1

한편, 이러한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응답결과를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6-26>과 같이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교육 등 ‘기초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사업’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그림 6-26〉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



마.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하였다.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39>와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도 ‘언어소통지원’이 2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19.8%), ‘일자리 관련 지원’(16.1%),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12.9%),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11.2%)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다

음과 같다. 우선, 조사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50대 이상은 ‘일자리 관련 지원’, 30대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결혼이주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40대와 50대 이상은 ‘언어소통지원’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일자리 관련 지원’, 유배우의 경우 ‘다문화 가족이나 자녀를 위한 사업’, 사별/이혼의 경우는 ‘언어소통 지원’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교육정도별로는 중졸이하는 ‘언어소통 지원’, ‘일자리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른 학력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 반면, 고졸과 대졸이상의 경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유형별로는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기타 거주 여성은 ‘언어소통지원’을, 아파트 거주여성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구소득별로는 200만원 미만 가구여성은 ‘언어소통지원’을, 200만원 이상 가족은 ‘다문화 가족이나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은 ‘일자리 관련 지원’, 도시지역은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를 대상으로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 한국어 교육, 번역·통역 등 ‘언어소통 지원’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국인 남편, 시부모 등 ‘다문화 가족(부부, 부모)을 위한 프로그램’ (21.1%), 결혼이주여성 적합 직종개발,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취업알선 등 ‘일자리 관련 지원’ (16.9%),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확대’ (11.9%),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11.2%), ‘결혼이주여성 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8.7%),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3.1%)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21〉 참조).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에 대한 조사결과를 가구의 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6-27〉과 같이 여성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언어소통 지원’, ‘일자리 관련 지원’, ‘결혼이주여성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강화’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남성가구의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가구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는 사실을 주목할 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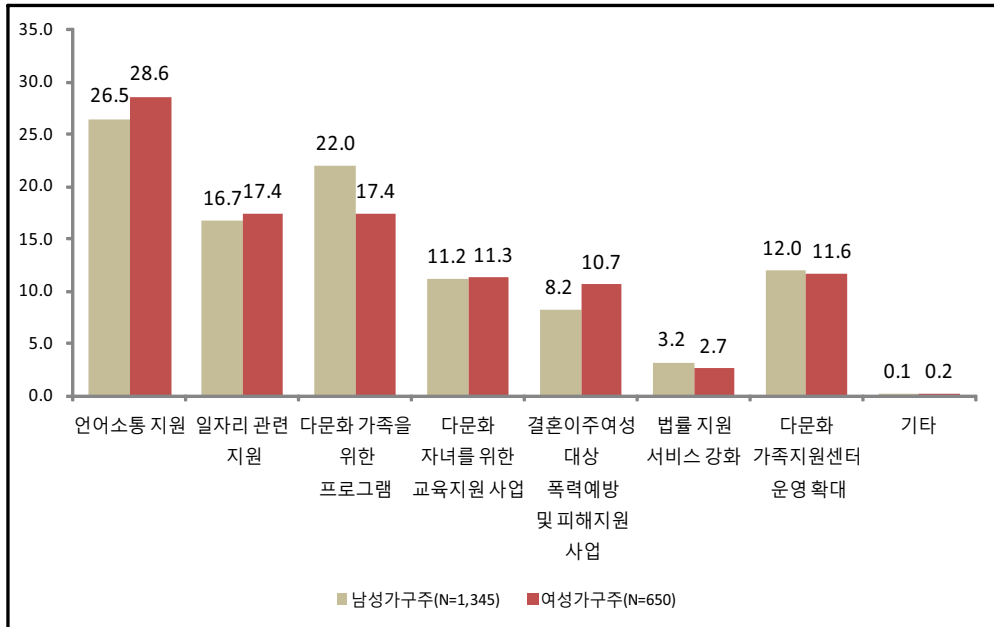
〈표 6-39〉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언어소통 지원	일자리 관련 지원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결혼이주 여성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다문화 가족지원 센터운영 확대	기타
계		2,302	26.6	16.1	19.8	11.2	9.9	3.4	12.9	0.2
연령별	19~30세미만	380	22.5	19.6	20.4	9.5	9.4	4.7	13.2	0.5
	30~40세미만	648	23.4	12.4	23.5	11.6	12.5	2.8	13.7	0.2
	40~50세미만	668	30.1	14.9	18.8	11.3	8.0	3.3	13.6	—
	50~65세미만	606	29.5	18.5	16.2	12.3	9.5	3.1	11.0	—
혼인 상태	미혼	422	23.3	20.8	18.2	8.4	10.9	4.9	12.7	0.7
	유배우	1,660	26.6	14.5	20.8	12.4	9.0	3.2	13.4	—
	사별/이혼	220	33.8	17.2	16.0	8.9	13.5	1.4	9.2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32.8	19.9	19.2	8.6	8.4	1.9	9.2	—
	고졸	984	26.9	15.5	19.1	12.3	9.3	3.4	13.3	0.2
	대졸이상	973	24.1	15.5	20.6	11.1	10.9	4.0	13.6	0.1
취업 여부	취업	1,208	26.3	16.6	20.5	11.4	10.2	2.9	11.9	0.1
	미취업	1,094	26.8	15.6	18.9	11.1	9.5	4.0	13.9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29.9	16.5	19.9	11.1	10.7	3.0	9.0	—
	아파트	1,268	24.1	16.5	19.8	11.9	9.8	3.1	14.7	—
	연립/다세대/기타	596	29.4	15.1	19.6	9.9	9.4	4.4	11.7	0.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36.5	16.8	16.5	7.8	14.9	2.3	5.3	—
	100~200만원미만	420	31.0	18.2	17.3	9.8	8.4	3.7	11.4	0.3
	200~300만원미만	520	24.5	14.0	21.5	12.6	9.6	3.3	14.3	0.2
	300~400만원미만	447	24.8	16.7	19.4	11.8	11.3	3.5	12.1	0.3
	400~500만원미만	294	23.1	16.9	20.8	10.3	7.7	4.7	16.5	—
	500만원이상	432	24.6	15.3	21.2	12.5	9.4	2.8	14.2	—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25.5	16.1	20.4	12.8	8.9	2.7	13.6	—
	외벌이	980	26.3	15.7	19.8	11.6	9.4	3.7	13.5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26.8	17.2	17.8	11.1	9.8	3.3	13.9	0.2
	도시지역	1,379	26.4	15.6	20.8	11.3	9.9	3.5	12.3	0.1

〈그림 6-27〉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



바. 취약계층 여성복지 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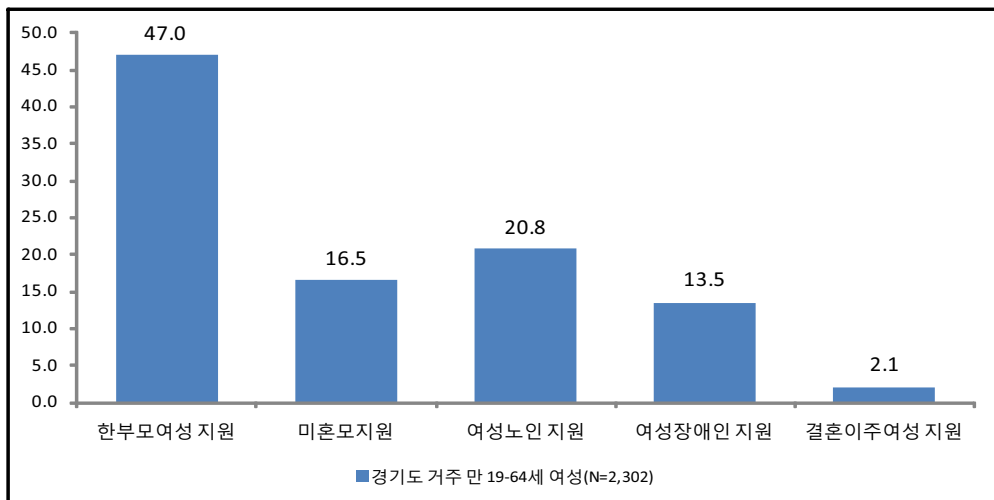
다음에서는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대상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이다.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정책 1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6-28〉과 같다. 여성응답자에 대한 조사결과도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여성지원’이 47.0%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여성노인 지원’ (20.8%), ‘미혼모 지원’ (16.5%), ‘여성장애인 지원’ (13.5%), ‘결혼이주여성 지원’ (2.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 6-40〉과 같이 1순위 조사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모 지원’ 이,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노인지원’ 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30대와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부모 여성 지원’ 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사별/이혼의 경우 ‘한부모 여성 지원’ , 미

혼의 경우 ‘미혼모 지원’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는 ‘여성노인 지원’이 현저하게 높은 반면, 고졸이상은 ‘한부모 여성 지원’이 현저하게 높은 차이를 보인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현저하게 낮은 집단인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여성노인 지원’과 ‘여성장애인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 하다.

〈그림 6-28〉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다음으로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결과를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그림 6-29〉와 같다. 1순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한부모 여성 지원’이 6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여성노인 지원’(44.5%), ‘미혼모 지원’(42.6%), ‘여성장애인 지원’(35.0%)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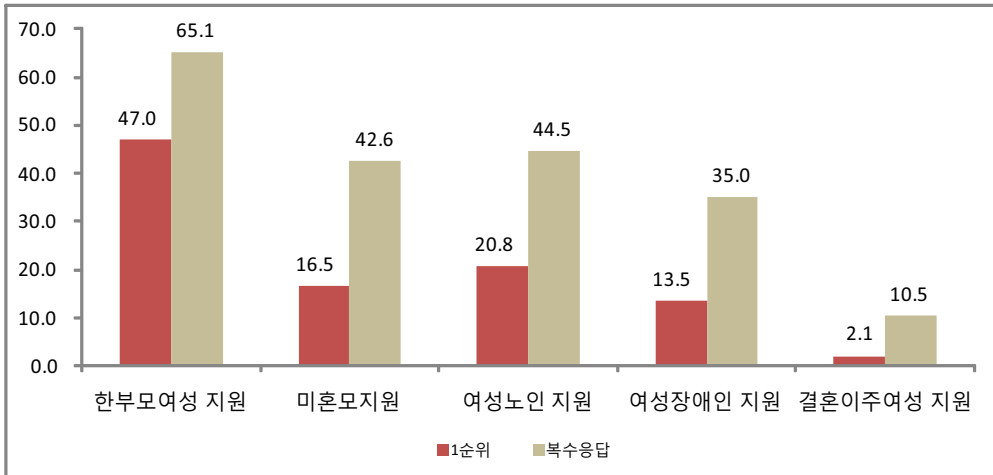
〈표 6-40〉 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부모 여성 지원	미혼모 지원	여성노인 지원	여성 장애인 지원	결혼이주 여성 지원
계		2,302	47.0	16.5	20.8	13.5	2.1
연령별	19~30세미만	380	41.5	25.5	14.9	15.0	3.1
	30~40세미만	648	50.2	18.5	15.1	13.7	2.5
	40~50세미만	668	53.5	12.9	20.8	11.5	1.4
	50~65세미만	606	41.3	10.6	32.0	14.3	1.8
혼인 상태	미혼	422	40.2	24.2	16.8	15.9	2.8
	유배우	1,660	47.9	14.9	22.4	12.9	1.9
	사별/이혼	220	56.9	9.8	19.0	12.3	2.0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38.6	10.4	32.9	16.8	1.2
	고졸	984	49.0	15.9	19.9	12.8	2.4
	대졸이상	973	47.9	19.0	17.8	13.1	2.2
취업 여부	취업	1,208	48.0	15.7	20.4	13.9	2.1
	미취업	1,094	45.9	17.4	21.3	13.1	2.2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44.2	14.4	23.0	16.2	2.1
	아파트	1,268	47.2	18.2	19.7	12.8	2.1
	연립/다세대/기타	596	48.6	14.3	21.8	13.1	2.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41.5	8.0	32.0	16.2	2.2
	100~200만원미만	420	50.3	12.5	23.0	11.1	3.1
	200~300만원미만	520	42.9	21.1	19.6	13.7	2.7
	300~400만원미만	447	48.6	14.8	19.4	15.4	1.9
	400~500만원미만	294	48.0	17.5	21.3	11.6	1.5
	500만원이상	432	49.0	19.5	16.5	13.8	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44.8	18.2	21.0	14.6	1.4
	외벌이	980	48.7	15.9	20.4	12.3	2.7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48.4	16.2	20.2	13.5	1.7
	도시지역	1,379	46.3	16.6	21.2	13.5	2.4

〈그림 6-29〉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단위 : %)



여성응답자의 복수응답결과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표 6-41〉과 같다. 1순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낮을수록 ‘미혼모 지원’ 이,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노인지원’ 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30대와 4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한부모 여성 지원’ 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도 사별/이혼의 경우 ‘한부모 여성 지원’ , 미혼의 경우 ‘미혼모 지원’ 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학력별 복수응답 결과는 1순위와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고졸 및 대졸이상은 ‘미혼모 지원’ 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사실을 주목할 만 하다. 가구소득별 복수응답 결과도 1순위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100만원 미만 가구에서는 ‘여성노인 지원’ 이 차지하는 비율이 더욱 높아진 반면, ‘미혼모 지원’ 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저하게 낮다.

다음으로 가구의 1순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부모 여성지원’ 이 47.2%로 과반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며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여성노인 지원’ (21.3%), ‘미혼모 지원’ (15.7%), ‘여성장애인 지원’ (13.0%), ‘결혼이주여성 지원’ (2.9%)의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22)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구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30〉과 같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여성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에 비해 ‘한부모 여성 지원’ , ‘여성노인 지원’ , ‘여성장애인 지원’ 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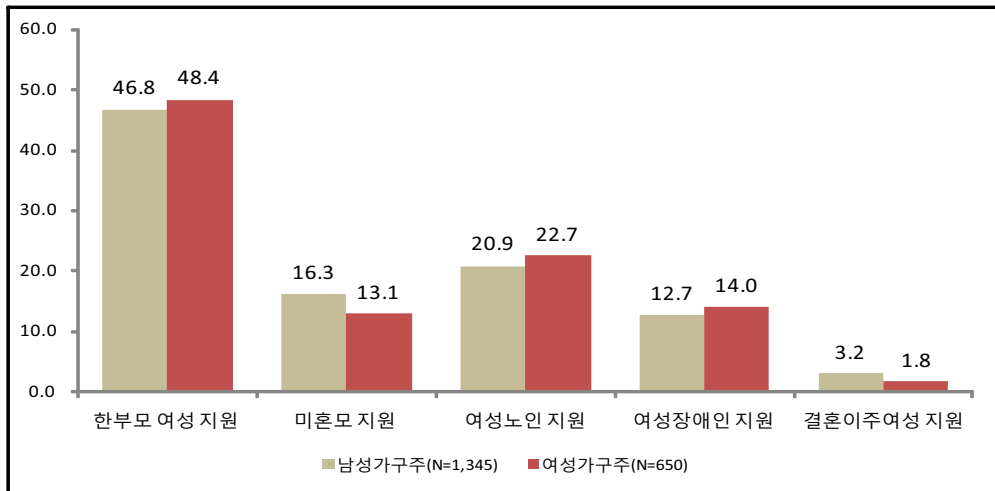
〈표 6-41〉 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부모 여성 지원	미혼모 지원	여성노인 지원	여성 장애인 지원	결혼이주 여성 지원
계		2,302	65.1	42.6	44.5	35.0	10.5
연령별	19~30세미만	380	59.1	53.9	35.6	35.6	13.3
	30~40세미만	648	70.0	50.1	35.2	32.9	10.7
	40~50세미만	668	69.2	39.2	45.7	35.1	8.9
	50~65세미만	606	60.5	28.5	60.6	36.7	9.6
혼인 상태	미혼	422	59.4	50.8	36.3	38.9	12.6
	유배우	1,660	65.8	41.3	46.4	34.1	10.2
	사별/이혼	220	73.3	32.1	49.7	32.5	7.7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60.4	29.4	59.2	39.2	8.4
	고졸	984	65.0	41.9	45.6	35.4	9.9
	대졸이상	973	66.7	47.4	38.7	33.3	11.8
취업 여부	취업	1,208	66.3	41.4	43.9	34.9	11.4
	미취업	1,094	63.8	43.8	45.2	35.1	9.5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62.4	38.5	47.2	37.7	12.2
	아파트	1,268	65.9	46.3	41.7	33.6	10.0
	연립/다세대/기타	596	65.3	37.6	48.4	36.1	10.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60.6	28.0	62.3	39.7	9.0
	100~200만원미만	420	66.1	36.5	49.2	34.9	11.3
	200~300만원미만	520	63.0	46.3	41.4	35.1	12.1
	300~400만원미만	447	66.4	40.7	43.5	38.0	9.2
	400~500만원미만	294	63.9	45.5	45.9	31.0	10.8
	500만원이상	432	68.0	50.1	36.0	32.7	9.7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63.2	43.9	43.4	37.4	10.5
	외벌이	980	66.2	43.4	44.4	32.9	10.6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66.5	42.4	41.4	36.2	9.9
	도시지역	1,379	64.3	42.7	46.1	34.4	10.8

〈그림 6-30〉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



6.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

본 절은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과 관련한 경기도민의 정책수요를 분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 예방 정책, 성폭력 예방 정책, 성매매 예방 정책,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가. 가정폭력 예방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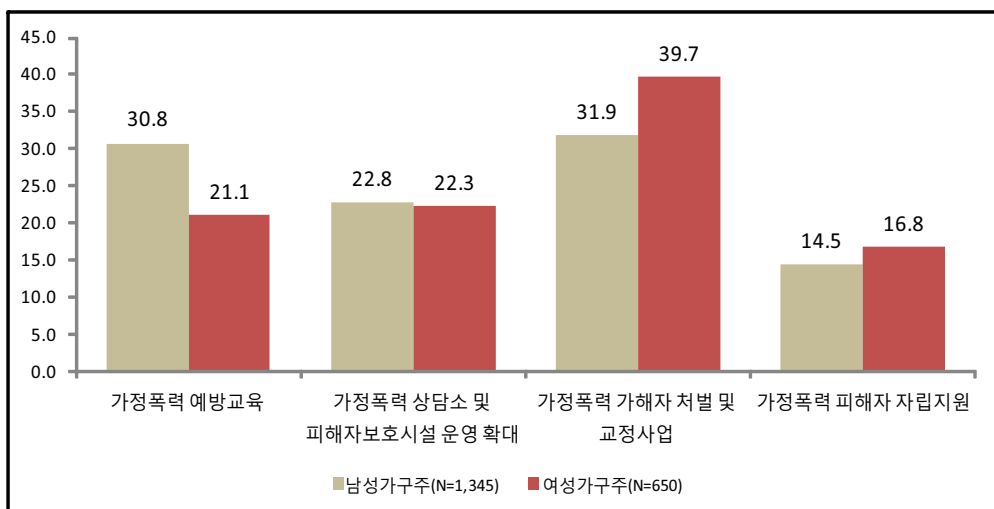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가정폭력〉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42〉와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도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이 37.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은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

영 확대’ 24.3%, ‘가정폭력 예방교육’ 21.6%,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16.8%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가정폭력 예방교육’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연령이 낮을수록, 대졸이상, 취업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활권별로는 도시지역 거주여성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을,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의 경우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

다음으로 가구주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이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28.7%로 나타났고,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22.7%,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15.0%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24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31>과 같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견된다. 즉,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가정폭력 가해자처벌 및 교정사업’ 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남성 가구주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을 더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1〉 가정폭력 예방 정책(가구주)

(단위 : %)



〈표 6-42〉 가정폭력 예방 정책(여성)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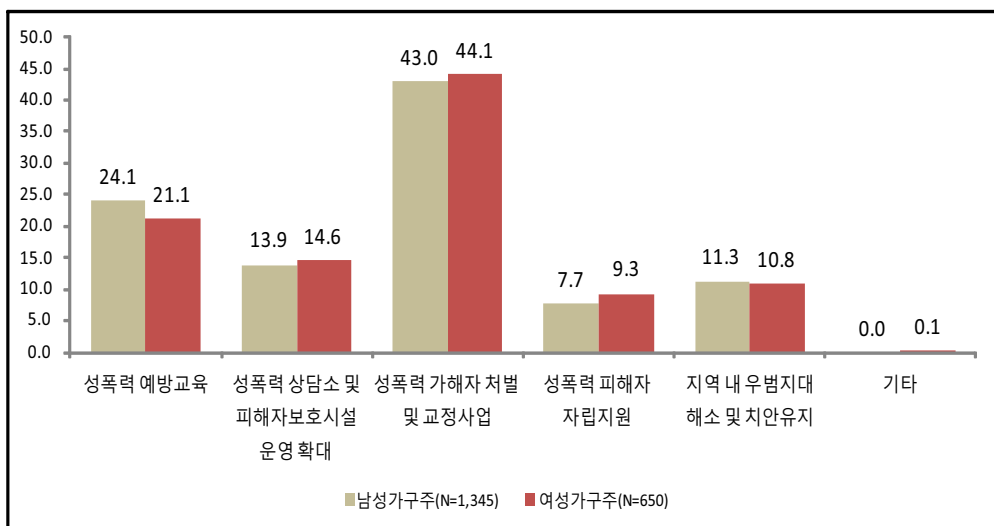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확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계		2,302	21.6	24.3	37.3	16.8
연령별	19~30세미만	380	15.0	25.8	40.7	18.4
	30~40세미만	648	18.9	23.8	39.9	17.3
	40~50세미만	668	24.5	24.5	33.6	17.4
	50~65세미만	606	26.7	23.4	35.6	14.2
혼인 상태	미혼	422	16.1	26.3	41.1	16.5
	유배우	1,660	23.3	24.1	35.8	16.9
	사별/이혼	220	22.1	21.1	39.7	17.2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28.2	21.3	35.6	14.9
	고졸	984	21.5	27.1	34.5	16.9
	대졸이상	973	19.6	22.6	40.5	17.3
취업 여부	취업	1,208	21.0	21.8	40.1	17.1
	미취업	1,094	22.3	27.1	34.2	16.4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25.6	24.3	34.5	15.6
	아파트	1,268	21.9	23.6	38.2	16.2
	연립/다세대/기타	596	18.1	25.8	37.3	18.8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3.6	26.4	34.1	15.9
	100~200만원미만	420	21.7	24.9	35.8	17.6
	200~300만원미만	520	21.4	24.9	34.6	19.0
	300~400만원미만	447	21.0	20.9	41.6	16.5
	400~500만원미만	294	21.1	26.1	39.6	13.2
	500만원이상	432	21.8	24.4	37.2	16.6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21.6	24.0	38.5	15.9
	외벌이	980	22.8	24.6	35.4	17.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22.6	24.8	33.7	18.9
	도시지역	1,379	21.0	24.1	39.2	15.7

나. 성폭력 예방 정책

다음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경기도민들은 성폭력 예방 정책의 경우도 가정폭력 예방 정책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43〉과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이 43.5%로 가장 높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이 21.3%,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확대’ 15.0%,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 유지’ 11.4%,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8.7%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예방정책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성폭력 예방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졌다.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이 낮은 집단, 취업여성, 아파트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 도시지역 거주여성이 상대 집단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32〉 성폭력 예방 정책(가구주)

(단위 : %)



〈표 6-43〉 성폭력 예방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 시설 운영 확대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	성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	기타
계		2,302	21.3	15.0	43.5	8.7	11.4	0.1
연령별	19~30세미만	380	14.6	13.3	50.2	10.7	11.2	-
	30~40세미만	648	18.2	14.8	45.1	9.0	12.8	0.2
	40~50세미만	668	23.6	17.6	41.7	7.0	10.0	0.2
	50~65세미만	606	28.0	13.7	38.0	8.4	11.8	0.1
혼인 상태	미혼	422	15.3	15.6	47.2	10.6	11.1	0.2
	유배우	1,660	22.4	15.4	42.7	7.8	11.6	0.1
	사별/이혼	220	28.1	10.2	40.5	10.2	11.0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27.7	11.4	42.4	8.8	9.5	0.2
	고졸	984	21.0	17.5	41.5	8.2	11.7	0.1
	대졸이상	973	19.6	13.7	45.8	9.1	11.8	0.1
취업 여부	취업	1,208	20.6	14.7	45.0	8.3	11.3	0.1
	미취업	1,094	22.2	15.3	41.8	9.0	11.5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23.2	17.8	38.3	9.9	10.4	0.4
	아파트	1,268	22.3	14.2	44.6	7.1	11.7	-
	연립/다세대/기타	596	18.0	14.7	44.6	11.0	11.6	0.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6.5	13.4	37.6	7.6	14.6	0.4
	100~200만원미만	420	22.0	15.9	44.5	9.0	8.5	-
	200~300만원미만	520	20.2	16.2	41.5	9.5	12.6	-
	300~400만원미만	447	18.6	13.1	46.4	10.3	11.3	0.4
	400~500만원미만	294	23.9	15.5	43.0	6.5	11.1	-
	500만원이상	432	21.0	14.9	44.7	7.6	11.9	-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21.3	14.4	44.5	8.0	11.6	0.1
	외벌이	980	20.4	16.6	43.1	9.0	10.9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24.3	15.1	41.0	7.1	12.4	0.1
	도시지역	1,379	19.8	14.9	44.8	9.5	10.9	0.1

다음으로 가구주 조사결과로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이 43.2%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 (23.5%),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14.1%),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 (11.2%),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8.0%)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25)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32>와 같이 큰 차이는 없었다.

다. 성매매 예방 정책

다음으로는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 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44>와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도 ‘성매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정사업’이 52.6%로 과반수를 차지했고, 다음은 ‘성매매 예방교육’ 17.5%, ‘성매매피해 여성 자립지원’ 12.4%, ‘성매매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11.4%, ‘성매매지역 및 시설 단속’ 6.1%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예방 정책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예방 정책에 대해서도 ‘성매매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연령이 낮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아파트 거주여성, 가구소득이 높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성매매수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사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를 조사한 결과 ‘성매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정사업’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성매매 예방교육’ 21.2%,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14.8%,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12.1%,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7.2%순으로 나타났다(부표 26)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33>과 같이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남성가구주는 성매매 예방교육을, 여성가구주는 성매매수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 사업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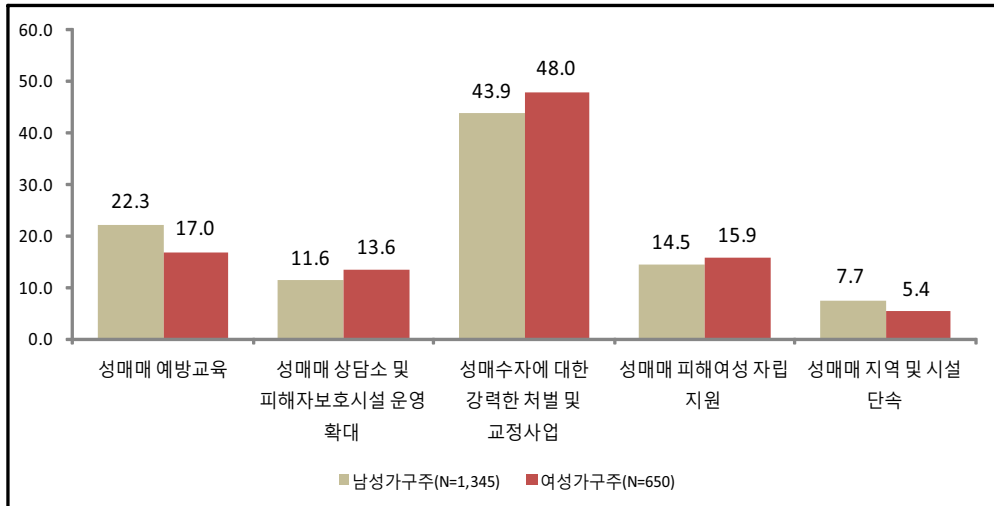
〈표 6-44〉 성매매 예방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성매매 예방 교육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 시설 운영 확대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정사업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기타
계		2,302	17.5	11.4	52.6	12.4	6.1	0.1
연령별	19~30세미만	380	11.3	11.3	57.1	12.1	7.8	0.3
	30~40세미만	648	15.6	9.1	57.3	13.4	4.5	-
	40~50세미만	668	19.2	11.2	52.9	10.8	6.0	-
	50~65세미만	606	22.8	14.1	43.4	13.2	6.4	0.1
혼인 상태	미혼	422	13.1	10.9	56.7	12.1	7.0	0.3
	유배우	1,660	18.4	11.1	52.4	12.0	6.0	0.0
	사별/이혼	220	20.8	14.8	44.3	15.8	4.4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21.8	11.6	44.9	15.1	5.9	0.6
	고졸	984	16.2	14.9	51.4	11.2	6.3	-
	대졸이상	973	17.3	7.9	56.3	12.6	6.0	-
취업 여부	취업	1,208	17.6	11.1	52.7	12.6	6.0	-
	미취업	1,094	17.3	11.8	52.5	12.1	6.2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19.5	12.3	46.5	13.6	7.9	0.2
	아파트	1,268	17.4	10.0	56.6	11.0	4.9	-
	연립/다세대/기타	596	16.2	13.7	48.3	14.3	7.2	0.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19.1	15.2	47.3	14.0	4.4	-
	100~200만원미만	420	17.1	12.9	48.5	13.4	8.1	-
	200~300만원미만	520	19.0	13.3	48.9	14.9	3.9	-
	300~400만원미만	447	15.6	9.4	54.6	12.4	7.9	0.2
	400~500만원미만	294	14.3	10.4	55.9	11.8	7.7	-
	500만원이상	432	19.4	8.9	59.0	7.9	4.5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16.7	10.0	54.6	12.1	6.4	0.2
	외벌이	980	17.6	11.5	53.9	10.9	6.0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17.6	10.8	52.6	12.5	6.4	0.1
	도시지역	1,379	17.4	11.7	52.6	12.3	5.9	0.1

〈그림 6-33〉 성매매 예방 정책(가구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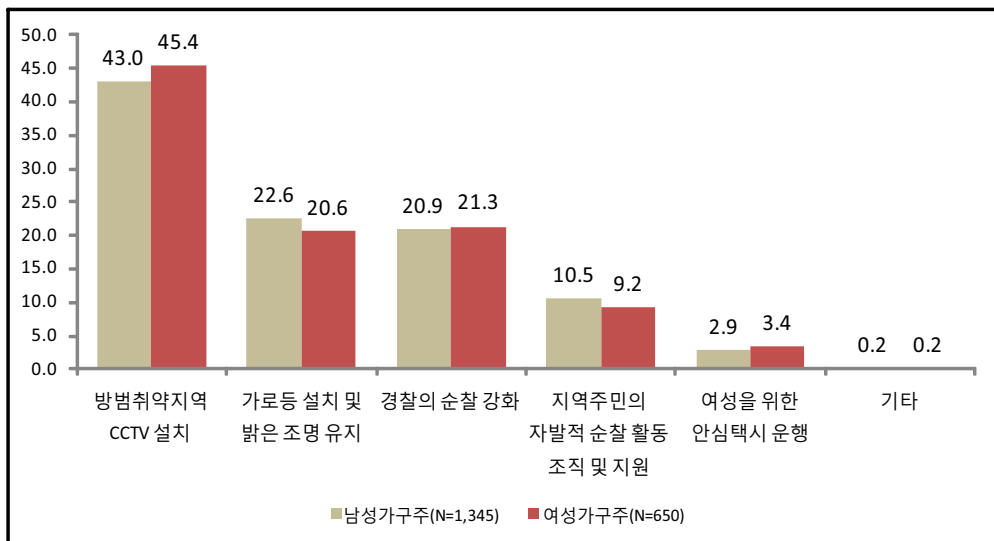
라.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

다음으로는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여성이 안전한 지역〉정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45〉와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도 ‘방법 취약지역 CCTV 설치’가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찰의 순찰 강화’ 21.7%,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20.9%,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9.0%,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 4.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응답자의 집 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경찰의 순찰 강화를, 30대 이상은 방법 취약지역 CCTV 설치를 더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 거주여성은 CCTV 설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은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은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도시지역 여성은 경찰의 순찰강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가구주 조사결과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가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22.2%, ‘경찰의 순찰 강화’ 21.0%,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10.2%, 여성전용택시 등 운영 지원의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 3.0%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27〉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34〉와 같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4〉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



〈표 6-45〉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경찰의 순찰 강화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	기타
계		2,302	43.8	20.9	21.7	9.0	4.5	0.1
연령별	19~30세미만	380	39.3	22.2	24.8	7.4	6.3	—
	30~40세미만	648	45.7	19.0	21.8	9.1	4.1	0.3
	40~50세미만	668	45.1	21.6	19.0	9.5	4.5	0.2
	50~65세미만	606	44.2	20.8	21.8	9.7	3.5	—
혼인 상태	미혼	422	40.1	22.2	23.4	8.1	6.2	—
	유배우	1,660	44.7	20.5	21.2	9.4	4.1	0.2
	사별/이혼	220	45.5	20.8	21.3	8.5	3.8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41.9	21.3	23.5	8.4	4.9	—
	고졸	984	46.0	19.8	21.8	7.4	4.7	0.2
	대졸이상	973	42.3	21.7	20.9	10.8	4.2	0.1
취업 여부	취업	1,208	43.5	21.2	21.4	9.5	4.3	0.1
	미취업	1,094	44.1	20.5	21.9	8.5	4.8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47.4	17.1	23.8	8.6	3.2	—
	아파트	1,268	44.0	20.9	20.6	9.9	4.5	0.1
	연립/다세대/기타	596	40.9	23.4	22.3	7.5	5.5	0.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41.5	21.4	26.1	5.6	5.5	—
	100~200만원미만	420	48.7	16.6	21.8	9.6	3.3	—
	200~300만원미만	520	43.7	21.8	21.2	9.3	3.4	0.6
	300~400만원미만	447	41.6	23.0	21.8	6.8	6.9	—
	400~500만원미만	294	44.0	19.9	19.4	11.5	5.2	—
	500만원이상	432	42.3	22.2	21.6	10.2	3.8	—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41.9	20.2	22.7	10.4	4.5	0.1
	외벌이	980	45.2	21.1	20.6	8.0	4.9	0.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42.4	23.6	19.1	9.4	5.5	—
	도시지역	1,379	44.5	19.4	23.1	8.8	4.0	0.2

마.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

다음은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의 수요를 조사한 결과는 <표 6-46>과 같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체계 구축’이 60.8%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차량, 보행 도로 분리’ 19.4%, ‘여성, 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 11.3%,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조성’ 8.0%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은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구축’, 20대와 30대는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조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성은 차량-보행 도로 분리, 미취업여성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조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여성은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 단독주택 거주여성은 ‘차량-보행 도로 분리’,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은 ‘여성, 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구주 조사결과 응답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가장 중심지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이 59.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차량 중심의 도로가 아닌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도로 설계 및 보안을 의미하는 ‘차량-보행 도로 분리(보행 안전성 확보)’ 21.3%, ‘여성·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 11.7%,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조성’ 7.4%순으로 나타났다(<부표 28> 참조). 조사결과를 가족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았는데, <그림 6-35>와 같이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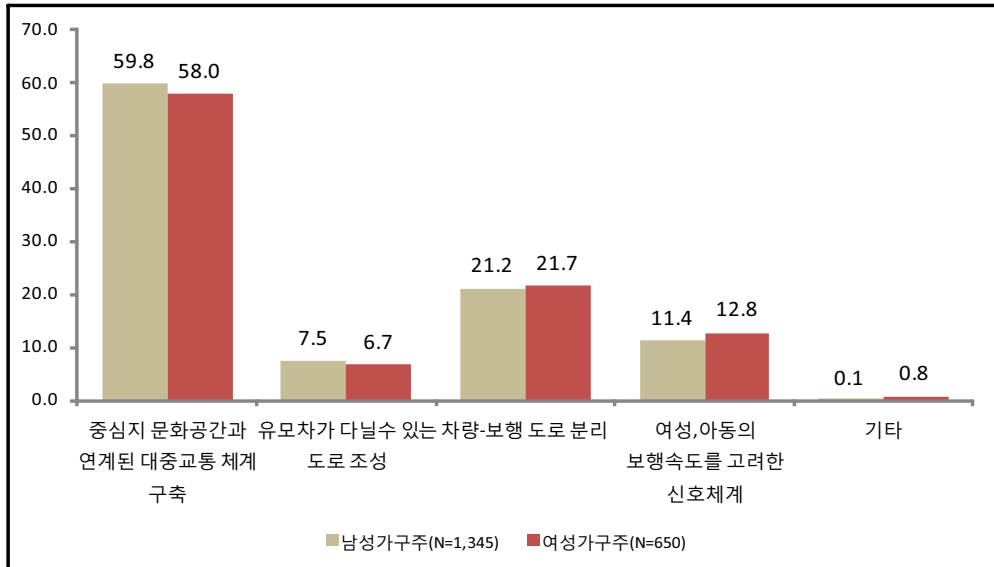
〈표 6-46〉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유모차가 다닐수있는 도로 조성	차량-보행 도로 분리	여성,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	기타
계		2,302	60.8	8.0	19.4	11.3	0.6
연령별	19~30세미만	380	57.8	10.3	18.2	12.7	1.1
	30~40세미만	648	58.7	11.1	19.8	10.1	0.3
	40~50세미만	668	64.1	5.1	20.7	9.6	0.5
	50~65세미만	606	61.9	5.9	18.5	13.1	0.6
혼인 상태	미혼	422	61.7	6.3	19.2	11.4	1.4
	유배우	1,660	60.9	8.7	19.7	10.4	0.4
	사별/이혼	220	57.7	7.2	17.5	17.6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54.8	6.3	22.3	16.4	0.2
	고졸	984	62.6	6.5	19.5	11.0	0.4
	대졸이상	973	60.9	10.0	18.3	9.9	0.9
취업 여부	취업	1,208	61.4	6.9	20.3	11.1	0.4
	미취업	1,094	60.1	9.3	18.4	11.5	0.8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55.4	7.2	23.4	13.8	0.2
	아파트	1,268	63.1	8.8	17.6	9.7	0.8
	연립/다세대/기타	596	59.6	6.9	20.3	12.8	0.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62.0	5.9	17.5	14.3	0.4
	100~200만원미만	420	59.9	7.8	20.2	11.5	0.6
	200~300만원미만	520	57.4	10.6	19.7	11.9	0.4
	300~400만원미만	447	59.4	8.0	20.7	11.9	-
	400~500만원미만	294	59.9	7.2	19.8	11.7	1.4
	500만원이상	432	67.0	6.7	17.4	8.0	1.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62.1	6.6	21.1	9.6	0.5
	외벌이	980	61.7	9.3	18.1	10.6	0.3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59.8	7.2	21.3	11.0	0.7
	도시지역	1,379	61.3	8.5	18.4	11.4	0.5

〈그림 6-35〉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



바.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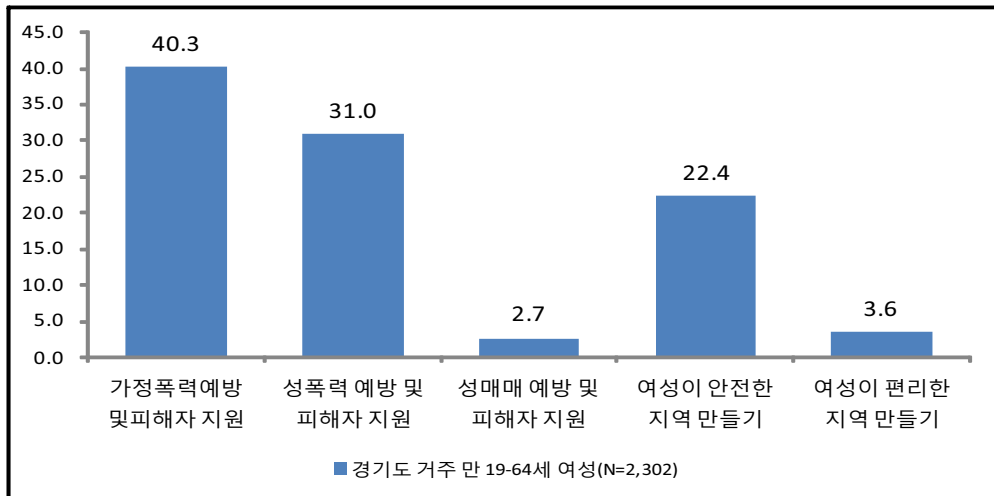
다음은 지금까지 분야별로 조사한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여성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1순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역시 〈그림 6-36〉과 같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31.0%,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22.4%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 3.6%,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7%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표 6-47〉과 같다. 연령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정책’, 연령이 낮을수록 ‘성폭력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낮아졌다. 또한 20대의 경우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의 필요성’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사별/이혼 여성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

이나 유배우자 여성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또한 ‘성폭력 예방 정책’ 에 대해서는 대졸이상보다 중졸이하 여성들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미혼의 경우는 ‘성폭력 예방 정책’ 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의 경우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정책’ 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6-36〉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표 6-47〉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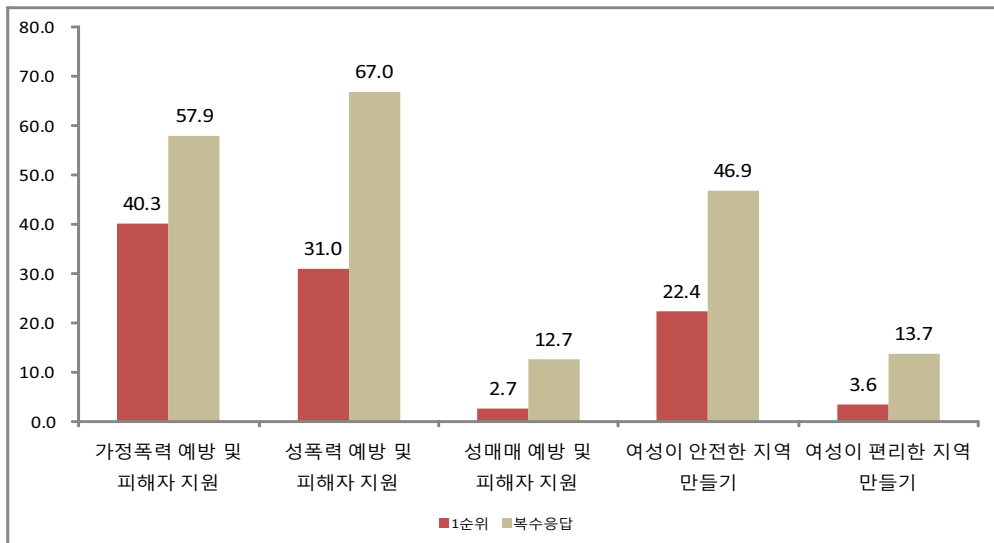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
계		2,302	40.3	31.0	2.7	22.4	3.6
연령별	19~30세미만	380	25.1	38.8	3.0	28.1	5.1
	30~40세미만	648	39.2	33.9	1.4	23.0	2.5
	40~50세미만	668	47.7	29.2	2.8	17.4	2.9
	50~65세미만	606	46.4	23.3	3.8	22.1	4.4
혼인 상태	미혼	422	28.0	37.4	2.8	25.9	6.0
	유배우	1,660	42.8	29.9	2.9	21.9	2.5
	사별/이혼	220	51.1	24.4	1.3	17.3	5.9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48.8	20.4	3.8	21.5	5.5
	고졸	984	41.1	31.3	2.8	21.9	2.9
	대졸이상	973	36.8	34.2	2.3	23.1	3.7
취업 여부	취업	1,208	39.7	32.5	2.9	21.1	3.8
	미취업	1,094	40.9	29.4	2.5	23.7	3.4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45.8	28.4	4.1	17.6	4.1
	아파트	1,268	37.7	32.6	2.5	23.7	3.5
	연립/다세대/기타	596	41.9	29.6	2.2	22.8	3.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51.2	19.7	1.7	19.9	7.5
	100~200만원미만	420	44.1	28.9	3.9	21.0	2.1
	200~300만원미만	520	38.7	34.2	3.3	21.5	2.3
	300~400만원미만	447	36.4	34.7	2.8	22.0	4.1
	400~500만원미만	294	40.0	28.1	2.3	25.8	3.8
	500만원이상	432	38.1	32.4	1.4	23.8	4.3
맛별이 여부	맛별이	799	39.0	32.3	3.3	22.2	3.3
	외별이	980	39.4	31.0	2.3	23.9	3.5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40.0	30.0	3.0	22.5	4.5
	도시지역	1,379	40.4	31.6	2.6	22.3	3.1

한편, <여성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2순위까지 조사한 복수응답 결과는 1순위와는 차이를 보였다. 즉, 1순위에서는 가정폭력 예방 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복수응답 결과는 <그림 6-37>과 같이 성폭력 예방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수응답 결과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표 6-48>과 같다.

〈그림 6-37〉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단위 : %)



다음으로 가구주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1순위로는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 44.8%로 다른 정책에 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8.6%,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22.2%로 나타났다. 이 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2.4%),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 (2.0%)에 대한 우선순위는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부표 29>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분석해 보았는데, <그림 6-38>과 같이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매매 정책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낮은 것은 경기도민들이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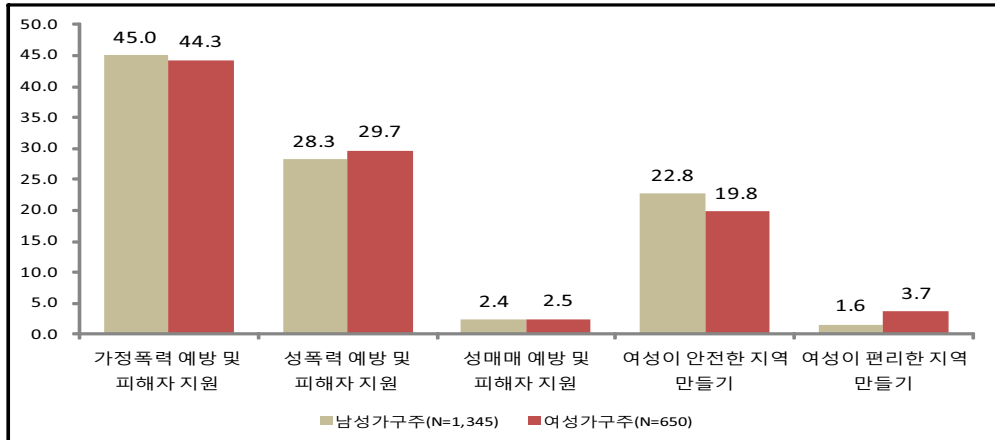
〈표 6-48〉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
계		2,302	57.9	67.0	12.7	46.9	13.7
연령별	19~30세미만	380	43.1	73.1	13.2	52.6	16.4
	30~40세미만	648	59.9	70.5	8.7	46.7	12.9
	40~50세미만	668	64.9	65.6	14.8	42.4	10.6
	50~65세미만	606	60.7	59.8	14.3	47.0	15.4
혼인 상태	미혼	422	48.3	70.3	13.2	51.2	15.5
	유배우	1,660	59.7	67.0	12.4	46.2	12.9
	사별/이혼	220	67.1	59.8	13.8	41.2	15.1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62.3	57.4	15.3	47.0	15.6
	고졸	984	58.4	66.6	14.2	45.9	13.4
	대졸이상	973	55.9	70.6	10.4	47.7	13.3
취업 여부	취업	1,208	58.3	68.1	12.6	45.2	14.5
	미취업	1,094	57.4	65.9	12.8	48.7	12.8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59.6	65.8	14.4	43.8	14.2
	아파트	1,268	56.3	69.0	10.8	48.6	13.4
	연립/다세대/기타	596	60.0	63.8	15.4	45.3	13.9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64.4	52.4	19.2	47.2	16.4
	100~200만원미만	420	60.8	65.7	15.1	45.3	11.9
	200~300만원미만	520	56.9	68.7	13.7	46.8	11.3
	300~400만원미만	447	55.3	69.5	12.4	47.9	13.0
	400~500만원미만	294	57.8	65.7	11.3	46.2	15.6
	500만원이상	432	56.0	71.1	7.7	47.5	16.4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55.6	68.7	13.0	45.9	15.2
	외벌이	980	56.8	66.8	11.7	49.7	12.9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56.1	68.4	11.1	45.6	15.6
	도시지역	1,379	58.8	66.3	13.6	47.5	12.6

〈그림 6-38〉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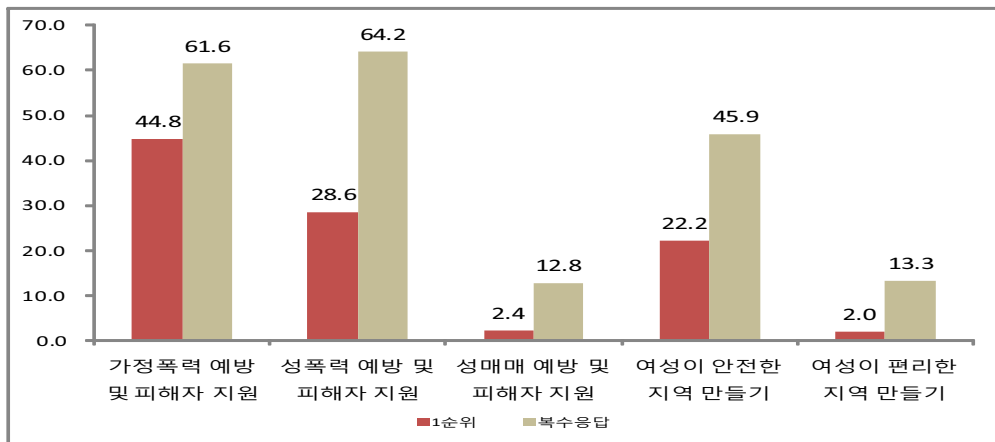
(단위 : %)



〈여성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조사와 관련하여 가구주를 대상으로 복수응답을 조사한 결과는 1순위와 차이가 보였다.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 64.2%로 1순위와 큰 차이를 보였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61.6%,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45.9%,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 13.3%,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12.8%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39〉 참조).

〈그림 6-39〉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



7. 여성건강 · 문화 · 여가 부문

본 절은 여성건강 · 문화 · 여가 부분과 관련한 건강상태,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여성의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정책,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가. 여성건강 정책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스스로의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을 ‘1점 매우 좋다~5점 매우 나쁘다’ 의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그 결과는 <표 6-49>와 같이 긍정적인 응답(매우 좋음 15.1%, 다소 좋음 35.5%)이 50.6%로 가장 높았다. 본인의 건강상태를 보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4.4%를 차지했으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다소 나쁨 12.4%, 매우 나쁨 2.6%)은 15.0%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경기도 여성들은 전반적으로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응답자의 집단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 > 유배우 > 사별/이혼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성이 미취업여성 보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여성이 도시지역 여성보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6-49〉 주관적 건강상태 인식(여성)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좋음	매우	다소	보통	나쁨	다소	매우	건강 정도 평점
계		2,302	50.6	15.1	35.5	34.4	15.0	12.4	2.6	3.48
연령별	19~30세미만	380	67.7	26.3	41.4	27.0	5.3	5.0	0.3	3.89
	30~40세미만	648	58.7	17.2	41.5	34.2	7.1	6.4	0.8	3.68
	40~50세미만	668	47.1	12.2	34.9	37.5	15.4	13.3	2.2	3.42
	50~65세미만	606	31.3	6.6	24.7	37.5	31.2	24.4	6.8	3.00
혼인 상태	미혼	422	67.1	24.4	42.7	26.6	6.4	5.7	0.6	3.84
	유배우	1,660	48.4	13.1	35.3	36.2	15.4	13.2	2.2	3.44
	사별/이혼	220	28.2	8.3	19.9	39.4	32.4	22.9	9.5	2.95
교육 정 도	중졸이하	345	21.0	4.6	16.4	42.3	36.7	27.8	8.9	2.80
	고졸	984	49.5	14.5	34.9	35.6	14.9	13.0	2.0	3.47
	대졸이상	973	61.3	19.1	42.2	30.6	8.0	7.0	1.1	3.71
취업 여 부	취업	1,208	52.1	16.1	36.1	35.9	11.9	11.1	0.8	3.55
	미취업	1,094	48.9	14.1	34.8	32.7	18.4	13.9	4.5	3.40
주택 형 태	단독주택	438	47.3	15.7	31.6	33.0	19.8	15.2	4.6	3.39
	아파트	1,268	53.0	15.8	37.2	34.5	12.5	10.8	1.7	3.55
	연립/다세대/기타	596	48.0	13.4	34.6	35.1	16.9	13.9	3.0	3.42
가 구 월 평 균 소 득	100만원미만	189	25.1	11.3	13.9	35.6	39.3	25.7	13.5	2.84
	100~200만원미만	420	43.8	14.7	29.1	36.1	20.1	16.3	3.8	3.35
	200~300만원미만	520	49.3	14.8	34.4	38.7	12.0	10.4	1.6	3.50
	300~400만원미만	447	56.8	13.5	43.2	32.2	11.1	10.3	0.8	3.58
	400~500만원미만	294	57.7	20.8	36.9	32.2	10.1	9.7	0.3	3.68
	500만원이상	432	58.7	15.5	43.2	30.8	10.6	9.5	1.1	3.63
생 활 권	도농복합지역	923	51.8	15.2	36.6	34.5	13.7	12.2	1.5	3.52
	도시지역	1,379	50.0	15.1	34.9	34.3	15.7	12.6	3.1	3.46

주 : 5점척도(5점 매우 좋다, 4점 다소 좋다, 3점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2점 다소 나쁘다, 1점 매우 나쁘다)

다음으로 <여성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조사하였다.¹⁸⁾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여성응답자 조사결과는 <표 6-50>과 같이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 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16.1%),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13.6%),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지원’ (13.5%),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 (12.7%), ‘여성특성화 질병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 (12.3%)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예상할 수 있듯이 여성들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연령이 낮을수록 높아졌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지원’, ‘여성특화질병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혼인상태별로도 여성들의 집단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여성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요구는 사별/이혼 > 유배우 > 미혼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성은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 미취업여성은 ‘여성특화병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 가구 여성의 경우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18) ①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는 임신부 및 아동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철분제),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 직장여성을 위한 임신·출산 지원 관련 야간 프로그램 운영, 미숙아 등 의료비 및 검사비 지원, 불임 부부 지원,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등을 의미한다. ②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지원은 폐경기 여성의 스트레스 상담 및 스트레스 관련 프로그램, 폐경기 여성 검진 서비스 지원, 폐경기 여성에 대한 종합적 건강 상담 프로그램 등을 의미한다. ③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검진 지원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암에 대한 조기검진 지원 등을 의미한다. ④ 여성특화질병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은 골다공증 등 여성이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 등을 의미한다. 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의미한다. ⑥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이다.

〈표 6-50〉 여성건강 지원 정책(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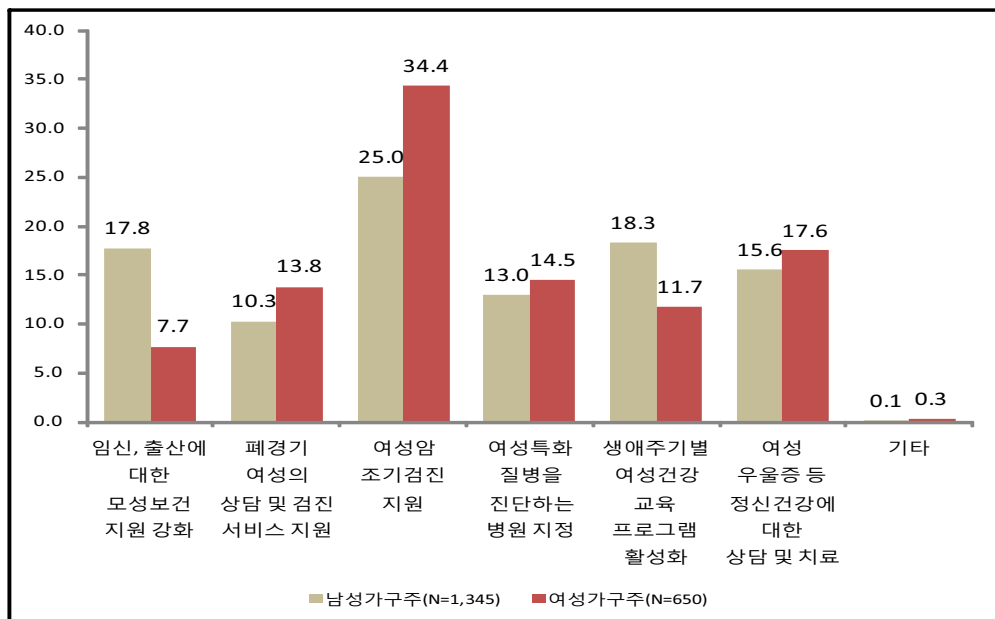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지원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	여성특화질환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	생애 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여성 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기타
계		2,302	12.7	13.5	31.6	12.3	13.6	16.1	0.2
연령별	19~30세미만	380	23.8	5.8	38.7	9.9	9.5	12.3	-
	30~40세미만	648	18.0	3.4	34.4	10.6	14.6	19.0	-
	40~50세미만	668	6.4	17.8	30.0	14.0	16.1	15.7	-
	50~65세미만	606	4.3	26.0	24.4	14.5	13.4	16.8	0.6
혼인 상태	미혼	422	18.1	5.2	39.5	11.7	12.0	13.6	-
	유배우	1,660	12.2	15.5	29.4	11.9	14.6	16.3	0.1
	사별/이혼	220	3.6	18.3	29.4	17.1	9.9	20.6	1.1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2.2	23.0	30.1	15.1	10.5	18.8	0.4
	고졸	984	11.2	14.4	31.4	14.1	11.7	17.3	-
	대졸이상	973	17.5	9.5	32.3	9.8	16.5	14.2	0.2
취업 여부	취업	1,208	12.3	13.8	34.9	10.4	13.0	15.5	0.1
	미취업	1,094	13.1	13.1	28.0	14.5	14.3	16.9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11.3	17.4	30.0	11.9	12.3	16.9	0.3
	아파트	1,268	14.1	12.8	30.7	11.6	15.0	15.7	0.2
	연립/다세대/기타	596	10.6	12.3	34.7	14.3	11.7	16.5	-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4.8	13.6	28.1	16.4	14.2	21.6	1.2
	100~200만원미만	420	11.8	14.4	35.0	14.4	9.4	14.9	-
	200~300만원미만	520	12.0	13.9	34.2	11.4	11.2	17.3	-
	300~400만원미만	447	14.6	13.1	30.4	12.0	16.9	13.0	-
	400~500만원미만	294	15.8	14.6	27.6	9.7	14.9	17.5	-
	500만원이상	432	13.5	11.7	30.7	11.9	16.0	15.9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11.5	14.4	35.3	10.2	13.7	14.9	-
	외벌이	980	15.1	14.0	27.3	11.4	15.3	16.8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12.6	12.2	30.0	11.9	14.6	18.9	-
	도시지역	1,379	12.7	14.2	32.5	12.6	13.1	14.7	0.2

다음으로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가구주 조사결과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이 2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16.9%),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16.0%),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15.7%), ‘여성특성화 질병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13.3%),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지원’(11.0%)순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책에 비해 응답률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부표 31)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40>과 같이 차이가 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반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를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6-40〉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



나. 문화 및 여가 관련 정책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평소 문화 및 여가 생활(TV 시청 제외)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항목은 5점 척도로 ‘1점 매우 만족~5점 매우 불만족’으로 구성되었다. <표 6-51>과 같이 긍정적인 응답(매우 만족 5.3%, 약간 만족 19.3%)은 24.6%, 보통 43.8%, 부정적인 응답(약간 불만족 24.0%, 매우 불만족 7.7%) 31.6%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볼 때 경기도 여성의 경우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경우보다 불만족하는 비율이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 > 40대 > 30대 > 50대 이상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혼 여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 및 여가 생활의 만족도도 낮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 여성의 만족도가 다른 소득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여성의 만족도가 낮았다. 생활권별로는 도시지역 거주 여성의 만족도가 도농복합지역 거주 여성보다 높았다.

다음은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불만족한 사람(④ 약간 불만족 또는 ⑤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을 대상으로 불만족 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는 <표 6-52>와 같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54.0%)가 과반수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시간이 부족해서’ (16.1%), ‘육아부담 때문에’ (11.4%), ‘문화 및 여가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8.3%),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7.4%), ‘문화 및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2.2%)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여가 생활에 불만족하는 이유를 여성응답자의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30대의 경우 ‘육아부담 때문에’, 40대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시간이 부족해서’와 ‘문화 및 여가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사별/이혼의 경우는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가 상대적으로 높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체력이나 건강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 가구여성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의 경우 ‘문화 및 여가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도시지역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6-51〉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여성)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¹⁾	만족	매우	약간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만족도 평점
계		2,302	24.6	5.3	19.3	43.8	31.6	24.0	7.7	2.91
연령별	19~30세미만	380	34.8	7.5	27.4	40.9	24.3	19.5	4.8	3.13
	30~40세미만	648	21.5	4.2	17.4	41.7	36.7	28.2	8.5	2.80
	40~50세미만	668	22.6	5.9	16.7	45.2	32.2	25.1	7.0	2.89
	50~65세미만	606	21.1	3.9	17.2	46.9	32.0	22.1	9.9	2.83
혼인 상태	미혼	422	34.4	8.2	26.1	43.6	22.0	17.7	4.3	3.16
	유배우	1,660	22.5	4.9	17.7	43.9	33.5	25.6	8.0	2.86
	사별/이혼	220	16.4	1.3	15.1	43.3	40.3	26.9	13.4	2.64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16.2	2.3	13.9	43.0	40.8	28.2	12.6	2.65
	고졸	984	21.5	5.2	16.3	46.3	32.2	24.5	7.7	2.87
	대졸이상	973	30.2	6.3	23.9	41.7	28.1	22.1	6.0	3.02
취업 여부	취업	1,208	23.4	4.3	19.1	41.2	35.4	27.3	8.1	2.84
	미취업	1,094	25.8	6.4	19.4	46.7	27.5	20.3	7.2	2.98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21.4	4.8	16.6	45.2	33.4	24.6	8.8	2.84
	아파트	1,268	26.6	5.9	20.7	42.9	30.5	23.8	6.7	2.95
	연립/다세대/기타	596	22.5	4.4	18.1	44.7	32.8	23.9	8.9	2.8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2.5	3.8	18.7	43.1	34.3	19.0	15.3	2.77
	100~200만원미만	420	22.1	4.9	17.2	46.2	31.7	22.9	8.8	2.87
	200~300만원미만	520	22.6	5.5	17.2	42.7	34.7	28.4	6.3	2.87
	300~400만원미만	447	20.8	3.6	17.2	48.2	31.0	23.1	7.9	2.86
	400~500만원미만	294	24.1	7.0	17.1	40.8	35.1	27.4	7.7	2.88
	500만원이상	432	34.3	6.5	27.8	40.6	25.1	20.5	4.6	3.1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23.0	5.8	17.2	42.0	35.0	24.3	10.7	2.83
	도시지역	1,379	25.4	5.0	20.4	44.7	29.9	23.8	6.1	2.94

주 : 1) 경기도 만 19~65세의 여성인구

〈표 6-52〉 문화 및 여가생활에 불만족한 이유(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시간이 부족 해서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문화 및 여가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문화 및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육아 부담 때문에	기타
계		745	54.0	16.1	7.4	8.3	2.2	11.4	0.6
연령별	19~30세미만	92	54.4	16.1	1.1	11.1	2.1	12.9	2.3
	30~40세미만	239	43.7	13.5	3.8	8.6	2.2	27.3	0.8
	40~50세미만	216	64.9	18.0	5.5	7.2	1.4	2.9	—
	50~65세미만	198	54.4	17.3	17.7	7.2	3.1	0.4	—
혼인 상태	미혼	93	55.2	23.6	2.1	15.9	3.1	—	—
	유배우	563	53.3	15.2	6.2	7.6	1.3	15.6	0.9
	사별/이혼	89	57.3	12.3	21.2	2.7	6.5	—	—
교육 정도	중졸이하	142	62.5	14.3	15.3	4.1	2.7	1.0	—
	고졸	324	58.6	16.1	8.2	8.8	1.4	7.0	—
	대졸이상	279	45.0	17.1	2.7	9.7	2.8	21.1	1.6
취업 여부	취업	434	56.9	24.2	2.4	7.8	1.1	7.6	—
	미취업	311	50.0	4.7	14.4	9.0	3.7	16.7	1.5
주택 형태	단독주택	150	51.6	17.8	8.9	12.8	3.4	3.9	1.7
	아파트	394	51.9	15.5	5.8	7.2	2.4	16.6	0.6
	연립/다세대/기타	201	59.9	16.2	9.3	7.2	0.9	6.4	—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68	59.6	8.7	21.8	2.9	4.9	—	2.1
	100~200만원미만	138	62.2	11.5	10.3	5.1	2.7	7.5	0.7
	200~300만원미만	185	52.4	17.0	2.5	10.2	0.7	16.0	1.3
	300~400만원미만	141	52.3	17.4	6.5	10.7	0.7	12.5	—
	400~500만원미만	102	53.9	19.2	4.2	8.9	3.7	10.1	—
	500만원이상	111	45.8	20.3	7.5	8.5	2.7	15.1	—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328	54.0	14.9	6.6	12.7	1.0	9.4	1.3
	도시지역	417	54.0	16.9	7.8	5.5	2.9	12.6	0.2

주 : 1) 경기도 만 19~64세의 여성인구 중 문화 및 여가생활에 불만족한 인구

다음으로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를 조사하였다.¹⁹⁾ 우선,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 6-53>과 같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가 54.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 (19.0%),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15.2%), ‘문화,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7.7%), ‘문화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 (3.2%)순으로 나타났다.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정책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30대 이상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성의 경우 미취업 여성에 비해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 프로그램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미취업 여성에 비해 문화생활에 있어 시간제약을 받는 취업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맞벌이 가구 여성도 마찬가지이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이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 확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19) ①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는 거주지역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를 의미한다. ②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는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적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를 의미한다. ③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프로그램 확대는 직장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프로그램 확대를 의미한다. ④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활용을 의미한다. ⑤ 문화 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은 지역 내에서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소모임 공간제공 등을 의미한다.

〈표 6-53〉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정책(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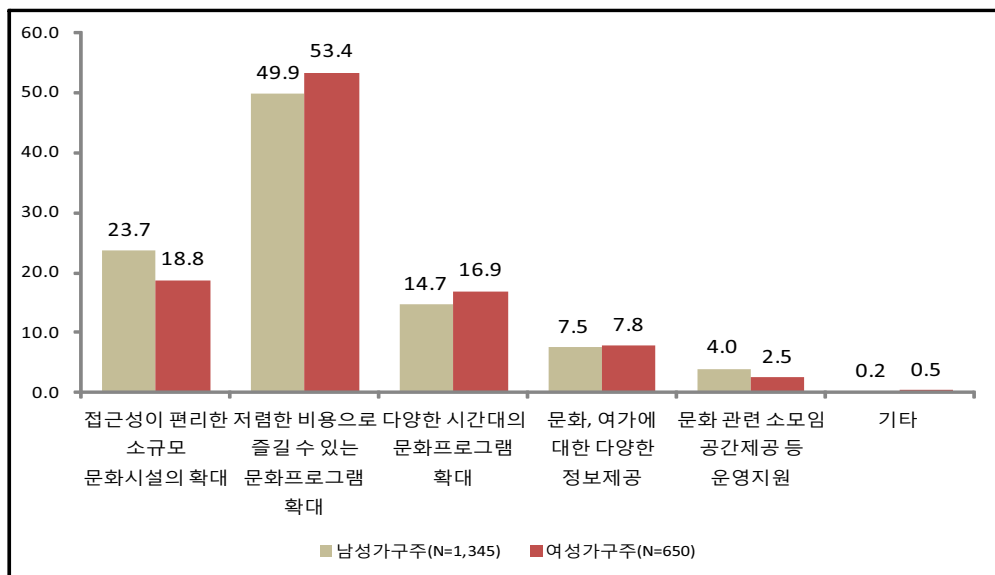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수있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 프로그램 확대	문화,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문화 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운영지원	기타
계		2,302	19.0	54.5	15.2	7.7	3.2	0.3
연령별	19~30세미만	380	22.7	45.8	18.7	8.9	3.7	0.3
	30~40세미만	648	18.1	55.5	16.4	7.5	2.0	0.5
	40~50세미만	668	17.7	58.7	13.8	6.2	3.5	0.2
	50~65세미만	606	18.1	56.4	12.6	8.7	3.8	0.4
혼인 상태	미혼	422	20.8	46.8	18.7	9.6	3.6	0.5
	유배우	1,660	18.5	56.8	14.5	7.0	3.0	0.3
	사별/이혼	220	18.5	55.8	12.6	8.5	3.9	0.6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15.9	56.4	13.5	9.6	4.7	-
	고졸	984	18.4	55.6	13.9	8.7	3.0	0.4
	대졸이상	973	20.6	52.8	17.1	6.2	2.9	0.4
취업 여부	취업	1,208	19.5	53.3	17.4	6.4	3.4	0.1
	미취업	1,094	18.4	55.8	12.9	9.2	3.0	0.6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22.9	49.1	16.3	8.6	3.1	-
	아파트	1,268	18.8	55.2	15.2	7.8	2.9	0.2
	연립/다세대/기타	596	16.7	56.8	14.6	7.0	4.1	0.8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11.4	61.1	13.2	10.2	3.5	0.6
	100~200만원미만	420	21.2	55.1	14.3	6.3	2.9	0.3
	200~300만원미만	520	22.4	53.7	14.3	7.2	1.8	0.6
	300~400만원미만	447	18.7	53.1	18.0	6.6	3.6	-
	400~500만원미만	294	21.1	50.5	13.8	12.0	2.6	-
	500만원이상	432	15.0	56.2	16.3	7.0	5.1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18.6	52.5	17.6	7.7	3.4	0.1
	외벌이	980	19.5	57.2	13.1	6.8	3.1	0.3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23.1	51.3	14.7	6.9	3.9	0.2
	도시지역	1,379	16.8	56.2	15.5	8.2	2.9	0.4

다음으로 여성의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가 50.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 (22.7%), ‘다양한 시대간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15.1%), ‘문화,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7.6%), ‘문화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 (3.7%)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32〉 참조).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그림 6-41〉과 같이 남성가구주는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 여성가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를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림 6-41〉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



다음으로 여성응답자에게 소득활동 이외에 평소 가장 참여하고 싶었던 사회활동을 조사한 결과이다. 〈표 6-54〉와 같이 여성응답자들이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으로는 ‘문화, 취미, 스포츠 관련 활동’이 5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이 19.5%로 높았다. 이외 ‘종교활동’ (8.1%), ‘학부모회 등 자녀교육 관련 활동’ (5.7%), ‘여성단

체, 시민단체 활동' (3.3%), '정치활동' (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없음' 이란 응답도 6.8%로 조사되었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로 사회활동에 대한 요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 이상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20대와 30대는 '문화, 취미, 스포츠 관련 활동'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경우 '종교활동'에 대한 요구가 대졸이상 여성의 두 배 이상으로 높았다. 또한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이 '없다'는 응답도 학력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낮은 여성의 경우 '종교활동'과 '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화, 취미, 스포츠 관련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법의 분류기준에 따라 여성응답자들이 평소 가장 받고 싶었던 교육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표 6-55>와 같이 '문화예술 교육'이 3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직업준비프로그램, 자격증 관련 프로그램 등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능력향상 교육'이 2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인문교양 교육' (13.2%), 검정고시, 보습 및 입시관련 프로그램 등의 '학력보완 교육' (10.0%), '시민참여 교육' (5.0%), '성인기초/문자해독 교육' (3.0%) 순으로 나타났고, '없음'이라고 응답한 대상자도 7.5%로 조사되었다. 여성들의 사회교육에 대한 요구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는 '문화예술교육', 30대는 '직업능력향상교육', 50대 이상은 '학력보완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학력보완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문화예술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가구소득별로는 100~5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여성들의 '직업능력향상교육'에 대한 요구가 100만원 미만 저소득 및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여성에 비해 높았다.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는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졌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은 '학력보완교육', 도시지역 여성은 '문화예술교육'이 다소 높았다.

〈표 6-54〉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¹⁾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 회 등 자녀 교육 관련 활동	여성 단체, 시민 단체 활동	정치 활동	종교 활동	문화, 취미, 스포츠 관련 활동	부녀회 등 지역 관련 활동	기타	없음
계		2,302	19.5	5.7	3.3	0.6	8.1	55.0	0.9	0.2	6.8
연령별	19~30세미만	380	16.7	2.6	2.4	0.8	2.9	69.1	—	0.3	5.3
	30~40세미만	648	16.4	9.5	2.8	0.6	4.0	60.7	0.3	0.5	5.2
	40~50세미만	668	22.5	8.1	3.4	0.2	9.7	49.0	0.9	—	6.1
	50~65세미만	606	21.7	1.5	4.7	0.7	15.1	43.5	2.3	0.2	10.4
혼인 상태	미혼	422	18.8	1.1	2.6	0.7	3.1	68.6	—	0.3	4.8
	유배우	1,660	19.4	7.3	3.2	0.6	9.3	51.9	1.2	0.2	6.9
	사별/이혼	220	22.0	3.7	6.0	—	11.0	45.6	0.7	0.6	10.4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18.8	1.4	4.3	0.2	15.8	41.9	3.1	0.4	14.1
	고졸	984	21.8	5.9	2.9	0.5	7.3	53.3	0.7	0.2	7.5
	대졸이상	973	17.5	6.8	3.5	0.7	6.4	60.9	0.4	0.2	3.7
취업 여부	취업	1,208	19.5	5.0	3.6	0.6	7.1	56.7	1.0	—	6.5
	미취업	1,094	19.5	6.4	3.1	0.5	9.2	53.2	0.8	0.5	7.0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20.8	4.1	3.8	0.9	12.2	46.9	1.5	0.2	9.5
	아파트	1,268	20.3	6.4	3.1	0.7	6.3	57.5	0.7	0.3	4.8
	연립/다세대/기타	596	16.8	5.2	3.5	—	9.0	55.4	0.9	0.2	9.0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1.4	2.2	3.5	—	15.3	41.9	1.7	1.4	12.6
	100~200만원미만	420	19.8	4.3	3.9	0.8	10.0	49.7	1.0	—	10.4
	200~300만원미만	520	21.3	6.9	2.9	—	9.3	53.1	0.5	0.2	5.8
	300~400만원미만	447	18.2	6.7	3.4	1.2	5.0	57.8	0.8	—	6.9
	400~500만원미만	294	16.2	5.2	3.9	—	7.2	60.9	1.5	0.3	4.7
	500만원이상	432	19.7	6.2	2.7	1.0	5.4	61.0	0.6	0.2	3.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20.7	4.3	3.7	0.2	7.1	54.6	1.6	0.4	7.3
	도시지역	1,379	18.8	6.4	3.1	0.8	8.6	55.2	0.5	0.1	6.5

주 : 1) 경기도 만 19~64세의 여성인구

〈표 6-55〉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¹⁾	학력보완 교육	성인기초 /문자 해독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기타	없음
계		2,302	10.0	3.0	22.0	13.2	39.0	5.0	0.3	7.5
연령별	19~30세미만	380	8.6	3.1	23.4	11.6	46.5	0.6	0.3	6.0
	30~40세미만	648	8.4	2.5	29.3	12.4	38.0	3.9	0.3	5.3
	40~50세미만	668	9.3	1.2	21.3	14.2	39.0	6.1	0.5	8.4
	50~64세미만	606	13.5	5.2	14.0	14.2	33.7	8.7	0.3	10.4
혼인 상태	미혼	422	8.0	3.6	24.4	12.2	44.9	1.7	—	5.2
	유배우	1,660	9.6	2.6	21.9	13.3	38.5	5.9	0.5	7.7
	사별/이혼	220	17.5	4.0	17.5	14.2	29.0	5.6	—	12.3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22.8	8.1	15.3	6.6	24.3	8.9	0.2	13.8
	고졸	984	10.1	2.2	25.8	13.2	33.6	5.2	0.3	9.6
	대졸이상	973	5.6	2.0	20.6	15.3	49.0	3.5	0.4	3.6
취업 여부	취업	1,208	10.0	2.9	21.3	12.1	42.0	4.9	0.2	6.7
	미취업	1,094	9.9	3.1	22.8	14.4	35.7	5.1	0.6	8.5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11.6	3.9	17.2	16.7	33.0	7.4	0.2	10.0
	아파트	1,268	8.8	2.5	22.8	13.3	42.0	4.4	0.4	5.9
	연립/다세대/기타	596	11.3	3.3	23.8	10.5	36.9	4.6	0.3	9.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12.7	5.0	16.9	15.8	28.4	9.4	—	11.8
	100~200만원미만	420	12.8	5.5	27.3	10.4	29.6	6.4	0.7	7.3
	200~300만원미만	520	10.4	2.1	22.5	13.8	37.2	5.0	0.1	9.0
	300~400만원미만	447	9.8	1.3	24.2	12.5	41.5	2.2	0.3	8.3
	400~500만원미만	294	7.9	1.9	22.5	13.0	43.3	6.0	—	5.3
	500만원이상	432	7.3	3.1	16.1	14.7	49.3	3.8	0.7	5.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12.6	3.3	21.9	11.0	37.5	5.5	0.2	7.9
	도시지역	1,379	8.5	2.8	22.1	14.3	39.8	4.7	0.4	7.3

주 : 1) 경기도 만 19~64세의 여성인구

8. 돌봄 부문

본 절은 돌봄 부문과 관련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아동·청소년 정책,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가. 보육 정책

여성응답자 전체 2,302명 중에서 취학 전 자녀가 없는 여성이 84.7%,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이 15.3%로 나타났다. 이 중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들에게 현재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는 <표 6-56>과 같이 ‘양육비용의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52.4%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자녀를 믿고 맡길 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21.3%),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12.6%), ‘직접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8.3%), ‘양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5.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여성응답자의 집단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를 믿고 맡길 시설을 찾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양육비용의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성은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을, 미취업여성은 ‘양육비용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었다. 생활권별로는 도시지역의 경우는 ‘직접자녀를 돌볼 시간의 부족’, 도농복합지역의 경우는 ‘양육비용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표 6-56〉 자녀 양육의 어려움(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¹⁾	직접자녀를 돌볼시간이 부족하다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자녀를 맡길 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양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양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계		363	8.3	12.6	21.3	52.4	5.4
연령별	19~30세미만	38	5.1	10.5	23.7	50.2	10.5
	30~40세미만	294	8.6	13.6	21.3	51.3	5.0
	40~50세미만	31	10.8	5.8	16.5	66.9	—
	50~65세미만	—	—	—	—	—	—
혼인 상태	미혼	—	—	—	—	—	—
	유배우	359	8.4	12.7	21.5	51.9	5.5
	사별/이혼	4	—	—	—	100.0	—
교육 정도	중졸이하	8	—	—	—	100.0	—
	고졸	118	9.3	11.6	15.6	56.7	6.8
	대졸이상	237	8.2	13.5	24.9	48.6	4.9
취업 여부	취업	155	17.7	16.0	23.6	41.3	1.4
	미취업	208	1.5	10.1	19.6	60.5	8.3
주택 형태	단독주택	40	10.0	5.7	26.2	50.8	7.2
	아파트	253	8.3	13.3	22.6	51.2	4.5
	연립/다세대/기타	70	7.3	14.0	13.7	57.6	7.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6	—	—	—	100.0	—
	100~200만원미만	47	—	11.9	19.1	65.0	4.1
	200~300만원미만	100	4.1	7.0	20.0	64.1	4.8
	300~400만원미만	81	12.6	8.8	25.7	46.2	6.7
	400~500만원미만	45	6.5	10.7	17.8	50.7	14.3
	500만원이상	84	15.5	25.1	23.4	34.8	1.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151	3.8	12.4	22.7	55.0	6.1
	도시지역	212	11.2	12.7	20.4	50.8	4.9

주 : 1) 경기도 만 19~64세 중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인구

다음은 〈취학 전 자녀양육 정책〉(보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한 결과이다.²⁰⁾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중 1순위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조사결과도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45.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과반을 넘지는 않는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13.5%), ‘직장어린이집 확대’ (12.0%),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 (10.5%)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 외 ‘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5.2%),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4.2%),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2.7%), ‘영아 전담 어린이집 확대’ (2.7%), ‘가정파견보육서비스 확대’ (2.1%), ‘장애아보육 지원확대’ (1.9%)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4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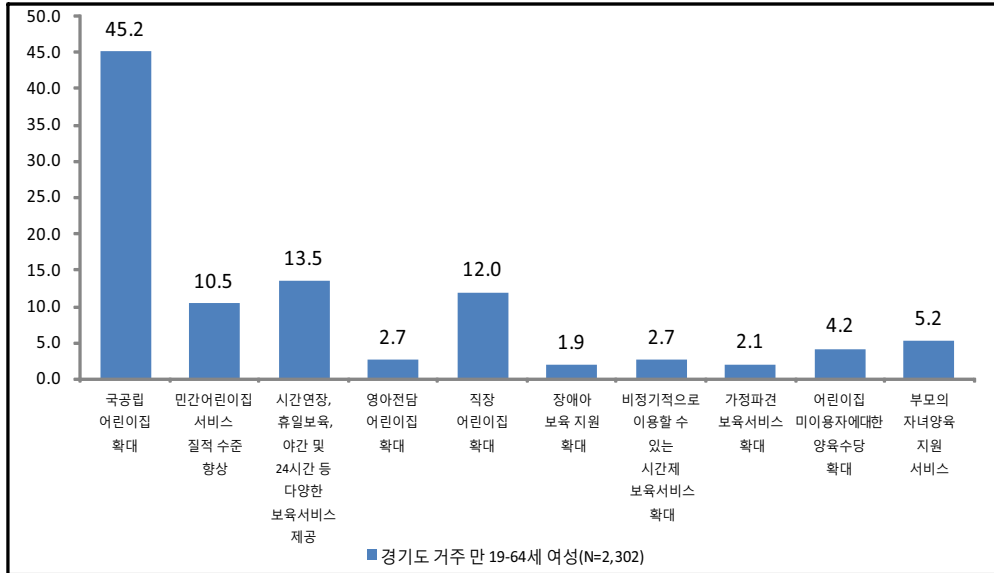
또한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1순위 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반면, ‘양육수당 확대’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학력이 낮을수록, 미취업여성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양육수당 확대’는 맞벌이보다는 외벌이 가구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표 6-57〉 참조).

한편, 취학 전 자녀 유무에 따라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즉,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은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2.6%로 취학 전 자녀가 없는 여성의 응답률 2.7%에 비해 현저하게 높았다(〈그림 6-43〉 참조).

20) 취학 전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정책을 제시하였다. 우선,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이다. ②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강화,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교육 강화, 어린이집 관리 감독 강화 등을 의미한다. ③ 시간 연장, 휴일보육, 야간 및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주말 및 공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 24시간 교대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의미한다. ④ 영아전담(만3세미만)어린이집 확대는 36개월 미만 영아를 전담으로 돌보는 어린이집 확대를 의미한다. ⑤ 직장어린이집 확대는 직장에 설치하는 어린이집 확대를 의미한다. ⑥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는 장애아동에 대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대를 의미한다. ⑦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는 전업주부, 시간제 근로자 등이 필요에 따라 시간제로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 보육서비스 확대를 의미한다. ⑧ 가정파견 보육서비스 확대(예:아이돌보미, 가정보육교사 등)는 영유아가 있는 집으로 보육교사, 아이돌보미 등을 파견해 주는 서비스 확대를 의미한다. ⑨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양육수당 확대를 의미한다. ⑩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의 예로 부모교육, 육아나눔터, 자녀와 놀이체험 공간 등이 있으며,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확대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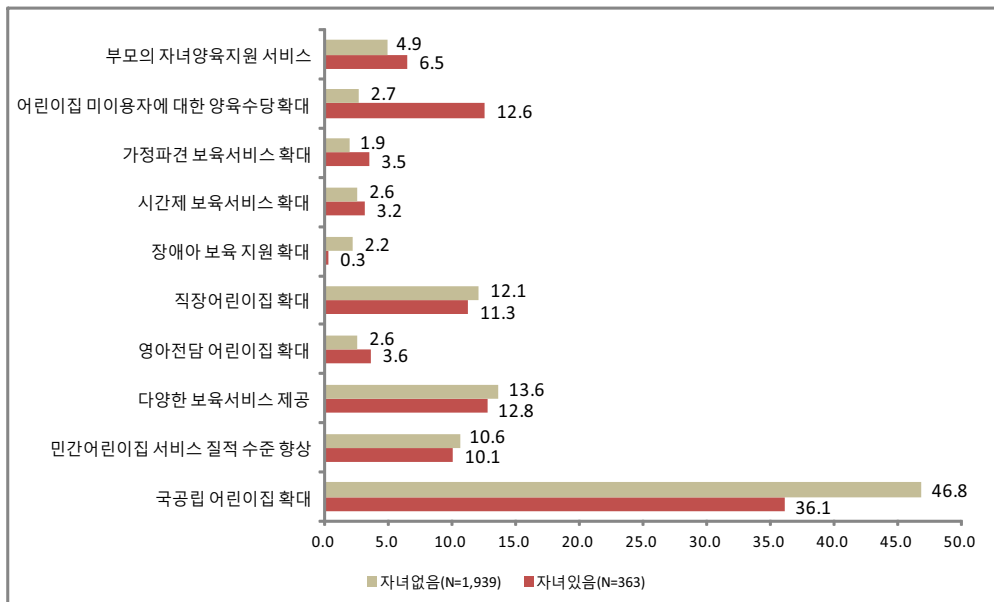
〈그림 6-42〉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그림 6-43〉 취학 전 자녀유무에 따른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표 6-57〉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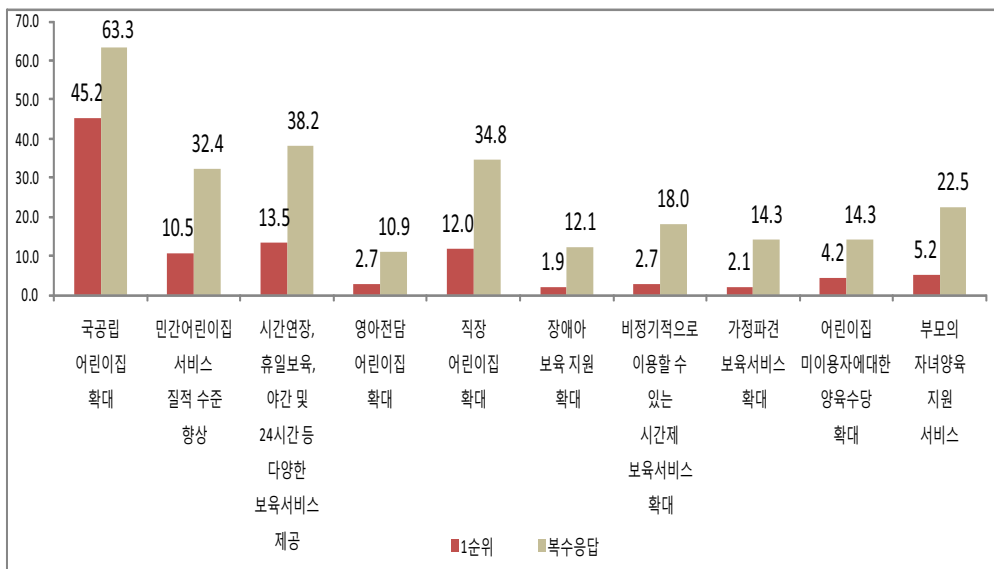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국공립 어린이 집 확대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시간 연장, 휴일 보육, 야간 및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영아 전담 어린이 집 확대	직장 어린이 집 확대	장애아 보육 지원 확대	비정기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가정 파견 보육 서비스 확대	어린이 집 미이용 자에 대한 양육 수당 확대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계		2,302	45.2	10.5	13.5	2.7	12.0	1.9	2.7	2.1	4.2	5.2
연령별	19~30세미만	380	43.8	10.7	14.1	3.2	12.4	1.3	1.6	1.0	5.6	6.3
	30~40세미만	648	39.7	10.0	14.9	2.6	11.7	2.0	3.2	2.5	6.8	6.5
	40~50세미만	668	45.9	11.6	12.4	2.1	12.6	2.2	3.2	2.7	2.7	4.6
	50~65세미만	606	51.4	9.8	12.8	3.1	11.2	1.8	2.4	2.1	2.0	3.4
혼인 상태	미혼	422	45.1	10.4	15.0	1.9	12.0	2.2	1.7	1.6	3.2	7.0
	유배우	1,660	45.2	10.4	12.6	3.0	12.7	1.7	3.0	2.1	4.7	4.5
	사별/이혼	220	45.5	11.6	16.5	3.0	6.3	2.1	2.8	3.4	3.1	5.6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52.0	11.0	13.0	2.3	10.2	1.6	1.9	1.7	2.6	3.6
	고졸	984	48.0	10.2	13.4	2.5	11.1	1.8	2.0	1.9	3.1	6.1
	대졸이상	973	40.3	10.6	13.8	3.1	13.4	2.1	3.6	2.5	5.8	4.8
취업 여부	취업	1,208	42.6	9.8	15.1	3.6	13.8	1.8	2.6	2.0	3.2	5.6
	미취업	1,094	48.0	11.4	11.8	1.8	10.0	2.0	2.8	2.2	5.4	4.7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47.2	10.7	12.2	2.4	11.5	3.4	1.9	2.0	3.3	5.4
	아파트	1,268	43.1	10.1	13.8	2.8	13.3	1.4	2.9	2.0	5.4	5.0
	연립/다세대/기타	596	48.1	11.2	13.7	2.8	9.6	1.9	2.7	2.4	2.3	5.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53.5	8.4	10.4	1.9	11.2	3.1	0.7	2.1	3.8	4.9
	100~200만원미만	420	50.2	8.8	13.3	1.5	10.2	2.7	3.0	2.6	3.3	4.4
	200~300만원미만	520	42.0	12.6	12.5	2.8	11.3	2.2	2.2	2.3	5.2	7.1
	300~400만원미만	447	44.7	12.8	12.4	2.8	11.2	2.0	2.9	1.3	4.5	5.4
	400~500만원미만	294	46.7	10.7	12.5	4.2	12.9	0.9	2.2	2.1	4.5	3.5
	500만원이상	432	40.1	8.3	18.1	3.2	15.1	0.8	3.8	2.4	3.6	4.6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41.2	11.1	15.8	3.6	14.0	2.2	2.3	1.8	2.9	5.1
	외벌이	980	46.3	10.8	11.0	2.6	11.5	1.6	3.2	2.2	6.3	4.6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39.6	10.3	16.6	3.6	11.1	2.4	3.0	2.4	5.8	5.2
	도시지역	1,379	48.2	10.7	11.8	2.3	12.4	1.6	2.5	2.0	3.4	5.1
취학 전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63	36.1	10.1	12.8	3.6	11.3	0.3	3.2	3.5	12.6	6.5
	자녀 없음	1,939	46.8	10.6	13.6	2.6	12.1	2.2	2.6	1.9	2.7	4.9

다음으로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중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1순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림 6-44>와 같이 여성응답자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가 63.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38.2%), ‘직장 어린이집 확대’ (34.8%),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32.4%)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22.5%),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18.0%), ‘가정파견 보육서비스 확대’ (14.3%),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14.3%), ‘장애아 보육지원확대’ (12.1%), ‘영아전담 어린이집 확대’ (10.9%)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6-58>과 같다.

〈그림 6-44〉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단위 : %)



〈표 6-58〉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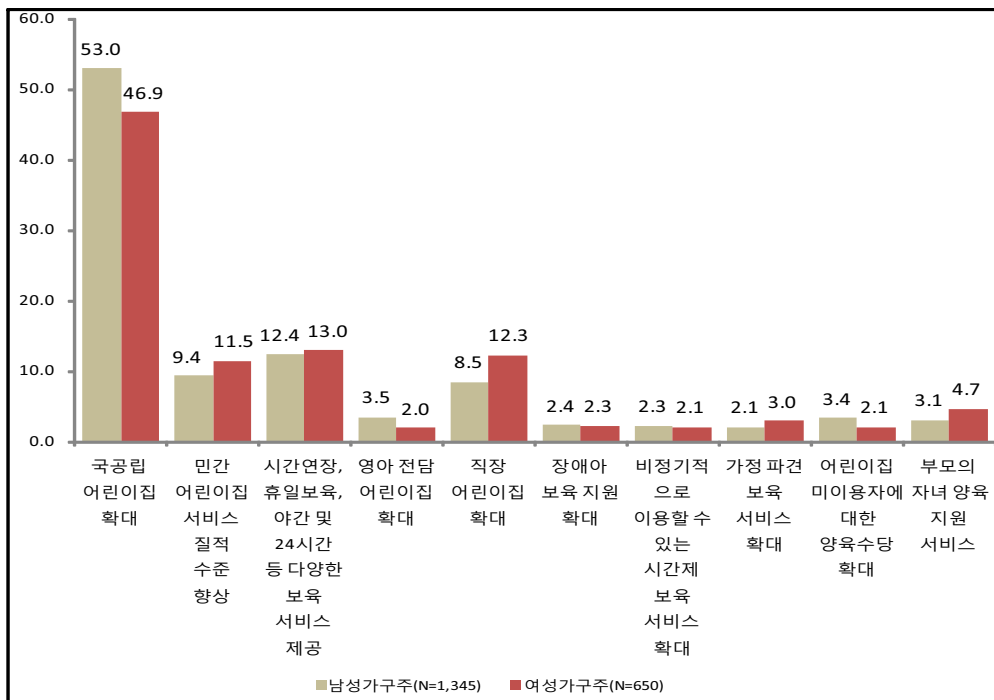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국공립 어린이 집 확대	민간 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시간연장, 휴일보육, 야간 및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서비 스 제공	영아 전담 어린이 집 확대	직장 어린이 집 확대	장애아 보육 지원 확대	비정기적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가정 파견 보육 서비 스 확대	어린이집 미이용자 에대한 양육 수당 확대	부모 의 자녀 양육 지원 서비 스
계		2,302	63.3	32.4	38.2	10.9	34.8	12.1	18.0	14.3	14.3	22.5
연령별	19~30세미만	380	63.0	33.9	40.3	13.1	38.8	11.4	15.9	10.5	14.2	26.9
	30~40세미만	648	60.3	33.6	40.0	8.8	32.4	8.2	20.9	17.1	21.8	25.2
	40~50세미만	668	63.4	32.4	35.7	9.2	35.0	13.9	19.9	13.8	11.1	20.8
	50~65세미만	606	66.7	30.0	37.2	12.9	33.8	14.8	14.6	15.3	9.8	17.7
혼인 상태	미혼	422	63.3	33.0	42.5	10.9	38.3	12.7	15.6	10.3	12.2	25.7
	유배우	1,660	63.3	33.1	36.4	10.7	34.9	11.4	19.4	15.1	15.4	22.2
	사별/이혼	220	63.7	26.4	41.4	11.6	26.4	15.9	13.3	18.2	11.0	17.0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69.8	33.0	37.2	11.9	30.7	13.7	11.8	17.4	8.6	16.4
	고졸	984	63.9	30.0	37.3	9.7	36.2	13.0	15.3	12.5	14.8	23.9
	대졸이상	973	60.7	34.6	39.3	11.6	34.9	10.7	22.6	15.2	15.6	23.1
취업 여부	취업	1,208	61.0	32.0	42.0	12.1	37.1	10.2	18.4	15.2	12.7	21.5
	미취업	1,094	65.9	33.0	33.9	9.5	32.4	14.2	17.6	13.4	16.0	23.5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64.7	32.4	34.7	10.6	33.3	15.4	12.9	12.7	13.8	23.2
	아파트	1,268	61.4	32.4	38.7	11.0	36.5	9.5	20.4	14.2	16.1	23.3
	연립/다세대/기타	596	66.4	32.5	39.5	10.8	32.5	15.2	16.6	15.7	10.6	20.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68.0	25.9	33.1	8.4	30.9	22.1	14.8	14.8	13.4	17.6
	100~200만원미만	420	69.4	32.0	37.7	8.9	31.1	15.1	13.7	12.5	14.4	22.5
	200~300만원미만	520	62.5	31.7	37.2	9.4	35.1	14.8	14.3	14.9	17.0	25.6
	300~400만원미만	447	60.5	34.1	36.8	12.8	34.0	9.9	20.7	14.0	14.4	23.3
	400~500만원미만	294	60.3	35.5	39.0	11.4	37.2	7.4	20.3	13.9	12.6	21.5
	500만원이상	432	61.5	32.9	42.9	13.2	39.2	7.1	23.5	15.9	12.3	20.7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60.0	33.1	41.7	12.4	39.8	10.4	18.9	15.0	12.0	21.3
	외벌이	980	64.3	33.4	34.5	9.9	33.0	11.4	18.3	13.9	18.1	23.7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59.5	29.1	40.9	13.3	34.3	11.8	15.7	12.7	15.3	24.5
	도시지역	1,379	65.4	34.2	36.7	9.5	35.1	12.2	19.2	15.2	13.7	21.4
취학전 자녀 유무	자녀 있음	363	57.5	36.3	32.7	9.9	27.7	5.8	23.5	19.3	30.0	32.7
	자녀 없음	1,939	64.4	31.7	39.2	11.0	36.1	13.2	17.0	13.5	11.4	20.6

다음으로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중 1순위에 대한 가구주 조사결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51.7%)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시간 연장, 휴일보육, 야간 및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12.6%),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 (9.9%), ‘직장어린이집 확대’ (9.3%), ‘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3.4%), ‘영아 전담 어린이집 확대’ (3.1%),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3.1%), ‘장애아보육 지원확대’ (2.4%), ‘가정파견보육서비스 확대’ (2.3%),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2.2%)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33〉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45〉와 같다. 남녀가구주 모두 ‘국공립어린이집의 확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확대’ 등 다른 보육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좀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5〉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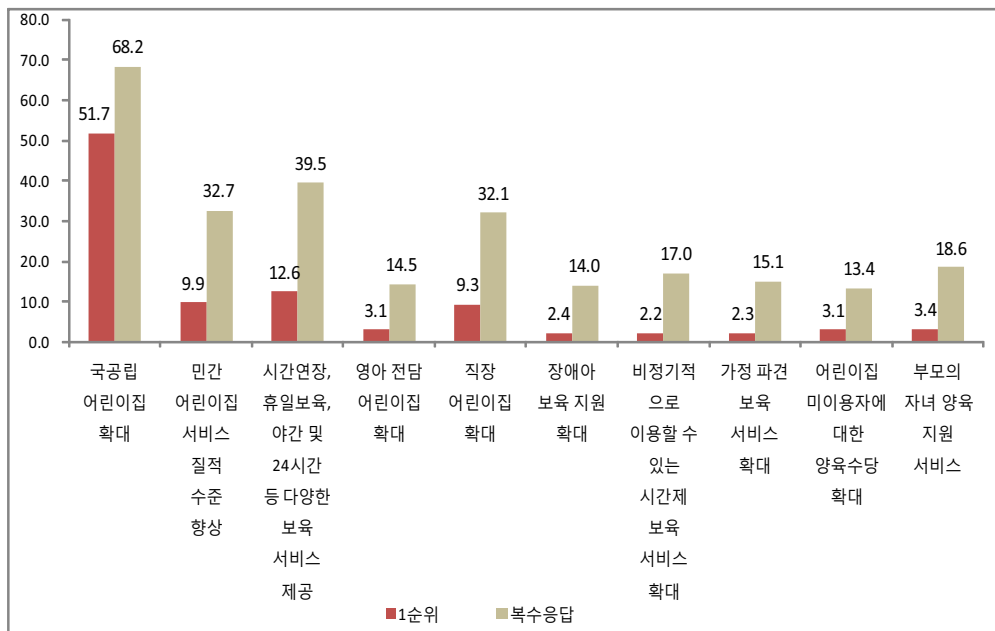
(단위 : %)



한편, <취학 전 자녀양육 정책>에 대한 응답결과를 1순위, 2순위, 3순위를 합한 결과는 1순위만을 분석한 결과보다 훨씬 다양한 보육정책에 대한 요구를 나타낸다. 즉, 1순위 결과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치중되어 있었지만, 3순위까지를 조사하면 ‘휴일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직장어린이집의 확대’,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1순위 조사결과에서는 5% 미만을 차지했지만, 3순위까지를 조사하면 20%에 가까운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6-46〉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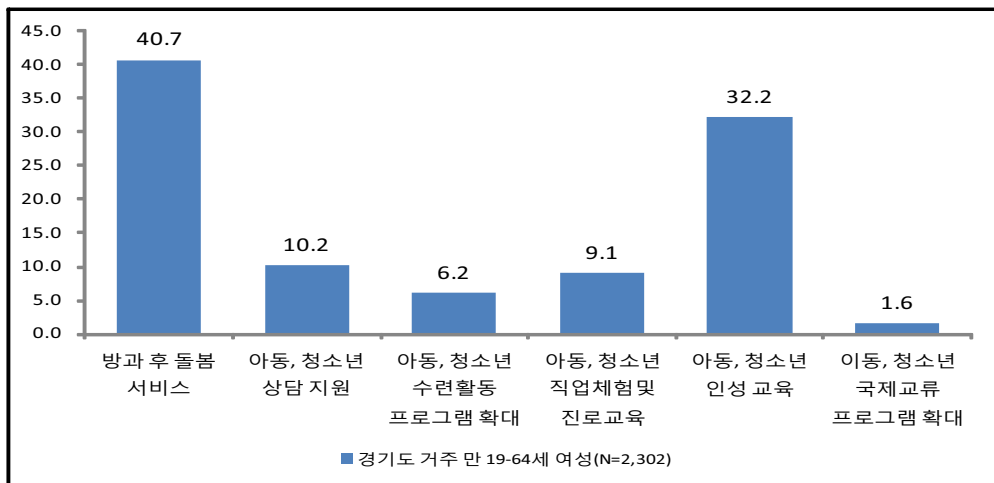
나. 아동·청소년 정책

다음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질문한 결과이다.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를 묻는 항목이다.²¹⁾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에 대해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는 <그림 6-47>과 같다. 즉,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40.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아동·청소년 인성교육’도 32.2%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는 ‘아동·청소년 상담지원’ (10.2%), ‘아동·청소년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9.1%),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6.2%), ‘아동·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확대’ (1.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6-47〉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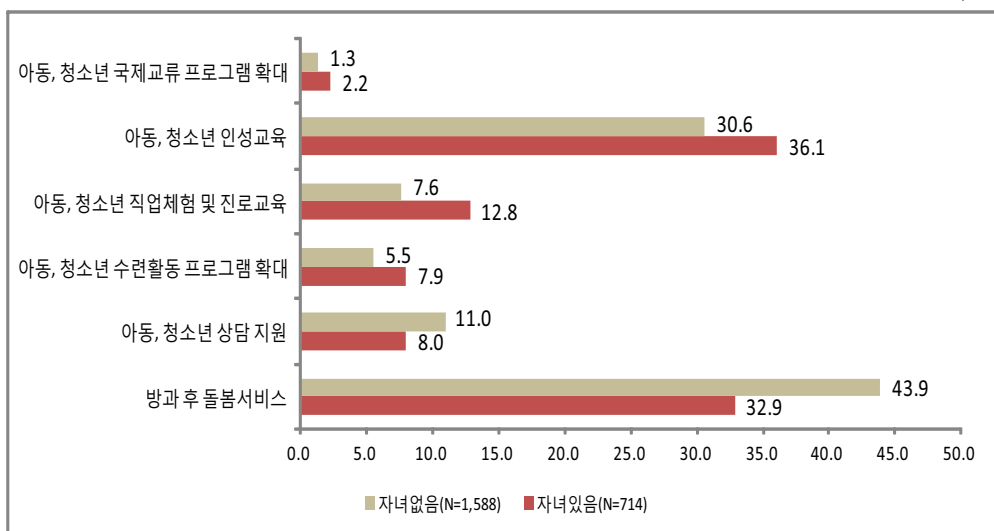
여성응답자의 1순위 응답결과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6-59>와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의 경우 ‘방과 후 돌봄 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의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다른 정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40대

21) 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꿈나무안심학교 등이 있으며, 취학 자녀를 방과 후 돌봐주는 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한다. ② 아동·청소년 상담 지원은 가정상담지원 강화, 학교생활 관련 상담 강화를 의미한다. ③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는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를 의미한다. ④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은 체험활동 중심의 진로지도 강화, 건전한 아르바이트 여건 조성, 진로교육 강화를 의미한다. ⑤ 아동·청소년 인성 교육은 언어순화 교육, 폭력예방 및 인권교육, 인성교육 강화를 의미한다. ⑥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이다.

는 ‘아동,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청소년 상담지원’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성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 미취업여성은 ‘아동청소년 상담 지원’ 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형태별로는 아파트 거주여성의 경우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을, 단독주택과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은 ‘아동청소년 상담지원’ 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구소득별로는 100-400만원 미만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방과후 돌봄서비스’ 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고, 400만원대 가구의 경우 ‘아동, 청소년 인성교육’ , 5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는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차이도 발견되었다. 전체 여성응답자중 취학자녀가 있는 경우는 31.0%, 없는 경우는 69.0%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취학 자녀가 현재 있는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아동청소년 직업 체험 및 진로교육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아동청소년 정책 중에서 아동청소년 인성교육(36.1%)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그림 6-48〉 참조).

〈그림 6-48〉 취학자녀유무에 따른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표 6-59〉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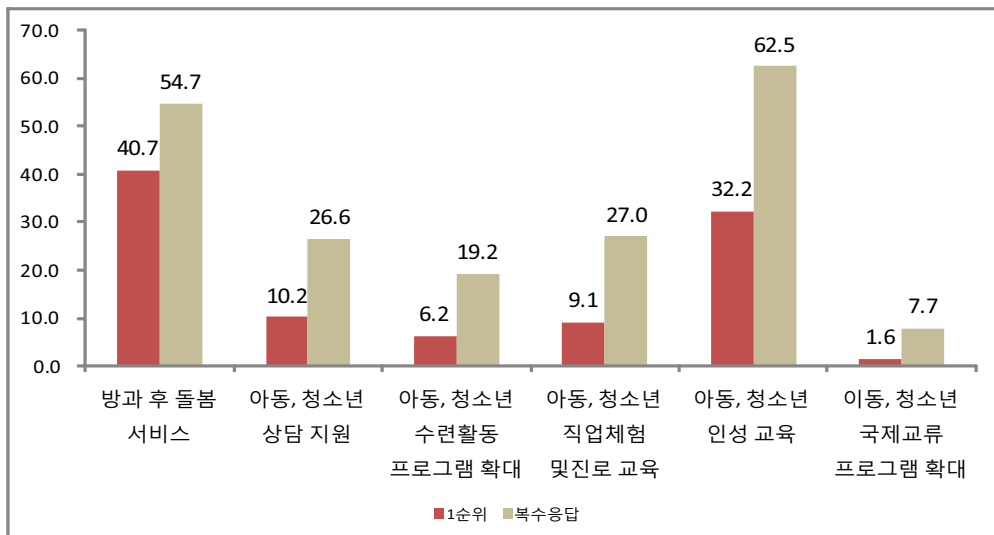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아동, 청소년 상담 지원	아동,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아동,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아동, 청소년 인성 교육	아동,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계		2,302	40.7	10.2	6.2	9.1	32.2	1.6
연령별	19~30세미만	380	43.4	10.2	2.9	11.8	29.3	2.4
	30~40세미만	648	46.5	5.5	5.0	6.4	35.1	1.4
	40~50세미만	668	33.9	11.9	8.4	12.6	31.2	1.9
	50~65세미만	606	39.8	13.1	7.8	5.9	32.6	0.7
혼인 상태	미혼	422	42.0	10.2	3.1	11.3	31.1	2.3
	유배우	1,660	40.1	9.5	6.6	8.6	33.7	1.5
	사별/이혼	220	42.2	15.3	10.4	7.9	24.0	0.3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39.6	15.4	8.9	7.5	28.4	0.2
	고졸	984	40.7	11.3	6.6	10.0	29.9	1.4
	대졸이상	973	41.1	7.4	4.9	8.8	35.6	2.2
취업 여부	취업	1,208	42.4	8.2	6.1	9.9	31.8	1.6
	미취업	1,094	38.9	12.3	6.3	8.3	32.7	1.6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42.0	13.2	6.2	7.9	28.8	1.8
	아파트	1,268	40.0	7.8	5.7	9.2	35.4	1.8
	연립/다세대/기타	596	41.3	12.9	7.2	9.8	27.9	1.0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34.6	20.4	6.9	7.6	29.1	1.4
	100~200만원미만	420	43.9	13.7	5.2	8.7	28.4	-
	200~300만원미만	520	44.0	7.1	7.9	7.5	32.5	0.9
	300~400만원미만	447	40.9	10.5	6.5	8.0	31.6	2.4
	400~500만원미만	294	36.0	7.3	5.4	9.7	40.2	1.4
	500만원이상	432	39.4	7.5	5.0	12.9	31.9	3.3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43.6	8.5	5.2	10.6	30.5	1.6
	외벌이	980	37.0	10.9	6.8	8.7	34.6	1.9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39.7	9.2	5.6	9.4	34.3	1.8
	도시지역	1,379	41.3	10.7	6.5	9.0	31.1	1.5
취학 자녀 유무	자녀있음	714	32.9	8.0	7.9	12.8	36.1	2.2
	자녀없음	1,588	43.9	11.0	5.5	7.6	30.6	1.3

다음으로 여성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1순위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1순위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차지했지만, 2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62.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 6-49〉 참조). 여성응답자의 복수응답 결과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6-60〉과 같다.

〈그림 6-49〉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단위 : %)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에 대해 가구주 조사결과 ‘방과 후 돌봄서비스’ (47.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26.8%), ‘아동·청소년 상담지원’ (11.2%), ‘아동·청소년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7.2%),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6.9%), ‘아동·청소년 국제교류프로그램 확대’ (0.8%)순으로 나타났다(〈부표 35〉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50〉과 같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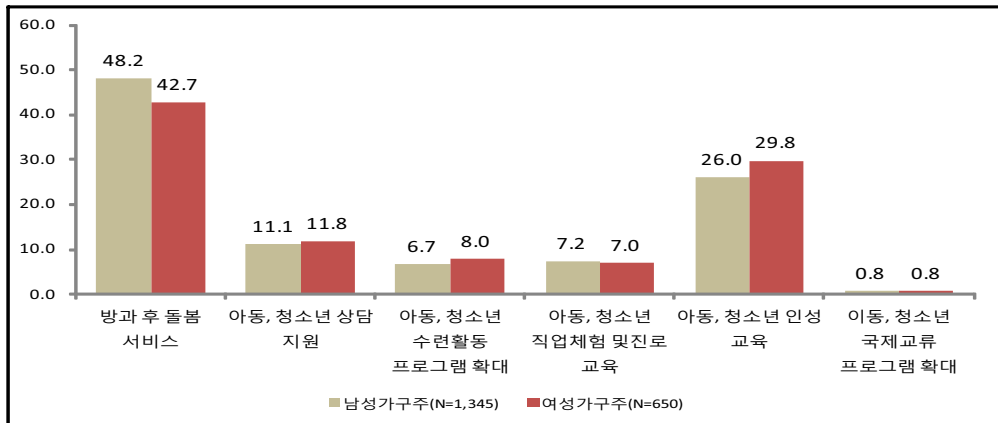
〈표 6-60〉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아동, 청소년 상담 지원	아동,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아동,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아동, 청소년 인성 교육	아동,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계		2,302	54.7	26.6	19.2	27.0	62.5	7.7
연령별	19~30세미만	380	57.1	27.7	13.5	31.3	59.0	9.0
	30~40세미만	648	62.5	21.8	17.7	25.4	64.4	6.5
	40~50세미만	668	44.0	26.6	24.9	31.9	60.5	10.4
	50~65세미만	606	56.2	30.8	19.4	19.6	65.7	4.8
혼인 상태	미혼	422	55.3	29.7	13.4	30.1	60.4	8.8
	유배우	1,660	54.6	24.8	20.6	26.4	63.8	7.7
	사별/이혼	220	54.6	32.7	22.5	24.0	57.8	5.0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55.2	35.3	20.2	22.4	61.9	3.5
	고졸	984	54.2	27.3	20.3	27.9	60.4	7.2
	대졸이상	973	55.1	23.1	17.8	27.6	64.8	9.5
취업 여부	취업	1,208	56.4	24.1	18.4	28.2	62.3	8.9
	미취업	1,094	52.9	29.4	20.1	25.7	62.8	6.4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55.1	31.4	19.2	25.7	61.9	4.7
	아파트	1,268	53.9	23.7	19.6	27.7	64.0	8.3
	연립/다세대/기타	596	56.1	29.4	18.5	26.4	59.8	8.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51.6	41.3	18.9	20.3	63.1	4.0
	100~200만원미만	420	58.4	28.2	16.2	28.0	61.5	6.4
	200~300만원미만	520	56.8	25.5	20.5	23.3	63.7	7.6
	300~400만원미만	447	54.3	25.8	21.0	28.7	59.6	8.5
	400~500만원미만	294	50.6	25.0	18.9	29.8	65.4	6.7
	500만원이상	432	53.2	21.9	19.0	29.6	63.0	1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57.8	25.3	18.2	29.0	59.6	8.3
	외벌이	980	51.3	26.7	21.0	26.4	64.4	7.5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55.2	25.0	18.4	28.9	62.4	7.7
	도시지역	1,379	54.5	27.5	19.7	26.0	62.6	7.7
취학 자녀 유무	자녀있음	714	42.9	21.9	23.6	34.4	64.3	11.8
	자녀없음	1,588	59.6	28.5	17.4	24.0	61.8	6.0

〈그림 6-50〉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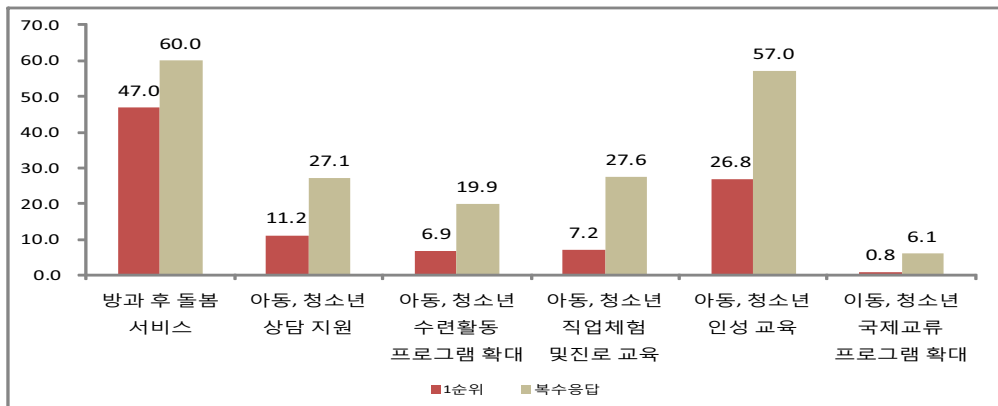
(단위 : %)



그러나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결과를 2순위까지 합한 결과는 1순위 분석결과와 다르게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1순위 결과에서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가 현저하게 높았던 것과 달리 복수응답결과에서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60.0%)와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57.0%)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성별 차이도 더욱 크게 나타나는데, 〈그림 6-51〉과 같이 복수응답 결과에서 여성가구주들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보다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51〉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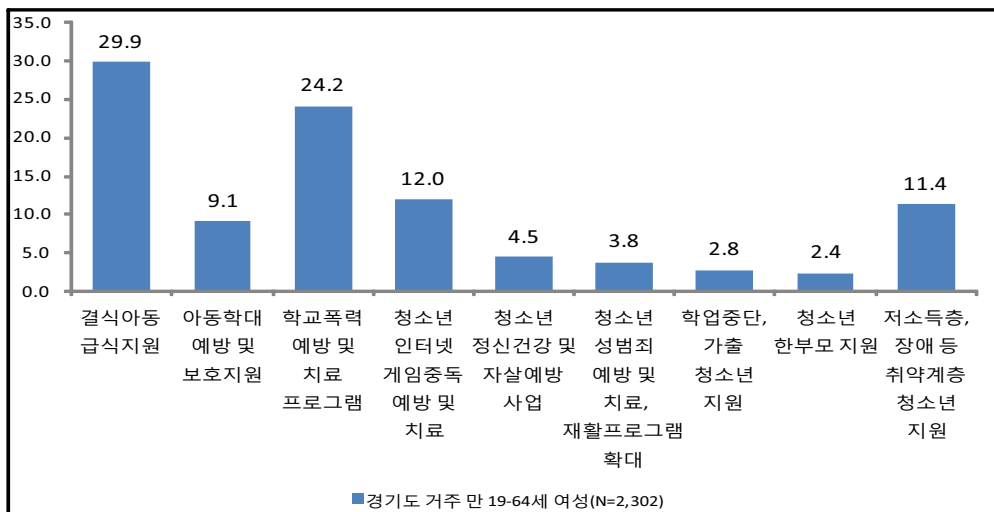
(단위 : %)



다음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질문한 결과이다.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6-52>와 같이 ‘결식아동급식지원’ (29.9%),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24.2%)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12.0%),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1.4%),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9.1%)이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그림 6-5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표 6-61〉과 같이 여성응답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30대의 경우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이 더 필요하다고 보았고, 40대와 5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맞벌이 가구 여성, 도농복합지역 여성은 다른 집단에 비해 ‘결식아동급식지원’을 1순위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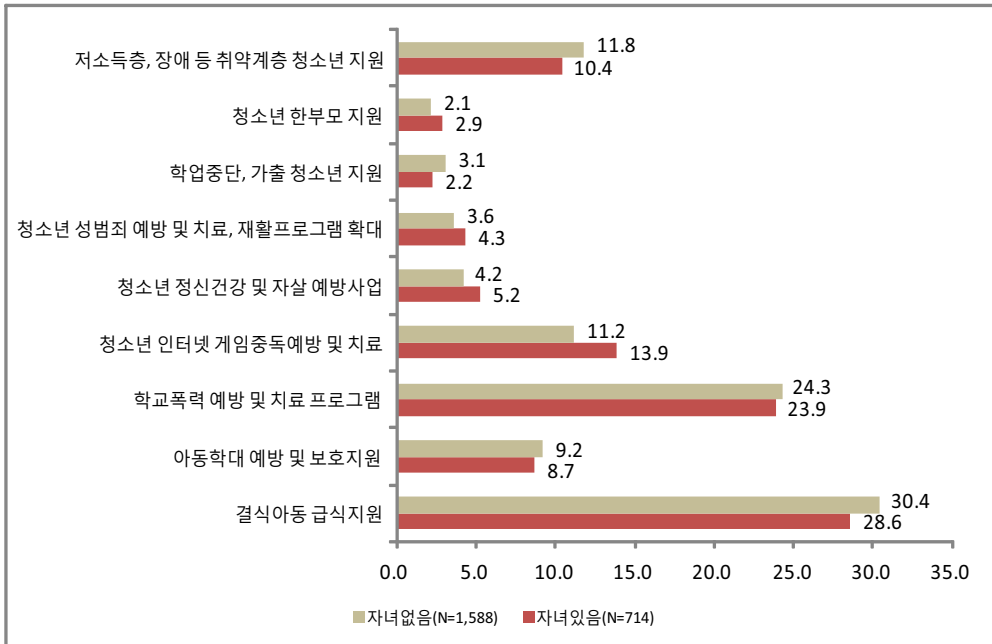
〈표 6-61〉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학교 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 그램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학업 중단, 가출 청소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 계층 청소년 지원
계		2,302	29.9	9.1	24.2	12.0	4.5	3.8	2.8	2.4	11.4
연령별	19~30세미만	380	28.6	10.5	22.8	7.4	3.7	5.1	4.2	2.9	15.0
	30~40세미만	648	30.7	9.2	27.3	7.4	3.6	4.9	2.7	1.7	12.6
	40~50세미만	668	27.8	8.2	22.8	17.0	5.4	3.5	2.8	2.4	10.1
	50~65세미만	606	32.4	8.8	23.5	15.5	5.3	1.8	1.8	2.5	8.5
혼인 상태	미혼	422	29.3	11.0	21.1	7.6	4.3	4.7	4.1	2.5	15.5
	유배우	1,660	31.0	8.2	25.1	12.9	4.6	3.6	2.5	1.8	10.1
	사별/이혼	220	22.7	10.8	24.5	15.5	4.6	2.7	1.9	6.1	11.1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31.5	7.3	24.6	14.0	5.3	3.4	3.5	1.9	8.6
	고졸	984	28.9	9.1	25.6	12.5	4.4	4.1	2.1	2.4	10.9
	대졸이상	973	30.3	9.7	22.6	10.9	4.3	3.6	3.3	2.5	12.8
취업 여부	취업	1,208	29.7	8.8	25.0	11.0	3.9	4.3	2.6	2.6	12.1
	미취업	1,094	30.1	9.4	23.3	13.2	5.2	3.2	3.0	2.1	10.6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28.6	10.0	25.1	14.7	4.4	3.7	3.3	2.1	8.3
	아파트	1,268	31.6	8.3	23.4	11.5	4.2	3.4	3.0	2.4	12.1
	연립/다세대/기타	596	27.2	10.0	25.1	11.3	5.2	4.6	2.2	2.4	12.0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26.9	6.3	24.6	18.0	5.2	2.2	1.7	5.5	9.5
	100~200만원미만	420	27.3	10.7	23.2	14.8	4.9	4.0	1.4	3.2	10.4
	200~300만원미만	520	29.1	11.9	24.5	9.1	4.9	4.4	1.9	1.9	12.4
	300~400만원미만	447	32.6	7.1	24.3	10.7	3.9	3.5	3.9	1.3	12.6
	400~500만원미만	294	30.7	8.5	25.7	9.5	4.5	3.0	4.5	2.4	11.2
	500만원이상	432	31.2	7.8	23.3	13.3	4.1	4.3	3.4	1.8	10.9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32.2	8.5	24.6	11.0	4.1	4.2	2.8	1.9	10.6
	외벌이	980	28.7	9.0	24.4	12.5	4.8	3.6	3.2	2.0	11.8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32.9	9.3	22.8	10.2	4.0	4.7	2.1	2.5	11.7
	도시지역	1,379	28.3	9.0	24.9	13.0	4.8	3.3	3.2	2.3	11.2
취학 자녀 유무	자녀 있음	714	28.6	8.7	23.9	13.9	5.2	4.3	2.2	2.9	10.4
	자녀 없음	1,588	30.4	9.2	24.3	11.2	4.2	3.6	3.1	2.1	11.8

〈그림 6-53〉 취학자녀 유무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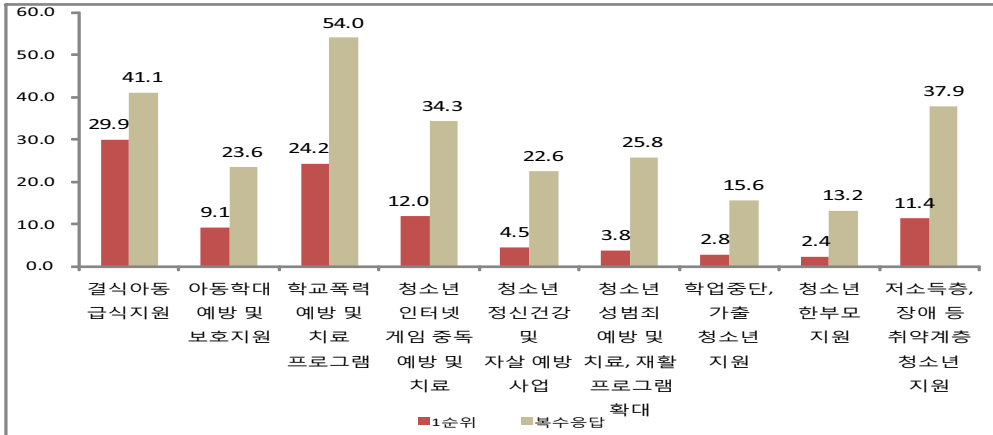


다음으로 여성응답자의 조사결과를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1순위 결과와는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6-54〉와 같이 복수응답 결과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54.0%)이다. 다음으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41.1%),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37.9%), ‘청소년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 (34.3%)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복수응답 결과 여성집단별 차이는 〈표 6-62〉와 같다.

한편, 가구주들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결식아동급식지원’ (33.2%)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22.3%)으로 나타났다. 이 외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11.7%),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10.6%),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9.4%)이 약 10% 전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은 4.0%, ‘학업 중단, 가출청소년 지원’은 3.1%,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와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각각 2.9%로 조사되었다(〈부표 37〉 참조).

〈그림 6-54〉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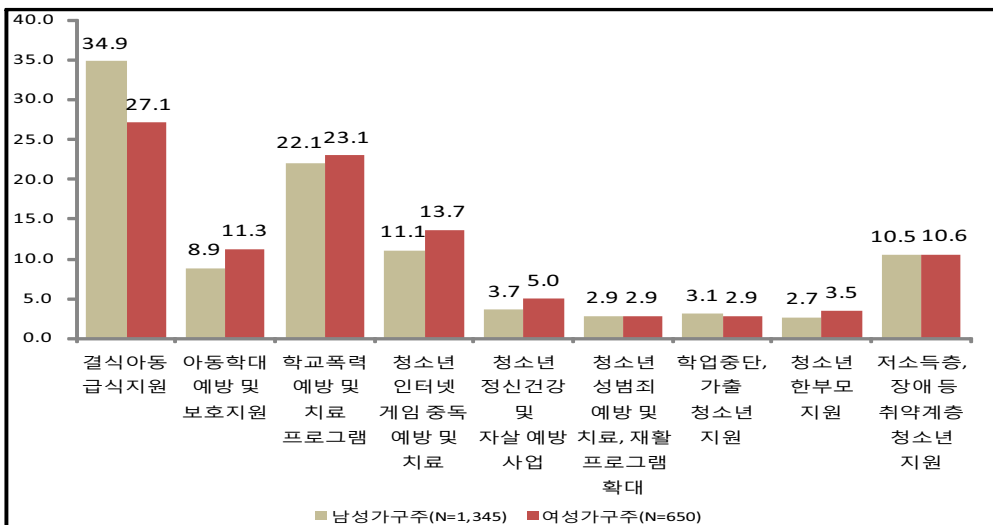
(단위 : %)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55〉와 같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결식아동 급식지원’ 을, 여성가구주의 경우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를 상대적으로 다소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6-55〉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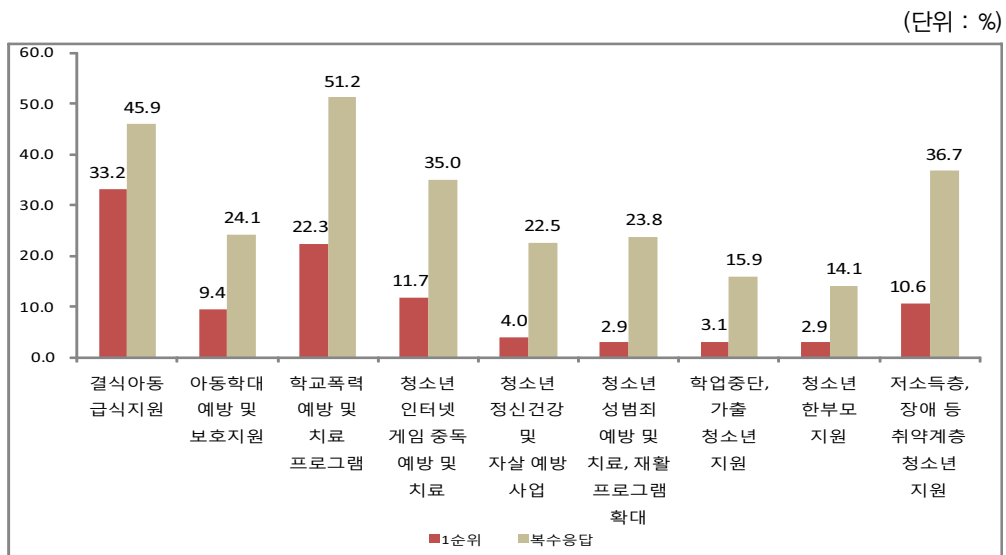
〈표 6-62〉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학교 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 그램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사 업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학업 중단, 가출 청소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저소 득층, 장애 등 취약 계층 청소년 지원
계		2,302	41.1	23.6	54.0	34.3	22.6	25.8	15.6	13.2	37.9
연령별	19~30세미만	380	39.1	25.5	54.1	24.7	21.1	27.1	19.3	17.0	44.2
	30~40세미만	648	44.5	27.4	59.2	27.8	20.7	29.0	16.0	11.9	40.2
	40~50세미만	668	37.1	19.6	51.0	42.5	25.4	27.0	15.7	12.1	34.3
	50~65세미만	606	43.7	22.2	51.9	40.5	23.0	20.1	11.7	12.4	34.2
혼인 상태	미혼	422	39.2	25.6	53.2	26.1	22.2	26.6	18.8	15.0	44.6
	유배우	1,660	42.9	23.3	55.0	36.8	22.9	25.2	15.1	11.7	36.0
	사별/이혼	220	32.9	20.8	48.9	35.1	22.0	28.4	11.4	20.1	36.3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44.0	22.2	53.6	40.2	24.1	18.0	13.0	11.0	33.4
	고졸	984	37.8	22.1	53.8	35.1	23.3	27.7	14.6	15.4	36.0
	대졸이상	973	43.5	25.4	54.5	31.6	21.6	26.5	17.3	11.7	41.2
취업 여부	취업	1,208	41.2	23.2	55.3	33.2	22.3	27.1	16.1	13.9	38.3
	미취업	1,094	41.1	24.0	52.7	35.6	23.0	24.4	15.0	12.4	37.6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38.7	23.1	55.4	40.1	24.7	25.4	12.0	11.5	30.8
	아파트	1,268	42.5	23.1	54.0	34.1	22.2	26.2	16.4	12.9	39.4
	연립/다세대/기타	596	40.0	24.8	53.3	30.7	22.2	25.4	16.3	14.8	39.8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39.1	19.6	47.0	37.8	24.6	24.4	11.8	16.8	35.9
	100~200만원미만	420	37.6	21.3	53.9	34.6	23.1	24.9	12.8	16.6	37.8
	200~300만원미만	520	38.3	26.9	54.5	32.1	22.0	26.3	15.9	12.2	42.3
	300~400만원미만	447	44.5	23.1	56.1	33.7	21.2	27.9	17.4	11.1	35.8
	400~500만원미만	294	45.2	27.4	53.6	33.9	17.5	21.9	17.2	16.5	34.2
	500만원이상	432	42.5	21.4	55.0	36.2	27.1	27.4	16.4	9.3	38.6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42.8	23.4	54.4	35.5	23.8	25.4	16.8	11.2	38.1
	외벌이	980	41.1	23.5	55.5	34.7	22.0	24.7	14.6	13.5	37.9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43.2	24.8	48.4	32.1	22.2	26.3	16.1	14.4	40.1
	도시지역	1,379	40.1	22.9	57.1	35.5	22.8	25.6	15.3	12.5	36.8
취학 자녀 유무	자녀 있음	714	38.0	22.5	55.1	39.8	24.9	28.1	15.9	13.0	33.9
	자녀 없음	1,588	42.4	24.0	53.6	32.1	21.7	24.9	15.4	13.3	39.6

〈그림 6-56〉과 같이 가구주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를 3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1순위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1순위에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가장 높았으나, 복수응답 결과는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51.2%)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45.9%)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36.7%)도 현저하게 높아졌다. 다음으로는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35.0%),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24.1%),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23.8%),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22.5%),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지원’ (15.9%), ‘청소년 한부모 지원’ (14.1%),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지원’ (10.6%)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6-56〉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가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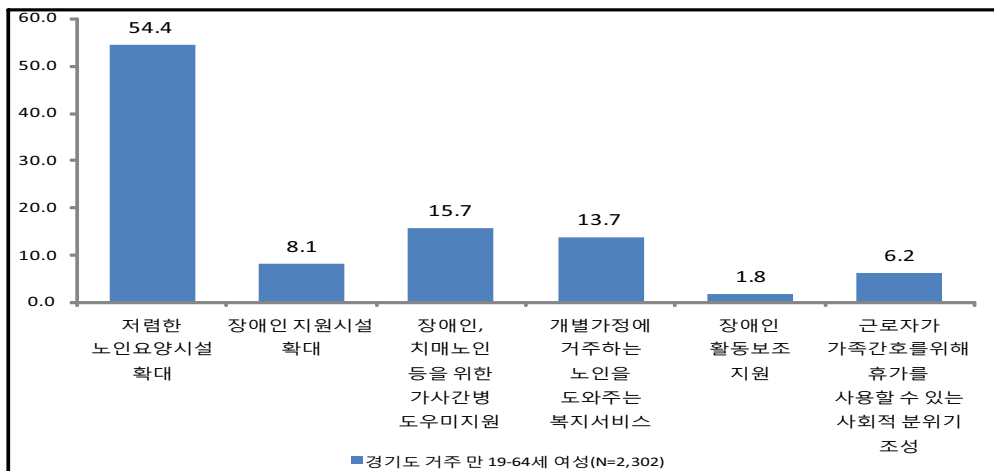
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다음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질문한 결과이다. 즉, 질병이나 장애 혹은 노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으로 응답자의 주관적인 인식을 조사하였다.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1순위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6-57〉과 같다. 여성들

의 경우도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 (54.4%)를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15.7%), ‘개별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13.7%), ‘장애인 지원시설 확대’ (8.1%), ‘근로자가 가족간호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6.2%),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1.8%) 순이었다.

〈그림 6-57〉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



여성응답자의 1순위 응답결과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6-63>과 같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별로도 차이가 보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지원 시설과 같은 시설 확대 정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 주택형태별로는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소득별에 따라서도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응답자들을 대상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그림 6-58>과 같고, 여성응답자의 복수응답 결과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표 6-64>와 같다. 복수응답 결과 우선순위에 대한 응답률은 1순위와 비슷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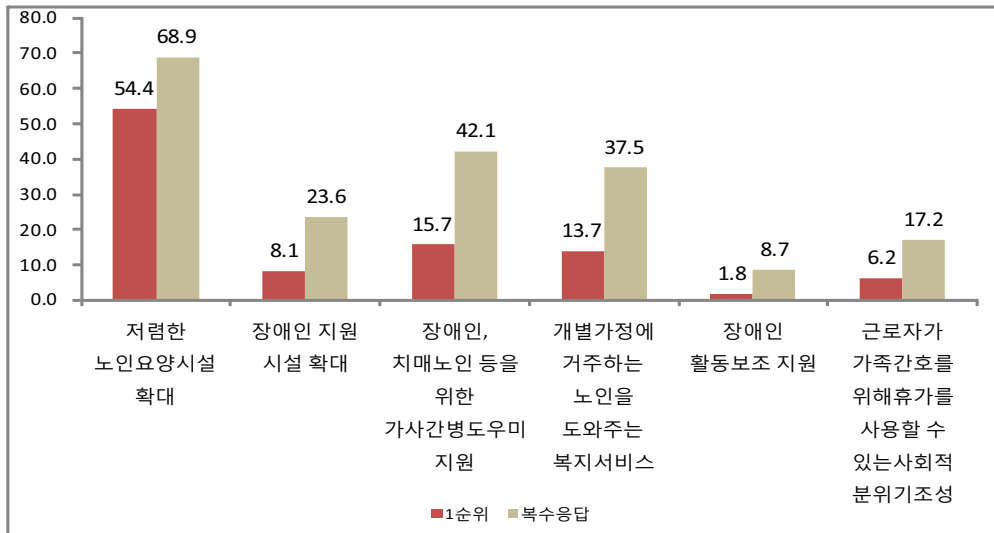
〈표 6-63〉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저렴한 노인요양 시설 확대	장애인 지원 시설 확대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지원	개별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근로자가 가족간호를 위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계		2,302	54.4	8.1	15.7	13.7	1.8	6.2
연령별	19~30세미만	380	46.1	11.3	16.7	16.7	1.0	8.1
	30~40세미만	648	51.1	6.4	14.5	18.6	1.7	7.8
	40~50세미만	668	58.3	8.1	16.1	9.5	2.5	5.5
	50~65세미만	606	60.9	7.3	15.7	10.7	1.8	3.5
혼인 상태	미혼	422	46.3	9.8	16.6	18.8	1.6	6.9
	유배우	1,660	56.6	7.7	15.5	12.4	1.7	6.1
	사별/이혼	220	57.4	7.4	15.5	11.7	3.3	4.8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56.4	10.4	17.0	10.7	2.3	3.2
	고졸	984	55.2	8.6	15.9	12.6	1.7	6.0
	대졸이상	973	53.0	7.0	15.1	15.8	1.8	7.3
취업 여부	취업	1,208	54.9	8.4	15.2	13.0	1.4	7.0
	미취업	1,094	53.9	7.8	16.3	14.6	2.2	5.2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53.5	10.6	14.4	13.8	2.4	5.3
	아파트	1,268	55.9	7.1	14.5	14.2	1.7	6.8
	연립/다세대/기타	596	52.1	8.6	19.1	12.8	1.8	5.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54.1	9.3	14.3	15.9	3.3	3.1
	100~200만원미만	420	55.3	10.0	13.1	13.3	2.4	5.8
	200~300만원미만	520	55.5	6.6	15.3	14.0	1.7	6.9
	300~400만원미만	447	49.6	11.2	19.0	13.6	2.0	4.5
	400~500만원미만	294	57.3	5.1	16.8	11.7	2.2	6.9
	500만원이상	432	55.5	6.5	15.1	14.4	0.2	8.1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55.5	9.1	15.0	11.8	1.6	7.1
	외벌이	980	56.0	7.4	15.2	13.4	1.8	6.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55.6	7.7	16.1	13.2	1.9	5.5
	도시지역	1,379	53.8	8.4	15.5	14.0	1.8	6.5

〈그림 6-58〉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단위 : %)



다음으로 가구주의 경우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는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가 54.4%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14.8%), ‘개별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11.8%), ‘장애인 지원 시설 확대’ (8.8%) 순이었으며, ‘근로자가 가족 간호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4.8%),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2.3%)은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부표 39)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보면 〈그림 6-59〉와 같이, 남성가구주의 경우 여성가구주에 비해 저렴한 노인요양시설의 확대를 더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개별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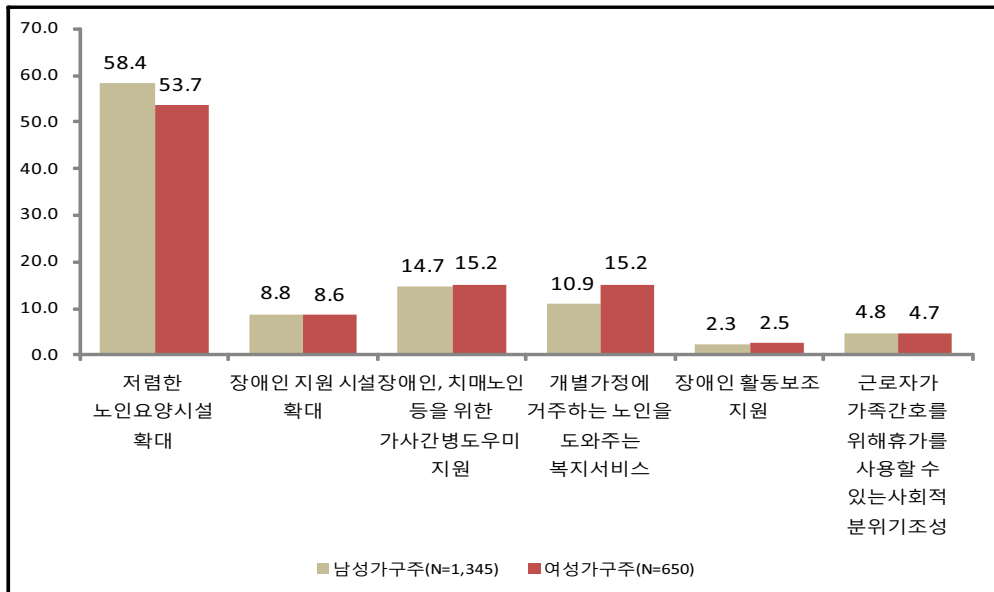
〈표 6-64〉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저렴한 노인요양 시설 확대	장애인 지원 시설 확대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지원	개별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근로자가 가족간호를 위해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계		2,302	68.9	23.6	42.1	37.5	8.7	17.2
연령별	19~30세미만	380	61.2	29.8	39.9	36.6	9.6	21.0
	30~40세미만	648	69.3	21.2	40.7	41.0	8.9	17.5
	40~50세미만	668	70.6	21.7	42.3	36.9	9.0	17.5
	50~65세미만	606	73.4	22.8	45.1	35.3	7.3	13.2
혼인 상태	미혼	422	61.8	30.5	39.5	37.5	10.0	18.7
	유배우	1,660	70.7	21.3	43.3	37.5	8.5	16.8
	사별/이혼	220	72.5	24.0	39.0	38.3	7.0	16.1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69.8	26.1	45.7	34.5	9.5	12.5
	고졸	984	69.0	23.5	40.8	37.9	8.1	18.7
	대졸이상	973	68.6	22.9	42.2	38.2	9.0	17.3
취업 여부	취업	1,208	70.1	23.3	41.3	36.2	8.2	19.4
	미취업	1,094	67.6	23.9	42.9	39.0	9.1	14.7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68.0	30.1	42.2	31.2	9.0	17.0
	아파트	1,268	69.6	21.6	41.5	39.6	7.6	18.1
	연립/다세대/기타	596	68.2	23.4	43.1	37.6	10.6	15.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67.0	27.1	44.1	39.4	9.4	11.2
	100~200만원미만	420	71.5	23.6	42.6	37.6	10.9	13.0
	200~300만원미만	520	68.7	23.1	40.4	36.1	8.9	20.4
	300~400만원미만	447	63.8	26.3	42.4	40.2	10.9	14.2
	400~500만원미만	294	75.9	21.5	38.3	36.0	6.2	19.2
	500만원이상	432	68.1	21.4	44.8	36.7	5.3	2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69.4	23.5	42.0	35.9	7.6	20.5
	외벌이	980	69.6	23.2	41.8	37.7	9.0	16.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70.4	23.5	42.1	36.6	7.4	17.3
	도시지역	1,379	68.1	23.7	42.0	38.1	9.4	17.1

〈그림 6-59〉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



9. 가족 부문

본 절은 가족 부문과 관련한 출산 계획 및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이다

가. 저출산 정책

여성응답자 중에서 만 49세 이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향후 자녀 출산 계획 및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대상자의 83.2%가 ‘향후 출산계획이 없다’ 고 응답하였고, 16.8%만이 ‘출산계획이 있다’ 고 응답하였다. 출산계획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자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가 6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경제적 이유로’ (23.4%)가 차지했다. 이 외 ‘건강 때문에’ (4.3%),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2.6%),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2.4%),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서’ (2.2%) 등은 5% 미만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향후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들 내부에서도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학력별로는 고졸, 가구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으로 나타났다(〈표 6-65〉 참조).

다음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하였다. 우선, 여성응답자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해 〈표 6-66〉과 같이 ‘자녀양육비용 지원확대’ (43.9%)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다음으로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경감 등 교육관련 정책’ (20.8%),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13.8%),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의 제공’ (10.5%),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 (7.9%), ‘가족친화적인 직장, 사회환경 조성’ (2.9%)순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한 여성집단간 차이는 다음과 같다. 연령별로는 20대는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확대와 육아휴직제도’, 30대는 ‘자녀양육 비용지원’, 40대는 ‘교육관련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여성의 연령대별로 당면한 문제에 대한 요구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된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저학력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관련해 경제적인 필요를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성은 ‘자녀양육 비용지원 확대’, 미취업여성은 ‘교육관련 정책’이 다소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양육비용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지는 반면, ‘육아휴직제도’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생활권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도농복합지역은 ‘자녀양육비용지원 확대’, 도시지역은 ‘교육관련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6-65〉 출산 계획 및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출산 계획 없음	소계	현재 자녀 로도 충분 하다고 생각 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유로	일하 는데 지장이 있어서	아이를 말길 데가 마땅치 않아서	건강 때문에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 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	출산 계획 있음
계		1,173	83.2	100.0	64.2	23.4	2.4	2.2	4.3	2.6	1.0	16.8
연령별	19~30세미만	76	34.1	100.0	53.6	31.5	7.5	3.7	-	3.7	-	65.9
	30~40세미만	522	77.0	100.0	52.2	33.6	3.7	4.1	3.3	2.5	0.7	23.0
	40~50세미만	575	97.9	100.0	73.3	15.6	1.2	0.8	5.2	2.5	1.3	2.1
	50~65세미만	-	-	-	-	-	-	-	-	-	-	-
교육 정도	중졸이하	70	95.9	100.0	66.5	16.5	2.8	-	6.9	1.6	5.7	4.1
	고졸	514	87.4	100.0	65.1	25.7	1.5	0.6	3.6	2.6	0.9	12.6
	대졸이상	589	78.2	100.0	62.9	22.1	3.3	4.1	4.5	2.7	0.5	21.8
취업 여부	취업	598	85.0	100.0	62.6	22.0	4.0	3.2	4.1	2.8	1.3	15.0
	미취업	575	81.4	100.0	65.8	24.8	0.8	1.2	4.5	2.3	0.6	18.6
주택 형태	단독주택	149	86.6	100.0	61.9	28.9	2.5	0.8	3.1	1.4	1.4	13.4
	아파트	769	82.3	100.0	65.1	21.9	2.8	2.8	4.1	2.3	0.8	17.7
	연립/다세대/기타	255	84.1	100.0	62.5	24.3	1.3	1.3	5.3	3.9	1.3	15.9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22	85.0	100.0	56.0	28.5	-	-	10.1	5.5	-	15.0
	100~200만원미만	163	78.8	100.0	53.6	31.9	1.5	2.1	5.4	3.3	2.2	21.2
	200~300만원미만	279	80.9	100.0	63.9	28.0	1.6	1.3	2.6	2.2	0.5	19.1
	300~400만원미만	260	83.2	100.0	62.9	26.9	2.7	0.9	4.1	2.2	0.4	16.8
	400~500만원미만	181	83.4	100.0	69.6	16.4	2.6	3.5	2.0	3.9	2.0	16.6
	500만원이상	268	88.2	100.0	68.6	15.0	3.6	3.9	6.5	1.7	0.8	11.8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468	82.3	100.0	61.6	26.7	2.5	1.5	4.4	2.0	1.3	17.7
	도시지역	705	83.8	100.0	65.6	21.4	2.4	2.7	4.2	2.9	0.8	16.2

주 : 1) 경기도 만 19~49세 중 기혼여성인구

〈표 6-66〉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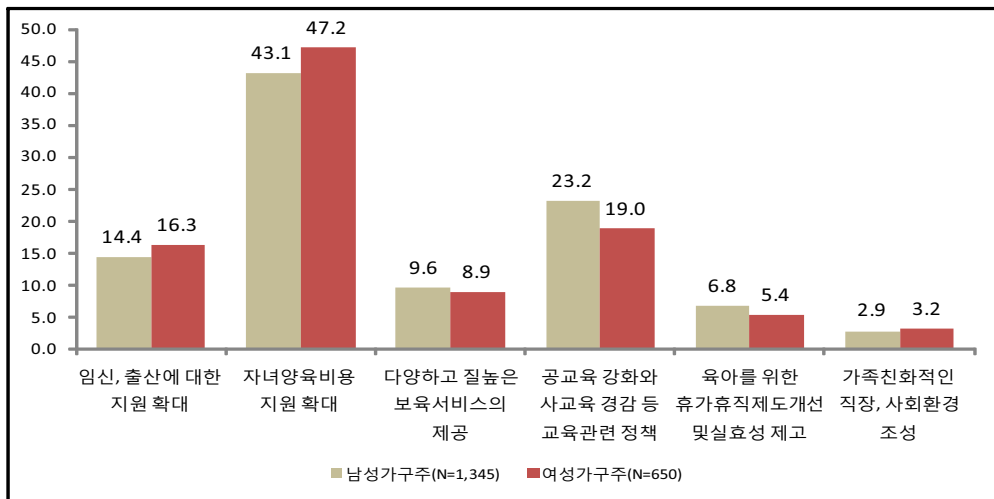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의 제공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등 교육 관련 정책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사회환경 조성	기타
계		2,302	13.8	43.9	10.5	20.8	7.9	2.9	0.2
연령별	19~30세미만	380	20.8	43.5	10.5	9.2	13.6	1.8	0.5
	30~40세미만	648	13.6	48.3	9.2	16.7	7.6	4.3	0.2
	40~50세미만	668	8.8	39.5	11.6	32.1	5.0	2.9	0.2
	50~65세미만	606	13.4	44.6	10.5	22.7	6.5	2.2	0.1
혼인 상태	미혼	422	20.6	40.6	11.2	11.0	13.4	3.0	0.3
	유배우	1,660	11.7	44.1	10.3	23.8	6.8	3.0	0.2
	사별/이혼	220	13.0	50.3	10.0	21.6	3.3	1.9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13.9	51.5	7.9	18.6	5.3	2.6	0.2
	고졸	984	14.0	45.8	10.3	21.4	6.3	2.1	0.1
	대졸이상	973	13.6	39.7	11.5	20.9	10.2	3.7	0.3
취업 여부	취업	1,208	13.7	45.6	10.0	19.4	8.0	3.3	—
	미취업	1,094	13.9	42.1	11.0	22.3	7.8	2.4	0.5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15.3	47.7	8.8	18.3	7.1	2.7	0.2
	아파트	1,268	12.9	41.1	11.5	21.8	9.2	3.3	0.3
	연립/다세대/기타	596	14.5	47.3	9.5	20.4	5.8	2.2	0.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11.9	52.5	7.3	21.8	4.0	2.4	—
	100~200만원미만	420	17.1	48.8	8.8	16.8	5.5	2.5	0.6
	200~300만원미만	520	14.6	49.0	10.2	17.9	5.8	2.5	—
	300~400만원미만	447	13.1	41.8	12.2	21.7	7.5	3.0	0.7
	400~500만원미만	294	12.1	40.6	11.2	23.6	10.5	2.0	—
	500만원이상	432	12.3	34.1	11.4	24.8	13.0	4.4	—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13.7	42.1	10.2	21.9	8.6	3.6	—
	외벌이	980	12.5	44.0	11.4	21.7	7.5	2.4	0.4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14.3	49.1	9.5	17.7	6.2	2.8	0.3
	도시지역	1,379	13.5	41.2	11.0	22.4	8.8	2.9	0.2

다음으로 가구주들에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조사한 결과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경감 등 교육관련 정책’(22.3%),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14.8%),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의 제공’(9.4%),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6.5%), ‘가족친화적인 직장, 사회환경 조성’(3.0%) 순으로 나타났다(〈부표 41〉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60〉과 같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를, 남성가구주의 경우 ‘교육관련 정책’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6-60〉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



나.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다음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질문한 우선순위를 묻는 항목이다.²²⁾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여성응답자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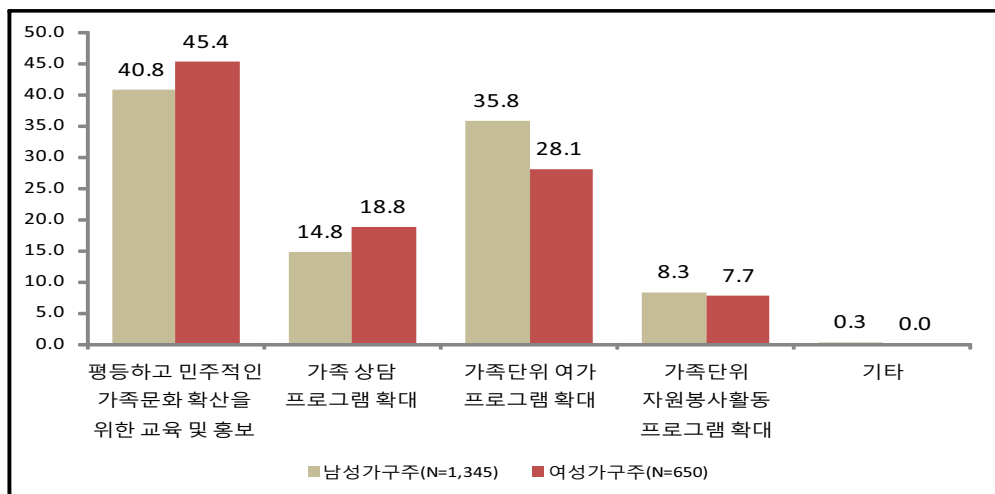
22) 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가족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문화 개선 캠페인 등을 의미한다. ② 가족 상담 프로그램 확대는 가족 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확대를 의미한다. ③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는 다양한 가족 여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가족여가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등을 의미한다. ④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활동 모델의 개발과 교육,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우수사례 개발 및 보급을 의미한다.

사결과는 <표 6-67>과 같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 (33.2%), ‘가족상담 프로그램 확대’ (16.5%),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확대’ (9.3%)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간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요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가족단위 여가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중 가장 필요한 정책에 대한 가구주 조사결과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41.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 (34.2%), ‘가족상담 프로그램 확대’ (15.7%),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확대’ (8.1%)순으로 나타났다(<부표 42>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61>과 같은 차이가 나타난다. 즉, 여성가구주는 남성가구주에 비해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6-6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



〈표 6-67〉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 상담 프로그램 확대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확대	기타
계		2,302	41.1	16.5	33.2	9.3	0.0
연령별	19~30세미만	380	35.8	16.6	41.5	6.1	-
	30~40세미만	648	37.8	16.8	38.1	7.2	0.1
	40~50세미만	668	44.3	13.6	30.3	11.8	-
	50~65세미만	606	45.4	19.1	23.9	11.6	-
혼인 상태	미혼	422	40.0	18.3	35.8	5.9	-
	유배우	1,660	40.1	15.9	33.4	10.7	0.1
	사별/이혼	220	50.9	16.4	25.5	7.2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48.7	19.0	22.5	9.8	-
	고졸	984	41.3	16.1	32.6	9.9	0.1
	대졸이상	973	38.3	16.0	37.2	8.5	-
취업 여부	취업	1,208	42.7	15.4	32.5	9.4	-
	미취업	1,094	39.2	17.6	33.9	9.2	0.1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43.5	18.9	26.0	11.6	-
	아파트	1,268	39.5	14.3	37.5	8.6	0.1
	연립/다세대/기타	596	42.6	19.2	29.1	9.1	-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54.3	17.6	20.9	7.2	-
	100~200만원미만	420	40.5	22.1	29.0	8.4	-
	200~300만원미만	520	37.1	18.5	34.7	9.7	-
	300~400만원미만	447	37.5	15.4	37.1	9.9	0.2
	400~500만원미만	294	39.4	15.3	34.1	11.2	-
	500만원이상	432	45.3	10.1	35.9	8.7	-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41.4	13.9	33.4	11.2	-
	외벌이	980	36.9	17.6	36.7	8.7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41.6	17.7	31.7	8.9	0.1
	도시지역	1,379	40.8	15.8	33.9	9.5	-

다.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다음으로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알아보았다. 우선, 여성 응답자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6-68>과 같이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휴가제도 활성화’ (35.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음 순위로는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 (25.3%),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19.8%),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19.6%)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보다는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응답자들의 집단별 차이는 다음과 같다.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가제도의 활성화 정책’ 이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았고, 40대와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30대 여성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하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는 ‘남성의 가정 내 역할교육 강화’, 고졸과 대졸 이상은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외별이 가구, 미취업 여성이 상대적으로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으로 ‘자녀양육 등을 위한 휴직제도’ 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다음으로 가구주 조사결과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휴가제도 활성화’ (36.3%)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26.9%),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20.6%),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 (16.1%)순으로 나타났다(<부표 43> 참조). 조사결과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그림 6-62>와 같이 차이가 있었다. 남성가구주의 경우 여성가구주에 비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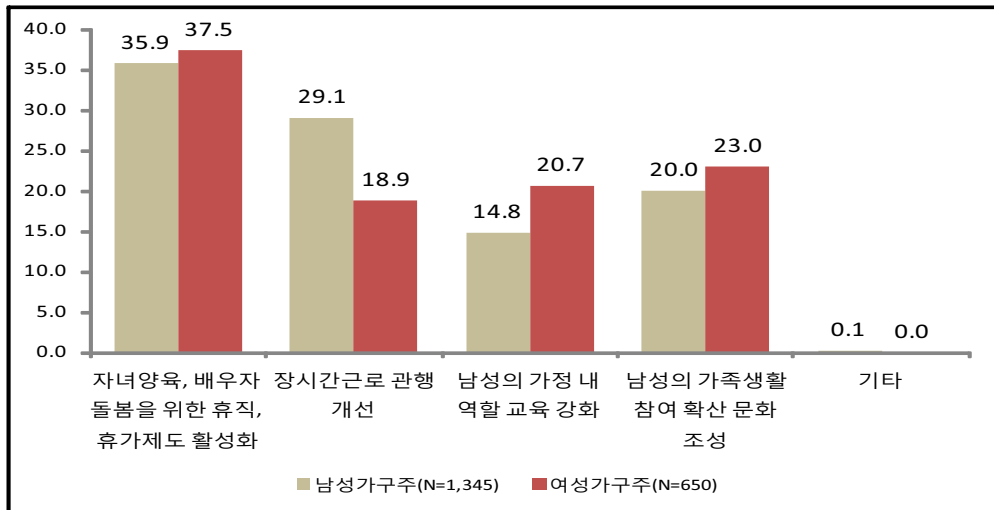
〈표 6-68〉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휴가제도 활성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기타
계		2,302	35.3	19.8	19.6	25.3	0.0
연령별	19~30세미만	380	40.8	18.3	17.7	23.2	-
	30~40세미만	648	37.9	23.0	16.9	22.0	0.2
	40~50세미만	668	30.1	18.0	22.7	29.1	-
	50~65세미만	606	33.4	19.6	20.5	26.5	-
혼인 상태	미혼	422	35.4	19.0	20.0	25.6	-
	유배우	1,660	35.3	20.7	18.4	25.6	0.1
	사별/이혼	220	34.8	15.3	27.4	22.5	-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36.3	19.1	25.1	19.4	-
	고졸	984	35.5	17.7	18.6	28.3	-
	대졸이상	973	34.8	22.1	18.7	24.3	0.1
취업 여부	취업	1,208	32.9	20.8	20.4	25.9	-
	미취업	1,094	37.9	18.7	18.6	24.7	0.1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34.8	14.0	23.0	28.2	-
	아파트	1,268	34.5	21.3	18.3	25.9	0.1
	연립/다세대/기타	596	37.3	20.8	19.8	22.1	-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36.3	15.5	31.7	16.5	-
	100~200만원미만	420	35.6	18.1	21.3	24.9	-
	200~300만원미만	520	41.1	20.2	14.4	24.3	-
	300~400만원미만	447	33.8	21.3	18.3	26.4	0.2
	400~500만원미만	294	31.0	19.1	19.8	30.2	-
	500만원이상	432	32.2	21.7	19.9	26.2	-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33.0	20.3	19.2	27.5	-
	외벌이	980	37.7	19.7	17.9	24.6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34.9	17.9	19.4	27.7	-
	도시지역	1,379	35.5	20.8	19.6	24.0	0.1

〈그림 6-6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



라.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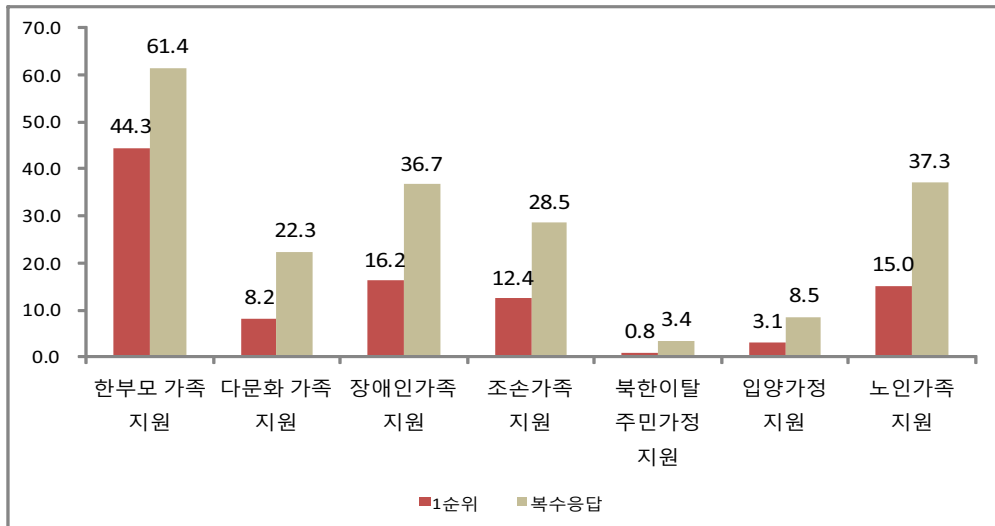
다음은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질문한 결과이다.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여성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는 ‘한부모 가족지원’ (44.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 (16.2%), ‘노인가족지원’ (15.0%), ‘조손가족지원’ (12.4%), ‘다문화가족지원’ (8.2%), ‘입양가정지원’ (3.1%), ‘북한이탈주민가정지원’ (0.8%)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표 6-69>와 같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인가족 지원’을 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사별/이혼 여성의 경우는 ‘한부모 가족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의 경우 ‘노인가족 지원’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여성응답자의 응답결과 1순위, 2순위를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도 <그림 6-63>과 같이 ‘한부모 가족 지원’이 6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노인가족지원’ (37.3%), ‘장애인가족지원’ (36.7%)이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고, ‘조손가족지원’ (28.5%),

‘다문화가족지원’ (22.3%)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복수응답 결과는 <표 6-70>과 같다.

〈그림 6-63〉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 vs 복수응답(여성)

(단위 : %)



〈표 6-69〉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여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부모 가족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장애인가 족지원	조손가족 지원	북한이탈 주민가정 지원	입양가정 지원	노인가족 지원
계		2,302	44.3	8.2	16.2	12.4	0.8	3.1	15.0
연령별	19~30세미만	380	47.1	7.4	18.2	10.8	0.5	4.8	11.3
	30~40세미만	648	49.3	9.9	15.4	9.4	0.8	3.1	12.3
	40~50세미만	668	43.8	7.9	14.8	13.6	1.2	2.8	16.0
	50~65세미만	606	37.2	7.5	16.9	15.8	0.6	2.0	19.9
혼인 상태	미혼	422	45.9	7.2	18.1	11.5	0.7	4.9	11.7
	유배우	1,660	41.9	8.6	16.2	12.9	0.9	2.9	16.5
	사별/이혼	220	58.1	7.6	11.7	10.7	—	0.4	11.4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41.0	4.9	14.7	17.1	0.4	1.9	20.0
	고졸	984	43.9	8.3	16.9	12.2	0.9	3.2	14.7
	대졸이상	973	45.7	9.2	16.0	11.1	0.8	3.4	13.7
취업 여부	취업	1,208	44.6	8.5	15.2	12.9	0.5	3.1	15.2
	미취업	1,094	43.9	7.9	17.3	12.0	1.1	3.1	14.8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44.0	7.4	17.7	12.3	0.5	2.8	15.4
	아파트	1,268	43.5	8.1	16.2	13.3	0.8	3.7	14.4
	연립/다세대/기타	596	46.1	9.0	15.2	10.7	1.0	2.1	15.9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46.4	4.3	16.8	11.3	1.2	2.3	17.8
	100~200만원미만	420	46.9	9.3	14.9	11.7	0.7	2.7	13.7
	200~300만원미만	520	42.5	8.9	17.1	13.7	0.5	3.1	14.4
	300~400만원미만	447	41.4	8.9	19.4	10.1	0.9	2.7	16.6
	400~500만원미만	294	43.9	7.6	14.3	15.0	1.6	5.4	12.2
	500만원이상	432	46.3	7.8	14.2	12.7	0.4	2.7	16.0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41.0	8.4	16.4	13.2	0.9	3.1	16.8
	외벌이	980	43.2	8.6	16.0	12.8	0.8	3.8	14.9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42.3	7.9	16.0	14.0	0.8	3.6	15.4
	도시지역	1,379	45.3	8.4	16.3	11.6	0.8	2.8	14.8

〈표 6-70〉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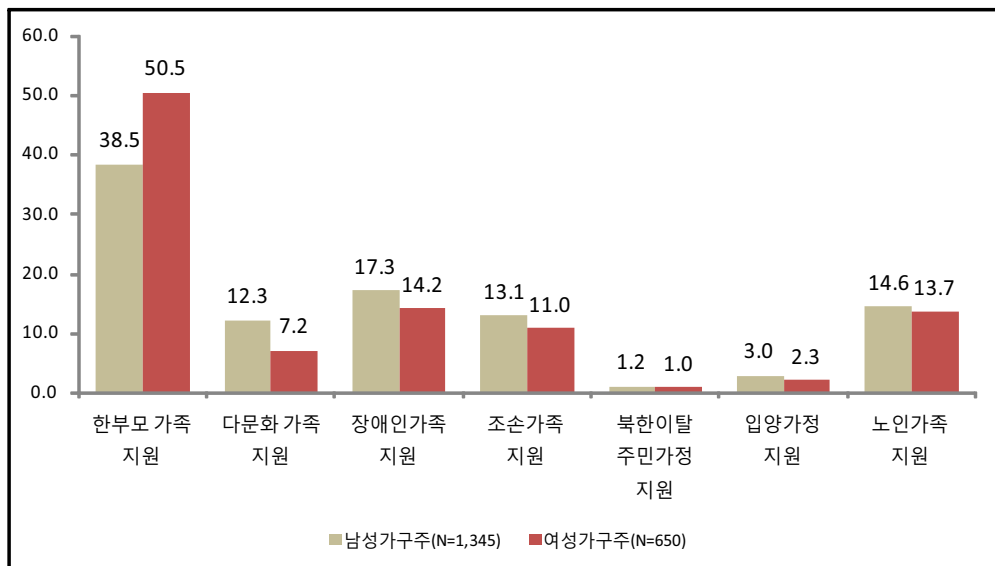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부모 가족지원	다문화 가족지원	장애인 가족지원	조손가족 지원	북한이탈 주민가정 지원	입양가정 지원	노인가족 지원
계		2,302	61.4	22.3	36.7	28.5	3.4	8.5	37.3
연령별	19~30세미만	380	65.1	25.2	39.7	25.1	3.2	10.5	28.6
	30~40세미만	648	67.6	27.6	36.3	25.0	2.8	8.8	30.7
	40~50세미만	668	61.9	19.5	34.2	30.0	4.5	8.5	40.2
	50~65세미만	606	51.1	17.2	37.2	33.5	3.2	6.6	48.6
혼인 상태	미혼	422	63.5	23.8	39.2	26.8	3.6	10.1	30.1
	유배우	1,660	59.6	21.6	36.6	29.1	3.6	8.5	39.4
	사별/이혼	220	69.8	23.5	31.2	27.7	1.5	5.5	38.9
교육 정도	중졸이하	345	55.4	15.8	34.1	36.4	1.9	5.0	50.1
	고졸	984	60.6	22.1	35.8	29.2	3.1	8.7	38.6
	대졸이상	973	64.2	24.5	38.4	25.3	4.2	9.6	31.9
취업 여부	취업	1,208	62.8	22.6	36.6	27.6	3.1	8.4	37.3
	미취업	1,094	59.9	21.9	36.8	29.5	3.8	8.7	37.4
주택 형태	단독주택	438	58.2	19.6	39.5	31.1	3.3	7.0	39.1
	아파트	1,268	61.7	22.5	35.0	27.9	3.8	9.0	37.7
	연립/다세대/기타	596	62.9	23.5	38.2	27.9	2.8	8.5	35.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9	57.1	20.5	37.2	33.1	5.0	5.3	40.7
	100~200만원미만	420	62.1	24.0	34.3	27.1	4.0	9.8	37.7
	200~300만원미만	520	60.3	23.6	37.2	29.2	2.8	7.7	37.0
	300~400만원미만	447	61.2	21.0	42.2	27.0	3.7	9.0	34.5
	400~500만원미만	294	61.6	21.4	33.7	31.6	2.6	11.7	35.7
	500만원이상	432	64.0	21.7	34.4	26.5	3.2	7.1	39.9
맞벌이 여부	맞벌이	799	59.3	21.3	37.2	27.9	3.4	8.9	40.2
	외벌이	980	61.3	21.8	35.9	30.0	3.5	9.5	36.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923	61.5	19.6	37.4	29.4	3.6	9.3	37.2
	도시지역	1,379	64.8	24.5	37.4	26.6	3.3	6.4	35.2

다음으로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가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순위는 ‘한부모 가족지원’이 41.1%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장애인가족지원’ (16.6%), ‘노인가족지원’ (14.5%), ‘조손가족지원’ (12.6%), ‘다문화가족지원’ (11.3%)이 10~16% 사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외 ‘입양가족지원’ (2.8%), ‘북한이탈주민가정지원’ (1.1%)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부표 44〉 참조). 조사결과를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그림 6-64〉와 같이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한부모 가족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그림 6-64〉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



논의 및 정책제언

1. 여성가족정책 우선순위
2. 여성경제활동 부문
3.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4.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
5. 여성건강 · 문화 · 여가 부문
6. 돌봄 부문
7. 가족 부문

본 연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여성가족정책에 대한 대규모 수요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정책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반해 향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성가족과 관련한 사회적, 정책적 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중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지만, 실제 정책대상자들이 여성가족정책에 있어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요구를 총체적으로 파악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총 1,995가구의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가구주와 여성가구원 3,647명(여성 2,302명, 남성 1,345명)에 대한 정책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여성·가족정책 향상도와 우선순위, 여성경제활동, 취약계층 여성복지, 여성폭력 및 안전, 여성건강·문화·여가, 돌봄(보육, 아동청소년), 가족 등 여성가족정책에 포괄되는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었다. 이하에서는 주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여성가족정책 우선순위

다음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한 11개 정책분야의 여성정책과 <건강가족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0개 정책분야의 가족정책에 대해 경기도민들은 어떤 분야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 여성정책 우선순위

여성정책 중 1순위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남녀가구주 및 여성응답자 모두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보육관련정책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민들이 여성정책으로서 보육정책에 관심을 두는 것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현재 경기도의 여성정책이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보육관련정책에 초점을 두는 것이 경기도민의 일반적인 인식과도 부합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성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2순위와 3순위를 포함한 복수응답 결과는 1순위 응답

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1순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했던 취약계층 여성 복지증진, 여성건강지원,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분야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여성정책을 추진할 때 참조해야 할 사항이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나타났다.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연령별로는 20대는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30대는 보육 관련 정책, 50대는 여성건강지원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사별/이혼은 취약계층여성복지증진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는 교육에서의 남녀평등과 여성건강지원, 대졸이상은 보육관련정책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보육관련 정책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소득이 낮을수록 취약계층 여성복지 증진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여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연령, 혼인상태, 학력, 가구소득 등에 따른 여성들 내부의 차이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가구에 대한 여성정책 1순위 조사결과는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여성가구의 경우는 여성정책의 우선순위로 보다 직접적으로 여성이 대상이 되는 정책(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을 남성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정책 우선순위

가족정책 중 1순위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남녀가구주 및 여성응답자 모두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이라는 응답이 현저하게 높았다. 또한 여성정책과 마찬가지로 가족정책 1순위에서도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가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차지했다. 가족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한 조사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은 경기도민들이 위기가정,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가족정책 보다 가족문화 확산, 자녀돌봄 지원,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등과 같은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가족정책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향후 경기도의 가족정책의 방향을 설

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특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정책도 중요하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한 가족문화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에 대한 요구가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경기도민이 취약계층과 관련한 가족정책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가족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복수응답 결과에서는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현저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이 상호중복 될 수 있는 정책영역과 대상을 포괄하는 것처럼 가족정책과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조사결과는 경기도민들이 가족정책의 범주로 정책의 1순위로는 복지정책의 대상으로도 포괄 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보다는 상대적으로 ‘보편적인’ 가족정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3순위까지 고려한다면 취약계층 관련 가족정책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여성정책 우선순위와 마찬가지로 가족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조사결과도 집단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여성응답자의 연령별, 혼인상태별, 학력별, 가구소득별 차이도 나타났다. 즉, 30대 여성은 자녀돌봄지원의 다양화를 상대적으로 중시하였다. 한편, 사별/이혼, 중졸이하, 가구소득이 낮은 여성은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를 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족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을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족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결과에는 여성정책 보다 자신이 당면한 가족문제에 관한 요구가 직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정책추진체계

경기도민들은 경기도의 여성 및 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사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성가족정책 정책추진체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조사결과는 예산의 확대 다음으로 ‘지역

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이었다. 즉, 경기도민들이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을 여성·가족부서와 관련부서의 업무협력, 도지사 등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의지,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전문성과 의지보다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향후에는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경기도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여성단체와 더욱 발전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여성단체와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여성단체에서도 경기도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2. 여성경제활동 부문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

경기도민들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해 여성들의 연령, 학력 등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자신의 조건에 맞는 구인업체, 구인조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취업알선서비스, 여성창업지원 강화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나타났다.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은 30대, 대졸이상, 아파트 거주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중졸이하, 연립/다세대/기타,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인 여성들의 요구가 높았다. 취업알선서비스는 50대 이상, 중졸이하, 단독주택 거주여성이, 여성창업지원 강화는 사별/이혼여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취업알선서비스와 여성창업지원 강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가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여성가구주는 보다 직접적으로 경제활동과 연관되는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조사대상 여성 중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연령, 학력 등 인적자본과 일자리의 불일치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이 적합하거나, 자신의 거주지 주위나 출퇴근이 가능한 근거리 범위 내에 알맞은 일거리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비율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책을 설계할 때 지역이라는 변수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즉, 직업훈련을 실시하더라도 그 지역의 사업체나 산업여건에 기반해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종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서비스를 위한 구인 사업체를 발굴할 때도 거리 및 교통시스템을 고려해 경력단절여성들의 지역적 접근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현재 일하고 있는 경기도 가구주의 약 80%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은 성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남성가구주의 경우 가정영역의 어려움(37.9%) 보다 직장영역의 어려움(42.2%)이 더 크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직장영역의 어려움(26.5%) 보다 가정영역의 어려움(42.9%)이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²³⁾ 또한 여성응답자의 경우도 직장영역의 어려움(23.3%) 보다 가정영역의 어려움(52.1%)이 두 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가족친화기업 인증사업이나 경기도의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등 근로문화를 개선하는 사업이 경기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임을 확인시켜 준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다음으로 필요한 정책으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우선순위, 가족정책 우선순위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경기도민들은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하나로도 보육관련 정책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

23) 가정영역의 어려움은 가사노동부담,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부담, 일하는 것에 대한 가족들의 이해부족을 포함한 결과이며, 직장영역의 어려움은 불규칙한 근무시간, 과중한 업무, 가정생활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회사 분위기를 포함한 결과이다.

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에 대한 수요는 여성응답자의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에 대해서는 50대 이상, 사별/이혼, 중졸이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는 30대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가구주는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반면, 여성가구주는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출퇴근시간 유연화 정책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한국 사회에서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법제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법제도적 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는 매우 더디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 법제도적 변화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 문화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으로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경기도민의 조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경기도민들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중에서 1순위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응답 결과를 3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1순위만을 분석한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지원’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민이 9개의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분야 중에서 위 두 분야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역시 앞서 제시한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이 여성경제활동 정책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한 1순위 조사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들 내부에서도 집단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청년 여성층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은 20대, 미혼이 상대적으로 중시하였다.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 예방 정책은 20대와 30대, 대졸이상, 가구소득 200-300만원 미만의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

하였다.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은 사별/이혼, 가구소득 100만원 이하 여성들의 요구가 높았다. 한편, 여성응답자의 복수응답 결과 여성근로자 차별방지에 대한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 문제가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해 1순위로 중요한 정책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요한 정책과제로 다뤄져야 하는 정책임을 시사한다. 특히, 20대, 미혼 여성들이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 정책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는 단 하나의 정책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운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여성정책 분야가 여성경제활동 분야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성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 중이지만 직접 사업으로는 주로 미취업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에 초점이 맞춰진 경향이 있다. 그러나 경기도민들은 경력단절 후 사후처방 차원의 정책보다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경력단절예방과 일·가정 양립지원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기도민의 조사결과는 향후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

한부모 여성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인 책임도 져야 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는 집단이다. 경기도민들은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자녀양육지원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이 외 모자보호시설 등 주거 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여성응답자의 집단별로 살펴보면, 경제적 자립지원의 경우 50대 이상, 중졸 이하, 1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자녀양육 지원 정책은 20대와 30대 여성, 대졸이상, 400-500만원 미만 여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다.

□ 미혼모 지원 정책

경기도민들은 <미혼모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와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두 가지 정책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지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다른 정책에 비해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성응답자의 집단간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는데,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가구여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앞서 살펴본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고 응답해 정책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드러났지만, 미혼모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두 20~30% 사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점은 향후 미혼모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그러나 미혼모 지원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미세하지만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나타났다는 사실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경기도민들이 ‘미혼모 문제’ 해결의 주체로 ‘미혼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미혼모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미혼부의 양육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여성노인 지원 정책

경기도민들은 <여성노인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 여성노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사도우미 파견 등 혼자 사는 여성노인 돌봄 사업, 여성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 관련 지원, 여성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관련 지원, 요양원(실버타운)과 같은 주거지원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들 정책에 대한 응답률은 모두 10% 후반에서 20% 중반의 비율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성노인 지원 정책이 어느 한 가지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대상별로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만, 여성노인 지원 정책으로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 제공은 다른 정책에 비해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의 경우 일반적으로 생계를 위한 다른 정책에 비해 후순위로 인식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여

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혼자 사는 여성노인 돌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20대 여성이 50대 이상 여성보다 10%p 정도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이는 여성노인 정책의 실질적인 대상자는 여성노인이지만, 정책의 효과는 자녀 등 다음 세대와 관련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이 세대 간 연관성이 있는 정책이라는 사실은 향후 여성노인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여성노인의 건강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사별/이혼,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남성가구주보다 생계비 지원과 요양원(실버타운)등 주거지원 강화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면서 장애인으로 차별과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대표적인 여성취약 계층이다. 경기도민은 <여성장애인>을 위해 도우미 및 차량지원 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음으로는 여성장애인의 장애유형별로 취업 가능한 직종개발, 직업교육 프로그램 실시, 취업알선 등 일자리 관련 지원도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지원 정책과 일자리 지원 정책의 중요성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고, 상호연관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향후 여성장애인 정책을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경기도민 조사결과 장애유형별 건강교육 및 운동프로그램 개발 등 건강 및 의료지원사업도 약 20%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외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은 남성가구주 보다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은 30대, 300만원대 가구소득 여성들이, 건강 및 의료 지원 사업은 50대 이상, 중졸이하 여성들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경기도민들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 지원>을 위해 언어소통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일자

리 관련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언어소통지원은 사별/이혼,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일자리 관련 지원은 미혼여성, 폭력예방 사업은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여성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가구주의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여성가구주는 언어소통, 일자리, 폭력예방과 같은 ‘결혼이주여성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에서도 다양한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이며, 정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은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정책에 해당한다. 궁극적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이 한국 사회에서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

□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지금까지 살펴본 취약계층 여성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과반수에 가까운 경기도민들은 한부모 여성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여성노인 지원, 미혼모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이주여성 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결과는 2%대로 다른 정책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1순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집단별로 다소 차이를 보인다.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은 40대, 사별/이혼 여성이, 미혼모 지원 정책은 20대, 미혼 여성이, 여성노인 지원 정책은 50대 이상,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저소득 가구 여성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취약계층 여성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잠재적인 정책대상자 집단의 이해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취약계층에 대한 여성정책에 대해 경기도민들이 무엇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4.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

□ 가정폭력 예방 정책

경기도민들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중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가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고, 그 외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 중에서는 중졸이하, 단독주택 거주 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평균보다 높았다.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는 가정폭력 가해자처벌 및 교정사업, 남성가구주는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이 모두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특히,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조사결과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사업이 가장 필요하다고 나타났는데 이 또한 예방의 효과가 있는 정책이다. 즉, 가정폭력을 행했을 때 강력하게 처벌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는 향후 관련 사건이 줄어들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권한은 없지만, 향후 가해자에 대한 교정사업은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성폭력 예방 정책

경기도민들은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의 경우도 가정폭력 예방 정책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43% 정도로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다음으로는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예방 정책에 대한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정폭력 예방정책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높

아질수록, 학력이 낮아질수록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높아졌다. 가해자 처벌 및 교정 사업은 연령이 낮은 집단, 취업여성, 아파트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 도시지역 거주여성이 상대 집단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예방 교육 정책과 달리 성폭력 예방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성가구주의 경우도 가정폭력 보다는 성폭력에 있어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권한은 없다.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교정사업과 성폭력 예방교육 등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다양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성매매 예방 정책

경기도민들은 〈성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정 사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여성들은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여성들의 경우 집단별로 차이를 보였다. 가정폭력, 성폭력 예방정책에 대한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성매매 예방 정책에 대해서도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더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연령이 낮은 집단, 학력이 높은 집단, 아파트 거주여성, 가구소득이 높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는 성매매 예방교육, 여성가구주는 성매수자에 대한 처벌 및 교정 사업을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향후 성매매 예방 정책을 추진할 때 이러한 여성 집단별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

경기도민들은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도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는 경찰의 순찰강화와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가 약 20%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외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으로 나타났고,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에 대한 요구는 매우 낮았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다. 경기도 여성의 경우 집단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별로는 20대의 경우 경찰의 순찰 강화를, 30대 이상은 방법취약지역 CCTV 설치를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 거주여성은 CCTV 설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은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은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도시지역 여성은 경찰의 순찰강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정책들이 다 중요하지만, 경기도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으로 방법취약지역 CCTV 설치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

경기도민들은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가장 중심지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결과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는 사실은 향후 정책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차량 중심의 도로가 아닌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도로 설계 및 보안을 의미하는 ‘차량-보행 도로 분리(보행 안전성 확보), 여성·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조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는 나타났다. 즉, 연령별로는 40대 이상은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구축, 20대와 30대는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조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취업여부별로는 취업여성은 차량-보행 도로 분리, 미취업여성은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조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 거주여성은 대중교통 체계 구축,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은 차량-보행 도로 분리,

여성과 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언뜻 볼 때 대중교통 관련 정책은 여성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여성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분야이다. 여성들의 경우 자가운전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낮은 반면 대중교통 이용률은 높고, 무엇보다 여성들은 아동을 동반하고 이동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향후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수행할 때 조사결과 나타난 경기도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지역이 넓어 도민들의 생활에 대중교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기반시설이 된다. 이 때 여성들의 연령별, 주택유형별, 생활권별 차이를 고려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여성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 분야는 다른 정책분야와 중복성이 낮고, 여성정책에서 다뤄지는 가장 고유한 분야에 속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의 1순위에 대해서는 경기도민들은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조사결과를 2순위를 포함해 복수응답으로 분석해 보면 1순위 결과와 달리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실은 경기도민들이 가정폭력 예방 정책 못지않게 성폭력 예방 정책도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이나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는 1순위 결과에서는 모두 5% 미만으로 나타나 우선순위에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런데 복수응답 결과에서는 이들 정책간에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즉, 2순위를 포함해 분석하면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에 대한 응답률은 현저하게 높아지는데(여성응답자 46.9%),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응답률은 여전히 낮기 때문이다(여성응답자 12.7%). 경기도민들이 다른 정책에 비해 성매매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자신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책이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을 만드는 정책과 달리 성매매 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해당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여진다.

〈여성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응답자 조사결과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우선, 1순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은 40대와 50대 이상, 중졸이하, 단독주택,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은 20대, 미혼, 대졸이상 여성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20대의 경우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필요성을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혼인상태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사별/이혼 여성의 경우 현재 배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미혼이나 유배우자 여성보다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실은 주목할 만 하다. 과거 경험이 현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생각된다. 주택형태별로는 단독주택에 비해 아파트나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의 경우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복수응답 결과도 1순위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다만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1순위와 달리 복수응답 결과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이 눈에 띈다. 경기도 여성에 대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 여성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정책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여성들 내부의 집단별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러한 여성 집단별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5. 여성건강 · 문화 · 여가 부문

□ 여성건강 정책

경기도민 약 3명 중 1명은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으로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을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

료,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지원, 여성특성화 질병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에 대해서는 모두 10%대의 비슷한 응답률을 나타냈다. 이처럼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을 제외한 여성건강 정책이 다른 정책에 비해 응답률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건강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별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여성건강정책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성별 및 여성응답자 집단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예상할 수 있듯이 여성들의 연령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여성응답자의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 정책은 20대와 30대, 미혼, 대졸이상 여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았다.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지원은 50대 이상, 사별/이혼, 중졸이하 여성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은 20대, 미혼, 맞벌이 가구 여성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는 사별/이혼,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여성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는 학력이 높을수록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가구주는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 남성가구주는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향후 여성건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기도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여성 집단별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문화 및 여가 관련 정책

경기도민 약 2명 중 1명은 <여성의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경기도 여성들이 문화 및 여가 생활(TV 시청 제외)에 불만족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54.0%)라고 응답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다음으로는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 다양한 시대간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문화,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문화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다. 저렴한 비용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는 40대,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여성,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은 400만원 가구소득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취업여성의 경우 미취업여성에 비해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 프로그램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미취업여성에 비해 문화생활에 있어 시간제약을 받는 취업여성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이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 확대’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주의 성별로는 여성가구주는 저렴한 비용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남성가구주는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를 상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여성정책 중에서 다른 분야의 정책과 달리 문화 및 여가생활 관련 정책은 특정한 정책대상이 있는 분야가 아니다. 즉, 모든 여성이 직접적인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야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여성 집단별 요구의 차이가 갖는 의미는 더욱 중요하다.

또한 본 조사결과 경기도 여성들은 소득활동 이외에 평소 가장 참여하고 싶었던 사회활동으로 과반수 이상이 ‘문화, 취미, 스포츠 관련 활동’이라고 답했다. 여성의 집단별 차이를 보면 연령별로는 20대는 문화예술교육, 30대는 직업능력향상교육, 50대 이상은 학력보완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구소득별로는 100~500만원 가구소득 여성들의 ‘직업능력향상교육’에 대한 요구가 100만원 미만 저소득 및 5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여성에 비해 높았다. 한편, 학력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은 학력보완교육, 도시지역 여성은 인문교양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러한 사실은 문화 및 여가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다. 예를 들어, 도농복합지역 여성의 경우 저렴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높지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에 대한 요구가 도시지역에 비해 높다.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 있어서는 비용의 문제와 함께 접근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문화시설은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인프라라는 점에 있어서 저렴한 문화프로그램의 확대에 일정 부분 선행되어야 할 정책이기도 하다. 따라서 조사결과는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여성을 위한 문화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성의 문제를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6. 돌봄 부문

□ 보육 정책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중 1순위를 질문한 결과 경기도민 약 2명 중 1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라고 응답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대는 경기도 여성들 중에서도 50대 이상, 중졸이하, 200만원 미만 가구소득, 도시지역 여성들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어린이집의 시설주체가 민간이 아닌 국공립이라는 것인데 경기도민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어린이집의 질’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간연장, 휴일보육, 야간 및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직장어린이집 확대,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향상이 약 10%대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 외 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서비스, 영아 전담 어린이집 확대,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장애아보육 지원확대, 가정파견보육서비스 확대,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는 5% 미만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지만, 양육수당확대의 경우 30대, 외벌이 가구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확대도 현재 취학 전 자녀가 있는 여성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취학 전 자녀양육 정책>에 대한 응답을 1~3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도 1순위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결국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직장어린이집 확대, 민간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에 높은 요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보육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설운영 주체가 누구이든, 보육대상 아동이 누구이든(영아, 장애아 등) 기본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 아동·청소년 정책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를 ‘일반’ 아동청소년 정책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으로 구분해 조사함으로써 정책분야별 요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했지만, 정책대상으로서 ‘일반’ 아동청소년과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집단은 아니다. 즉, 모든 아동청소년이 잠재적인 정책대상자가 된다. 한편, 본 연구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수요는 정책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을 직접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있는 성인 또는 보호자의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경기도민 약 10명 중 4명 이상이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이 차지했다. 여성응답자 집단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30대, 맞벌이 가구 여성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은 30대, 대졸이상, 400만원대 가구소득, 외벌이, 도농복합지역, 취학 자녀가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조사결과 아동청소년 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취학 자녀가 현재 있는 여성들은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보다도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주목할 수 있다. 가구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가구의 경우 남성가구에 비해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성응답자의 경우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를 2순위까지 합한 결과는 1순위 분석결과와 다르게 아동·청소년 인성교육이 방과 후 돌봄서비스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외 정책으로는 아동·청소년 상담지원과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은 약 10% 전후(1순위)의 비율을 차지했다. 아동·청소년 상담지원에 대해서는 사별/이혼,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여성의 요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와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집단별 요구에 따라 다양한 아동청소년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경기도민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이 외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저소득층·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이 약 10% 전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가구주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에 대한 조사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은 3순위까지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는 여성응답자 및 가구주 모두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또한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과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순위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들은 청소년 성범죄 예방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다음으로는 질병이나 장애 혹은 노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질문한 결과이다. 경기도민 약 2명 중 1명 이상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를 꼽았다. 정책대상으로서 노인의 경우 장애인 등 다른 정책대상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노인 관련 정책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결과이다. 그런데 노인 관련 정책 중에서도 가사간병도우미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비해 저렴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경기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노인 돌봄 정책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여성응답자의 조사결과도 집단별로 차이가 있었다.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에 대한 요구는 연령이 높을수록 현저하게 높아졌다. 학력별로도 차이가 보였는데, 학력이 낮을수록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지원 시설과 같은 시설 확대 정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았다. 주택형태별로는 연립/다세대/기타 거주여성의 경우가 다른 집단에 비해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다. 여성가구주도 저렴한 노인요양시설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남성가구주에 비해 높았다.

7. 가족 부문

□ 저출산 정책

경기도민들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자녀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향후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큰 것 과도 일맥상통한다. 여성들 내부에서도 경제적 이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은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 학력별로는 고졸, 가구소득별로는 100-200만원 미만, 생활권별로는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경감 등 교육관련 정책,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의 제공,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 가족친화적인 직장·사회 환경 조성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가 드러났다.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는 30대, 사별/이혼, 중졸이하, 300만원 이하 가구소득, 도농복합지역 거주여성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교육관련 정책은 40대, 400만원 이하 가구소득, 도시지역 거주 여성의 요구가 더 높았다.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수요는 20대, 미혼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수요가 여성내부에서도 연령, 소득 등 차이에 따라 더욱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를, 남성가구주의 경우 교육관련 정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아니다. 출산·양육·교육 등과 관련한 정책들이 유기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때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난다. 자녀양육 비용 확대 다음으로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등 교육 관련 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은 저출산 정책의 범주가 출산, 양육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 분야까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 즉, 최근 저출산 정책의 방향이 주로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양육의 문제에서 자녀교육의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하게 높은 현실을 감안하면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플랜이 요구되며, 특히 교육 분야에서 획기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경기도민 10명 중 약 4명은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으로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도 3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 가족상담 프로그램 확대,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응답자의 집단별 차이도 드러났다.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50대 이상, 사별/이혼, 중졸이하, 100만원 미만 가구소득 여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는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의 요구가 현저하게 높았다. 20대 여성의 경우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보다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응답(41.5%)이 더 높게 나타났다. 가구주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가구주는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반면,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족문화를 바꾸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여성 집단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 특히, 경기도민의 요구에 부응해 향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가족교육 프로그램,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경기도민들은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자녀양육·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도 활성화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200만원대 가구소득 여성들의 요구가 높았다. 대표적인 제도가 육아휴직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남성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남성의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은 무엇보다 실제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의 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10년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한 전체 41,733명 중 여성은 40,914명으로 98.1%를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819명으로 1.9%에 불과하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2년 78명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나 그 절대적인 수가 적어 사실상 제도의 실효성을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제도적으로는 남녀근로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성근로자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더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경기도민에 대한 본 조사결과 드러나듯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으로 도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양육·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가·휴직제도의 활성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등 제도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관련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검토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진다.²⁴⁾

이 외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다른 정책에 대해서는 가구주의 성별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남성가구주의 경우 여성가구주에 비해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이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클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여성가구주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남성의 가정 내 역할교육 강화를 상대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성가구주는 가족생활 참여의 조건으로 ‘시간’의 문제를, 여성가구주는 ‘문화와 교육’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한국 사회의 장시간근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칠레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²⁵⁾ 이러한 장시간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저하,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및 출산율 저하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장시간근로 관행개선을 위한 법제도 정비 관련 논의 진행 중이다.²⁶⁾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으로 인해 일자리 나누기(Work

24) 이와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형옥(2011), “육아휴직제도, 현실과 쟁점”, 이슈브리프 32호,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을 참조하시오.

25) OECD(2011), 「Employment Outlook」

26) 노사정위원회는 2010년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과 근로문화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 합의(2010.6.8.)” 결과를 발표했다. 합의문은 2020년 이내 실근로시간 1800시간대 단축, 중소기업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진단·관리 컨설팅 등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6월경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고용노동부장관(2012.1.30.)에 따르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시킬 경우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한편,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 (2011.1.31.)은 현재 26개인 근로시간특례업종을 10개로 축소하는 방

sharing)의 효과뿐만 아니라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가 가능한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경기도민들은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 중 한부모 가족을 위한 정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성응답자 중에서는 30대, 사별/이혼 여성이 다른 집단에 비해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이 더욱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장애인가족지원, 노인가족 지원, 조손가족지원, 다문화가족지원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 외 입양가족지원과 북한이탈주민가정지원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다른 가족지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한부모 가족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녀 가구주 모두 가장 높았고, 여성가구주는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1순위, 2순위를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도 역시 한부모 가족 지원이 가장 높았으나, 노인가족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아졌다. 노인가족 지원은 50대 이상, 중졸이하 여성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앞서 살펴본 취약계층 여성복지 분야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경기도민들은 한부모 여성에 대한 지원이 다른 취약계층 여성정책에 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성노인 지원 순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결과도 비슷하다. 조사에서 제시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은 모두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정책이지만, 본 조사결과를 통해 경기도민들의 우선추진 정책에 대한 상대적인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데 주요한 의의가 있다.

안을 제안한 바 있다. 근로시간특례업종을 축소할 경우 근로시간특례 적용대상 근로자수가 현행 400만 명 수준에서 140만명 수준으로 1/3정도 감소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 강희경. 2005. “‘건강가정’ 담론의 불건강성”. 「경제와 사회」, 제65호: 155-178.
- 고경환. 2009. “OECD국가들의 가족정책 유형화와 한국에의 함의-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한국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148호: 110-126.
- 공선영 외. 2008. 「건국 60년 지방여성정책연구 지역여성정책의 성과 및 전망」, 여성부.
- 권수현. 2011. “여성운동과 정부, 그리고 여성정책의 동학: 한국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0권 1호: 7-48.
- 김경희. 200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17-133.
- 김경희. 2002. “90년대 정부와 여성운동의 여성정책 프레임에 대한 분석”. 「젠더와 사회」, p.11-39.
- 김경희. 2003. “성인지적 예산 도입을 위한 시론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예산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19권 1호: 5-41.
- 김경희. 2005. “세계화와 한국 여성정책의 변화”. 「여성과 사회」, 제16호: 137-161.
- 김경희. 2005.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2호: 255-287.
- 김경희·신현옥. 2004. “정책과정을 통해 본 젠더와 평등개념의 제도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0권 3호: 171-206.
- 김미숙. 2008.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3개법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31권 3호: 27-55.
- 김애령. 2000. “지방정부 여성정책담당관의 역할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국제포럼 발표논문집: 75-90.
- 김영미. 2002. “거버넌스와 여성, 여성정책”.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6권 3호: 77-92.
- 김영옥. 2010. “저출산 사회의 여성정책 방향”. 한국행정학회 2010년도 제23회 국정포럼: 1-14.
- 김은경. 2008.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여성부의 협력사업 사례”.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사회과학연구소: 67-101.
- 김인숙. 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3호: 253-280.

- 김재인·임미영. 2004. “한국 여성정책네트워크에 관한 실태 분석”. 『한국행정학보』, 제38권 6호: 371-390.
- 김정란. 2009. “광주지역 여성의 의식과 삶의 질 연구”, 광주여성희망포럼.
- 김혜경. 2005. “건강가정기본법의 제·개정을 둘러싼 담론에 대한 연구”. 『여성과 사회』, 제16호: 67-102.
- 김희자. 2008. “서구의 가족법·가족정책의 변화와 포스트모던 가족모형”. 『경제와 사회』, 제78호: 194-222.
- 마정희. 2007. “성주류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여성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가? 함정인가?”. 『한국여성학』, 제23권 1호: 39-67.
- 문미경·임미영. 2004.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한국행정학회 2004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769-797.
- 박금식 외. 2009. 「제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보영. 2006.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가족정책: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상황과 복지』, 제22호: 119-153.
- 변화순·최운정. 2004. 「가족정책방향 정립 및 통합적 시행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손승영. 2002. “여성과 가족정책”. 『한국의 여성정책』: 235-258.
- 송다영. 2009. “영국가족정책의 변화와 한계”. 『상황과 복지』, 제28호: 51-94.
- 신경아. 2006.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 『페미니즘연구』, 제6호: 135-167.
- 신경아. 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여성 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연구』, 제10권 1호: 89-122.
- 양현아. 2006. “여성주의정책으로서의 한국 가족정책의 원리모색”.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정책』, p.325-364.
- 엄태석. 2010. “여성의 정치참여가 지역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고양시의회 여성위원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제13권 1호: 71-94.
- 오재림. 2004. “한국여성의 정치참여와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아시아여성연구』, 제43권 1호: 107-147.
- 원숙연. 2009. “수사 또는 현실?: 정부정책 영역에서의 성-주류화 기반구조”. 『국가정책연구』, 제23권 4호: 93-113.

- 윤경자. 2008. “건강가족을 위한 한국가족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건강가정기본법과 건강가정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4호: 85-101.
- 윤승희. 2010. “북유럽국가들의 가족화정책: 부모 휴가와 아동가정양육수당정책에 나타나는 아버지 상의 상이성”.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0년 학술대회』: 60-78.
- 윤홍식. 2005. “가족정책의 성 통합적 재구조화: 노동 주체의 관점에 근거한 일과 가족의 양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춘계학술대회자료집』: 469-492.
- 윤홍식. 2006a. “부모·부성휴가를 통해본 남성 돌봄 노동참여 지원정책 비교: 경제협력개발기구 15개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3호: 337-361.
- 윤홍식. 2006b. “OECD 21개국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3호: 341-370.
- 윤홍식. 2007.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2호: 327-354.
- 이승미 외. 2006. “한국 가족정책 수립과정 및 가족정책의 개념화”. 『한국가정관리학회 2006년 추계학술대회』: 107-118.
- 이정옥. 1999. “유럽통합에 따른 가족정책의 확산과 수렴”. 『한국사회』, 제2집: 239-266.
- 이진숙. 2002. “독일 가족정책의 변천에 대한 연구-주요 정당의 정책이념과 정책수단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5권 1호: 145-179.
- 이진숙. 2006. “독일 가족정책의 현황과 젠더적 성격”.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4호: 93-118.
- 이진숙·김태원. 2007. “EU국가들의 가족정책의 한국 가족정책에 대한 함의”. 『한독사회과학학회』, 제17권 1호: 101-130.
- 이진숙·김태원. 2011. “보수주의 복지국가들의 가족정책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연구-독일과 스위스를 중심으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 2호: 167-188.
- 장하진. 1997. “지방화시대 여성정책의 현황과 방향”. 『사회과학논총』, 제8권: 31-51.
- 장혜경 외. 2004. 『여성정책방향과 의제설정을 위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조사』, 여성부.
- 전광희. 2005. “유럽 선진국의 인구·가족정책의 전개과정-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사회과학연구』, 제16권: 211-236.

- 정광조. 1996. “가족제도의 변화와 가족정책의 방향”.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7권: 163-179.
- 정인선 외. 2010. 「민선5기 서울시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수요 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정현숙. 2006. “혼인율 특성, 변화요인 분석과 가족정책 제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6호: 177-193.
- 조연숙·김재인. 2008. “여성정책의 예산변동 추이분석: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기간(2009-2007)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363-378.
- 조영희. 2009.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단절된 균형과 불균형의 대조적 정책현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9년도 동계학술대회: 873-897.
- 조현옥. 2008. “한국의 여성정책결정에 여성운동이 미친 영향”. 한국행정학회 : 7-30.
- 한경현. 2010. “노르웨이 정당시스템과 가족정책의 연관성 분석”. 『상황과 복지』, 제30호: 16-196.
- 한승준·주재현. 200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업무의 표준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7권 1호: 119-141.
- 허훈 외. 2002. 「경기도민의 여성정책 요구조사」, 한국여성개발원.

부 록

1. 경기도 가구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분석 결과표
2.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여성가구주)
3.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여성가구원)
4.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남성가구주)

부록 1. 경기도 가구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분석 결과표

〈부표 1〉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법 및 제도(가구주)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매우	약간	항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항상도 평점
계		1,995	50.2	5.6	44.6	49.8	41.1	8.7	2.47
성별	남자	1,345	52.3	6.4	45.9	47.7	39.1	8.6	2.50
	여자	650	42.5	2.7	39.8	57.5	48.5	9.1	2.36
연령별	19~30세미만	106	42.7	3.5	39.1	57.3	44.9	12.4	2.34
	30~40세미만	487	46.6	6.0	40.6	53.4	43.0	10.4	2.42
	40~50세미만	662	52.2	4.8	47.4	47.8	39.7	8.1	2.49
	50~65세미만	740	53.1	6.7	46.4	46.9	40.0	7.0	2.53
혼인 상태	미혼	152	43.2	—	43.2	56.8	46.2	10.6	2.33
	유배우	1,635	51.0	6.2	44.9	49.0	40.5	8.5	2.49
	사별/이혼	208	46.0	4.0	42.0	54.0	44.2	9.8	2.40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45.5	7.7	37.8	54.5	46.8	7.7	2.45
	고졸	795	45.8	3.2	42.6	54.2	43.5	10.7	2.38
	대졸이상	909	54.7	7.0	47.7	45.3	37.9	7.4	2.54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50.2	5.8	44.3	49.8	40.9	9.0	2.47
	직장없음	404	50.5	4.6	45.8	49.5	42.2	7.3	2.48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49.3	6.1	43.2	50.7	41.7	9.0	2.46
	아파트	1,099	53.5	6.3	47.2	46.5	38.5	8.0	2.52
	연립/다세대/기타	525	43.1	3.7	39.4	56.9	46.8	10.1	2.37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0.9	5.5	45.4	49.1	40.8	8.3	2.48
	100~200만원미만	392	41.9	3.5	38.4	58.1	45.9	12.2	2.33
	200~300만원미만	455	52.7	5.4	47.3	47.3	40.8	6.5	2.52
	300~400만원미만	377	42.9	4.2	38.6	57.1	47.1	10.1	2.37
	400~500만원미만	233	54.0	8.4	45.5	46.0	36.6	9.4	2.53
	500만원이상	356	60.2	7.6	52.6	39.8	33.6	6.3	2.6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50.7	5.8	44.9	49.3	39.1	10.2	2.46
	도시지역	1,175	50.0	5.5	44.4	50.0	42.1	8.0	2.48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부표 2〉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정치참여(가구주)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항상되지 않았다			항상도 평점
				매우	약간		약간	매우	
계		1,995	59.8	9.0	50.8	40.2	33.5	6.7	2.62
성별	남자	1,345	60.5	10.1	50.4	39.5	32.9	6.7	2.64
	여자	650	57.3	4.9	52.3	42.7	35.9	6.9	2.55
연령별	19~30세미만	106	48.6	4.6	44.0	51.4	42.6	8.8	2.44
	30~40세미만	487	56.1	10.3	45.7	43.9	35.2	8.8	2.58
	40~50세미만	662	62.4	7.2	55.2	37.6	31.3	6.3	2.63
	50~65세미만	740	63.0	10.8	52.2	37.0	32.1	4.9	2.69
혼인 상태	미혼	152	59.2	4.4	54.8	40.8	32.6	8.2	2.55
	유배우	1,635	59.9	9.5	50.4	40.1	33.6	6.5	2.63
	사별/이혼	208	58.9	6.4	52.5	41.1	33.4	7.7	2.58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57.3	9.4	47.9	42.7	36.9	5.9	2.61
	고졸	795	53.2	7.1	46.2	46.8	37.4	9.4	2.51
	대졸이상	909	65.4	10.4	55.1	34.6	29.7	4.9	2.71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59.5	9.4	50.1	40.5	34.0	6.5	2.62
	직장없음	404	61.4	6.9	54.5	38.6	30.7	7.9	2.60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61.5	7.4	54.1	38.5	32.9	5.6	2.63
	아파트	1,099	62.7	10.2	52.5	37.3	30.7	6.6	2.66
	연립/다세대/기타	525	52.0	7.2	44.8	48.0	40.3	7.7	2.51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61.1	7.8	53.3	38.9	32.0	7.0	2.62
	100~200만원미만	392	51.0	6.9	44.1	49.0	40.5	8.6	2.49
	200~300만원미만	455	58.7	9.5	49.2	41.3	35.0	6.2	2.62
	300~400만원미만	377	55.7	7.7	48.0	44.3	35.3	9.0	2.54
	400~500만원미만	233	67.7	11.1	56.6	32.3	25.8	6.5	2.72
	500만원이상	356	68.0	10.7	57.3	32.0	28.7	3.3	2.75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59.3	9.0	50.2	40.7	33.2	7.6	2.61
	도시지역	1,175	60.0	9.0	51.1	40.0	33.7	6.3	2.63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부표 3〉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교육(가구주)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매우	약간	항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항상도 평점
계		1,995	70.8	18.7	52.1	29.2	23.0	6.2	2.83
성별	남자	1,345	71.4	19.8	51.6	28.6	22.3	6.3	2.85
	여자	650	68.7	14.6	54.1	31.3	25.6	5.6	2.78
연령별	19~30세미만	106	61.5	11.5	50.1	38.5	26.5	11.9	2.61
	30~40세미만	487	64.2	16.9	47.3	35.8	28.3	7.5	2.74
	40~50세미만	662	73.0	19.3	53.7	27.0	21.0	6.0	2.86
	50~65세미만	740	76.6	21.5	55.1	23.4	19.6	3.8	2.94
혼인 상태	미혼	152	64.5	8.4	56.0	35.5	28.6	6.9	2.66
	유배우	1,635	71.5	19.5	52.0	28.5	22.5	6.0	2.85
	사별/이혼	208	68.3	17.5	50.8	31.7	23.5	8.1	2.78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75.0	19.1	55.9	25.0	17.8	7.2	2.87
	고졸	795	67.1	15.8	51.3	32.9	24.7	8.2	2.75
	대졸이상	909	72.8	20.8	51.9	27.2	22.8	4.4	2.89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70.8	19.4	51.4	29.2	22.9	6.4	2.84
	직장없음	404	71.2	15.2	56.0	28.8	23.5	5.3	2.81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72.4	18.4	54.0	27.6	22.9	4.7	2.86
	아파트	1,099	71.8	20.7	51.2	28.2	22.5	5.7	2.87
	연립/다세대/기타	525	67.5	14.3	53.2	32.5	24.1	8.4	2.7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71.2	14.3	57.0	28.8	23.3	5.5	2.80
	100~200만원미만	392	64.6	13.9	50.7	35.4	27.4	8.0	2.70
	200~300만원미만	455	73.4	18.4	55.0	26.6	22.0	4.6	2.87
	300~400만원미만	377	64.4	19.5	44.9	35.6	26.3	9.2	2.75
	400~500만원미만	233	76.1	23.0	53.1	23.9	18.6	5.4	2.94
	500만원이상	356	76.9	21.4	55.5	23.1	19.2	3.9	2.94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69.5	18.4	51.2	30.5	23.8	6.7	2.81
	도시지역	1,175	71.5	18.9	52.6	28.5	22.6	6.0	2.84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부표 4〉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가족생활(가구주)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매우	약간	항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항상도 평점
계		1,995	63.7	9.7	53.9	36.3	30.2	6.1	2.67
성별	남자	1,345	65.1	10.4	54.7	34.9	28.7	6.2	2.69
	여자	650	58.3	7.2	51.2	41.7	36.0	5.7	2.60
연령별	19~30세미만	106	54.1	4.8	49.3	45.9	33.7	12.2	2.47
	30~40세미만	487	55.8	9.7	46.1	44.2	36.3	7.8	2.58
	40~50세미만	662	67.3	9.0	58.3	32.7	27.7	5.1	2.71
	50~65세미만	740	69.1	11.9	57.2	30.9	26.8	4.1	2.77
혼인 상태	미혼	152	54.1	1.6	52.5	45.9	38.6	7.4	2.48
	유배우	1,635	64.6	10.5	54.1	35.4	29.4	6.0	2.69
	사별/이혼	208	60.6	7.2	53.3	39.4	33.2	6.3	2.62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62.5	11.2	51.3	37.5	31.5	6.1	2.68
	고졸	795	60.0	7.1	52.8	40.0	33.2	6.9	2.60
	대졸이상	909	66.8	11.4	55.4	33.2	27.7	5.5	2.73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63.9	10.1	53.7	36.1	30.0	6.1	2.68
	직장없음	404	62.6	7.6	55.0	37.4	31.6	5.8	2.64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67.9	9.8	58.0	32.1	29.1	3.0	2.75
	아파트	1,099	65.6	11.1	54.5	34.4	27.8	6.6	2.70
	연립/다세대/기타	525	56.5	6.6	50.0	43.5	36.5	6.9	2.5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9.1	6.6	52.5	40.9	34.9	6.0	2.60
	100~200만원미만	392	59.1	6.3	52.9	40.9	36.0	4.9	2.61
	200~300만원미만	455	66.6	10.1	56.4	33.4	27.9	5.5	2.71
	300~400만원미만	377	60.2	8.9	51.3	39.8	31.7	8.2	2.61
	400~500만원미만	233	65.9	11.2	54.8	34.1	27.6	6.4	2.71
	500만원이상	356	68.4	13.6	54.8	31.6	26.1	5.5	2.77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63.7	10.7	53.1	36.3	29.6	6.6	2.68
	도시지역	1,175	63.7	9.3	54.4	36.3	30.5	5.8	2.67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부표 5〉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경제활동(가구주)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매우	약간	항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항상도 평점
계		1,995	63.6	10.4	53.3	36.4	29.1	7.3	2.67
성별	남자	1,345	63.9	10.6	53.2	36.1	28.6	7.5	2.67
	여자	650	62.8	9.5	53.3	37.2	30.7	6.5	2.66
연령별	19~30세미만	106	57.3	5.9	51.4	42.7	27.9	14.8	2.48
	30~40세미만	487	58.6	7.7	50.9	41.4	31.9	9.6	2.57
	40~50세미만	662	64.2	11.1	53.1	35.8	31.4	4.4	2.71
	50~65세미만	740	69.0	13.1	55.9	31.0	24.5	6.5	2.76
혼인 상태	미혼	152	60.0	3.8	56.2	40.0	30.5	9.5	2.54
	유배우	1,635	64.2	10.8	53.4	35.8	28.7	7.1	2.68
	사별/이혼	208	59.6	11.1	48.5	40.4	32.4	8.0	2.63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62.9	14.6	48.3	37.1	28.1	9.1	2.68
	고졸	795	60.7	9.0	51.7	39.3	30.8	8.5	2.61
	대졸이상	909	66.0	10.4	55.6	34.0	28.0	6.0	2.71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63.0	10.5	52.5	37.0	29.7	7.2	2.66
	직장없음	404	66.8	9.8	57.0	33.2	25.5	7.7	2.69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69.7	12.8	56.9	30.3	24.8	5.5	2.77
	아파트	1,099	64.5	11.0	53.5	35.5	28.5	7.0	2.68
	연립/다세대/기타	525	57.8	7.5	50.3	42.2	33.1	9.1	2.5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4.6	9.9	44.7	45.4	34.6	10.7	2.54
	100~200만원미만	392	62.4	7.9	54.4	37.6	31.1	6.6	2.64
	200~300만원미만	455	65.2	11.3	53.9	34.8	28.6	6.2	2.70
	300~400만원미만	377	59.2	9.6	49.6	40.8	32.3	8.5	2.60
	400~500만원미만	233	65.4	10.5	55.0	34.6	25.7	8.9	2.67
	500만원이상	356	69.5	12.5	57.0	30.5	24.7	5.8	2.76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61.5	11.9	49.6	38.5	30.8	7.8	2.66
	도시지역	1,175	64.7	9.6	55.1	35.3	28.2	7.1	2.67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부표 6〉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문화 및 의식(가구주)

(단위 : 명, %, 점)

구분		사례수	항상 되었다	매우	약간	항상되지 않았다	약간	매우	항상도 평점
계		1,995	66.3	11.6	54.7	33.7	27.4	6.3	2.72
성별	남자	1,345	66.3	12.0	54.3	33.7	27.2	6.5	2.72
	여자	650	66.5	10.2	56.3	33.5	28.0	5.5	2.71
연령별	19~30세미만	106	61.4	9.3	52.2	38.6	28.1	10.4	2.60
	30~40세미만	487	60.7	10.2	50.5	39.3	30.4	8.9	2.62
	40~50세미만	662	67.6	10.9	56.7	32.4	27.0	5.4	2.73
	50~65세미만	740	71.1	14.2	56.9	28.9	24.9	4.0	2.81
혼인 상태	미혼	152	61.9	5.6	56.3	38.1	29.5	8.6	2.59
	유배우	1,635	66.5	12.0	54.5	33.5	27.3	6.2	2.72
	사별/이혼	208	67.9	11.8	56.1	32.1	26.1	5.9	2.74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64.4	14.1	50.3	35.6	32.2	3.4	2.75
	고졸	795	63.7	9.5	54.2	36.3	29.0	7.4	2.66
	대졸이상	909	68.8	12.7	56.2	31.2	25.0	6.2	2.75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65.2	11.8	53.5	34.8	28.2	6.5	2.70
	직장없음	404	72.1	10.8	61.3	27.9	22.7	5.2	2.78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69.2	13.5	55.7	30.8	26.2	4.6	2.78
	아파트	1,099	67.2	12.9	54.3	32.8	26.2	6.7	2.73
	연립/다세대/기타	525	62.6	7.4	55.1	37.4	30.9	6.5	2.6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67.9	11.3	56.7	32.1	27.0	5.1	2.74
	100~200만원미만	392	61.0	9.2	51.8	39.0	32.8	6.2	2.64
	200~300만원미만	455	67.4	11.7	55.6	32.6	26.7	6.0	2.73
	300~400만원미만	377	62.0	11.3	50.7	38.0	29.5	8.4	2.65
	400~500만원미만	233	70.6	13.2	57.5	29.4	22.0	7.4	2.76
	500만원이상	356	71.3	13.2	58.2	28.7	24.3	4.3	2.8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62.3	13.0	49.2	37.7	29.3	8.4	2.67
	도시지역	1,175	68.4	10.9	57.5	31.6	26.4	5.3	2.74

주 : 4점 척도(1점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2점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3점 향상된 편이다, 4점 매우 향상되었다)

〈부표 7〉 여성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육 에서의 남녀 평등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의 참여 확대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	보육관 련 정책	여성건 강 지원	취약 계층 여성 복지 증진	농어촌 여성 복지 증진	평등한 가족관 계의 확립	여성 대한 폭력방 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국제 협력 강화	여성의 자원 봉사 활동
계		1,995	12.7	13.7	23.2	20.3	7.9	9.4	2.9	3.4	6.1	0.2	0.1
성별	남자	1,345	13.0	14.5	22.2	22.3	7.4	8.5	3.4	3.2	5.2	0.3	0.0
	여자	650	11.6	10.9	27.0	12.7	9.7	12.8	1.1	4.5	9.3	-	0.4
연령별	19~30세미만	106	15.4	11.4	17.3	23.2	3.5	6.7	3.5	1.0	18.0	-	-
	30~40세미만	487	11.3	12.2	21.3	30.4	5.6	6.3	1.7	2.9	7.6	0.5	0.1
	40~50세미만	662	12.6	13.7	25.5	19.0	6.9	10.5	2.2	5.1	4.5	-	-
	50~65세미만	740	13.3	15.7	23.9	12.3	12.0	11.7	4.5	2.7	3.4	0.3	0.3
혼인 상태	미혼	152	9.7	11.1	25.1	12.5	7.0	8.2	0.4	4.1	21.9	-	-
	유배우	1,635	12.9	14.1	23.1	21.7	7.7	8.8	3.2	3.1	5.1	0.3	0.1
	사별/이혼	208	12.7	11.7	22.7	10.1	11.1	19.1	0.9	6.6	4.1	-	1.0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13.8	9.3	17.8	13.0	17.2	17.0	6.6	2.9	2.0	-	0.5
	고졸	795	15.2	13.9	24.3	17.9	7.1	9.0	3.0	3.4	5.8	0.4	-
	대졸이상	909	10.6	14.6	23.6	23.9	6.3	8.0	1.9	3.6	7.3	0.1	0.1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12.7	13.2	23.4	21.3	7.7	8.8	2.9	3.5	6.1	0.3	0.1
	직장없음	404		12.8	16.4	21.8	15.1	9.0	12.6	2.9	3.3	5.9	-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12.5	11.4	20.8	17.3	9.8	13.0	8.1	1.6	4.7	0.4	0.2
	아파트	1,099	11.6	14.8	23.5	23.9	6.6	8.0	1.9	3.5	6.1	0.2	0.1
	연립/다세대/기타	525	15.5	12.6	24.0	13.9	9.7	10.6	2.0	4.4	6.9	0.2	0.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11.5	13.9	21.8	9.9	12.0	16.2	3.8	3.5	6.8	-	0.6
	100~200만원미만	392	13.9	13.1	23.1	15.4	8.6	12.3	3.2	1.9	8.1	0.4	-
	200~300만원미만	455	14.4	12.6	23.5	17.1	8.2	9.3	3.5	5.2	6.0	-	0.2
	300~400만원미만	377	10.4	15.6	23.7	22.4	6.8	10.1	3.0	2.1	5.5	0.3	0.2
	400~500만원미만	233	10.7	12.1	25.9	24.9	9.5	6.5	3.2	2.8	3.8	0.5	-
	500만원이상	356	13.7	14.6	21.1	26.9	5.6	5.8	1.4	4.6	6.2	0.2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11.8	13.8	22.8	22.7	7.8	9.2	4.1	3.3	4.5	-	-
	홀벌이	861	13.7	14.0	23.6	21.2	8.0	8.5	2.1	2.7	5.7	0.5	0.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13.9	12.9	21.7	18.6	8.0	7.5	6.4	3.7	6.7	0.5	0.2
	도시지역	1,175	12.1	14.2	23.9	21.1	7.8	10.4	1.2	3.3	5.8	0.1	0.1

〈부표 8〉 여성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교육 에서의 남녀 평등	정책 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확대	여성 경제 활동 활성화	보육관 련 정책	여성 건강 지원	취약 계층 여성 복지 증진	농어촌 여성 복지 증진	평등한 가족 관계의 확립	여성 에 대한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국제 협력 강화	여성의 자원 봉사 활동
계		1,995	19.6	27.3	47.9	41.0	30.0	35.8	10.9	14.7	29.5	2.4	4.8
성별	남자	1,345	20.4	28.7	47.5	43.2	28.0	35.0	11.9	14.9	28.5	2.2	4.9
	여자	650	16.4	22.0	49.2	32.9	37.5	38.6	7.0	13.9	33.2	3.2	4.2
연령별	19~30세미만	106	26.8	26.0	44.4	40.7	24.9	31.6	9.6	10.4	49.2	1.9	4.1
	30~40세미만	487	18.2	27.5	48.2	57.3	26.7	33.9	7.1	15.0	31.5	3.0	2.7
	40~50세미만	662	19.3	27.9	51.0	39.0	27.6	36.7	10.3	16.3	28.1	1.5	4.0
	50~65세미만	740	19.2	26.6	45.1	29.3	36.7	37.5	15.0	13.9	24.3	3.0	7.6
혼인 상태	미혼	152	16.5	27.0	49.2	34.5	28.9	33.8	7.9	15.4	46.7	3.8	2.7
	유배우	1,635	19.9	27.9	48.0	42.8	29.2	34.9	11.4	14.7	28.1	2.2	5.1
	사별/이혼	208	18.3	19.9	45.3	24.7	40.4	47.9	6.7	14.9	31.3	3.0	3.1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21.5	17.4	38.1	22.3	47.7	43.1	18.6	11.2	21.2	1.3	8.0
	고졸	795	22.9	26.5	50.2	35.8	29.1	35.2	11.2	14.2	28.2	3.0	4.2
	대졸이상	909	16.6	30.1	48.4	49.4	26.6	34.5	8.8	16.0	32.4	2.2	4.5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19.9	27.0	48.9	42.7	28.5	35.4	11.0	14.7	30.5	2.3	4.5
	직장없음	404	17.7	28.5	42.4	32.3	37.8	37.5	9.9	14.8	24.1	2.6	6.5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17.5	21.8	41.4	33.8	38.9	36.2	21.3	12.9	26.3	2.4	7.2
	아파트	1,099	19.0	29.4	49.8	46.4	25.2	34.1	8.8	15.6	29.7	2.4	4.7
	연립/다세대/기타	525	22.3	25.8	47.5	33.1	35.6	39.5	9.1	13.8	31.1	2.4	3.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15.4	21.4	45.0	23.4	45.7	42.2	8.6	9.7	27.4	2.7	2.6
	100~200만원미만	392	21.8	24.5	45.0	33.0	31.3	39.6	13.9	11.4	28.5	4.3	5.6
	200~300만원미만	455	20.8	25.9	48.1	38.2	31.4	36.6	11.1	15.2	30.8	1.2	6.5
	300~400만원미만	377	19.6	29.1	48.8	43.6	28.0	35.3	11.5	14.3	31.8	1.4	3.6
	400~500만원미만	233	14.4	28.6	46.9	47.2	30.7	32.4	12.1	17.1	27.7	3.9	3.3
	500만원이상	356	20.9	30.5	51.1	51.1	23.5	31.8	7.0	17.9	28.4	1.9	4.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18.3	27.1	48.3	44.2	29.7	35.1	13.2	15.4	31.5	2.0	4.7
	홀벌이	861	21.0	28.5	48.5	42.6	28.6	35.4	9.9	13.5	25.8	2.4	5.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21.7	25.7	44.3	40.4	28.3	31.8	20.4	14.2	26.2	2.4	6.3
	도시지역	1,175	18.5	28.0	49.7	41.3	30.8	37.7	6.1	15.0	31.2	2.4	4.0

〈부표 9〉 가족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남성의 가족 생활 참여 지원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부모 역할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가족 돌봄자 지원 서비스 강화	취약 가정 및 위기 가정 서비스 강화	가족친 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	가족친 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
계		1,995	38.2	9.8	17.4	6.8	7.4	1.5	2.3	11.3	3.8	1.5
성별	남자	1,345	39.5	9.9	18.0	6.3	5.9	1.4	2.1	11.2	4.1	1.7
	여자	650	33.6	9.3	15.4	8.9	13.0	1.8	3.0	11.9	2.6	0.6
연령별	19~30세미만	106	26.5	17.5	24.8	5.9	5.1	1.1	2.8	11.3	3.4	1.6
	30~40세미만	487	32.8	9.9	24.3	5.7	4.8	1.3	2.7	10.6	5.5	2.4
	40~50세미만	662	39.9	7.9	15.9	7.6	8.3	1.7	2.4	11.5	3.6	1.2
	50~65세미만	740	44.1	9.8	11.4	7.2	9.3	1.5	1.6	11.7	2.6	0.9
혼인 상태	미혼	152	31.3	12.7	15.6	4.8	10.3	1.1	3.9	17.1	2.2	0.9
	유배우	1,635	39.0	9.9	17.8	6.9	6.0	1.5	2.2	11.0	4.2	1.6
	사별/이혼	208	34.7	6.0	14.1	7.9	22.3	1.8	2.2	10.4	0.5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37.0	11.5	10.6	6.5	13.3	1.4	1.5	15.1	3.2	-
	고졸	795	37.2	9.4	19.7	7.4	7.5	1.6	2.5	9.9	2.8	2.1
	대졸이상	909	39.3	9.7	17.2	6.5	6.0	1.3	2.3	11.5	4.7	1.3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38.7	9.6	18.0	6.4	7.4	1.3	2.3	10.7	3.8	1.7
	직장없음	404	35.5	10.9	14.6	8.9	7.4	2.2	2.1	14.6	3.7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37.6	9.0	16.3	8.3	10.2	2.2	1.8	12.5	2.0	-
	아파트	1,099	38.7	9.2	18.5	6.5	6.8	1.2	2.5	10.4	4.3	1.8
	연립/다세대/기타	525	37.4	11.5	15.7	6.8	7.0	1.5	2.0	12.8	3.7	1.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33.9	6.8	17.6	9.2	14.4	1.8	2.3	11.9	2.1	-
	100~200만원미만	392	36.9	8.5	15.2	8.6	9.4	1.4	2.8	13.6	2.5	1.1
	200~300만원미만	455	39.2	7.0	17.8	5.2	6.3	1.5	3.0	13.4	4.3	2.1
	300~400만원미만	377	37.3	16.1	17.0	6.9	6.2	0.9	2.3	8.8	3.2	1.5
	400~500만원미만	233	40.8	7.9	17.6	7.3	7.2	1.6	0.5	12.2	3.6	1.1
	500만원이상	356	39.0	9.6	19.4	5.9	5.9	1.8	2.1	8.8	5.8	1.7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37.1	11.5	18.8	7.0	6.4	1.3	1.7	9.9	4.7	1.5
	홀벌이	861	40.4	8.3	18.0	6.4	5.8	1.4	2.4	11.8	3.6	1.8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40.2	8.5	15.8	6.9	6.7	2.5	2.9	11.6	3.3	1.6
	도시지역	1,175	37.2	10.4	18.3	6.8	7.8	0.9	2.0	11.2	4.1	1.4

〈부표 10〉 가족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건강한 가족 문화 확산	남성의 가족 생활 참여 지원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부모 역할 지원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	다문화 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가족 돌봄자 지원 서비스 강화	취약 가정 및 위기 가정 서비스 강화	가족친 화적인 직장 환경 조성	가족친 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
계		1,995	53.9	26.6	40.1	24.2	26.1	12.7	13.3	36.2	17.7	11.4
성별	남자	1,345	55.0	26.6	41.3	24.3	23.8	12.9	14.1	35.5	18.5	11.9
	여자	650	49.9	26.5	36.0	24.1	34.7	12.1	10.5	38.8	14.5	9.5
연령별	19~30세미만	106	45.8	33.7	46.3	23.5	26.4	17.2	15.7	29.1	21.9	12.1
	30~40세미만	487	49.1	30.6	53.6	22.9	20.8	10.1	16.0	34.0	21.5	11.1
	40~50세미만	662	56.4	23.5	35.9	25.9	27.7	13.2	11.0	37.4	16.9	11.9
	50~65세미만	740	57.5	24.6	31.6	23.8	28.8	13.2	12.9	38.7	14.1	10.9
혼인 상태	미혼	152	51.1	32.5	37.1	17.4	33.4	16.8	10.5	37.7	24.3	9.2
	유배우	1,635	54.4	27.0	41.0	24.6	23.8	12.6	13.5	36.1	17.9	11.9
	사별/이혼	208	50.5	16.0	32.5	25.6	48.2	10.6	13.8	36.8	8.5	6.7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51.2	18.8	34.9	19.7	34.6	15.8	12.6	43.3	11.6	4.1
	고졸	795	52.7	26.1	40.7	28.0	27.6	12.9	13.8	34.3	13.8	10.9
	대졸이상	909	55.5	28.8	41.0	22.3	22.9	11.8	13.1	36.1	22.1	13.5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54.4	26.7	41.0	24.2	26.1	12.6	13.6	35.7	18.2	11.3
	직장없음	404	51.6	26.3	35.4	24.4	26.1	13.0	11.6	38.8	14.7	11.6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51.2	20.1	36.9	32.6	28.5	14.9	10.3	37.7	14.5	11.3
	아파트	1,099	54.9	28.2	40.8	24.8	23.3	11.7	13.5	35.8	20.1	11.9
	연립/다세대/기타	525	53.4	27.0	40.7	17.7	31.0	13.6	14.9	36.2	14.0	10.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46.8	20.7	34.5	23.1	32.8	15.8	11.8	37.9	11.9	6.6
	100~200만원미만	392	50.0	21.0	36.2	30.0	34.0	13.8	11.3	39.4	11.8	10.5
	200~300만원미만	455	56.2	27.3	41.9	21.5	25.9	13.7	13.4	38.9	15.1	11.9
	300~400만원미만	377	54.8	30.6	41.7	22.6	21.2	11.8	14.9	35.9	19.2	11.7
	400~500만원미만	233	55.4	27.7	38.5	26.0	25.7	9.5	12.7	35.0	16.5	13.0
	500만원이상	356	55.6	28.0	43.1	22.8	22.0	12.4	14.3	30.7	27.0	11.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53.0	28.4	41.9	26.4	23.5	10.8	15.1	37.2	18.9	11.9
	홀벌이	861	55.3	25.6	41.3	22.8	24.8	13.7	12.2	35.8	16.7	12.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53.6	25.2	40.0	24.5	23.0	13.5	14.8	35.7	17.3	11.6
	도시지역	1,175	54.1	27.3	40.2	24.1	27.6	12.3	12.6	36.5	17.8	11.3

〈부표 11〉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예산의 확대	도지사 등 최고관 리 자의 관심과 의지	여성, 가족부 서와 관련 부서의 업무 협력	공무원 의 전문성 과 의지	경기도 가구주 의회의 전문 성과 의지	지역 여성 단체의 전문성 과 적극적 활동	일반 도민의 참여 통로 확대	기타
계		1,995	35.0	11.1	11.5	10.3	10.5	13.7	7.7	0.2
성별	남자	1,345	35.9	11.1	11.0	11.0	10.4	12.9	7.5	0.2
	여자	650	31.4	11.2	13.1	7.9	11.2	16.6	8.6	-
연령별	19~30세미만	106	36.6	9.2	7.2	5.5	14.1	13.1	12.0	2.4
	30~40세미만	487	37.3	11.1	10.3	7.2	11.4	13.9	8.8	-
	40~50세미만	662	32.9	10.8	13.7	12.4	10.5	13.8	5.9	-
	50~65세미만	740	34.7	12.1	11.1	12.0	8.9	13.4	7.8	-
혼인 상태	미혼	152	28.5	13.4	10.4	9.3	9.6	11.6	14.1	3.0
	유배우	1,635	35.5	10.8	11.4	10.6	10.7	13.6	7.4	-
	사별/이혼	208	34.2	13.3	12.7	7.5	9.6	16.7	5.9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40.1	14.9	9.6	8.8	8.5	12.4	5.7	-
	고졸	795	35.6	11.1	10.9	10.1	11.4	14.0	6.9	-
	대졸이상	909	33.3	10.3	12.3	10.8	10.3	13.7	8.9	0.4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35.0	10.9	11.4	10.8	10.4	13.8	7.5	0.2
	직장없음	404	34.9	12.2	12.0	7.7	11.1	13.2	9.0	-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42.3	8.6	13.0	14.1	7.8	8.8	5.4	-
	아파트	1,099	31.8	11.1	11.4	10.8	11.4	14.6	8.5	0.3
	연립/다세대/기타	525	37.6	12.8	10.7	6.9	10.1	14.5	7.4	-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40.0	13.5	10.4	9.1	8.7	9.3	9.0	-
	100~200만원미만	392	36.4	10.0	12.0	9.7	11.0	10.8	9.0	1.1
	200~300만원미만	455	33.6	10.1	10.7	8.9	10.4	18.3	7.9	-
	300~400만원미만	377	36.3	10.5	10.1	9.9	11.6	15.5	6.2	-
	400~500만원미만	233	34.2	12.2	10.7	12.1	10.3	10.7	9.7	-
	500만원이상	356	32.5	12.5	14.0	12.3	9.9	12.4	6.4	-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32.7	11.0	11.6	11.6	10.6	13.8	8.8	-
	도시지역	1,175	36.1	11.2	11.4	9.7	10.5	13.6	7.2	0.3

〈부표 12〉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	기타
계		1,995	22.4	31.1	19.6	26.7	0.3
성별	남자	1,345	22.7	31.5	19.4	26.1	0.3
	여자	650	21.1	29.4	20.5	28.9	0.2
연령별	19~30세미만	106	24.6	22.3	25.0	28.1	—
	30~40세미만	487	22.2	32.2	18.9	26.4	0.4
	40~50세미만	662	23.7	31.5	19.8	24.6	0.5
	50~65세미만	740	20.5	31.9	18.7	28.9	—
혼인 상태	미혼	152	19.5	24.2	23.2	32.5	0.5
	유배우	1,635	22.6	31.5	19.6	26.0	0.3
	사별/이혼	208	21.2	31.4	17.2	30.2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18.2	31.1	19.7	30.4	0.6
	고졸	795	24.0	27.4	22.3	26.2	0.1
	대졸이상	909	22.0	33.9	17.6	26.2	0.3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21.9	31.5	19.5	26.8	0.2
	직장없음	404	24.8	28.5	20.3	25.9	0.5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21.2	30.5	20.2	27.4	0.7
	아파트	1,099	23.4	32.4	17.0	27.2	0.1
	연립/다세대/기타	525	20.7	28.4	25.5	25.0	0.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23.4	20.4	24.7	31.5	—
	100~200만원미만	392	23.9	31.1	18.3	26.7	—
	200~300만원미만	455	16.8	32.5	23.2	26.8	0.6
	300~400만원미만	377	25.8	29.7	20.7	23.8	—
	400~500만원미만	233	24.7	29.1	15.5	29.8	0.9
	500만원이상	356	21.8	35.5	16.6	26.1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21.6	29.8	20.6	27.7	0.1
	홀벌이	861	23.1	33.4	18.8	24.4	0.3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19.0	34.4	18.8	27.2	0.5
	도시지역	1,175	24.0	29.4	20.0	26.4	0.2

〈부표 13〉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취업알선 서비스	여성창업 지원 강화	기타
계		1,995	32.7	33.7	19.1	13.0	1.4
성별	남자	1,345	33.0	34.8	18.3	12.6	1.4
	여자	650	31.8	29.8	22.2	14.8	1.4
연령별	19~30세미만	106	33.3	34.4	15.6	14.4	2.4
	30~40세미만	487	27.9	37.0	18.3	14.1	2.7
	40~50세미만	662	31.4	35.9	18.5	13.2	0.9
	50~65세미만	740	38.1	28.3	21.5	11.6	0.6
혼인 상태	미혼	152	32.2	34.4	20.9	10.9	1.6
	유배우	1,635	32.7	34.5	18.5	12.9	1.4
	사별/이혼	208	33.9	23.6	25.3	16.7	0.5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41.1	19.4	28.4	10.8	0.3
	고졸	795	34.0	30.3	19.9	14.4	1.5
	대졸이상	909	29.8	39.7	16.4	12.5	1.6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32.0	35.0	18.4	13.3	1.4
	직장없음	404	36.7	27.2	23.2	11.8	1.1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38.1	24.7	25.5	11.0	0.7
	아파트	1,099	30.2	37.6	17.3	13.3	1.6
	연립/다세대/기타	525	35.2	30.4	19.4	13.7	1.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41.7	24.0	22.2	11.5	0.7
	100~200만원미만	392	39.0	27.2	23.2	10.7	-
	200~300만원미만	455	31.2	33.4	18.5	15.5	1.5
	300~400만원미만	377	33.4	37.5	15.2	12.0	1.9
	400~500만원미만	233	23.4	36.6	23.2	14.7	2.0
	500만원이상	356	30.9	37.6	16.6	12.9	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31.0	33.5	18.2	15.5	1.8
	홀벌이	861	33.5	36.3	18.6	10.4	1.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32.7	36.1	17.1	12.7	1.4
	도시지역	1,175	32.7	32.5	20.2	13.2	1.4

〈부표 14〉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출퇴근 시간 유연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안심하고 말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	기타
계		1,995	34.3	15.2	13.2	17.8	19.3	0.2
성별	남자	1,345	35.9	14.0	11.6	18.4	19.9	0.1
	여자	650	28.1	19.6	19.0	15.6	17.0	0.5
연령별	19~30세미만	106	29.1	15.5	13.1	17.2	25.0	—
	30~40세미만	487	35.1	14.3	13.1	12.5	24.8	0.2
	40~50세미만	662	34.5	15.5	14.1	20.3	15.4	0.3
	50~65세미만	740	34.8	15.6	12.4	20.0	17.3	—
혼인 상태	미혼	152	37.7	19.2	12.3	16.9	13.0	0.9
	유배우	1,635	34.7	14.7	12.6	18.0	20.0	0.1
	사별/이혼	208	26.4	17.9	21.8	17.2	16.3	0.4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29.2	13.9	13.4	23.0	20.3	0.2
	고졸	795	33.3	15.3	14.0	20.3	16.9	0.2
	대졸이상	909	36.2	15.4	12.6	14.8	20.9	0.1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34.4	14.9	12.8	18.4	19.3	0.2
	직장없음	404	33.7	16.8	15.1	15.0	19.4	—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31.7	16.7	11.7	19.1	20.6	0.2
	아파트	1,099	37.3	13.8	13.3	15.8	19.7	0.2
	연립/다세대/기타	525	29.0	17.5	14.0	21.9	17.5	0.1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28.2	23.1	15.8	14.6	17.9	0.4
	100~200만원미만	392	33.9	14.8	15.1	20.7	15.3	0.3
	200~300만원미만	455	34.7	13.0	12.7	20.8	18.8	—
	300~400만원미만	377	33.0	14.7	11.6	19.3	21.2	0.2
	400~500만원미만	233	40.9	15.2	13.1	13.7	16.9	0.2
	500만원이상	356	33.5	16.2	12.7	14.0	23.6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34.8	15.3	12.8	18.7	18.2	0.1
	홀벌이	861	34.1	13.8	12.6	18.1	21.3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38.4	13.5	10.9	16.8	19.9	0.5
	도시지역	1,175	32.3	16.1	14.3	18.4	19.0	—

〈부표 15〉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년 여성층 의 진로 지도 및 경력 개발 지원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 절예방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취업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여성 창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	직업 능력 교육 과정의 다양화	남성 다수 직종에 여성 진출 확대	여성 근로자 차별 방지	기업의 가족 친화 문화 확산
계		1,995	13.0	28.2	11.1	23.3	4.5	8.4	2.2	6.2	3.4
성별	남자	1,345	13.3	29.3	10.5	22.7	3.8	8.3	2.4	6.1	3.7
	여자	650	11.9	24.1	13.0	25.4	6.8	8.7	1.4	6.5	2.1
연령별	19~30세미만	106	22.7	35.7	4.9	12.2	2.6	1.9	8.9	10.1	1.1
	30~40세미만	487	7.9	39.0	6.9	25.2	2.9	6.8	1.9	4.3	5.0
	40~50세미만	662	13.8	20.8	15.3	26.5	3.9	10.2	1.0	5.9	2.6
	50~65세미만	740	14.0	24.8	11.6	20.8	6.9	9.5	2.0	7.0	3.4
혼인 상태	미혼	152	17.0	31.0	9.0	12.0	3.9	9.5	5.2	10.9	1.5
	유배우	1,635	12.9	28.7	10.9	23.6	4.0	8.3	2.1	5.8	3.7
	사별/이혼	208	10.4	19.0	14.8	29.9	10.2	8.2	0.3	5.9	1.3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12.4	20.4	18.0	23.7	4.8	10.9	1.0	6.5	2.2
	고졸	795	14.2	28.1	10.8	22.7	5.4	7.5	2.8	6.2	2.4
	대졸이상	909	12.1	30.1	9.6	23.6	3.7	8.5	2.0	6.1	4.4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13.4	29.0	10.0	23.4	4.0	8.2	2.0	6.3	3.7
	직장없음	404	10.8	23.6	16.8	22.3	7.0	9.3	3.3	5.5	1.4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13.9	25.6	12.9	18.5	5.7	9.6	2.3	7.5	3.9
	아파트	1,099	12.3	29.5	9.8	24.8	4.2	8.4	2.1	5.1	3.8
	연립/다세대/기타	525	14.0	26.8	12.9	22.5	4.2	7.6	2.3	7.8	1.9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16.6	18.1	24.1	20.1	6.6	6.6	1.2	5.6	1.1
	100~200만원미만	392	14.7	23.9	12.6	19.3	6.5	9.7	3.9	7.3	2.2
	200~300만원미만	455	11.5	30.2	10.4	24.1	3.4	8.2	2.3	6.0	3.9
	300~400만원미만	377	12.2	31.5	10.8	24.8	3.4	7.9	1.5	5.0	2.9
	400~500만원미만	233	11.4	31.8	7.0	23.3	5.8	8.4	2.6	4.8	4.9
	500만원이상	356	13.6	27.4	8.8	25.4	3.3	8.5	1.3	7.6	4.1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12.7	29.9	9.6	25.7	3.4	6.5	1.1	6.9	4.1
	홀벌이	861	12.9	28.4	11.5	22.2	4.2	9.3	2.8	5.0	3.6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15.0	27.5	10.6	22.5	4.4	8.0	1.8	5.4	4.7
	도시지역	1,175	11.9	28.5	11.3	23.6	4.5	8.6	2.4	6.6	2.7

〈부표 16〉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년 여성층 의 진로 지도 및 경력 개발 지원	임신, 출산, 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 절예방	경력 단절 여성의 취업 지원	취업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지원	여성창 업 및 여성 경제인 지원	직업 능력 교육 과정의 다양화	남성 다수 직종에 여성 진출 확대	여성 근로자 차별 방지	기업의 가족 친화 문화확 산
계		1,995	25.0	49.1	28.8	51.9	18.5	30.8	8.5	26.2	16.2
성별	남자	1,345	25.8	50.6	28.1	51.9	17.4	31.2	8.4	25.6	17.6
	여자	650	21.6	43.3	31.3	51.8	22.6	29.5	8.9	28.2	10.8
연령별	19~30세미만	106	35.7	61.1	23.4	44.0	14.9	18.9	19.4	29.8	11.7
	30~40세미만	487	18.4	64.1	25.4	58.3	18.2	25.2	6.3	24.6	21.4
	40~50세미만	662	24.7	39.0	33.2	54.8	19.1	35.3	6.9	25.7	15.0
	50~65세미만	740	28.1	43.9	28.4	45.2	19.0	33.8	9.4	27.1	14.2
혼인 상태	미혼	152	32.5	53.3	22.5	43.7	24.0	26.0	12.7	35.0	7.9
	유배우	1,635	24.8	50.1	29.0	52.4	17.5	30.8	8.3	25.3	17.4
	사별/이혼	208	19.8	32.0	32.1	52.5	26.4	35.1	7.5	29.2	8.1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22.9	36.7	32.0	47.6	18.7	33.3	6.5	33.2	10.3
	고졸	795	25.1	47.2	26.6	50.4	21.5	29.9	10.0	26.9	13.8
	대졸이상	909	25.4	53.4	29.8	54.0	16.1	30.9	7.9	23.9	19.4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25.2	50.2	28.0	52.7	17.4	31.1	8.5	26.3	17.1
	직장없음	404	23.6	43.2	33.3	47.5	24.2	29.2	9.0	25.5	11.3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24.6	44.1	29.9	41.0	21.2	30.6	11.8	28.5	13.4
	아파트	1,099	25.0	50.7	29.3	54.2	16.2	31.6	7.9	25.4	19.0
	연립/다세대/기타	525	25.0	48.2	27.0	53.3	22.1	29.0	7.9	26.5	11.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23.1	40.6	37.1	41.2	24.2	30.6	10.4	25.5	6.5
	100~200만원미만	392	26.7	41.4	30.0	44.7	22.7	33.9	8.9	28.1	11.9
	200~300만원미만	455	23.1	47.7	30.0	52.3	18.9	32.7	8.3	26.2	17.2
	300~400만원미만	377	25.4	55.5	27.9	54.6	17.5	27.8	8.4	24.5	13.2
	400~500만원미만	233	25.2	56.0	26.9	56.4	17.4	29.2	8.8	22.9	18.8
	500만원이상	356	25.4	49.4	25.7	56.0	14.0	29.9	7.9	28.4	2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25.0	52.7	26.8	56.6	16.4	27.8	7.2	27.7	19.2
	홀벌이	861	24.4	48.9	31.6	49.1	18.1	32.8	9.2	23.4	16.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26.5	45.4	27.5	49.5	17.4	30.6	8.5	26.7	17.4
	도시지역	1,175	24.2	50.9	29.4	53.1	19.0	30.9	8.6	25.9	15.6

〈부표 17〉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녀양육 지원	경제적 지원 지원	모자보호 시설 등 주거지원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서비스	기타
계		1,995	30.6	53.3	9.8	6.1	0.1
성별	남자	1,345	31.0	54.0	9.6	5.4	0.0
	여자	650	29.2	50.6	10.8	8.9	0.5
연령별	19~30세미만	106	31.0	54.6	7.7	6.7	—
	30~40세미만	487	39.4	44.2	11.3	4.9	0.1
	40~50세미만	662	31.1	54.5	8.2	6.1	0.1
	50~65세미만	740	22.3	59.5	10.9	7.0	0.2
혼인 상태	미혼	152	31.2	48.0	10.4	9.8	0.5
	유배우	1,635	30.7	53.7	9.5	5.9	0.1
	사별/이혼	208	28.4	52.5	13.4	5.1	0.6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24.7	58.0	9.2	8.0	—
	고졸	795	30.6	54.3	9.7	5.2	0.2
	대졸이상	909	32.0	51.4	10.1	6.4	0.2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31.2	53.0	9.8	5.9	0.1
	직장없음	404	27.3	54.7	10.1	7.4	0.4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28.8	53.5	8.7	8.7	0.2
	아파트	1,099	31.9	51.6	10.6	5.7	0.1
	연립/다세대/기타	525	28.7	57.0	8.7	5.5	0.1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25.7	53.3	12.5	8.5	—
	100~200만원미만	392	28.0	54.7	9.3	8.0	—
	200~300만원미만	455	32.3	50.6	9.4	7.3	0.3
	300~400만원미만	377	31.9	54.2	9.2	4.5	0.2
	400~500만원미만	233	29.2	60.1	6.2	4.5	—
	500만원이상	356	32.3	49.7	12.8	5.0	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34.6	49.5	10.5	5.4	—
	홀벌이	861	27.6	57.7	8.2	6.3	0.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30.0	52.9	9.8	7.2	0.1
	도시지역	1,175	30.9	53.5	9.9	5.6	0.2

〈부표 18〉 미혼모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	기타
계		1,995	28.4	15.1	27.0	28.8	0.7
성별	남자	1,345	28.5	14.6	27.5	28.6	0.6
	여자	650	27.9	17.1	25.2	29.1	0.7
연령별	19~30세미만	106	25.7	21.6	30.6	19.7	2.4
	30~40세미만	487	31.4	14.8	25.7	28.0	0.1
	40~50세미만	662	28.8	13.5	25.2	31.8	0.7
	50~65세미만	740	26.1	15.6	29.3	28.4	0.6
혼인 상태	미혼	152	31.7	15.3	26.1	23.4	3.6
	유배우	1,635	28.4	15.0	27.1	29.1	0.5
	사별/이혼	208	25.2	17.4	27.8	29.1	0.5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24.7	18.0	29.5	26.1	1.7
	고졸	795	25.0	16.0	28.6	30.2	0.3
	대졸이상	909	31.9	13.8	25.3	28.2	0.7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28.1	15.1	27.1	29.1	0.6
	직장없음	404	29.9	15.3	26.8	27.0	1.1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29.7	16.9	27.5	24.8	1.1
	아파트	1,099	28.4	14.8	25.3	30.8	0.8
	연립/다세대/기타	525	27.6	14.8	30.9	26.5	0.1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23.7	16.5	31.9	26.7	1.1
	100~200만원미만	392	27.3	16.8	27.9	26.3	1.6
	200~300만원미만	455	28.0	19.1	26.4	26.2	0.2
	300~400만원미만	377	28.3	13.5	29.8	28.0	0.3
	400~500만원미만	233	29.5	12.0	23.3	34.8	0.5
	500만원이상	356	30.8	12.3	24.7	31.6	0.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27.5	14.8	27.4	29.7	0.6
	홀벌이	861	29.4	14.5	26.7	29.3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27.6	15.8	26.8	29.9	—
	도시지역	1,175	28.8	14.8	27.2	28.2	1.0

〈부표 19〉 여성노인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일자리 관련 지원	건강 관련 지원	혼자 사는 여성노인 돌봄사업	문화 및 여가관련 서비스 제공	생계비 지원	요양원 (실버타운) 등 주거 지원
계		1,995	17.5	18.0	18.8	7.1	23.2	15.4
성별	남자	1,345	17.6	18.6	19.3	7.2	22.2	15.0
	여자	650	17.3	15.8	17.0	6.7	26.6	16.6
연령별	19~30세미만	106	17.7	17.8	21.0	8.7	27.0	7.9
	30~40세미만	487	20.2	17.9	18.3	5.8	25.3	12.5
	40~50세미만	662	15.8	17.4	19.4	7.2	23.3	16.9
	50~65세미만	740	17.0	18.9	18.0	7.8	20.2	18.1
혼인 상태	미혼	152	23.6	13.5	22.9	6.5	19.7	13.7
	유배우	1,635	17.1	18.2	19.1	7.1	23.0	15.5
	사별/이혼	208	17.0	20.0	11.9	7.5	27.9	15.6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15.2	25.3	14.8	4.1	26.4	14.1
	고졸	795	16.9	16.1	19.2	7.3	23.7	16.7
	대졸이상	909	18.5	17.8	19.4	7.6	22.0	14.6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18.3	17.9	18.5	6.8	23.0	15.5
	직장없음	404	13.6	18.6	20.3	8.6	24.0	15.0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18.1	16.3	19.9	4.2	25.8	15.7
	아파트	1,099	18.1	18.0	19.0	8.2	21.7	15.0
	연립/다세대/기타	525	15.9	19.2	17.7	6.4	24.8	16.0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16.0	22.5	13.4	9.2	23.6	15.3
	100~200만원미만	392	17.5	18.3	20.5	5.5	26.2	11.9
	200~300만원미만	455	16.5	18.1	18.0	7.3	26.0	14.1
	300~400만원미만	377	19.6	17.0	19.0	6.2	23.9	14.5
	400~500만원미만	233	16.0	18.4	16.5	8.6	22.0	18.6
	500만원이상	356	18.1	17.0	21.3	7.7	16.9	19.0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19.1	17.3	18.3	6.3	22.2	16.8
	홀벌이	861	15.6	18.9	19.4	7.8	24.1	14.3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14.2	18.4	16.5	7.0	25.6	18.2
	도시지역	1,175	19.2	17.8	20.0	7.2	21.9	14.0

〈부표 20〉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기초 교육 지원	일자리 관련 지원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지원	건강 및 의료지원 사업	그룹홈 등 주거 지원	여성 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	기타
계		1,995	7.0	29.3	32.4	20.8	4.5	6.0	0.0
성별	남자	1,345	6.6	29.1	33.1	21.2	4.5	5.5	—
	여자	650	8.1	30.0	29.8	19.4	4.6	7.8	0.2
연령별	19~30세미만	106	8.2	33.0	32.1	17.7	3.5	5.5	—
	30~40세미만	487	6.0	26.3	38.0	16.8	6.3	6.4	0.1
	40~50세미만	662	5.7	31.3	32.8	19.7	4.4	6.1	—
	50~65세미만	740	8.8	28.8	27.3	26.3	3.3	5.5	—
혼인 상태	미혼	152	8.9	30.0	34.2	14.9	6.0	5.6	0.5
	유배우	1,635	6.8	29.2	32.7	21.0	4.4	5.9	—
	사별/이혼	208	6.5	29.5	27.8	24.5	4.8	6.9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8.6	28.7	25.8	29.3	2.2	5.4	—
	고졸	795	6.7	29.2	31.2	21.6	3.5	7.8	0.1
	대졸이상	909	6.8	29.5	34.9	18.3	5.8	4.7	—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6.8	29.6	33.4	19.7	4.6	5.9	—
	직장없음	404	7.8	27.8	27.0	26.7	4.1	6.3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8.7	27.8	27.8	25.1	3.4	7.3	—
	아파트	1,099	6.9	29.4	32.4	20.3	5.3	5.7	—
	연립/다세대/기타	525	6.0	30.0	35.3	19.4	3.4	5.8	0.1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6.2	32.8	29.9	21.2	2.3	7.6	—
	100~200만원미만	392	9.0	32.5	27.5	22.2	3.9	4.9	—
	200~300만원미만	455	7.0	26.2	31.3	22.8	5.9	6.6	0.2
	300~400만원미만	377	6.1	29.2	36.2	19.7	2.8	6.1	—
	400~500만원미만	233	5.1	29.3	31.9	20.4	6.6	6.7	—
	500만원이상	356	7.3	28.8	35.4	18.7	4.6	5.2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7.0	26.9	33.0	21.8	3.9	7.4	—
	홀벌이	861	6.8	30.6	32.6	20.5	4.8	4.7	—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6.9	26.8	31.7	23.0	5.3	6.3	—
	도시지역	1,175	7.0	30.5	32.8	19.8	4.1	5.8	0.1

〈부표 21〉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언어 소통 지원	일자리 관련 지원	다문화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결혼이주 여성 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법률 지원 서비스 강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확대	기타
계		1,995	27.0	16.9	21.1	11.2	8.7	3.1	11.9	0.1
성별	남자	1,345	26.5	16.7	22.0	11.2	8.2	3.2	12.0	0.1
	여자	650	28.6	17.4	17.4	11.3	10.7	2.7	11.6	0.2
연령별	19~30세미만	106	31.2	17.6	22.7	14.2	9.9	2.6	1.9	-
	30~40세미만	487	22.6	15.3	23.3	12.3	10.8	3.1	12.4	0.1
	40~50세미만	662	27.1	16.4	23.3	11.4	6.1	3.0	12.5	0.2
	50~65세미만	740	29.5	18.6	16.4	9.3	9.5	3.2	13.5	0.1
혼인 상태	미혼	152	30.7	21.9	17.3	4.7	13.0	3.7	8.2	0.5
	유배우	1,635	26.2	16.3	21.8	11.9	8.1	3.2	12.4	0.1
	사별/이혼	208	32.9	19.9	14.9	9.2	12.5	1.1	9.6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35.8	18.9	17.6	6.6	9.5	2.3	9.3	-
	고졸	795	27.5	18.3	19.2	10.8	9.0	3.7	11.3	0.2
	대졸이상	909	24.5	15.3	23.3	12.7	8.4	2.8	13.0	0.1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27.0	16.7	21.5	11.4	8.5	2.9	11.7	0.1
	직장없음	404	26.7	17.7	18.5	10.0	9.9	3.9	12.9	0.5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33.3	17.9	17.5	9.4	7.7	3.4	10.7	-
	아파트	1,099	23.6	16.3	22.7	13.5	8.8	3.0	11.8	0.2
	연립/다세대/기타	525	30.9	17.6	19.4	7.1	9.1	3.0	12.8	0.1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35.4	19.2	13.8	7.9	13.8	2.5	7.5	-
	100~200만원미만	392	29.3	21.7	16.8	11.0	7.4	3.4	10.3	0.2
	200~300만원미만	455	30.6	16.7	22.4	9.6	7.0	2.7	10.9	0.2
	300~400만원미만	377	23.8	15.8	23.3	10.4	12.2	2.6	11.9	-
	400~500만원미만	233	22.6	11.8	25.7	13.3	6.5	4.5	15.1	0.5
	500만원이상	356	24.1	16.2	20.7	13.9	7.9	3.1	14.1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27.0	15.3	21.8	12.7	8.3	2.8	11.7	0.2
	홀벌이	861	26.0	17.1	22.0	11.4	7.5	3.2	12.6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25.8	16.7	23.0	10.5	8.3	2.9	12.8	0.1
	도시지역	1,175	27.6	17.0	20.1	11.6	9.0	3.2	11.5	0.2

〈부표 22〉 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부모 여성 지원	미혼모 지원	여성노인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결혼이주 여성 지원
계		1,995	47.2	15.7	21.3	13.0	2.9
성별	남자	1,345	46.8	16.3	20.9	12.7	3.2
	여자	650	48.4	13.1	22.7	14.0	1.8
연령별	19~30세미만	106	41.8	26.9	15.8	10.7	4.8
	30~40세미만	487	49.3	18.4	15.6	14.0	2.7
	40~50세미만	662	52.2	15.3	20.1	10.5	1.9
	50~65세미만	740	41.2	10.8	28.8	15.4	3.7
혼인 상태	미혼	152	39.4	21.5	23.7	13.2	2.1
	유배우	1,635	46.9	15.7	21.3	13.0	3.0
	사별/이혼	208	57.3	9.5	19.0	12.4	1.8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39.6	8.9	31.6	16.4	3.4
	고졸	795	47.7	17.3	20.6	11.6	2.8
	대졸이상	909	48.5	15.9	19.5	13.3	2.9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47.9	15.9	20.7	12.5	2.9
	직장없음	404	43.0	14.2	24.5	15.6	2.7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49.1	8.9	25.7	13.2	3.0
	아파트	1,099	47.5	17.0	19.2	13.2	3.1
	연립/다세대/기타	525	45.2	16.8	23.4	12.3	2.3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40.8	7.6	32.9	15.9	2.8
	100~200만원미만	392	47.4	14.6	22.1	11.6	4.3
	200~300만원미만	455	44.3	18.7	18.8	15.4	2.8
	300~400만원미만	377	50.1	15.9	21.9	10.0	2.1
	400~500만원미만	233	43.7	19.1	23.5	12.9	0.8
	500만원이상	356	51.5	13.5	17.4	13.8	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47.7	14.0	22.0	13.4	2.9
	홀벌이	861	46.8	17.2	20.2	12.4	3.4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48.1	14.6	21.1	12.5	3.7
	도시지역	1,175	46.7	16.2	21.4	13.2	2.5

〈부표 23〉 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부모 여성 지원	미혼모 지원	여성노인 지원	여성장애인 지원	결혼이주 여성 지원
계		1,995	65.1	40.1	45.8	36.0	10.8
성별	남자	1,345	64.9	40.6	45.2	36.1	11.2
	여자	650	65.8	38.6	48.2	35.6	9.3
연령별	19~30세미만	106	62.4	53.7	35.2	32.5	14.4
	30~40세미만	487	66.4	51.9	35.8	34.3	10.7
	40~50세미만	662	69.8	38.8	45.7	34.9	8.4
	50~65세미만	740	59.5	28.1	57.3	39.5	12.5
혼인 상태	미혼	152	58.3	50.4	40.9	38.0	11.0
	유배우	1,635	64.9	39.9	46.0	36.0	11.1
	사별/이혼	208	73.9	33.3	47.5	33.4	6.7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59.4	27.7	59.4	39.1	11.9
	고졸	795	65.7	37.9	45.4	38.1	10.0
	대졸이상	909	66.0	44.8	42.9	33.6	11.1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65.7	41.3	44.5	35.6	11.0
	직장없음	404	62.2	33.9	52.6	38.1	9.7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64.3	30.1	49.8	40.5	11.9
	아파트	1,099	65.3	42.9	43.1	35.2	11.4
	연립/다세대/기타	525	65.1	40.0	49.6	34.8	8.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6.1	29.1	62.4	41.6	10.2
	100~200만원미만	392	65.3	36.0	47.3	36.6	13.2
	200~300만원미만	455	63.5	43.1	44.6	35.2	10.7
	300~400만원미만	377	67.4	39.9	44.8	36.2	9.5
	400~500만원미만	233	63.2	41.2	50.9	34.0	7.9
	500만원이상	356	68.6	43.9	38.1	35.3	1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63.2	39.6	47.2	37.9	10.5
	홀벌이	861	66.9	41.0	43.9	34.1	11.9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63.6	39.0	45.6	35.5	12.6
	도시지역	1,175	65.8	40.7	45.9	36.2	9.9

〈부표 24〉 가정폭력 예방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확대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기타
계		1,995	28.7	22.7	33.5	15.0	0.0
성별	남자	1,345	30.8	22.8	31.9	14.5	0.0
	여자	650	21.1	22.3	39.7	16.8	-
연령별	19~30세미만	106	29.2	16.5	40.0	14.4	-
	30~40세미만	487	22.2	26.7	34.6	16.5	-
	40~50세미만	662	32.0	21.9	32.4	13.7	-
	50~65세미만	740	30.8	21.6	32.2	15.3	0.1
혼인 상태	미혼	152	19.9	23.8	39.8	16.5	-
	유배우	1,635	29.8	22.7	32.5	15.0	0.0
	사별/이혼	208	23.0	21.7	41.2	14.1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39.2	17.4	32.6	10.8	-
	고졸	795	27.2	23.7	32.8	16.3	-
	대졸이상	909	27.5	23.1	34.3	15.0	0.1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29.6	21.6	33.5	15.3	0.0
	직장없음	404	24.4	28.3	34.0	13.3	-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34.4	22.1	30.8	12.7	-
	아파트	1,099	27.3	23.2	34.3	15.0	0.1
	연립/다세대/기타	525	28.5	21.8	33.4	16.3	-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30.4	26.5	29.0	14.2	-
	100~200만원미만	392	30.6	23.1	32.4	13.6	0.2
	200~300만원미만	455	27.8	24.8	30.5	16.8	-
	300~400만원미만	377	28.2	18.8	39.6	13.3	-
	400~500만원미만	233	24.0	22.6	33.6	19.8	-
	500만원이상	356	31.0	22.6	33.2	13.2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29.0	19.8	34.8	16.3	0.1
	홀벌이	861	30.2	24.4	31.2	14.2	-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28.4	23.2	31.3	17.0	0.1
	도시지역	1,175	28.9	22.4	34.7	14.0	-

〈부표 25〉 성폭력 예방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확대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	기타
계		1,995	23.5	14.1	43.2	8.0	11.2	0.0
성별	남자	1,345	24.1	13.9	43.0	7.7	11.3	-
	여자	650	21.1	14.6	44.1	9.3	10.8	0.1
연령별	19~30세미만	106	18.2	12.4	52.6	4.3	12.4	-
	30~40세미만	487	18.5	13.8	49.4	8.9	9.4	-
	40~50세미만	662	26.5	14.0	39.6	7.7	12.1	-
	50~65세미만	740	25.9	14.8	39.4	8.4	11.4	0.1
혼인 상태	미혼	152	17.4	15.3	49.9	8.0	9.3	-
	유배우	1,635	23.5	14.2	43.0	7.9	11.3	0.0
	사별/이혼	208	28.6	11.1	40.4	8.8	11.2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29.1	9.8	42.2	8.0	10.8	0.1
	고졸	795	21.9	16.8	41.1	6.9	13.2	-
	대졸이상	909	23.4	12.9	45.1	8.9	9.7	-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23.3	13.9	43.3	8.2	11.3	-
	직장없음	404	24.3	15.2	42.8	7.1	10.6	0.1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29.1	14.3	37.0	9.4	10.1	0.1
	아파트	1,099	22.4	13.8	45.7	7.5	10.5	-
	연립/다세대/기타	525	22.5	14.5	41.2	8.3	13.4	-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32.0	14.5	36.1	6.6	10.6	0.3
	100~200만원미만	392	24.8	17.6	41.3	9.2	7.1	-
	200~300만원미만	455	24.1	14.7	40.9	8.4	11.9	-
	300~400만원미만	377	18.9	11.1	49.7	9.3	11.1	-
	400~500만원미만	233	22.2	14.8	41.8	6.3	14.9	-
	500만원이상	356	24.4	12.7	44.1	6.7	12.0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20.9	14.5	43.8	7.3	13.4	-
	홀벌이	861	24.5	14.2	42.7	8.8	9.6	0.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24.9	14.7	41.2	7.6	11.6	0.1
	도시지역	1,175	22.8	13.8	44.2	8.2	11.0	-

〈부표 26〉 성매매 예방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성매매 예방교육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확대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정사업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계		1,995	21.2	12.1	44.8	14.8	7.2
성별	남자	1,345	22.3	11.6	43.9	14.5	7.7
	여자	650	17.0	13.6	48.0	15.9	5.4
연령별	19~30세미만	106	25.2	10.2	44.1	10.4	10.1
	30~40세미만	487	17.0	10.2	47.8	16.8	8.2
	40~50세미만	662	22.3	11.5	45.4	14.8	6.0
	50~65세미만	740	22.4	14.8	41.6	14.2	7.0
혼인 상태	미혼	152	14.3	12.8	50.0	17.9	5.0
	유배우	1,635	21.7	11.8	44.3	14.6	7.6
	사별/이혼	208	20.9	14.3	45.4	14.5	5.0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26.9	12.1	40.4	16.0	4.7
	고졸	795	20.5	13.3	45.4	12.9	7.9
	대졸이상	909	20.4	11.1	45.3	16.0	7.3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21.4	11.7	44.2	14.9	7.8
	직장없음	404	19.8	14.0	47.6	14.5	4.2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24.8	10.7	41.3	17.3	5.9
	아파트	1,099	20.9	11.0	45.9	14.8	7.4
	연립/다세대/기타	525	19.4	15.4	44.2	13.2	7.7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27.7	14.2	41.5	14.2	2.4
	100~200만원미만	392	24.5	12.4	42.3	14.8	6.0
	200~300만원미만	455	19.7	14.3	44.1	13.9	8.0
	300~400만원미만	377	17.3	11.1	48.6	14.2	8.9
	400~500만원미만	233	19.3	10.8	44.5	18.4	7.1
	500만원이상	356	22.8	10.3	45.1	14.3	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20.6	11.7	45.8	14.2	7.8
	홀벌이	861	21.9	11.5	44.0	15.3	7.3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21.2	11.2	45.2	15.8	6.6
	도시지역	1,175	21.1	12.5	44.6	14.3	7.6

〈부표 27〉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방법취약 지역 CCTV 설치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경찰의 순찰 강화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	기타
계		1,995	43.5	22.2	21.0	10.2	3.0	0.2
성별	남자	1,345	43.0	22.6	20.9	10.5	2.9	0.2
	여자	650	45.4	20.6	21.3	9.2	3.4	0.2
연령별	19~30세미만	106	33.8	29.7	21.6	11.6	3.4	—
	30~40세미만	487	45.7	18.9	20.8	10.9	3.5	0.1
	40~50세미만	662	43.3	23.3	21.0	9.6	2.6	0.2
	50~65세미만	740	44.3	21.8	20.9	9.9	2.9	0.2
혼인 상태	미혼	152	37.9	25.4	22.1	11.9	2.7	—
	유배우	1,635	43.7	22.1	20.8	10.2	3.0	0.2
	사별/이혼	208	45.9	20.3	21.3	8.9	3.5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44.6	22.1	23.6	7.5	2.2	—
	고졸	795	47.2	19.4	19.7	9.8	3.6	0.4
	대졸이상	909	40.4	24.4	21.3	11.2	2.7	—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43.1	22.5	20.7	10.6	3.0	0.2
	직장없음	404	45.6	20.3	22.5	8.3	3.1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43.4	20.2	24.3	10.9	1.3	—
	아파트	1,099	45.6	21.2	19.2	10.7	3.3	—
	연립/다세대/기타	525	38.6	25.7	23.0	8.8	3.3	0.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42.0	23.1	26.8	5.3	2.7	—
	100~200만원미만	392	45.5	18.9	20.4	11.3	3.8	—
	200~300만원미만	455	43.5	19.0	25.3	9.0	2.5	0.7
	300~400만원미만	377	44.0	25.8	16.1	11.0	3.0	—
	400~500만원미만	233	42.9	25.8	17.1	10.8	3.4	—
	500만원이상	356	42.0	22.5	22.0	11.0	2.6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41.2	22.2	22.9	10.9	2.7	0.2
	홀벌이	861	45.4	22.3	18.9	9.9	3.3	0.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43.9	23.5	18.3	10.9	3.4	—
	도시지역	1,175	43.3	21.5	22.3	9.9	2.8	0.2

〈부표 28〉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	유모차가 다닐수 있는 도로 조성	차량-보행 도로 분리	여성, 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	기타
계		1,995	59.4	7.4	21.3	11.7	0.2
성별	남자	1,345	59.8	7.5	21.2	11.4	0.1
	여자	650	58.0	6.7	21.7	12.8	0.8
연령별	19~30세미만	106	50.0	16.0	16.8	16.7	0.5
	30~40세미만	487	58.5	10.4	21.5	9.5	0.1
	40~50세미만	662	61.6	5.3	23.0	9.9	0.1
	50~65세미만	740	60.2	4.7	20.4	14.4	0.4
혼인 상태	미혼	152	61.1	5.7	19.7	12.0	1.4
	유배우	1,635	59.4	7.6	21.7	11.2	0.2
	사별/이혼	208	57.4	6.4	17.7	18.5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52.4	6.5	24.2	16.8	0.1
	고졸	795	58.6	5.5	21.6	13.9	0.4
	대졸이상	909	61.7	9.0	20.3	8.8	0.1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59.7	7.6	21.6	10.8	0.2
	직장없음	404	57.6	5.9	19.6	16.4	0.4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53.3	6.5	24.4	15.7	0.1
	아파트	1,099	61.5	7.1	21.7	9.5	0.2
	연립/다세대/기타	525	58.3	8.5	18.3	14.4	0.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2.4	5.2	23.8	18.3	0.3
	100~200만원미만	392	58.2	9.3	19.5	12.9	-
	200~300만원미만	455	56.4	10.1	21.7	11.3	0.5
	300~400만원미만	377	62.2	4.3	21.6	11.9	-
	400~500만원미만	233	60.7	6.5	19.8	12.8	0.1
	500만원이상	356	62.4	7.0	22.2	8.0	0.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60.1	5.9	22.9	10.9	0.3
	홀벌이	861	59.4	9.3	20.1	11.1	0.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57.1	8.1	23.2	11.3	0.2
	도시지역	1,175	60.5	7.0	20.3	11.9	0.3

〈부표 29〉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
계		1,995	44.8	28.6	2.4	22.2	2.0
성별	남자	1,345	45.0	28.3	2.4	22.8	1.6
	여자	650	44.3	29.7	2.5	19.8	3.7
연령별	19~30세미만	106	35.0	34.5	1.2	27.7	1.6
	30~40세미만	487	39.6	32.8	1.7	23.6	2.3
	40~50세미만	662	47.4	29.7	2.4	18.9	1.6
	50~65세미만	740	49.0	22.2	3.4	23.0	2.3
혼인 상태	미혼	152	37.2	38.5	2.9	18.6	2.8
	유배우	1,635	44.5	28.3	2.5	23.0	1.7
	사별/이혼	208	55.4	22.2	1.3	15.2	5.9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47.7	18.8	6.2	23.8	3.5
	고졸	795	45.2	27.9	2.8	21.5	2.6
	대졸이상	909	43.8	31.4	1.3	22.3	1.2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43.9	29.1	2.5	22.8	1.7
	직장없음	404	49.5	25.7	2.2	19.0	3.5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53.3	23.9	2.6	18.3	1.9
	아파트	1,099	41.8	30.3	2.6	23.5	1.9
	연립/다세대/기타	525	46.6	27.4	2.1	21.5	2.4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3.9	23.2	2.5	15.2	5.2
	100~200만원미만	392	45.5	25.4	3.9	23.2	2.0
	200~300만원미만	455	47.2	28.0	2.9	20.0	1.9
	300~400만원미만	377	42.9	30.7	2.5	22.1	1.8
	400~500만원미만	233	38.4	35.7	0.5	23.1	2.3
	500만원이상	356	44.4	27.2	1.6	25.5	1.2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43.6	29.5	1.8	23.3	1.8
	홀벌이	861	43.8	28.4	3.0	23.5	1.4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44.4	28.2	2.7	22.6	2.1
	도시지역	1,175	45.0	28.8	2.3	21.9	2.0

〈부표 30〉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
계		1,995	61.6	64.2	12.8	45.9	13.3
성별	남자	1,345	61.5	64.1	12.1	46.5	13.5
	여자	650	62.0	64.5	15.5	43.6	12.7
연령별	19~30세미만	106	47.0	77.9	9.9	50.8	13.3
	30~40세미만	487	58.9	66.9	9.6	47.8	15.2
	40~50세미만	662	66.3	63.9	12.9	43.0	11.9
	50~65세미만	740	62.6	58.6	16.3	46.3	13.3
혼인 상태	미혼	152	61.0	73.0	13.3	43.1	8.5
	유배우	1,635	61.0	64.1	12.4	46.6	13.6
	사별/이혼	208	70.0	56.8	17.5	39.4	14.3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62.2	55.7	19.3	45.8	14.2
	고졸	795	59.8	61.9	13.9	47.8	14.1
	대졸이상	909	62.9	67.9	10.5	44.5	12.5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60.9	64.9	12.7	45.8	13.7
	직장없음	404	65.5	60.5	13.7	46.7	11.0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67.8	60.7	13.1	43.8	11.2
	아파트	1,099	60.0	66.1	12.5	45.5	14.1
	연립/다세대/기타	525	61.6	62.0	13.4	48.4	12.7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67.7	54.6	18.7	44.7	13.3
	100~200만원미만	392	60.7	59.1	15.6	47.4	15.6
	200~300만원미만	455	65.2	61.5	12.9	45.3	13.3
	300~400만원미만	377	60.4	68.7	10.3	45.4	13.1
	400~500만원미만	233	54.5	74.6	13.5	42.7	11.5
	500만원이상	356	62.1	63.8	10.4	48.3	12.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58.9	67.6	11.8	47.2	12.6
	홀벌이	861	61.3	62.2	13.3	46.2	14.6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61.6	63.2	12.9	44.2	14.2
	도시지역	1,175	61.6	64.7	12.8	46.8	12.9

〈부표 31〉 여성건강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임신, 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지원	여성암 조기검진 지원	여성특화 질병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	생애 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여성 우울증 등 정신 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기타
계		1,995	15.7	11.0	27.0	13.3	16.9	16.0	0.1
성별	남자	1,345	17.8	10.3	25.0	13.0	18.3	15.6	0.1
	여자	650	7.7	13.8	34.4	14.5	11.7	17.6	0.3
연령별	19~30세미만	106	31.5	3.8	26.8	16.8	8.9	12.1	-
	30~40세미만	487	28.1	2.5	29.5	9.9	15.2	14.7	-
	40~50세미만	662	9.3	13.8	27.2	13.2	18.8	17.5	0.1
	50~65세미만	740	7.8	17.2	24.7	15.4	18.2	16.5	0.2
혼인 상태	미혼	152	14.7	2.0	43.7	16.3	12.6	10.6	-
	유배우	1,635	16.7	11.1	25.7	12.8	17.7	15.9	0.1
	사별/이혼	208	3.6	18.0	28.4	16.4	9.9	22.6	1.0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6.3	19.3	26.8	16.7	12.0	18.6	0.3
	고졸	795	16.3	12.6	26.5	11.9	15.7	17.0	-
	대졸이상	909	17.4	7.9	27.4	13.6	18.9	14.7	0.2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16.9	10.3	27.5	12.6	17.0	15.6	0.1
	직장없음	404	9.3	14.8	24.4	16.8	16.3	18.1	0.2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13.8	15.0	27.1	14.4	14.1	15.5	0.2
	아파트	1,099	17.0	10.2	26.7	12.4	18.3	15.3	0.1
	연립/다세대/기타	525	13.9	10.4	27.8	14.8	15.2	18.0	-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6.5	15.3	28.5	14.1	13.9	20.5	1.1
	100~200만원미만	392	15.0	10.3	29.4	15.0	12.1	18.2	-
	200~300만원미만	455	14.9	13.3	23.9	13.2	17.8	16.9	-
	300~400만원미만	377	17.3	10.1	26.5	15.7	17.5	13.0	-
	400~500만원미만	233	18.8	11.7	28.4	10.5	16.9	13.8	-
	500만원이상	356	16.7	8.2	27.4	10.8	20.5	16.2	0.2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16.2	10.9	28.7	11.7	16.9	15.5	0.1
	홀벌이	861	17.4	11.2	23.8	13.6	18.2	15.8	-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14.5	11.0	26.4	12.4	17.6	17.9	0.1
	도시지역	1,175	16.3	11.0	27.3	13.7	16.5	15.1	0.1

〈부표 32〉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정책(가구주)

(단위 :2 명, %)

구분		사례수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 확대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프로 그램 확대	문화, 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문화 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	기타
계		1,995	22.7	50.7	15.1	7.6	3.7	0.2
성별	남자	1,345	23.7	49.9	14.7	7.5	4.0	0.2
	여자	650	18.8	53.4	16.9	7.8	2.5	0.5
연령별	19~30세미만	106	22.1	43.6	19.2	8.2	7.0	—
	30~40세미만	487	23.9	51.1	15.4	6.4	2.7	0.4
	40~50세미만	662	22.7	51.4	14.9	7.1	3.6	0.2
	50~65세미만	740	21.8	51.3	14.1	8.8	3.8	0.2
혼인 상태	미혼	152	19.8	46.6	19.7	9.4	4.0	0.5
	유배우	1,635	23.3	50.5	15.0	7.3	3.7	0.2
	사별/이혼	208	17.3	56.3	13.2	9.0	3.7	0.5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17.5	54.3	14.3	8.3	5.6	—
	고졸	795	21.7	51.2	14.5	8.5	3.8	0.2
	대졸이상	909	24.6	49.4	15.8	6.6	3.2	0.3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23.1	51.3	15.4	6.8	3.3	0.2
	직장없음	404	20.5	47.6	13.7	11.6	5.9	0.7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23.8	49.8	16.1	7.5	2.9	—
	아파트	1,099	23.5	50.7	15.1	7.4	3.2	0.1
	연립/다세대/기타	525	20.1	51.3	14.6	7.9	5.4	0.7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14.7	58.0	10.9	11.9	4.0	0.5
	100~200만원미만	392	25.1	48.9	16.1	6.1	3.8	—
	200~300만원미만	455	22.7	49.5	13.8	7.8	5.9	0.3
	300~400만원미만	377	22.4	52.7	14.9	7.5	2.2	0.3
	400~500만원미만	233	20.5	52.9	15.8	8.2	2.6	—
	500만원이상	356	24.9	47.6	17.1	6.9	3.3	0.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22.8	48.5	17.1	7.3	4.0	0.3
	홀벌이	861	23.3	53.0	13.6	6.8	3.2	0.1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28.0	48.4	12.3	6.8	4.5	—
	도시지역	1,175	20.0	51.8	16.5	7.9	3.4	0.4

〈부표 33〉 취학 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국공립 어린이 집 확대	민간 어린이 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시간 연장, 휴일 보육, 야간 및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영아 전담 어린이 집 확대	직장 어린이 집 확대	장애아 보육 지원 확대	비정기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가정 파견 보육 서비스 확대	어린이 집 미이용 자에 대한 양육 수당 확대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계		1,995	51.7	9.9	12.6	3.1	9.3	2.4	2.2	2.3	3.1	3.4
성별	남자	1,345	53.0	9.4	12.4	3.5	8.5	2.4	2.3	2.1	3.4	3.1
	여자	650	46.9	11.5	13.0	2.0	12.3	2.3	2.1	3.0	2.1	4.7
연령별	19~30세미만	106	58.9	9.9	4.9	1.9	15.9	0.5	1.0	0.5	5.6	1.0
	30~40세미만	487	45.5	10.6	15.0	2.3	8.7	2.6	2.4	3.5	5.5	3.9
	40~50세미만	662	50.1	10.3	14.2	3.3	8.5	2.6	2.2	2.3	2.3	4.2
	50~65세미만	740	56.9	8.7	10.7	4.0	9.0	2.6	2.4	1.6	1.3	2.8
혼인 상태	미혼	152	53.9	9.8	10.0	0.9	13.6	2.2	1.7	2.9	1.2	3.8
	유배우	1,635	52.0	9.7	12.5	3.3	9.2	2.5	2.2	2.1	3.3	3.2
	사별/이혼	208	45.2	11.8	16.3	2.7	6.4	1.9	3.0	4.1	2.4	6.1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52.0	10.3	13.1	4.0	9.1	2.3	2.7	1.4	1.9	3.2
	고졸	795	55.6	8.9	11.6	2.8	8.6	2.1	1.0	1.6	3.3	4.5
	대졸이상	909	48.6	10.5	13.2	3.2	9.9	2.7	3.1	3.0	3.3	2.6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51.3	9.9	12.8	3.2	9.4	2.4	2.2	2.3	3.1	3.4
	직장없음	404	53.8	9.5	11.2	2.6	8.8	2.7	2.3	2.1	3.2	3.7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60.0	7.9	9.7	2.8	7.7	2.6	1.7	1.9	1.8	3.9
	아파트	1,099	47.6	10.2	14.0	3.6	9.9	2.6	2.5	2.4	4.2	3.1
	연립/다세대/기타	525	55.9	10.4	11.1	2.4	8.9	1.9	2.1	2.3	1.4	3.8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2.6	7.6	11.2	1.1	13.0	2.7	1.5	2.1	4.3	4.1
	100~200만원미만	392	56.0	8.6	12.0	2.5	8.5	2.7	2.3	1.7	2.1	3.6
	200~300만원미만	455	46.4	10.3	12.1	3.8	9.7	2.9	3.8	2.7	5.1	3.2
	300~400만원미만	377	53.6	13.4	11.4	2.8	8.1	1.1	1.4	1.6	2.4	4.4
	400~500만원미만	233	58.2	8.9	10.6	2.4	6.3	2.4	1.6	4.0	3.2	2.3
	500만원이상	356	47.3	8.2	16.5	4.6	11.6	2.8	1.9	2.0	2.1	2.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51.9	8.9	12.4	3.8	9.8	2.2	1.8	2.8	2.7	3.7
	홀벌이	861	52.1	10.7	12.3	3.1	8.9	2.6	2.5	1.6	3.7	2.6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48.8	9.6	15.3	3.5	8.0	2.4	2.0	2.2	4.7	3.3
	도시지역	1,175	53.1	10.0	11.2	2.9	10.0	2.4	2.3	2.3	2.3	3.4

〈부표 34〉 취학 전 자녀 양육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국공립 어린이 집 확대	민간 어린이 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시간 연장, 휴일 보육, 야간 및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영아 전담 어린이 집확대	직장어 린이집 확대	장애아 보육 지원 확대	비정기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가정 파견 보육 서비스 확대	어린이 집 미이용 자에 대한 양육 수당 확대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서비스
계		1,995	68.2	32.7	39.5	14.5	32.1	14.0	17.0	15.1	13.4	18.6
성별	남자	1,345	69.2	33.0	40.1	15.7	31.5	14.0	16.9	15.0	13.9	18.0
	여자	650	64.5	31.5	37.4	10.2	34.3	14.0	17.2	15.7	11.4	20.8
연령별	19~30세미만	106	77.1	30.8	42.7	16.2	31.8	12.8	11.3	9.1	21.0	22.5
	30~40세미만	487	66.9	34.8	40.0	15.3	31.2	9.7	17.9	17.4	19.4	21.5
	40~50세미만	662	64.3	34.7	41.0	12.5	30.3	14.7	18.7	14.9	10.2	20.0
	50~65세미만	740	71.2	29.3	36.8	15.6	34.8	17.3	15.7	15.1	9.6	13.7
혼인 상태	미혼	152	68.4	30.7	35.0	10.2	35.6	19.8	15.3	11.0	12.4	25.7
	유배우	1,635	68.6	33.2	39.8	15.2	32.1	13.5	17.3	15.0	13.8	18.1
	사별/이혼	208	62.0	28.1	40.4	10.6	28.3	15.7	14.3	20.7	8.9	18.6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67.9	30.2	34.9	16.2	32.7	17.2	14.9	15.3	8.4	13.3
	고졸	795	69.7	29.3	38.8	13.7	32.5	15.4	13.7	13.6	15.8	19.2
	대졸이상	909	67.1	35.9	41.2	14.8	31.6	12.2	20.0	16.3	12.6	19.4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67.8	33.1	40.7	15.0	32.5	13.5	16.9	15.5	13.6	18.2
	직장없음	404	69.9	30.9	33.6	12.3	30.1	16.7	17.2	13.4	12.3	20.7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73.6	31.3	33.3	13.3	26.7	17.3	12.3	16.0	13.1	21.6
	아파트	1,099	65.9	32.8	41.4	16.1	33.2	12.3	18.5	14.4	15.1	18.4
	연립/다세대/기타	525	70.2	33.5	39.0	11.6	32.9	16.0	16.3	16.3	9.6	17.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68.1	23.1	35.4	7.0	31.4	24.9	16.0	15.1	11.9	16.0
	100~200만원미만	392	71.3	32.9	37.4	13.5	32.9	14.8	13.9	12.6	14.2	17.7
	200~300만원미만	455	65.0	30.6	36.1	14.1	33.9	14.0	15.0	17.5	16.4	22.4
	300~400만원미만	377	68.8	36.4	42.6	13.2	26.9	14.7	18.3	13.8	12.6	18.0
	400~500만원미만	233	70.1	34.9	37.3	15.2	25.9	13.6	17.6	18.1	15.4	18.4
	500만원이상	356	67.0	33.0	45.1	19.5	38.7	9.3	20.4	14.5	9.1	16.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67.5	32.0	42.0	16.7	34.6	13.2	17.9	16.3	11.6	17.8
	홀벌이	861	69.7	34.2	37.8	14.1	30.9	13.1	17.2	14.1	15.3	18.4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65.3	30.3	40.3	16.9	31.4	12.3	15.4	14.2	14.6	20.5
	도시지역	1,175	69.6	33.9	39.1	13.3	32.4	14.9	17.7	15.6	12.7	17.7

〈부표 35〉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아동, 청소년 상담 지원	아동,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아동, 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 교육	아동, 청소년 인성 교육	아동,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계		1,995	47.0	11.2	6.9	7.2	26.8	0.8
성별	남자	1,345	48.2	11.1	6.7	7.2	26.0	0.8
	여자	650	42.7	11.8	8.0	7.0	29.8	0.8
연령별	19~30세미만	106	52.1	9.7	1.6	7.1	28.6	1.0
	30~40세미만	487	51.6	8.9	4.8	6.3	27.8	0.5
	40~50세미만	662	42.2	12.5	8.9	9.0	26.2	1.2
	50~65세미만	740	47.0	12.3	8.0	6.0	26.2	0.5
혼인 상태	미혼	152	47.0	11.2	2.3	5.6	32.7	1.2
	유배우	1,635	47.3	11.0	6.9	7.2	26.7	0.8
	사별/이혼	208	42.8	14.0	11.4	8.6	23.0	0.3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46.3	13.8	7.0	6.9	25.3	0.7
	고졸	795	47.6	13.1	7.4	8.0	22.9	1.0
	대졸이상	909	46.7	9.2	6.6	6.6	30.2	0.7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48.0	10.6	6.9	7.5	26.2	0.8
	직장없음	404	41.7	14.6	6.8	5.6	30.2	1.0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51.6	11.6	5.6	7.1	23.6	0.5
	아파트	1,099	45.2	10.3	7.4	7.4	28.9	0.8
	연립/다세대/기타	525	48.3	13.2	6.8	6.8	24.0	0.9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39.4	21.6	4.3	7.5	25.9	1.4
	100~200만원미만	392	49.6	13.0	5.6	8.5	22.7	0.6
	200~300만원미만	455	48.2	12.4	7.8	4.5	26.5	0.5
	300~400만원미만	377	49.0	8.7	8.1	8.2	25.7	0.3
	400~500만원미만	233	40.7	10.8	7.7	7.7	32.8	0.2
	500만원이상	356	47.6	7.8	6.3	7.5	28.8	2.0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50.1	11.3	5.3	7.2	25.3	0.7
	홀벌이	861	45.2	10.7	8.4	7.5	27.4	0.8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44.6	11.0	5.4	8.8	29.2	1.1
	도시지역	1,175	48.2	11.3	7.7	6.4	25.7	0.7

〈부표 36〉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아동, 청소년 상담 지원	아동,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아동, 청소년 직업체험 및진로 교육	아동, 청소년 인성 교육	아동,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계		1,995	60.0	27.1	19.9	27.6	57.0	6.1
성별	남자	1,345	61.3	26.8	20.1	28.4	55.2	5.8
	여자	650	54.9	28.4	19.4	24.8	63.6	7.2
연령별	19~30세미만	106	66.3	27.9	13.1	22.7	57.6	12.3
	30~40세미만	487	67.6	25.6	17.8	24.4	55.4	7.1
	40~50세미만	662	51.7	26.5	22.0	33.2	57.4	7.2
	50~65세미만	740	60.7	28.9	21.3	25.8	57.8	2.5
혼인 상태	미혼	152	57.7	28.3	11.5	27.1	65.6	8.3
	유배우	1,635	60.6	26.8	20.2	28.0	56.1	6.0
	사별/이혼	208	53.4	30.3	23.9	23.6	60.2	5.8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61.7	32.0	18.7	25.3	57.4	2.8
	고졸	795	61.3	26.9	19.6	30.1	54.6	5.2
	대졸이상	909	58.5	26.1	20.5	26.3	58.7	7.6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60.9	26.1	20.1	28.2	56.4	6.1
	직장없음	404	55.0	32.4	19.0	24.9	60.2	6.2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62.3	28.9	19.3	25.6	56.2	5.0
	아파트	1,099	57.8	26.6	20.3	27.0	58.5	7.3
	연립/다세대/기타	525	63.6	27.3	19.4	30.5	54.0	4.1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3.9	42.1	16.5	22.8	60.5	3.3
	100~200만원미만	392	62.2	30.3	17.0	29.6	54.2	5.1
	200~300만원미만	455	62.0	25.6	21.9	26.4	54.0	7.7
	300~400만원미만	377	61.3	23.2	21.6	28.6	58.2	4.4
	400~500만원미만	233	56.7	26.3	18.4	28.0	61.3	6.8
	500만원이상	356	58.1	25.5	20.8	27.7	57.9	7.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63.3	26.1	19.3	27.8	56.1	5.6
	홀벌이	861	58.4	27.1	20.9	28.6	56.0	6.4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58.0	25.7	18.7	30.4	57.1	7.5
	도시지역	1,175	60.9	27.8	20.6	26.2	57.0	5.4

〈부표 37〉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학교 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학업 중단, 가출 청소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 계층 청소년 지원
계		1,995	33.2	9.4	22.3	11.7	4.0	2.9	3.1	2.9	10.6
성별	남자	1,345	34.9	8.9	22.1	11.1	3.7	2.9	3.1	2.7	10.5
	여자	650	27.1	11.3	23.1	13.7	5.0	2.9	2.9	3.5	10.6
연령별	19~30세미만	106	34.2	7.9	24.7	10.1	1.2	1.4	5.9	5.5	9.0
	30~40세미만	487	36.0	9.2	24.2	7.0	4.0	2.6	2.4	3.0	11.6
	40~50세미만	662	27.8	10.3	23.0	15.0	4.0	2.7	3.7	2.8	10.8
	50~65세미만	740	36.4	9.1	19.4	12.5	4.6	3.8	2.2	2.2	9.8
혼인 상태	미혼	152	29.1	11.0	17.1	13.0	3.3	2.9	5.7	4.7	13.4
	유배우	1,635	34.4	9.1	22.6	11.3	3.9	2.9	2.9	2.5	10.3
	사별/이혼	208	21.8	12.1	23.6	15.6	4.9	2.8	2.1	6.3	10.8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32.3	8.3	19.3	13.0	4.8	3.1	4.4	2.3	12.4
	고졸	795	30.9	9.9	24.6	12.4	3.5	2.4	3.2	2.9	10.2
	대졸이상	909	35.3	9.3	21.2	10.8	4.1	3.3	2.7	3.0	10.4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33.7	9.4	22.4	11.1	3.7	3.2	2.8	2.9	10.8
	직장없음	404	30.7	9.5	22.0	14.5	5.1	1.1	4.7	2.9	9.4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31.0	9.1	19.5	16.4	3.5	2.7	4.5	3.3	10.0
	아파트	1,099	35.1	8.8	22.9	9.6	3.6	3.0	3.0	2.7	11.2
	연립/다세대/기타	525	30.2	11.2	22.8	13.3	5.0	2.7	2.4	2.9	9.5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28.9	7.0	16.6	18.9	6.1	1.9	3.3	5.6	11.7
	100~200만원미만	392	29.2	10.8	22.4	13.6	4.2	2.4	2.4	4.6	10.4
	200~300만원미만	455	33.5	10.7	20.2	10.9	3.9	4.1	3.4	2.4	11.0
	300~400만원미만	377	35.9	8.3	24.0	11.6	3.4	1.9	3.7	1.6	9.6
	400~500만원미만	233	33.9	9.7	21.8	10.5	4.3	3.5	4.3	3.0	9.0
	500만원이상	356	34.9	8.6	25.3	9.1	3.5	2.9	1.7	2.1	11.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37.1	8.7	23.1	10.3	3.9	3.1	2.7	2.3	8.8
	홀벌이	861	32.0	9.4	23.0	11.6	3.7	3.0	3.2	2.7	11.5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35.7	9.3	21.9	11.4	3.8	3.1	3.1	2.0	9.8
	도시지역	1,175	32.0	9.5	22.6	11.8	4.0	2.8	3.1	3.3	10.9

〈부표 38〉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결식 아동 급식 지원	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학교 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청소년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학업 중단, 가출 청소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 계층 청소년 지원
계		1,995	45.9	24.1	51.2	35.0	22.5	23.8	15.9	14.1	36.7
성별	남자	1,345	48.0	24.2	50.9	35.3	22.8	22.7	16.5	13.4	36.2
	여자	650	38.3	23.9	52.4	33.8	21.4	27.9	13.8	16.7	38.4
연령별	19~30세미만	106	51.2	14.4	55.5	26.2	18.8	31.6	15.4	17.0	40.3
	30~40세미만	487	49.7	26.2	53.6	31.6	21.2	23.0	16.9	16.2	38.4
	40~50세미만	662	39.0	25.3	51.1	36.6	22.6	25.2	16.4	14.0	37.1
	50~65세미만	740	48.8	23.4	48.2	38.3	24.6	21.0	14.8	11.7	33.9
혼인 상태	미혼	152	42.2	25.6	47.7	25.8	22.3	25.5	21.2	15.1	46.9
	유배우	1,635	47.4	24.2	51.6	35.6	22.6	23.1	15.9	13.5	36.0
	사별/이혼	208	30.4	21.9	49.8	35.5	22.0	30.6	11.8	20.4	35.7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47.4	19.9	46.5	41.5	23.5	18.6	14.5	12.1	33.3
	고졸	795	44.2	23.9	50.4	33.2	22.3	25.7	14.4	16.0	36.2
	대졸이상	909	46.9	25.2	53.0	34.9	22.5	23.6	17.5	13.1	37.8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46.6	24.2	52.3	34.9	21.9	24.3	15.4	14.0	36.8
	직장없음	404	42.5	23.5	45.6	35.5	25.8	21.2	19.0	14.6	36.2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43.2	21.6	45.9	40.7	27.9	19.4	14.8	14.3	36.1
	아파트	1,099	47.4	24.2	52.8	34.1	22.5	24.5	16.5	13.4	36.9
	연립/다세대/기타	525	44.1	25.5	50.9	33.3	19.2	24.9	15.4	15.6	36.6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40.5	25.7	40.8	38.3	23.8	22.5	12.5	18.8	32.0
	100~200만원미만	392	42.5	21.3	49.1	33.8	24.5	25.8	13.5	17.2	36.8
	200~300만원미만	455	45.0	25.3	51.9	34.4	24.1	22.6	14.2	14.8	40.5
	300~400만원미만	377	48.3	24.2	52.1	35.7	18.8	26.0	17.8	11.7	35.1
	400~500만원미만	233	43.3	23.9	51.9	35.3	23.5	24.7	20.8	13.5	34.7
	500만원이상	356	51.0	24.8	54.6	34.5	21.8	20.8	16.3	11.8	36.8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49.2	23.9	54.4	34.7	22.5	21.8	16.7	13.3	34.8
	홀벌이	861	46.0	23.8	50.6	36.2	22.4	24.2	14.6	13.7	37.6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46.8	22.7	48.4	35.6	21.7	23.4	17.1	16.0	37.5
	도시지역	1,175	45.5	24.8	52.7	34.7	23.0	24.0	15.4	13.2	36.3

〈부표 39〉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저렴한 노인요양시 설 확대	장애인 지원 시설 확대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개별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근로자가 가족간호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계		1,995	57.4	8.8	14.8	11.8	2.3	4.8
성별	남자	1,345	58.4	8.8	14.7	10.9	2.3	4.8
	여자	650	53.7	8.6	15.2	15.2	2.5	4.7
연령별	19~30세미만	106	50.4	7.2	15.0	14.3	2.4	10.7
	30~40세미만	487	49.9	12.2	15.2	14.2	2.3	6.2
	40~50세미만	662	61.4	8.0	13.2	11.1	2.4	3.9
	50~65세미만	740	61.5	7.0	16.2	10.0	2.2	3.1
혼인 상태	미혼	152	47.3	10.2	15.9	20.1	1.7	4.7
	유배우	1,635	58.1	8.6	14.8	11.3	2.3	4.9
	사별/이혼	208	58.4	9.1	14.6	10.7	2.8	4.4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60.6	7.2	18.0	9.4	2.2	2.5
	고졸	795	57.8	9.7	14.3	11.6	2.0	4.7
	대졸이상	909	56.4	8.4	14.5	12.6	2.6	5.5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57.8	8.6	14.9	11.3	2.3	5.2
	직장없음	404	55.8	9.6	14.6	14.7	2.6	2.7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60.0	9.6	12.0	11.8	2.5	4.0
	아파트	1,099	56.5	9.3	15.2	11.6	2.1	5.3
	연립/다세대/기타	525	58.1	7.0	15.6	12.4	2.7	4.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6.2	9.8	13.7	13.0	4.1	3.2
	100~200만원미만	392	59.3	10.8	12.1	11.0	2.9	4.0
	200~300만원미만	455	52.5	7.9	18.6	13.1	2.9	4.9
	300~400만원미만	377	57.2	9.4	15.5	11.5	2.0	4.4
	400~500만원미만	233	63.4	7.0	11.9	10.1	2.4	5.3
	500만원이상	356	58.3	7.8	14.5	12.3	0.9	6.2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58.1	7.5	14.5	11.4	2.2	6.4
	홀벌이	861	58.0	9.6	14.8	11.0	2.5	4.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59.7	8.3	16.2	9.8	1.6	4.4
	도시지역	1,175	56.3	9.0	14.1	12.8	2.7	5.0

〈부표 40〉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저렴한 노인요양시 설 확대	장애인 지원 시설 확대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지원	개별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근로자가 가족 간호를 위해 휴가를 사용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계		1,995	72.0	25.1	39.9	37.3	8.8	15.0
성별	남자	1,345	72.6	25.5	39.3	36.7	9.0	15.1
	여자	650	69.9	23.5	42.3	39.5	8.3	14.6
연령별	19~30세미만	106	71.3	29.5	29.4	32.0	11.4	25.4
	30~40세미만	487	65.9	27.0	41.6	41.0	8.1	15.4
	40~50세미만	662	74.6	24.7	38.4	36.4	9.0	14.9
	50~65세미만	740	74.6	22.8	42.7	36.6	8.5	12.2
혼인 상태	미혼	152	69.8	24.2	37.7	41.2	13.2	12.5
	유배우	1,635	72.1	25.2	40.1	36.9	8.5	15.4
	사별/이혼	208	72.3	25.1	39.0	39.1	8.7	13.2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74.8	21.9	42.1	38.7	8.1	12.2
	고졸	795	72.0	25.5	39.5	34.5	9.2	17.0
	대졸이상	909	71.4	25.6	39.7	39.2	8.7	14.2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72.4	25.0	39.8	36.8	8.4	15.8
	직장없음	404	70.1	25.6	40.5	40.0	11.2	10.7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73.4	30.1	35.4	32.4	8.8	15.9
	아파트	1,099	72.4	25.6	40.3	37.9	7.8	14.4
	연립/다세대/기타	525	70.3	20.7	41.7	38.9	11.1	15.8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68.1	27.3	41.6	37.2	13.2	11.9
	100~200만원미만	392	73.2	27.6	39.7	32.5	12.6	13.1
	200~300만원미만	455	68.2	23.2	43.0	38.4	7.3	17.9
	300~400만원미만	377	72.7	24.8	36.8	38.8	7.7	16.1
	400~500만원미만	233	74.6	21.9	40.6	38.7	7.3	13.8
	500만원이상	356	74.2	26.7	38.9	38.1	7.7	1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72.0	23.8	40.3	36.5	8.5	17.9
	홀벌이	861	72.3	25.7	40.5	37.1	8.3	13.7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73.0	24.7	40.5	34.1	8.8	15.7
	도시지역	1,175	71.5	25.3	39.6	38.9	8.8	14.7

〈부표 41〉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의 제공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등 교육관련 정책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 제도개선 및 실효성 제고	가족 친화적인 직장, 사회환경 조성
계		1,995	14.8	43.9	9.4	22.3	6.5	3.0
성별	남자	1,345	14.4	43.1	9.6	23.2	6.8	2.9
	여자	650	16.3	47.2	8.9	19.0	5.4	3.2
연령별	19~30세미만	106	27.5	53.8	4.1	3.8	9.8	1.0
	30~40세미만	487	17.5	48.9	9.3	15.2	5.2	3.7
	40~50세미만	662	11.4	40.5	9.7	29.9	5.6	3.0
	50~65세미만	740	13.0	40.8	10.7	24.9	7.8	2.8
혼인 상태	미혼	152	22.6	50.4	9.4	6.8	6.4	4.4
	유배우	1,635	14.5	43.1	9.4	23.3	6.8	2.9
	사별/이혼	208	11.9	48.5	10.3	24.2	3.1	2.0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15.1	48.4	10.3	16.8	6.8	2.6
	고졸	795	15.4	47.5	8.4	21.2	5.0	2.5
	대졸이상	909	14.3	40.2	10.0	24.4	7.7	3.3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15.0	44.2	9.5	22.2	6.2	2.9
	직장없음	404	14.0	42.8	9.2	22.7	8.3	3.1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13.6	48.0	7.9	20.0	7.7	2.9
	아파트	1,099	14.9	41.4	9.1	23.8	7.4	3.4
	연립/다세대/기타	525	15.4	47.3	11.3	20.3	3.8	2.0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15.3	47.6	8.6	24.0	2.9	1.6
	100~200만원미만	392	20.5	45.7	8.1	17.4	5.2	3.0
	200~300만원미만	455	14.3	48.2	10.0	19.5	5.6	2.4
	300~400만원미만	377	14.2	41.4	9.3	23.8	8.0	3.3
	400~500만원미만	233	10.9	42.5	8.5	26.5	7.8	3.7
	500만원이상	356	13.2	39.8	10.9	25.3	7.6	3.1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13.2	44.2	10.0	22.1	7.4	3.0
	홀벌이	861	15.8	42.6	8.6	24.2	6.0	2.8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16.4	46.4	9.5	18.8	5.8	3.2
	도시지역	1,175	14.1	42.7	9.4	24.1	6.9	2.8

〈부표 42〉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가족 상담 프로그램 확대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	가족단위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 확대	기타
계		1,995	41.8	15.7	34.2	8.1	0.2
성별	남자	1,345	40.8	14.8	35.8	8.3	0.3
	여자	650	45.4	18.8	28.1	7.7	-
연령별	19~30세미만	106	34.7	23.2	40.3	1.7	-
	30~40세미만	487	34.7	15.4	43.6	6.1	0.2
	40~50세미만	662	44.1	13.9	32.5	9.3	0.2
	50~65세미만	740	47.2	15.8	26.3	10.3	0.3
혼인 상태	미혼	152	44.5	20.0	29.3	6.3	-
	유배우	1,635	40.5	15.3	35.5	8.4	0.3
	사별/이혼	208	56.1	16.1	21.4	6.4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50.2	18.8	21.9	8.7	0.3
	고졸	795	43.0	17.5	33.2	6.3	-
	대졸이상	909	38.9	13.5	37.8	9.4	0.4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40.7	15.2	35.7	8.3	0.1
	직장없음	404	47.4	18.2	26.3	7.5	0.7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48.6	16.2	27.2	7.8	0.2
	아파트	1,099	38.6	14.1	38.6	8.5	0.3
	연립/다세대/기타	525	45.1	19.0	28.3	7.5	-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6.5	17.8	19.3	6.4	-
	100~200만원미만	392	42.5	18.2	31.9	7.1	0.4
	200~300만원미만	455	40.8	17.8	33.7	7.7	-
	300~400만원미만	377	36.0	17.7	38.6	7.6	-
	400~500만원미만	233	42.9	13.3	34.6	8.6	0.5
	500만원이상	356	42.7	9.5	36.9	10.4	0.5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41.3	13.4	35.6	9.6	0.2
	홀벌이	861	39.0	16.5	36.8	7.4	0.4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39.8	16.4	36.9	6.9	0.1
	도시지역	1,175	42.8	15.3	32.8	8.8	0.3

〈부표 43〉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 휴가제도 활성화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기타
계		1,995	36.3	26.9	16.1	20.6	0.1
성별	남자	1,345	35.9	29.1	14.8	20.0	0.1
	여자	650	37.5	18.9	20.7	23.0	-
연령별	19~30세미만	106	48.6	28.5	14.9	8.0	-
	30~40세미만	487	46.3	28.0	10.0	15.5	0.2
	40~50세미만	662	29.6	29.1	16.9	24.3	0.1
	50~65세미만	740	31.6	23.3	20.8	24.3	-
혼인 상태	미혼	152	36.7	22.5	20.3	20.5	-
	유배우	1,635	36.3	28.1	14.9	20.6	0.1
	사별/이혼	208	35.6	16.5	27.1	20.8	-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33.9	28.4	18.8	19.0	-
	고졸	795	35.9	25.4	18.9	19.8	-
	대졸이상	909	37.1	27.8	13.2	21.6	0.2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36.8	28.0	15.0	20.1	0.1
	직장없음	404	33.3	21.4	21.7	23.6	-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34.8	22.5	21.6	21.2	-
	아파트	1,099	37.2	26.8	13.5	22.4	0.1
	연립/다세대/기타	525	35.1	30.1	18.6	16.1	0.2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32.2	22.3	30.7	14.8	-
	100~200만원미만	392	37.7	22.4	19.2	20.7	-
	200~300만원미만	455	36.3	30.1	13.5	20.1	-
	300~400만원미만	377	35.6	28.5	16.0	19.7	0.2
	400~500만원미만	233	35.8	27.7	12.8	23.1	0.5
	500만원이상	356	37.2	26.9	13.3	22.6	-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38.6	25.3	15.6	20.2	0.3
	홀벌이	861	35.4	30.9	13.4	20.2	-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35.9	25.4	15.6	23.0	0.1
	도시지역	1,175	36.4	27.7	16.3	19.5	0.1

〈부표 44〉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1순위(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조손가족 지원	북한이탈 주민가정 지원	입양가정 지원	노인가족 지원
계		1,995	41.1	11.3	16.6	12.6	1.1	2.8	14.5
성별	남자	1,345	38.5	12.3	17.3	13.1	1.2	3.0	14.6
	여자	650	50.5	7.2	14.2	11.0	1.0	2.3	13.7
연령별	19~30세미만	106	42.7	20.5	14.0	14.2	0.5	3.6	4.5
	30~40세미만	487	45.2	13.4	18.1	8.8	0.7	4.0	9.8
	40~50세미만	662	43.0	9.8	13.8	14.1	1.3	2.5	15.4
	50~65세미만	740	34.9	8.6	19.1	14.0	1.4	2.0	20.0
혼인 상태	미혼	152	44.8	9.8	15.3	14.7	1.2	3.8	10.4
	유배우	1,635	39.2	11.6	17.2	12.7	1.2	3.0	15.1
	사별/이혼	208	61.5	8.0	11.1	9.6	—	0.4	9.4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38.7	6.0	18.3	11.7	1.8	0.9	22.6
	고졸	795	39.9	11.6	15.5	13.1	1.4	3.5	15.0
	대졸이상	909	42.5	12.2	17.1	12.5	0.8	2.8	12.1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40.7	11.3	16.7	12.7	1.0	3.0	14.5
	직장없음	404	43.2	10.8	16.1	12.2	1.6	2.0	14.2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41.9	9.1	16.8	13.4	0.9	3.1	14.7
	아파트	1,099	39.7	12.1	17.8	12.8	1.1	2.8	13.8
	연립/다세대/기타	525	43.7	10.7	13.7	11.9	1.3	2.8	15.8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44.9	5.2	16.3	9.5	1.1	2.4	20.5
	100~200만원미만	392	39.6	12.1	17.4	12.9	1.5	3.0	13.5
	200~300만원미만	455	42.2	10.5	16.0	15.1	0.9	2.6	12.7
	300~400만원미만	377	36.9	13.9	17.5	10.9	0.7	3.0	17.1
	400~500만원미만	233	39.3	12.3	17.0	14.6	0.9	3.6	12.3
	500만원이상	356	45.3	9.9	15.6	11.2	1.6	2.5	13.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37.3	11.7	18.0	12.3	1.5	3.4	16.0
	홀벌이	861	41.6	11.5	15.8	13.3	1.1	2.7	14.2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40.1	11.7	15.4	12.4	1.1	2.8	16.6
	도시지역	1,175	41.6	11.0	17.3	12.7	1.1	2.9	13.4

〈부표 45〉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 복수응답(가구주)

(단위 : 명, %)

구분		사례수	한부모 가족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	장애인 가족 지원	조손가족 지원	북한이탈 주민가정 지원	입양가정 지원	노인가족 지원
계		1,995	59.5	26.2	37.1	27.7	4.0	7.6	36.4
성별	남자	1,345	57.9	26.9	38.1	28.1	4.0	7.7	36.0
	여자	650	65.6	23.6	33.1	26.5	3.9	7.5	37.9
연령별	19~30세미만	106	63.9	40.9	31.8	30.6	3.5	9.3	17.6
	30~40세미만	487	64.0	33.0	38.6	22.7	3.7	9.4	27.4
	40~50세미만	662	64.3	23.7	33.4	27.7	3.6	8.2	37.4
	50~65세미만	740	49.2	19.4	41.2	31.4	4.8	5.1	47.8
혼인 상태	미혼	152	60.5	28.7	35.3	30.4	6.1	8.2	28.7
	유배우	1,635	58.2	26.1	37.8	27.8	4.0	7.7	36.9
	사별/이혼	208	74.5	25.3	30.2	24.7	1.4	5.7	36.8
교육 정도	중졸이하	291	54.4	14.6	35.6	33.8	3.4	3.6	52.8
	고졸	795	61.0	25.1	36.9	28.6	3.8	8.8	34.3
	대졸이상	909	59.5	29.8	37.6	25.7	4.3	7.7	34.1
취업 여부	직장있음	1,591	60.1	26.1	37.0	27.4	4.0	7.7	36.4
	직장없음	404	56.3	26.8	37.5	29.5	3.9	7.1	36.3
주택 형태	단독주택	371	54.2	21.1	37.6	29.9	3.7	9.5	40.7
	아파트	1,099	58.9	26.7	37.8	27.3	4.1	7.6	36.2
	연립/다세대/기타	525	64.1	28.4	35.0	27.5	4.0	6.5	34.1
가구 월평균 소득	100만원미만	182	55.7	20.7	38.3	31.7	4.2	4.9	43.3
	100~200만원미만	392	57.9	27.8	35.8	28.7	3.8	9.4	35.6
	200~300만원미만	455	60.7	24.5	37.2	29.2	4.0	7.7	35.1
	300~400만원미만	377	56.3	30.3	39.7	26.2	3.9	8.1	34.4
	400~500만원미만	233	61.2	27.8	35.8	26.5	2.2	7.0	37.0
	500만원이상	356	63.0	23.3	35.8	26.3	5.2	6.8	37.9
맞벌이 여부	맞벌이	688	57.6	25.1	40.0	24.5	4.6	8.3	38.8
	홀벌이	861	59.9	26.9	34.8	30.5	3.7	7.5	35.0
생활권	도농복합지역	820	59.3	26.6	33.3	27.0	4.3	9.3	37.7
	도시지역	1,175	59.6	26.0	39.0	28.1	3.8	6.8	35.7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2년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여성가구주]

인 사 말 씀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도 여성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향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아래 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가구구성

현재 귀 닥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대상 : 1947. 2. 20. ~ 1993. 2. 19. 기간 중 출생한 자)

가구원 번호	성 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양·음)	응답여부	비고
1		① 가구주	②여자	년 월 일 (양·음) 만__세	①응답 ②불응 ③불능	
2			②여자	년 월 일 (양·음) 만__세	①응답 ②불응 ③불능	
3			②여자	년 월 일 (양·음) 만__세	①응답 ②불응 ③불능	
4			②여자	년 월 일 (양·음) 만__세	①응답 ②불응 ③불능	
5			②여자	년 월 일 (양·음) 만__세	①응답 ②불응 ③불능	

※ 가구주와의 관계 : ①가구주 ②배우자 ③미혼자녀 ④기혼 자녀 및 그배우자 ⑤손자녀 및 그배우자
 ⑥부모(배우자쪽 포함) ⑦조부모(배우자쪽 포함) ⑧미혼 형제·자매 ⑨기타

조사 방법	가구당 조사표 수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①면접조사 ②응답자 기입식 조사	총 <input type="text"/> 부 중 <input type="text"/> 부		

※ 응답자 연락처는 응답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원 성명	조사원 연락처
--------	---------

※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표 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응답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된 경우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십시오.

I 개인 관련 사항

1 성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width: 100%;"></div>	2 가구주와의 관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자녀 ④ 기혼 자녀 및 그배우자 ⑤ 손자녀 및 그배우자 </div> <div> ⑥ 부모(배우자쪽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쪽 포함) ⑧ 미혼 형제·자매 ⑨ 기타 </div> </div>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생년월일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① 양력 ② 음력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margin-right: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margin-right: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margin-right: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margin-right: 5px;"></div> </div> <div style="margin-left: 10px;"> 년 월 일 </div> </div>
교 육 정 도 5 귀하의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div>① 안 다녔음</div> <div>② 초등학교 졸업</div> <div>③ 중학교 졸업</div> <div>④ 고등학교 졸업</div> <div>⑤ 전문대 졸업</div> <div>⑥ 대학교 졸업 이상</div> </div>	혼 인 상 태 6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div>① 미혼</div> <div>② 배우자있음(동거포함)</div> <div>③ 사별</div> <div>④ 이혼</div> </div>	경기도 거주기간 7 귀하의 경기도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5px;"> <div>① 1년 미만</div> <div>② 1년~5년 미만</div> <div>③ 5년~10년 미만</div> <div>④ 10년~15년 미만</div> <div>⑤ 15년~20년 미만</div> <div>⑥ 20년 이상</div> </div>	

II 여성경제활동 부문

경 제 활 동 여 부						
<p>8 귀하는 지난 1주일(2012.2.12~2012.2.18)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습니까?</p> <p>※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이신 분도 일을 ‘하였다’에 해당됩니다.</p> <p>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 15 문항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종사 산업</p> <p>10 귀하는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idth: 80%;"> <tr> <td style="padding: 5px;">분 류 코 드 (조사원이 기입합니다)</td> <td style="width: 100px;"></td> </tr> </table> <p>○ 직장(사업체)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top: 5px;"></div> <p>○ 직장(사업체)의 주된 사업 내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60px; margin-top: 5px;"></div>	분 류 코 드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종사 직업</p> <p>11 귀하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 width: 80%;"> <tr> <td style="padding: 5px;">분 류 코 드 (조사원이 기입합니다)</td> <td style="width: 100px;"></td> </tr> </table> <p>○ 하고 있는 일의 종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top: 5px;"></div> <p>○ 부서 및 직책</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60px; margin-top: 5px;"></div>	분 류 코 드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분 류 코 드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분 류 코 드 (조사원이 기입합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20 귀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 ④ 장시간근로관행 개선
 ②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
 ③ 출퇴근시간 유연화 ⑥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21 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①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⑥ 직업능력교육과정의 다양화
 ②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예방 ⑦ 남성다수직종에 여성진출확대
 ③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⑧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
 ④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⑨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
 ⑤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지원

III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

22 귀하는 <한부모 여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양육 지원
 ② 경제적 자립 지원
 ③ 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④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⑤ 기타(구체적으로 :)

미혼모 지원 정책

23 귀하는 <미혼모>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
 ②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
 ③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④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
 ⑤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노인 지원 정책

24 귀하는 <여성노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자리 관련 지원
 ② 건강 관련 지원
 ③ 혼자 사는 여성노인 돌봄 사업
 ④ 문화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제공
 ⑤ 생계비 지원
 ⑥ 요양원(실버타운) 등 주거 지원
 ⑦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25 귀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초교육 지원
 ② 일자리 관련 지원
 ③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우미, 차량 지원 등)
 ④ 건강 및 의료지원 사업
 ⑤ 그룹홈 등 주거 지원
 ⑥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
 ⑦ 기타(구체적으로 :)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26 귀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언어소통 지원 | ⑤ 결혼이주여성 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
| ② 일자리 관련 지원 | ⑥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
| ③ 다문화 가족(부부, 부모)을 위한 프로그램 | ⑦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
| ④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 ⑧ 기타(구체적으로 :) |

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

27 귀하는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한부모 여성 지원 ④ 여성장애인 지원
② 미혼모 지원 ⑤ 결혼이주여성 지원
③ 여성노인 지원

IV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

가정폭력 예방 정책

28 귀하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가정폭력 예방교육
- ②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 ③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 ④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 ⑤ 기타(구체적으로 :)

성폭력 예방 정책

29 귀하는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폭력 예방교육
- ②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 ③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 ④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 ⑤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
- ⑥ 기타(구체적으로 :)

성매매 예방 정책

30 귀하는 <성매매>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매매 예방교육
- ②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 ③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정사업
- ④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 ⑤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 ⑥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

31 귀하는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 ②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 ③ 경찰의 순찰 강화
- ④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 ⑤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
- ⑥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

32 귀하는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
- ②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조성
- ③ 차량·보행 도로 분리(보행 안전성 확보)
- ④ 여성·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
- ⑤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33 귀하는 <여성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④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
| ②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⑤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 |
|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

V 여성건강, 문화, 여가 부문

건강 상태

34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다소 좋다
③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④ 다소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35 귀하는 <여성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
②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지원
③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검진 지원
④ 여성특화질환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
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⑥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⑦ 기타(구체적으로 :)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36 귀하는 평소 문화 및 여가 생활(TV 시청 제외)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이유

37 만족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경제적 부담 때문에 | ⑤ 문화 및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
| ② 시간이 부족해서 | ⑥ 육아 부담 때문에 |
| ③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 |
| ④ 문화 및 여가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 |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정책

38 귀하는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
 ②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
 ③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④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⑤ 문화 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
 ⑥ 기타(구체적으로 :)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39 귀하가 평소 가장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은 다음 중 어느 분야입니까?

- ① 자원봉사 활동
 ② 학부모회 등 자녀교육 관련 활동
 ③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
 ④ 정치(정당) 활동
 ⑤ 종교 활동
 ⑥ 문화, 취미, 스포츠 관련 활동
 ⑦ 부녀회 등 지역 관련 활동
 ⑧ 기타(구체적으로 :)
 ⑨ 없음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40 귀하가 평소 가장 받고 싶었던 교육은 다음 중 어느 분야입니까?

- ① 학력보완 교육
 ② 성인기초/문자해독 교육
 ③ 직업능력향상 교육
 ④ 인문교양 교육
 ⑤ 문화예술 교육
 ⑥ 시민참여 교육
 ⑦ 기타(구체적으로 :)
 ⑧ 없음

VI 돌봄 부문

취학 전 자녀 유무(만 6세 미만)

41 귀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44문항으로**

자녀현황

42 귀하의 만 6세 미만 자녀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0~2세 (36개월 미만)	① 있다 _____명 ② 없다
만 3~5세	① 있다 _____명 ② 없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43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②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③ 자녀를 믿고 맡길 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④ 양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⑤ 양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⑥ 기타(구체적으로 :)

취학 전 자녀 양육 정책 우선순위

44 귀하는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해 다음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 | |
|--------------------------------------|---|
|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⑥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 |
| ②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⑦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 ③ 시간연장 휴일보육 야간 및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⑧ 가정파견 보육서비스 확대
(예: 아이돌보미, 가정보육교사 등) |
| ④ 영아전담(만3세미만)어린이집 확대 | ⑨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 ⑤ 직장어린이집 확대 | ⑩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예: 부모교육, 육아나눔터, 자녀와 놀이체험 공간 등) |

취학자녀 유무(초·중·고등학생)

45 귀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46 귀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꿈나무안심학교 등) | ④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
| ② 아동청소년 상담 지원 | ⑤ 아동청소년 인성 교육 |
| ③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 ⑥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47 귀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① 결식아동 급식지원
 - ②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 ④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 ⑤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 ⑥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 ⑦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지원
 - ⑧ 청소년 한부모 지원
 - ⑨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48 귀하는 질병이나 장애 혹은 노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 | ④ 개별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
| ② 장애인 지원 시설 확대 | 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 ③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 ⑥ 근로자가 가족간호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VII 가족 부문

출산 계획

※ 만49세 이하 기혼여성만(1962.2.20.~1993.2.19. 기간 중 출생한 기혼여성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9 귀하는 향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 ① 없다 ② 있다 → 51 문항으로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50 향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자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② 경제적 이유로
- ③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 ④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서
- ⑤ 건강 때문에
- ⑥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 ⑦ 기타(구체적으로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51 귀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②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③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
- ④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등 교육 관련 정책
- ⑤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
- ⑥ 가족친화적인 직장 사회환경 조성
- ⑦ 기타(구체적으로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52 귀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② 가족 상담 프로그램 확대
- ③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
- ④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
- ⑤ 기타구체적으로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53 귀하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도 활성화
- ②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 ③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
- ④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 ⑤ 기타구체적으로 :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54 귀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한부모 가족 지원 | ⑤ 북한이탈주민가정 지원 |
| ② 다문화 가족 지원 | ⑥ 입양가정 지원 |
| ③ 장애인가족 지원 | ⑦ 노인가족(노인만으로 구성된 가족) 지원 |
| ④ 조손가족 지원 | |

VIII 정책추진체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55 귀하는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예산의 확대 | ⑤ 경기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지(여성·가족 관련 조례 제정) |
| ② 도지사 등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의지 | ⑥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
| ③ 여성·가족부서와 관련 부서의 업무협력 | ⑦ 일반 도민의 참여 통로 확대 |
| ④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 |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56 귀하는 경기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①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 |
| ②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
| ③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선거구, 선거자금, 공천제도 등) |
| ④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 |
| 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IX 여성·가족정책 향상도, 우선순위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57 귀하는 지난 10년 동안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아래의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향상된 편이다	매우 향상되었다
1) 법 및 제도	①	②	③	④
2) 정치참여	①	②	③	④
3) 교육	①	②	③	④
4) 가족생활	①	②	③	④
5) 경제활동	①	②	③	④
6) 문화 및 의식	①	②	③	④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

58 다음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한 여성정책에 해당하는 정책분야입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 | |
|------------------|------------------------|
| ①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 ⑦ 농어촌여성 복지증진 |
| ②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 | ⑧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 |
| ③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 ⑨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 ④ 보육관련 정책 | ⑩ 여성의 국제협력강화 |
| ⑤ 여성건강 지원 | ⑪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
| ⑥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족정책

59 다음은 <건강가족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족정책입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 | |
|------------------|----------------------|
| 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 ⑥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
| ②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 ⑦ 가족돌봄자 지원 서비스 강화 |
| ③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 ⑧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 |
| ④ 부모역할 지원 | ⑨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
| ⑤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 | ⑩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

X 가구 관련 사항

주 택 유 형	점 유 형 태	가 구 구 성 형 태
60 귀택의 주택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 주택 ⑤ 기타	61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① 자기집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 ④ 월세(사글세) ⑤ 무상 및 기타	62 귀택의 현재 가구구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 ① 부부 ② 부부+자녀 ③ 한부모+자녀 ④ 3세대 이상 ⑤ 1인가구 ⑥ 기타
63 귀택은 현재 맞벌이 가구입니까? ※ 배우자가 취업을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임 ① 맞벌이 가구이다 ② 맞벌이 가구가 아니다 ③ 해당 없음	64 귀택의 지난 1년 동안(2011년)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 이상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2년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여성가구원]

인 사 말 씀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도 여성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향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아래 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조사 방법	가구당 조사표 수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① 면접조사 ② 응답자 기입식 조사	총 <input type="text"/> 부 중 <input type="text"/> 부		

※ 응답자 연락처는 응답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원 성명		조사원 연락처	
--------	--	---------	--

※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표 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응답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된 경우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십시오.

I 개인 관련 사항

1 성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width: 100%;"></div>	2 가구주와의 관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자녀 ④ 기혼 자녀 및 그배우자 ⑤ 손자녀 및 그배우자 </div> <div> ⑥ 부모(배우자쪽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쪽 포함) ⑧ 미혼 형제·자매 ⑨ 기타 </div> </div>	3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4 생년월일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① 양력 ② 음력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margin-right: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margin-right: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div> </div>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년 월 일 </div>
교 육 정 도 5 귀하의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① 안 다녔음</div> <div>② 초등학교 졸업</div> <div>③ 중학교 졸업</div> <div>④ 고등학교 졸업</div> <div>⑤ 전문대 졸업</div> <div>⑥ 대학교 졸업 이상</div> </div>	혼 인 상 태 6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① 미혼</div> <div>② 배우자있음(동거포함)</div> <div>③ 사별</div> <div>④ 이혼</div> </div>	경기도 거주기간 7 귀하의 경기도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① 1년 미만</div> <div>② 1년~5년 미만</div> <div>③ 5년~10년 미만</div> <div>④ 10년~15년 미만</div> <div>⑤ 15년~20년 미만</div> <div>⑥ 20년 이상</div> </div>	

II 여성경제활동 부문

경 제 활 동 여 부		
<div style="background-color: #4f7942; color: white;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8</div> 귀하는 지난 1주일(2012.2.12~2012.2.18)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고 동 일 가 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습니까?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이신 분도 일을 '하였다'에 해당됩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bottom: 10px;"> ② 하지 않았다 → 15 문항으로 </div>	
고 용 형 태	종사 산업	종사 직업
<div style="background-color: #4f7942; color: white;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9</div>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① 상용근로자</div> <div>② 임시근로자</div> <div>③ 일용근로자</div> <div>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div> <div>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div> <div>⑥ 무급가족종사자 → 14 문항으로</div>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4f7942; color: white;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10</div> 귀하는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lex: 1;"> 분 류 코 드 (조작원이 기입합니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flex: 2; height: 30px; margin-left: 5px;"></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input type="radio"/> 직장(사업체)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top: 5px;"></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input type="radio"/> 직장(사업체)의 주된 사업 내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top: 5px;"></div>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4f7942; color: white;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11</div> 귀하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margin-top: 10px;">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flex: 1;"> 분 류 코 드 (조작원이 기입합니다)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flex: 2; height: 30px; margin-left: 5px;"></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input type="radio"/> 하고 있는 일의 종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top: 5px;"></div> </div> <div style="margin-top: 10px;"> <input type="radio"/> 부서 및 직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margin-top: 5px;"></div> </div>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20 귀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업이 가족생활을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와 분위기 조성 ④ 장시간근로관행 개선
 ② 남성의 가사 및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
 ③ 출퇴근시간 유연화 ⑥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21 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① 청년여성층의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지원 ⑥ 직업능력교육과정의 다양화
 ②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한 경력단절예방 ⑦ 남성다수직종에 여성진출확대
 ③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⑧ 여성근로자 차별 방지
 ④ 취업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⑨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
 ⑤ 여성창업 및 여성경제인 지원

III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

22 귀하는 <한부모 여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양육 지원
 ② 경제적 자립 지원
 ③ 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지원
 ④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
 ⑤ 기타(구체적으로 :)

미혼모 지원 정책

23 귀하는 <미혼모>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
 ②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
 ③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④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
 ⑤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노인 지원 정책

24 귀하는 <여성노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일자리 관련 지원
 ② 건강 관련 지원
 ③ 혼자 사는 여성노인 돌봄 사업
 ④ 문화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제공
 ⑤ 생계비 지원
 ⑥ 요양원(실버타운) 등 주거 지원
 ⑦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장애인 지원 정책

25 귀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초교육 지원
 ② 일자리 관련 지원
 ③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우미, 차량 지원 등)
 ④ 건강 및 의료지원 사업
 ⑤ 그룹홈 등 주거 지원
 ⑥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
 ⑦ 기타(구체적으로 :)

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

26 귀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언어소통 지원 | ⑤ 결혼이주여성 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
| ② 일자리 관련 지원 | ⑥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
| ③ 다문화 가족(부부, 부모)을 위한 프로그램 | ⑦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 |
| ④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 ⑧ 기타(구체적으로 :) |

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

27 귀하는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한부모 여성 지원 | ④ 여성장애인 지원 |
| ② 미혼모 지원 | ⑤ 결혼이주여성 지원 |
| ③ 여성노인 지원 | |

IV 여성폭력 및 안전 부문

가정폭력 예방 정책

28 귀하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가정폭력 예방교육 | ① 성폭력 예방교육 |
| ②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 ②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
| ③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 ③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
| ④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 ④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
| ⑤ 기타(구체적으로 :) | ⑤ 지역 내 우범지대 해소 및 치안유지 |
| | ⑥ 기타(구체적으로 :) |

성폭력 예방 정책

29 귀하는 <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폭력 예방교육
- ②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 ③ 성폭력 가해자 처벌 및 교정사업
- ④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 ⑤ 지역 내 우범지역 해소 및 치안유지
- ⑥ 기타(구체적으로 :)

성매매 예방 정책

30 귀하는 <성매매>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성매매 예방교육 | ①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
| ② 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확대 | ②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
| ③ 성매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교정사업 | ③ 경찰의 순찰 강화 |
| ④ 성매매 피해여성 자립 지원(자활, 의료, 주거, 취·창업 등) | ④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
| ⑤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 ⑤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 |
| ⑥ 기타구체적으로 :) | ⑥ 기타구체적으로 :) |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

31 귀하는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
- ② 가로등 설치 및 밝은 조명 유지
- ③ 경찰의 순찰 강화
- ④ 지역주민의 자발적 순찰 활동 조직 및 지원
- ⑤ 여성을 위한 안심택시 운행
- ⑥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

32 귀하는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중심지 문화공간과 연계된 대중교통 체계 구축
- ② 유모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 조성
- ③ 차량-보행 도로 분리(보행 안전성 확보)
- ④ 여성아동의 보행속도를 고려한 신호체계
- ⑤ 기타구체적으로 :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33 귀하는 <여성폭력 및 안전>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④ 여성이 안전한 지역 만들기 |
| ②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⑤ 여성이 편리한 지역 만들기 |
| ③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

V 여성건강, 문화, 여가 부문

건강 상태

34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다소 좋다
③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④ 다소 나쁘다
⑤ 매우 나쁘다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35 귀하는 <여성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
②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지원
③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검진 지원
④ 여성특화질환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
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⑥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

36 귀하는 평소 문화 및 여가 생활(TV 시청 제외)에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약간 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 이유

37 만족하지 못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경제적 부담 때문에 | ⑤ 문화 및 여가를 함께 즐길 사람이 없어서 |
| ② 시간이 부족해서 | ⑥ 육아 부담 때문에 |
| ③ 체력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 ④ 문화 및 여가 관련 정보가 부족해서 | |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정책

38 귀하는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
- ②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
- ③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 ④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⑤ 문화 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39 귀하가 평소 가장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은 다음 중 어느 분야입니까?

- ① 자원봉사 활동
- ② 학부모회 등 자녀교육 관련 활동
- ③ 여성단체, 시민단체 활동
- ④ 정치(정당) 활동
- ⑤ 종교 활동
- ⑥ 문화, 취미, 스포츠 관련 활동
- ⑦ 부녀회 등 지역 관련 활동
- 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⑨ 없음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40 귀하가 평소 가장 받고 싶었던 교육은 다음 중 어느 분야입니까?

- ① 학력보완 교육
- ② 성인기초/문자해독 교육
- ③ 직업능력향상 교육
- ④ 인문교양 교육
- ⑤ 문화예술 교육
- ⑥ 시민참여 교육
-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 ⑧ 없음

VI 돌봄 부문

취학 전 자녀 유무(만 6세 미만)

41 귀하는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자녀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44문항으로**

자녀현황

42 귀하의 **만 6세 미만** 자녀 현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0~2세 (36개월 미만)	① 있다 _____명 ② 없다
만 3~5세	① 있다 _____명 ② 없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

43 귀하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직접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하다
- ②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 ③ 자녀를 믿고 맡길 시설을 찾기가 어렵다
- ④ 양육비용의 부담이 크다
- ⑤ 양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취학 전 자녀 양육 정책 우선순위

44 귀하는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해 다음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 | |
|--------------------------------------|---|
|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⑥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 |
| ②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⑦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 ③ 시간연장 휴일보육 야간 및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⑧ 가정파견 보육서비스 확대
(예: 아이돌보미, 가정보육교사 등) |
| ④ 영아전담(만3세미만)어린이집 확대 | ⑨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 ⑤ 직장어린이집 확대 | ⑩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예: 부모교육, 육아나눔터, 자녀와 놀이체험 공간 등) |

취학자녀 유무(초·중·고등학생)

45 귀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46 귀하는 아동 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꿈나무안심학교 등) | ④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
| ② 아동청소년 상담 지원 | ⑤ 아동청소년 인성 교육 |
| ③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 ⑥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47 귀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 | |
|-------------------------|------------------------------|
| ① 결식아동 급식지원 | ⑥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
| ②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 ⑦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지원 |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 ⑧ 청소년 한부모 지원 |
| ④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 ⑨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 ⑤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48 귀하는 질병이나 장애 혹은 노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 | ④ 개별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
| ② 장애인 지원 시설 확대 | 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 ③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 ⑥ 근로자가 가족간호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VII 가족 부문

출산 계획

※ 만49세 이하 기혼여성만(1962.2.20.~1993.2.19. 기간 중 출생한 기혼여성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49 귀하는 향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없다

② 있다 → 51 문항으로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50 향후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현재 자녀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② 경제적 이유로
- ③ 일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 ④ 아이를 맡길 데가 마땅치 않아서
- ⑤ 건강 때문에
- ⑥ 꼭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 ⑦ 기타(구체적으로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51 귀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②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 ③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
- ④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등 교육 관련 정책
- ⑤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
- ⑥ 가족친화적인 직장사회환경 조성
- ⑦ 기타(구체적으로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52 귀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② 가족 상담 프로그램 확대
- ③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
- ④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
- ⑤ 기타(구체적으로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53 귀하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도 활성화
- ②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 ③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
- ④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 ⑤ 기타(구체적으로 :)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54 귀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한부모 가족 지원 | ⑤ 북한이탈주민가정 지원 |
| ② 다문화 가족 지원 | ⑥ 입양가정 지원 |
| ③ 장애인가족 지원 | ⑦ 노인가족(노인만으로 구성된 가족) 지원 |
| ④ 조손가족 지원 | |

VIII 정책추진체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55 귀하는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예산의 확대 | ⑤ 경기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지(여성·가족 관련 조례 제정) |
| ② 도지사 등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의지 | ⑥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
| ③ 여성·가족부서와 관련 부서의 업무협력 | ⑦ 일반 도민의 참여 통로 확대 |
| ④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 | ⑧ 기타(구체적으로 :)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56 귀하는 경기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①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 |
| ②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
| ③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선거구, 선거자금, 공천제도 등) |
| ④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 |
| ⑤ 기타(구체적으로 :) |

IX 여성·가족정책 향상도, 우선순위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57 귀하는 지난 10년 동안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아래의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향상된 편이다	매우 향상되었다
1) 법 및 제도	①	②	③	④
2) 정치참여	①	②	③	④
3) 교육	①	②	③	④
4) 가족생활	①	②	③	④
5) 경제활동	①	②	③	④
6) 문화 및 의식	①	②	③	④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

58 다음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한 여성정책에 해당하는 정책분야입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 | |
|------------------|------------------------|
| ①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 ⑦ 농어촌여성 복지증진 |
| ②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 | ⑧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 |
| ③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 ⑨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
| ④ 보육관련 정책 | ⑩ 여성의 국제협력강화 |
| ⑤ 여성건강 지원 | ⑪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
| ⑥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족정책

59 다음은 <건강가족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족정책입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 | |
|------------------|----------------------|
| 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 ⑥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
| ②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 ⑦ 가족돌봄자 지원 서비스 강화 |
| ③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 ⑧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 |
| ④ 부모역할 지원 | ⑨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
| ⑤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 | ⑩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

MEMO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012년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남성가구주)

인 사 말 씀

경인지방통계청에서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공동으로 경기도 여성의 특성과 사회적 여건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향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거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아래 부분은 조사원이 기입하는 항목입니다.

시·도	시·군·구	읍·면·동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원번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가구구성

현재 귀 닥에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내용을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대상 : 1947. 2. 20. ~ 1993. 2. 19. 기간 중 출생한 자)

가구원 번호	성 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 별	생년·월·일 (양·음)			응답여부	비고
1		① 가구주	①남자	년	월	일 (양·음)	만__세	①응답 ②불응 ③불능
2			②여자	년	월	일 (양·음)	만__세	①응답 ②불응 ③불능
3			②여자	년	월	일 (양·음)	만__세	①응답 ②불응 ③불능
4			②여자	년	월	일 (양·음)	만__세	①응답 ②불응 ③불능
5			②여자	년	월	일 (양·음)	만__세	①응답 ②불응 ③불능

※ 가구주와의 관계 : ①가구주 ②배우자 ③미혼자녀 ④기혼 자녀 및 그배우자 ⑤손자녀 및 그배우자
 ⑥부모(배우자쪽 포함) ⑦조부모(배우자쪽 포함) ⑧미혼 형제·자매 ⑨기타

조사 방법	가구당 조사표 수	응답자 성명	응답자 연락처
①면접조사 ②응답자 기입식 조사	총 <input type="text"/> 부 중 <input type="text"/> 부		

※ 응답자 연락처는 응답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 질의하기 위한 것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원 성명	조사원 연락처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각 항목별로 응답항목에 ☐표 하거나 ☐안에 번호 또는 숫자를 기입하십시오.
◆ 응답항목 중에서 기타에 해당된 경우 () 안에 구체적인 내용을 기입하십시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지정된 항목으로 가서 기입하십시오.

I 개인 관련 사항

1 성명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height: 40px; width: 100%;"></div>	2 가구주와의 관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① 가구주 ② 배우자 ③ 미혼자녀 ④ 기혼 자녀 및 그배우자 ⑤ 손자녀 및 그배우자 </div> <div> ⑥ 부모(배우자쪽 포함) ⑦ 조부모(배우자쪽 포함) ⑧ 미혼 형제·자매 ⑨ 기타 </div> </div>	3 성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① 남자</div> <div>② 여자</div> </div>	4 생년월일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5px;"> ① 양력 ② 음력 </div>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margin-right: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 margin-right: 5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30px; height: 30px;"></div> </div> <div style="margin-left: 5px;"> 년 월 일 </div> </div>
교 육 정 도 5 귀하의 학교를 어디까지 다녀셨습니까?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① 안 다녔음</div> <div>② 초등학교 졸업</div> <div>③ 중학교 졸업</div> <div>④ 고등학교 졸업</div> <div>⑤ 전문대 졸업</div> <div>⑥ 대학교 졸업 이상</div> </div>	혼 인 상 태 6 귀하의 혼인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① 미혼</div> <div>② 배우자있음(동거포함)</div> <div>③ 사별</div> <div>④ 이혼</div> </div>	경기도 거주기간 7 귀하의 경기도 거주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div style="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gap: 10px;"> <div>① 1년 미만</div> <div>② 1년~5년 미만</div> <div>③ 5년~10년 미만</div> <div>④ 10년~15년 미만</div> <div>⑤ 15년~20년 미만</div> <div>⑥ 20년 이상</div> </div>	

II 여성경제활동 부문

경 제 활 동 여 부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bottom: 5px;">8</div> 귀하는 지난 1주일(2012.2.12~2012.2.18)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셨습니까? <small>※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했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가족적 이유,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이신 분도 일을 '하였다'에 해당됩니다.</small>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① 하였다 ② 하지 않았다 →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5px;">19</div>문항으로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7;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고 용 형 태</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5px; margin-bottom: 5px;">9</div> 귀하의 현재 고용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근로자 ③ 일용근로자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5px;">14</div>문항으로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7;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종사 산업</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5px; margin-bottom: 5px;">10</div> 귀하는 어디에서 일을 하셨습니까?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 5px 0;">분 류 코 드 (조사원이 기입합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30px; margin: 5px 0;"></div> <p>○ 직장(사업체)명</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40px; margin: 5px 0;"></div> <p>○ 직장(사업체)의 주된 사업 내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60px; margin: 5px 0;"></div>	<div style="background-color: #e0f2f7;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종사 직업</div> <div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 padding: 2px 5px; margin-bottom: 5px;">11</div> 귀하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div style="background-color: #d9d9d9;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 5px 0;">분 류 코 드 (조사원이 기입합니다)</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30px; margin: 5px 0;"></div> <p>○ 하고 있는 일의 종류</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40px; margin: 5px 0;"></div> <p>○ 부서 및 직책</p> <div style="border: 1px solid #ccc; height: 60px; margin: 5px 0;"></div>

III 취약계층 여성복지 부문

<p style="text-align: center;">한부모 여성 지원 정책</p> <p>22 귀하는 <한부모 여성>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자녀양육 지원</p> <p>② 경제적 자립 지원</p> <p>③ 모자보호시설 등 주거지원</p> <p>④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서비스</p> <p>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미혼모 지원 정책</p> <p>23 귀하는 <미혼모> 지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청소년 미혼모 지원기관 운영</p> <p>② 청소년 미혼모의 학업 지원</p> <p>③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p> <p>④ 미혼부의 양육책임 이행을 위한 지원서비스</p> <p>⑤ 기타(구체적으로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노인 지원 정책</p> <p>24 귀하는 <여성노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일자리 관련 지원</p> <p>② 건강 관련 지원</p> <p>③ 혼자 사는 여성노인 돌봄 사업</p> <p>④ 문화 및 여가 관련 서비스 제공</p> <p>⑤ 생계비 지원</p> <p>⑥ 요양원(실버타운) 등 주거 지원</p> <p>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여성장애인 지원 정책</p> <p>25 귀하는 <여성장애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기초교육 지원</p> <p>② 일자리 관련 지원</p> <p>③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도우미, 차량 지원 등)</p> <p>④ 건강 및 의료지원 사업</p> <p>⑤ 그룹홈 등 주거 지원</p> <p>⑥ 여성장애인 대상 폭력근절 및 피해지원 사업</p> <p>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결혼이주여성 지원 정책</p> <p>26 귀하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p>① 언어소통 지원</p> <p>② 일자리 관련 지원</p> <p>③ 다문화 가족(부부, 부모)을 위한 프로그램</p> <p>④ 다문화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p> <p>⑤ 결혼이주여성 대상 폭력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p> <p>⑥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p> <p>⑦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확대</p> <p>⑧ 기타(구체적으로 :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취약계층 여성 정책 우선순위</p> <p>27 귀하는 취약계층 여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p>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 1순위 <input type="text"/> 2순위 <input type="text"/> </div> <p>① 한부모 여성 지원</p> <p>② 미혼모 지원</p> <p>③ 여성노인 지원</p> <p>④ 여성장애인 지원</p> <p>⑤ 결혼이주여성 지원</p>	

V 여성건강, 문화, 여가 부문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35 귀하는 <여성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
- ② 폐경기 여성의 상담 및 검진 서비스 지원
- ③ 여성암(유방암, 자궁경부암 등) 조기검진 지원
- ④ 여성특화질환을 진단하는 병원 지정
- ⑤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⑥ 여성우울증 등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및 치료
- ⑦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 정책

38 귀하는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접근성이 편리한 소규모 문화시설의 확대
- ②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확대
- ③ 다양한 시간대의 문화프로그램 확대
- ④ 문화여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 ⑤ 문화 관련 소모임 공간제공 등 운영지원
- ⑥ 기타(구체적으로 : _____)

VI 돌봄 부문

취학 전 자녀 양육 정책 우선순위

44 귀하는 **취학 전 자녀양육**을 위해 다음 정책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 ②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③ 시간연장 휴일보육 야간 및 24시간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 ④ 영아전담(만3세미만)어린이집 확대
- ⑤ 직장어린이집 확대
- ⑥ 장애아보육 지원 확대
- ⑦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 보육서비스 확대
- ⑧ 가정파견 보육서비스 확대
(예: 아이돌보미, 가정보육교사 등)
- ⑨ 어린이집 미이용자에 대한 양육수당 확대
- ⑩ 부모의 자녀양육지원 서비스
(예: 부모교육, 육아나눔터, 자녀와 놀이체험 공간 등)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46 귀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①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아카데미, 꿈나무안심학교 등)
- ② 아동·청소년 상담 지원
- ③ 아동·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확대
- ④ 아동·청소년 직업체험 및 진로교육
- ⑤ 아동·청소년 인성 교육
- ⑥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확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47 귀하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 | | |
|-------------------------|------------------------------|
| ① 결식아동 급식지원 | ⑥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치료·재활 프로그램 확대 |
| ②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 | ⑦ 학업중단, 가출청소년 지원 |
| ③ 학교폭력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 ⑧ 청소년 한부모 지원 |
| ④ 청소년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 ⑨ 저소득층, 장애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
| ⑤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 예방 사업 |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48 귀하는 질병이나 장애 혹은 노화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저렴한 노인요양시설 확대 | ④ 개별 가정에 거주하는 노인을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
| ② 장애인 지원 시설 확대 | 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
| ③ 장애인, 치매노인 등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지원 | ⑥ 근로자가 가족간호를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

VII 가족 부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51 귀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② 자녀양육비용 지원 확대
 ③ 다양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
 ④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경감 등 교육 관련 정책
 ⑤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개선 및 실효성 제고
 ⑥ 가족친화적인 직장·사회환경 조성
 ⑦ 기타(구체적으로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52 귀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② 가족 상담 프로그램 확대
 ③ 가족단위 여가 프로그램 확대
 ④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확대
 ⑤ 기타(구체적으로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53 귀하는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자녀양육, 배우자 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도 활성화
 ② 장시간근로 관행 개선
 ③ 남성의 가정 내 역할 교육 강화
 ④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확산 문화 조성
 ⑤ 기타(구체적으로 :)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54 귀하는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 | | |
|-------------|-------------------------|
| ① 한부모 가족 지원 | ⑤ 북한이탈주민가정 지원 |
| ② 다문화 가족 지원 | ⑥ 입양가정 지원 |
| ③ 장애인가족 지원 | ⑦ 노인가족(노인만으로 구성된 가족) 지원 |
| ④ 조손가족 지원 | |

VIII 정책추진체계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55 귀하는 경기도의 여성·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예산의 확대 | ⑤ 경기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지(여성·가족 관련 조례 제정) |
| ② 도지사 등 최고관리자의 관심과 의지 | ⑥ 지역여성단체의 전문성과 적극적 활동 |
| ③ 여성·가족부서와 관련 부서의 업무협력 | ⑦ 일반 도민의 참여 통로 확대 |
| ④ 공무원의 전문성과 의지 | ⑧ 기타(구체적으로 :)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56 귀하는 경기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① 정당의 여성할당제 비율 확대 |
| ② 여성정치 후보자 발굴 및 지원 |
| ③ 여성에게 불리한 선거제도 개선(선거구, 선거자금, 공천제도 등) |
| ④ 정치는 남성의 영역이라는 인식개선 |
| ⑤ 기타(구체적으로 :) |

IX 여성·가족정책 향상도, 우선순위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57 귀하는 지난 10년 동안 여성정책을 추진한 결과 아래의 분야의 성평등 수준이 10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	별로 향상되지 않았다	향상된 편이다	매우 향상되었다
1) 법 및 제도	①	②	③	④
2) 정치참여	①	②	③	④
3) 교육	①	②	③	④
4) 가족생활	①	②	③	④
5) 경제활동	①	②	③	④
6) 문화 및 의식	①	②	③	④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

58

다음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한 여성정책에 해당하는 정책분야입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①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⑦ 농어촌여성 복지증진

②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

⑧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

③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⑨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④ 보육관련 정책

⑩ 여성의 국제협력강화

⑤ 여성건강 지원

⑪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⑥ 취약계층 여성복지증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가족정책

59

다음은 <건강가족기본계획>에 제시된 가족정책입니다. 다음 중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1순위나 2순위까지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①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⑥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활성화

②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⑦ 가족돌봄자 지원 서비스 강화

③ 자녀 돌봄 지원의 다양화

⑧ 취약가정 및 위기가정 서비스 강화

④ 부모역할 지원

⑨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⑤ 한부모 가족 지원정책

⑩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X 가구 관련 사항

<div><div>주택 유형</div><div><div>60</div><div>귀택의 주택유형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div></div><div><div>① 단독주택</div><div>② 아파트</div><div>③ 연립주택</div><div>④ 다세대 주택</div><div>⑤ 기타</div></div></div>	<div><div>점 유 형 태</div><div><div>61</div><div>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div></div><div><div>① 자기집</div><div>② 전세</div><div>③ 보증부 월세</div><div>④ 월세(사글세)</div><div>⑤ 무상 및 기타</div></div></div>	<div><div>가구구성 형태</div><div><div>62</div><div>귀택의 현재 가구구성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니까?</div></div><div><div>① 부부</div><div>② 부부+자녀</div><div>③ 한부모+자녀</div><div>④ 3세대 이상</div><div>⑤ 1인가구</div><div>⑥ 기타</div></div></div>
<div><div>맞벌이가구 여부</div><div><div>63</div><div>귀택은 현재 맞벌이 가구입니까?</div><div>※ 배우자가 취업을 위해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맞벌이 가구임</div></div><div><div>① 맞벌이 가구이다</div><div>② 맞벌이 가구가 아니다</div><div>③ 해당 없음</div></div></div>	<div><div>가 구 소 득</div><div><div>64</div><div>귀택의 지난 1년 동안(2011년)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 평균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div><div>※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div></div><div><div>① 100만원 미만</div><div>② 100~200만원 미만</div><div>③ 200~300만원 미만</div><div>④ 300~400만원 미만</div><div>⑤ 400~500만원 미만</div><div>⑥ 500~600만원 미만</div><div>⑦ 600만원 이상</div></div></div>	

설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책보고서 2012-05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발행인 박 명 순

발행일 2012년 5월 31일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Tel. 031)220-3900 Fax. 031)220-3919

인 쇄 신문사 (Tel. 031-255-2157)

ISBN 978-89-6432-071-6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 있습니다.

